

Ver. 1.0

문재인 정부
사회적경제 정책모음집
['17.5.10 ~ '19.4.30]

'19. 4.

Ver. 1.0

문재인 정부
사회적경제 정책모음집
['17.5.10 ~ '19.4.30]

'19. 4.

【 목 차 】 (발표일순)

정책명	발표일	페이지
1.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17.10.18 (제3차 일자리위원회)	1
2. 사회통합적 평창동계올림픽 유산(Legacy) 창출 방안	'17.12	45
3.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18.2.8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53
4. 소셜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18.5.16 (제6차 일자리위원회)	83
5.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	'18.7.3 (국무회의)	107
6.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2단계 혁신성장전략	'18.7.5	139
7.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	'18.7.26	165
8.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마을관리 협동조합 사업 추진 방안	'18.7.26	181
9.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학교 내 협동조합 지원계획	'18.9.6	207
10.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18~22)	'18.11.9 ('18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	237
11. 사회주택 활성화 방안	'19.2.19	277
12.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 방안	'19.3.21	289
13. 사회적농업 추진전략	'19.3.25	313
14. 복권기금의 사회적 가치 제고 방안	'19.4.26	327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2017. 10.

일자리위원회 · 관계부처 합동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2017. 10.

일자리위원회 · 관계부처 합동

순 서

I . 추진배경	5
II .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 현주소	9
III . 목표 및 발전전략	16
IV . 사회적경제 성장 인프라 구축	18
1. 통합 지원체계	18
2. 금융접근성 제고	19
3. 판로확대 지원	22
4. 인력양성 체계 강화	23
V . 사회적경제 주요 분야별 진출 촉진	26
1. 사회서비스 분야	27
2. 주거환경 분야	30
3. 문화예술 분야	32
4. 프랜차이즈 분야	34
5. 소셜벤처 분야	35
6. 지역기반 연계 분야	37
VI . 기대효과	40

I. 추진배경

- ◇ 사회적경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양극화를 완화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부각
- ◇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사회적경제가 고용 등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며 공공부문과 시장경제 부문을 보완

1 해외 동향

- 전세계적으로 빈부격차 · 고용불안 · 고령화 등의 구조적 문제에 직면함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이 부각
 - UN은 새로운 국제 공동목표로서 포용성 · 보편성 등 사회적 가치를 포함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2016~2030년)’를 수립*
 - EU 등 주요 국가들의 경우 저성장 · 저고용으로 경제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사회적경제를 새로운 해결책으로 평가*
- * '09년 EU는 사회적경제 개념인식 · 법적조치 권고 등 48개 항목의 ‘사회적경제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관련 정책 수립 · 집행을 강화

⇒ 사회적경제는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살리면서 실업 · 빈곤 등 경제 · 사회 문제까지 극복할 수 있어 포용적 성장 실현 가능

- 주요 선진국은 오래된 시민사회 전통 및 사회적경제 정책을 토대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 중
 - 사회적경제 관련 법률제정* 및 직 · 간접적인 지원제도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경제기업의 활동을 보장
- * 사회적경제법 제정 국가 :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퀘벡주 등
- 특히, 사회투자기금 · 사회성과채권* · 사회적금융기관 등 사회적금융 육성을 통한 금융접근성 제고에 주력하여 자생력 확충
- * 민간투자로 공공사업 시행 후, 사회적 성과 달성시 약정에 따라 투자금 및 수익을 상환(영국, 이탈리아, 미국 등에서 실시중)

2 국내 동향

- 우리나라는 '00년 이후 부처별로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이 활동 중

* 사회적기업('07년), 마을기업('11년), 자활기업·협동조합('12년) 등

-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 시범사업 실시, 사회적 인식 확산 등 양적성장 토대를 마련
-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이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사례 창출

※ 주요 사회적경제기업별 성공사례

- (베어베터 사회적기업)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고용('16년 기준 전체 근로자 225명 중 200명이 발달장애인)하여 인쇄물·커피 등을 제조·판매
- (인천서점 협동조합) 인천지역 동네서점 60여개 사업자가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공동브랜드 이용·공동홍보·공동구매 등으로 경쟁력 제고

- 정부주도하에 사회적경제기업이 양적성장을 이루고 있으나, EU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미흡

-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기업 고용비중은 1.4%*로 EU 6.5%의 22% 수준에 불과**('15년 기준)

* 「사회적경제기본법」상 총 고용인원(25,936천명) 대비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수(368,268명, 복수지위에 따른 중복포함)

** EU는 사회적경제 관련조직에 협동조합·협회·공제회를 포함하여 우리나라(사회적경제기본법상 조직)보다 범위가 포괄적

- 사회적경제가 우리사회의 협력성장·포용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통한 질적 성장을 준비할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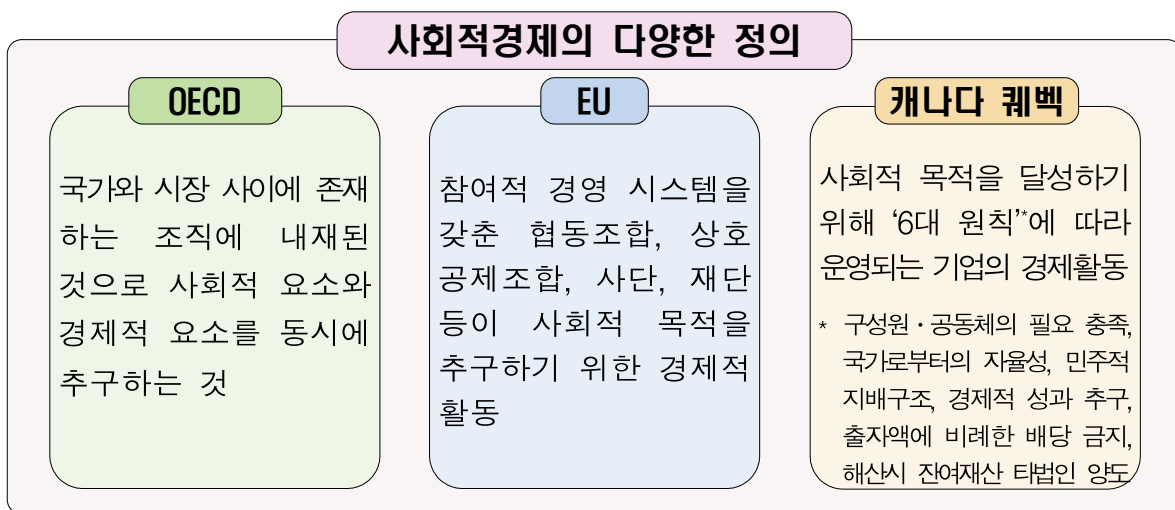
- 지원정책간 연계 강화, 금융·인력 등 제도적 여건 조성, 장기 비전 제시 등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전략 마련 필요

3 사회적경제의 개념

① (정의) 구성원간 협력·자조를 바탕으로 재화·용역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

○ 국가·시대별 정의는 다양하나, '구성원 참여'를 바탕으로 '국가-시장 경계'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활동'*을 의미

* 유사 개념 : 제3부문, 비영리섹터, 자발적 영역, 연대경제, 시민경제 등



② (특징) 시장에서의 경제활동이라는 측면에서 시장경제와 유사하나 자율·민주, 연대·협력 등의 활동목표에서 차이 존재

- (자율·민주) 효율경영보다는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1인1표 행사 등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한 자율경영을 원칙으로 조직운영
- (사회통합) 상업적 목표보다는 구성원간 이익공유·취약계층 일자리창출·지역사회 기여 등의 사회적 가치를 우선 추구
- (연대·협력) 정부 또는 시장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취약계층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공동체를 구성하여 상호협력
- (경쟁·보완) 시장조직과 경쟁하면서,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 시장실패 및 정부실패를 보완하는 제3의 영역으로 기능

□ 고용창출 · 고용안정 · 유희인력 활용 등에 기여

- (고용창출) 일반법인에 비해 취업유발 효과*가 높으며, 구성원이 전체 이익을 공유함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능

* (예) 산출액 10억원당 취업유발계수 : 전산업 12.9명, 협동조합 38.2명

** 택시협동조합의 근로일수 대비 수입(월평균)이 일반 택시회사의 1.7배

- (고용안정)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노사관계 및 불공정거래를 개선하고, 높은 기업생존율*을 유지

* 사회적기업(인증 후 3년) 91.8%, 마을기업(정부지원 종료 후) 87%,
사회적협동조합(등록 후 3년) 99.2% vs 일반기업(창업 후 3년) 38.2%

- 구성원간 인적결합을 중시함에 따라 높은 정규직 비중(협동조합 73.2%, 사회적기업 66.1%) 및 낮은 이직률 특성(협동조합 4.7%)을 보유

- (유희인력 활용) 경력단절여성 · 은퇴자 등 유희인력의 노동시장 진입을 통해 소득 및 부가가치 창출

□ 소득양극화 해소 · 사회안전망 강화 · 공동체 복원 등에 기여

- (소득양극화 해소)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통한 소득창출 기반을 마련하여 계층간 빈부격차를 완화

* (예) 경북 영주의 집수리 및 목 생산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노인 중심으로 설립하여 노인일자리 창출 및 노인빈곤 해소에 기여

- (사회안전망 강화) 보건 ·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새로운 복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

* (예)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은 문화소외 지역주민들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지역내 영화관을 설립

- 복지공급주체 다양화를 통한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도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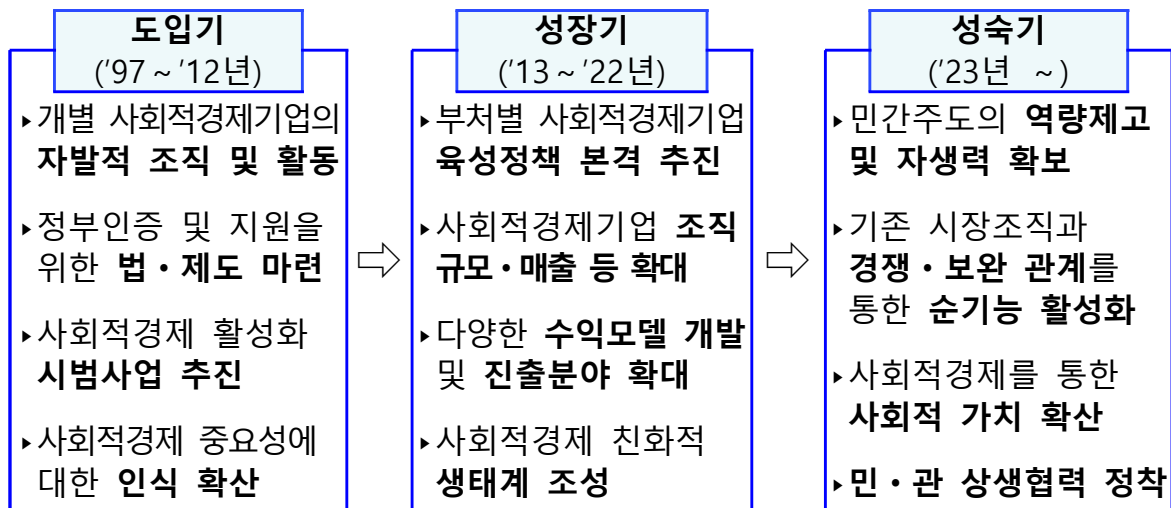
- (공동체 복원) 지역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촉진하여 구성원간의 장기적 신뢰관계를 회복함으로써 공동체 문화를 형성

Ⅱ.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 현주소

1 사회적경제 현황 진단

- 사회적 인식·제도적 기반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는 도입기를 지나 성장기 단계에 진입

<사회적경제 발전단계>



- 주요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측면이 있으나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중요성 인식 이후 본격적인 육성정책을 수립·집행 중
 -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사회적경제 관련 법·제도 마련, 시범사업 추진 등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기반을 구축
 - 지자체·민간에서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및 투자를 촉진
-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등 주요 사회적경제 기업의 기업수 및 고용·매출규모 등이 양적으로 성장 중
 -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이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례가 창출
 - 향후 수익모델 개발 및 진출분야 제약해소 등을 통해 다양한 경제주체의 진입확대 및 사회적경제 역량제고가 필요한 상황

2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 ① (범위) 「사회적경제기본법」상의 사회적경제기업은 일반 사회적경제기업 및 특별법에 의한 8개 개별협동조합을 모두 포함

「사회적경제기본법」상 사회적경제기업		
개별 협동조합	일반 사회적경제기업	
	주요 사회적경제기업	기타
농협, 수협, 신협, 생협, 새마을금고, 중기협, 산림조합, 업연초협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업 회사법인, 사회복지법인, 자활 센터 등

- 자립지향적이며 상대적으로 비영리성이 강한 주요 사회적경제기업*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등 주요 사회적경제기업은 총 14,948개 운영중이며, 총 91,100명을 고용('16년 기준)

조직유형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합계
조직 수(개)	1,713	10,640	1,446	1,149	14,948
고용 인원(명)	37,509	29,861	16,101	7,629	91,100

- ② (사회적기업)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요 목적으로 영업활동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 일자리 등 제공

* 배분가능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 30% 이상 취약계층 고용 등의 요건 충족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 (현황) '16년 기준 총 1,713개소(예비사회적기업 포함시 총 2,821개소) 운영 · 총 37,509명 고용 중이나, 최근 다소 성장세 둔화*

* 기업수 증가율(%) : ('13) 30.7 → ('14) 23.6 → ('15) 20.4 → ('16) 13.7

- (유형) 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별로는 취약계층 일자리를 제공하는 유형이 69.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목적 비중(%) : 일자리제공형 69.7, 사회서비스제공형 6.3, 혼합형 10 등

③ (협동조합) 조합원의 자발적 참여·민주적 의사결정 등의 특성*을 바탕으로 사업추진 → 조합원의 고용안정 등 권익향상

*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은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할 의무 부여(「협동조합기본법」 제6조)

- (현황) '16년 기준 총 10,640개소 운영·총 29,861명(추정) 고용중이며, 성장세는 일반협동조합 둔화·사회적협동조합 지속*

* 일반 연간 설립 수 : ('13) 3,042 → ('14) 2,691 → ('15) 2,286 → ('16) 1,961

사회적 연간 설립수 : ('13) 103 → ('14) 122 → ('15) 180 → ('16) 203

- (유형) 일반협동조합은 사업자협동조합이 전체의 75%를 차지하며,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문제 해결 목적형이 전체의 40%

④ (마을기업) 지역주민이 지역내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하여 수익 창출 및 지역 환원* → 지역공동체 활성화

* 지역의 범위는 읍·면(농촌지역) 또는 구(도시지역)이며, 사업계획서상에 지역사회공헌활동 포함시 마을기업으로 지정(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 (현황) '16년 기준 총 1,446개소 운영·총 16,101명 고용 중이며, 기업수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으나 기업당 평균고용**은 증가 추세

* 전년대비 증가율(%) : ('13) 42.2 → ('14) 11.6 → ('15) 7.4 → ('16) 7.7

** 기업당 평균고용(명) : ('13) 9 → ('14) 8 → ('15) 8.6 → ('16) 11

- (유형) 일반식품·전통식품 등 지역농산물 가공·판매 업종이 전체의 58.4%(일반식품 42.8%, 전통식품 15.6%)를 차지

⑤ (자활기업)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사업주체*가 되어 자활근로 사업 추진 → 취약계층의 탈수급 유도 및 사회안전망 강화

* 기초수급자가 1/3 이상시 자활기업 인정(「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 (현황) '16년 기준 총 1,149개소에서 운영 중이며, 총 7,629명이 자활기업 사업에 참여

- (유형) 전국자활협회 5대 표준화사업(청소소독, 집수리, 간병, 폐자원·음식물 재활용) 중 청소소독이 20.6%로 최고 비중*

* 업종별 비중(%) : 청소소독 20.6, 집수리 13.2, 간병돌봄 13.1 등

3

사회적경제 지원정책 추진경과

□ 개별 부처별·사회적경제 유형별로 사회적경제 확산을 위한 법 제정·기본계획 수립 등 직·간접 지원정책 마련

○ 사회적경제기업 인증, 경영·재정지원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등을 수립·시행**

* 협동조합기본법(기재부), 사회적기업육성법(고용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복지부) 등

** 협동조합 기본계획(기재부), 사회적기업육성 기본계획(고용부) 등

< 사회적경제 유형별 주요 지원정책 >

구분	직접 지원	간접 지원	
		공통	개별
사회적기업	인건비, 사회보험료, 사업 개발비	관로지원, 교육 및 홍보, 컨설팅, 창업 및 운영 지원, 정책자금 융자 등	세제(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감면, 기부금 인정 등) 모태펀드 운영 등
협동조합*	-		-
마을기업	사업비		-
자활기업	인건비, 사업비, 창업자금, 컨설팅비용		사업 및 시설자금 융자

* 자주·자립·자치 등 협동조합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간접지원 중심으로 운영

○ 인건비 지원 등 직접지원과 세제혜택(법인세·소득세 감면 등)*·공공조달시 우선구매 유도·정책자금 지원 등 간접지원 병행

* (예) 사회적기업에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향후 2년간 50% 감면

○ 광역·지역별로 중간 지원기관을 설립·운영하여 창업지원·홍보·인력양성·사업모델 발굴 등의 다양한 지원정책 추진

□ 개별법으로 분산되어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통합적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관련 법 제정 추진 중*

* 3법 국회계류중(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가치 실현 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로지원법)

□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 (일자리 100일 플랜 13개 과제에 포함)

- ◇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고, 금융·조달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 제고 기반도 취약
- ◇ 사회적경제 컨트롤타워 없이 소관부처별로 지원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체계적인 사회적경제 정책 수립·집행에 애로*
 - * 부처별·지자체별 전달체계 구축에 따른 중복·비효율 문제 등
- ◇ 설립단계 및 단기 재정지원 정책이 대부분이며 성장기·성숙기 및 실패시 재기에 이르기까지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정책 미비

① (사회적 여건) 사회적경제 활성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에 따라, 정부의 정책지원 및 사회적 참여가 미흡

- ① (정책지원) 초기 단계에서 인건비 보조 등 양적성장 중심의 정책 추진 결과, 기술혁신·역량강화 등 경쟁력 향상은 미흡
- ② (사회적 참여) 다양한 분야의 유능한 인재 유입이 저조하고, 물품·용역에 대한 사회의 선입견으로 판로확대에도 애로

② (지원체계) 부처별로 지원제도가 분산*되어 있음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비용 유발, 정책연계성 저조, 민·관 협업 부족 등 초래

* 사회적경제 지원제도 도입단계에서 부처·지자체가 독자적인 체계를 구축한 결과 주요 지원사업이 법령별·지원기관별로 운영 중

① 지원정책이 유사하지만 시행기관마다 별도로 요구하는 행정절차로 인해 시간·비용이 소요*되고, 지원규모**도 상이

* (예) 사회적협동조합이면서 사회적기업인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 경영공시 등을 소관부처별로 다른 양식으로 이중으로 이행

** (예) 인건비 지원 : (사회적기업) 최저임금액 및 사회보험료의 30~70%
(자활기업) 인건비 및 기타수당의 100%(최대 2년, 2~5년은 50%)

② 재정·세제지원 남용을 막기 위한 엄격한 인증기준이 사회적경제 기업 진입의 장애요인*이 되어 사회적경제 활동을 위축

* 사회적기업은 인건비 지원과 연계되므로 다소 엄격한 인증기준 유지

③ 정책 칸막이 해소·재정집행 효율성 제고 등 정책조정을 위한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고, 중앙-지자체간 연계도 미흡

- 중앙-지자체·중앙부처간 업무조정, 개별 법령에 따른 중간지원 기관간 연계·협력방안 등에 대한 검토 필요

④ 민간부문*에서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별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나, 공공-민간간 협업체계는 미비

* SK는 혁신적 사회적기업가 양성을 위해 교육개발·창업·연구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회적기업가 센터’를 운영중

③ (금융접근성) 기업별 성장단계에서 금융조달 수요는 높으나, 금융 시장 접근성이 낮고* 체계적인 금융지원이 미흡한 상황

* 사회적기업 자금조달('15년 고용부): 정부보조금(51.4%), 특수관계인 차입(43.6%)
협동조합(제2차 실태조사): 출자금(70.8%)·부채(29.2%), 금융기관 대출경험(9.2%)

① 주요 선진국과 비교*시 사회투자기금·사회성과연계채권·사회적금융 기관 등 성장기 단계에 필요한 사회적금융 기반이 취약

* (영국) Big Society Capital(6억 파운드), (프랑스) Caisse des Dépôts(5억 유로),
(미국) 지역개발금융기관(10억 달러), (이탈리아) Banca Etica(수신 9.4억·여신 8.0억 유로)

② 대부(미소금융·중소기업정책자금), 신용보증(지역신보·신보), 투자(모태펀드) 등 금융지원 정책을 추진 중이나 실효성 저조*

* 보증한도 미흡, 사회적경제 특성을 배려한 별도의 대출·보증기준 미비 등

<사회적경제 금융지원 현황>

구분	지원현황
소액금융사업(미소금융)	총 4,000억 중 사회적기업 대출은 0.24%수준인 9.5억원('16년 기준)
중소기업 정책자금	4.5조원 중 사회적기업 대출은 0.18% 수준인 82억원('16년 기준)
자활기금	조성액 349억 중 62억원 지원('16년 기준)
신용보증 한도	신보(협동조합 1억원, 사회적기업 1억원), 지신보(협동조합 5천만원, 사회적기업 4억원)
모태펀드	182억원 규모로 펀드운용 중

④ (판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우선구매의 실효성이 저조* 하며, 민간의 구매촉진을 위한 판로개척에 애로

* 우선구매 대상 기업별 조달현황('16년) : 중소기업 73.7%, 여성기업 4.2%
(물품·용역)·3%(공사), 사회적기업 1.8%

① 사회적가치에 대한 평가기준 없이 공공조달 낙찰이 최저가격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고려 미흡

※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 해외사례

- (EU) 양질의 일자리·사회적 책임 이행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최고가치 낙찰' 원칙의 공공조달제도 도입(공공조달 지침, '14년)
- (영국) 사회적 가치 개념을 정의하고, 공공조달시 경제적 가치와 함께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는 제도 도입(공공서비스법, '12년)

② 국가·지자체 등은 중소기업·여성기업 등의 제품을 일정 수준 이상 구매해야 하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구매는 강제성 결여*

* 중소기업(50%), (중증)장애인가기업(1%), 여성기업(물품·용역 3%, 공사 5%) 등은 의무사항, 사회적경제기업은 단순 권고사항

③ 광고비 부족·취약한 영업망·판로개척을 위한 정책지원 부족* 등으로 소비자 접근성 및 민간부문 수요처 확보 제한

* 온·오프라인 유통 플랫폼을 운영 중이나 지원대상 및 홍보효과는 제한적

⑤ (인력)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인프라가 부족

① 소관부처가 교육과정을 개별 추진함에 따라 체계적·유기적인 인재육성 시스템 및 프로그램은 미비

- 대상별·분야별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이 미흡하며, 정부지원 교육과정이 창업·운영 교육에 편중*

* 미국·영국·프랑스 등은 대학내 사회적기업가 육성과정·대학컨소시엄 지원 창업대회 등 고등교육 단계에서 고급인력 양성체계를 구축·운영

② 기술혁신을 위한 R&D 자체 역량이 부족한 사회적경제기업이 R&D 지원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 미흡

Ⅲ. 목표 및 발전전략

◇ 사회적경제가 포용성장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 전환 및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Two-Track 발전전략 마련

- ① (인프라 구축) 사회적경제 성장단계별 특성에 맞는 시스템 구축
- ② (진출분야 확대) 사회적경제 파급효과가 큰 분야 집중 육성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한 협력성장 및 포용성장 견인

목표

사회적경제의
역량 제고

일자리 창출 등
성장동력 확보

공동체 복원 등
사회통합

추진 전략

성장 인프라 구축

진출분야 확대

정책 과제

통합 지원체계 및
정책방향 확립

금융접근성 제고

판로확대 지원

인력양성 체계 강화

사회서비스 분야 진출

주거환경 분야 진출

문화예술 분야 진출

프랜차이즈 분야 진출

소셜벤처 분야 진출

지역기반 연계 분야 진출

추진 체계

민관협업 및 지역주도의 추진체계 구축
공공부문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 기초

① 사회적경제 정책방향 및 추진체계 확립

① (민간·지자체 역할강화 ← 중앙정부 주도)

- 민관합동 거버넌스 운영 등 민관협치를 통한 정책개발 추진, 현장 반응성이 높은 지자체의 정책집행 역할을 대폭 강화

② (정책대상 확대 ← 농·수·신협 등 배제)

- 농·수·신협 등 정책대상 확대와 사회적가치 강화 여건 조성
- 인증기준 완화 및 등록제 전환 등 진입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③ (맞춤형·간접 지원 ← 창업·홍보·직접 지원 위주)

- 조직의 성장 및 실패시 재기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혁신
- 사회적경제조직 성장생태계구축을 위한 간접지원을 확충하고, 직접지원(인건비 등)은 사회적가치 실현이 큰 조직에 엄격 적용

④ (컨트롤타워 구축 ← 종합조정 부재)

-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각 부처가 개별 추진하던 정책 종합조정

②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단계적 대응

① 정부 차원의 시급한 실행과제 중심으로 사회적경제활성화 방안 마련 ⇒ 일자리위원회에서 발표(10月)

② 금융(금융위)·인력양성(고용부)·지자체 역할제고(행안부) 등 분야별 중장기 개선과제* 심층검토 ⇒ 담당 부처별 발표(12月)

- * (금융) 공공·민간 부문의 투자확대를 위한 사회적경제 금융 생태계 구축 (인력) 부처별 교육 연계 및 실무·이론 통합 등 종합적인 인력양성 체계 정비 (지자체) 중앙정부와 역할분담 및 지자체 중심 수요개발·집행능력 제고 방안

③ 사회적경제 3법* 입법 ⇒ '17년 하반기

- * 사회적가치법,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판로지원법

④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5년) 수립 ⇒ '18년 상반기(기재부)

IV. 사회적경제 성장 인프라 구축

1 통합 지원체계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제를 추진하고, 지원정책 방향 확립, 범부처 컨트롤타워 설치 등 지원체계 재정비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제정

- ① (사회적경제 기본법) 개별법으로 분산되어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육성·지원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

* 사회적경제 발전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설치 및 5개년 기본계획 수립, 고용의 질 등 실태조사 등

- ② (사회적가치 실현 기본법) 사회적 가치를 국가 운영의 핵심원리로 반영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책무 규정*

* 사회적가치 실현 기본계획 수립 및 사회적가치 성과평가, 사회적가치 평가 지표 개발, 사회적감사 시스템 구축 등

- ③ (공공기관 판로지원법*)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해 공공부문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를 촉진

*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2 사회적경제 정책 컨트롤타워 수립

- ① (전담기구) 기획재정부 중심의 관계부처 협의체 구성*(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전) 및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설치**(기본법 제정 후)

*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입법 총괄지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수립 등

**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등 사회적경제 발전정책을 총괄 조정

- ② (기능)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부처간 정책수립·조정, 전달체계 효율성 제고를 위한 중앙·지자체간 역할 조율 등

-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의 사각지대 완화, 부처별 지원정책의 중복 조정 등을 통한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
-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서의 중앙·지자체간 협력 증진 및 지자체 담당자의 정책 이해도 제고를 통해 정책 효과성 향상
- 부처별·법령별로 설치된 사회적경제기업 중간 지원기관의 유사 기능(교육·판로지원 등)의 연계 및 협력 방안* 마련

* ‘(가칭)한국사회적경제개발원’, 시·도 단위 통합지원센터 등 활용

2 금융접근성 제고

◇ 공적 금융제도 개선, 민간 투자환경 개선, 규제완화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기 단계에 필요한 사회적 금융 확대

1 공적 금융제도 개선

- ① 신용보증기금에 사회적경제 지원 계정을 신설하여 향후 5년 내 최대 5,000억원까지 보증공급이 가능하도록 재정 등에서 지원(금융위, 중기부)

- 신보·지신보의 보증지원 한도 확대

구분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신보	(현행) 1억원 → (개선) 3억원	
지신보	(현행) 5천만원 → (개선) 3억원	(현행) 4억원 → 유지

- 신보·지신보의 보증지원 적용대상 확대(협동조합·사회적기업 → 마을기업·자활기업 등 포함)

- ② 정책자금 內 총액 대출목표 신설*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정책 자금 공급 확대(중기부)

* ('17년 및 '18년 총액 대출목표)

중소기업 정책자금 : ('16) 106억원(실적) → ('17) 200억원 → ('18) 350억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 ('16) 15억원(실적) → ('17) 30억원 → ('18) 50억원

③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평가모형 마련*(금융위, 중기부)

* 고용안정·지역사회 기여·사회적 환원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재무적 특성을 감안하고 '사회적가치지표'('17년 고용부) 등을 참고

- 중소기업 정책자금 內 사회적경제기업 평가모형 신설, 보증(신보·지신보) 기준 개선 등 공적자금 지원 대상 선정에 적용

② 투자환경 개선

①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투자펀드* 확대 운용(고용부, 금융위)

* 정부예산(고용부 모태펀드) 또는 성장사다리펀드 출자(금융위 사회투자펀드)와 민간자금이 결합된 펀드로서 주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투자

- (규모*) 모태펀드 추가조성[100억원('18년 예산) + α(민간자금)] 및 사회투자펀드 신규조성 300억원('17년 중, 성장사다리펀드 출자 100억원)

* 자금운용 추이에 따라 조성규모 확대 추진(사회투자펀드는 향후 5년간 최대 1천억원 규모, 고용부 모태펀드의 경우 '19년 이후 예산 추가반영 검토)

- (주목적 투자대상 확대) 주목적 투자대상을 사회적경제기업 등(現 : 사회적기업 등)으로 확대, 사회적경제기업이 주도*하거나 영리기업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에도 투자

* (예)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총출자의 50% 이상 투자

- (운용방식) 장기투자 유도, 자펀드 규모 확대, 성과보수 기준 조정*, 전문 운용사 선정 등 적극적 펀드 운용

* 성과보수 지급 기준수익률 : (현행) 4%~5% → (개선) 정부 2% 내외, 민간 4%~5%(기준수익률 차등 적용)

②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을 활용한 사회성과보상사업 확대(행안부)

* 민간투자자로 공공사업 수행 후, 성과목표 달성시 사업비 및 이자 등을 보전하는 계약을 민간-정부가 체결(현재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시행중)

- 근거법 제정 및 지자체의 사업참여를 위한 표준조례 배포

- 운용 매뉴얼 개발(추진절차 및 계약방법, 예산사후지출 방안 등 포함)

③ 사회적기업에 대한 크라우드펀딩 투자기반 조성(금융위)

- 투자자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보사이트*를 개설·운영하고, 업력 제한 기준을 완화(창업 7년 이내 제한 → 폐지)

* 사회적기업 개요 및 펀딩 진행상황 등 정보 게재

④ 우호적 조세환경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기재부, 행안부)

- (국세) 사회적기업 대상 기부금 인정제도*를 사회적협동조합에 적용

* 취약계층 고용 등을 위해 사회적기업에게 기부할 경우 소득공제 가능

- (지방세)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지방세감면 조례* 확대 유도

* 서울시 및 자치구 등 일부 지자체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취득세 50% · 등록면허세 정액 감면 등 지방세감면제도 旣 운영중

- (국유건물) 사회적경제기업이 국유건물에 입주시 대부료 감면, 수의 계약 허용, 매각시 장기분납(5년) 등 우대 적용

* 「국유재산법」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 검토

- (국유물품) 정부의 불용품(내구연한 도래 PC, 책상 등) 무상 양여 대상 확대*(지자체 · 비영리법인 등 → 사회적경제기업 추가)

* 「물품관리법」 개정

③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

① 신탁의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출자를 허용하는 신탁법 개정*을 통해 적극적 투자 확대(금융위)

* 조합원 · 비조합원 대상 대출만 허용 → 조합원 · 비조합원 대상 출자도 허용

② 연구용역 등을 통해 협동조합의 외부투자를 허용하는 투자조합원 제도* 도입방안 검토(기재부)

* 개인 · 타 협동조합 등 비조합원이 의결권 없이 출자 허용(협동조합기본법 개정)

3 판로확대 지원

◇ 공공조달 원칙에 사회적 가치 반영 ·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을 통해 공공조달을 확대하고, 민간부문의 판로를 개척

① 국가계약법상 공공조달시 사회적책임조달 강화(기재부)

- ① 낙찰기준에 사회적 가치 반영 원칙을 신설(국가계약법 개정)
- ② 종합심사낙찰제도 심사기준(사회적 책임) 조정* (기재부 예규 개정)
 - * ‘사회적 책임’ 항목 가점 : (기존) 1점 → (개선) 2점

② 국가 · 지자체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촉진 (기재부, 행안부, 고용부)

- ① 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자활기업 · 마을기업 물품 · 용역 입찰에 대한 가점 확대* (기재부 및 행안부 예규 개정) 및 의무구매제도 도입
 - * 국가 : (기존) 1.7점 → (개선) 2점, 지자체 : (기존) 0.5점 → (개선) 1점
- ② 취약계층을 일정비율(예: 30%) 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자활기업 · 마을기업에 대한 수의계약제도 신설(5천만원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 ③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공공구매 우수사례 발굴 · 공유*
 - * 장 · 차관급 회의체에서 구매실적 · 구매계획 등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국가 · 지자체의 우선구매 참여를 권고

③ 공기업 · 준정부기관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제도 개편(기재부, 행안부)

- ①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물품 · 용역 구매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촉진(‘18년도 국가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 ②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국가공공기관 경영평가 내용 연계 · 반영

④ 민간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고용부, 산업부, 중기부)

① 사회적경제기업의 온라인 판로 확대

- 사회적기업 제품 정보제공 사이트(e-store 36.5)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통합온라인 사이트로 확대·개편

② TV 홈쇼핑·백화점 등 기존 유통채널과의 연계* 강화

- * 민간 유통채널 발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기획전 개최 지원 등

③ 기업홍보, 상품체험·판매 등이 가능한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

④ 상품개선(품질, 디자인 등) 컨설팅, 우수 제품군 선정*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경쟁력 강화 지원

- * 사회적기업진흥원 심사 선정 → 책자홍보·팝업스토어 운영 등 지원

⑤ 사회적경제기업에 주요 수출마케팅 지원* 대상평가시 가점 부여 및 공동 해외진출사업 시 우대선정·지원**

- *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유망품목·유통망지도 등 해외시장 정보제공 등

- **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수출컨소시엄을 우대선정, 해외시장 개척 지원

4 인력양성 체계 강화

◇ 사회적경제 교육저변을 확대하고 지역중심 전문 인력양성 및 청년 창업촉진 기반 조성

① 사회적경제 교육환경 조성(교육부, 고용부, 복지부, 여가부, 인사처, 조달청)

① 초·중등 교육內 사회적경제 교육 확대

- 사회적경제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및 교원교육을 강화하고 시·도 교육청의 관련 교과목 신설 및 인정 교과서 개발 지원*

- * 사회적경제 교육 내용을 개발·제시하고, 인정 도서 개발 절차 등 안내

- ** 차기 교육과정 개정시, 사회적경제 관련 내용 확대·반영

- 사회적경제 체험이 가능한 학교협동조합*의 설립·운영 지원체계 마련

- * (조합원) 학생·학부모 등, (사업활동) 매점운영·진로·방과후 학습 등

② 노인·경력단절 여성 등의 재취업·창업 준비를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사회적경제 교육* 확대 반영**

*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제시

③ 공무원 일반* 및 공공조달 담당자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교육과정을 신설·강화**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신규·승진자 기본교육에 신규편성, 사이버 교육제작·전파 등

** 조달교육원 계약담당자 교육과정에 사회적경제, 사회책임조달 등 관련 교과 신설

②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학습시스템 구축**(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① **평생학습 도시, 행복학습센터, 지역경제교육센터, 민간경제교육 단체협의회 등을 활용하여 사회적경제 교육 프로그램 확산**

* 학습모임·강사풀 구성 등 지원, 지역특성화 교육서비스 제공 등

② **도시재생 등 지역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기반의 현장지원 조직*을 활용한 활동가·주민 등 대상 실무·전문교육** 실시**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등

** (예) 지역 공동체 및 사회적경제의 이해, 회계·마케팅 교육 등

③ **지역 학습공동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강사 인력풀을 구축·제공 하고 우수기업·공동체 탐방 등 현장교육 지원을 확대**

*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17개), 시도·시군구 단위 공동체지원센터(70여개) 내에 개설된 지역주민 중심의 학습공동체

③ **체계적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교육부, 고용부)

① **사회적 경제 리더·전문가 양성을 위해 대학 내 사회적기업 리더 과정* 및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확대**

* 현행 3개 대학 semi-석사과정(1년 비학위, '17년 124명 수강) 운영중

** 5개 대학 사회적경제 관련 학위·비학위 과정 개설('19)

② **지역 대학·선도기업간 컨소시엄을 통해 지역 특화산업 분야의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에 대한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 지역기반 특화 산업의 훈련수요 발굴 및 공동훈련 지원

- ③ 교육 콘텐츠 고도화, 現개별 교육기관* 재편 및 전문 교육기관운영 등 체계적인 전문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인력양성 로드맵, '17하반기)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고용부, 기재부), 마을기업지원센터(17개 권역, 행자부), 광역 자활센터(14개소, 복지부) 등을 통해 교육·컨설팅 사업 시행 중

④ 청년인재 유입을 위한 창업인프라 확충(고용부, 중기부)

- ① 비즈니스 모델 발굴·사업화를 지원하는 청년 사회적기업가 육성 사업을 확대하고 성장 단계별 지원체계를 차별화

- 해외진출형, 전문기술형 등 창업수요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창업실패·경영애로 기업의 재도전 기회를 위한 전문 멘토링 강화

* (해외진출형) KOICA 등과 연계, (기술기반형) 전문기술 기반 창업 지원

- ② 청년 창업기회 확대를 위해 '소셜캠퍼스 온(溫)'을 추가 조성*하고 멘토링, 네트워크 지원 등 컨설팅 기능을 강화

* ('17) 3개소 → ('18) 6개소 → ('19(안)) 9개소

- ③ 예비사회적기업 대상 사업개발비 지원(최대 2년, 연 한도 5천만원)을 공익성이 강한 사회적경제기업까지 확대

- ④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자 하는 사회적경제 예비창업가를 선발하여 창업아이템별 이론·기술 교육, 멘토링, 사업화비용* 지원

* 최대 2천만원(자부담 50%), 소상공인 창업자금도 연계지원(1억원 한도)

⑤ 기술혁신 및 교육 콘텐츠 개발투자 확대(산업부, 과기부, 교육부, 중기부)

- ① 출연(연), 대학 등과 연계를 통한 공동참여 기술개발, 바우처형 기술개발 의뢰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필요한 유형별 R&D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수준에 맞게 공동참여 또는 의뢰방식 선택 → 과학기술인협동조합지원센터, 지역혁신기관 등을 통한 기술·인프라 등을 매칭

- ② R&D 전단계(기획→기술개발→사업화)에 대한 기획능력 향상을 위해 '기획역량강화교육 사업' 선정시 사회적경제기업 우대

* 교육 이후 우수 교육생을 선발하여 R&D 기획멘토링, 기술매칭 등 연계과정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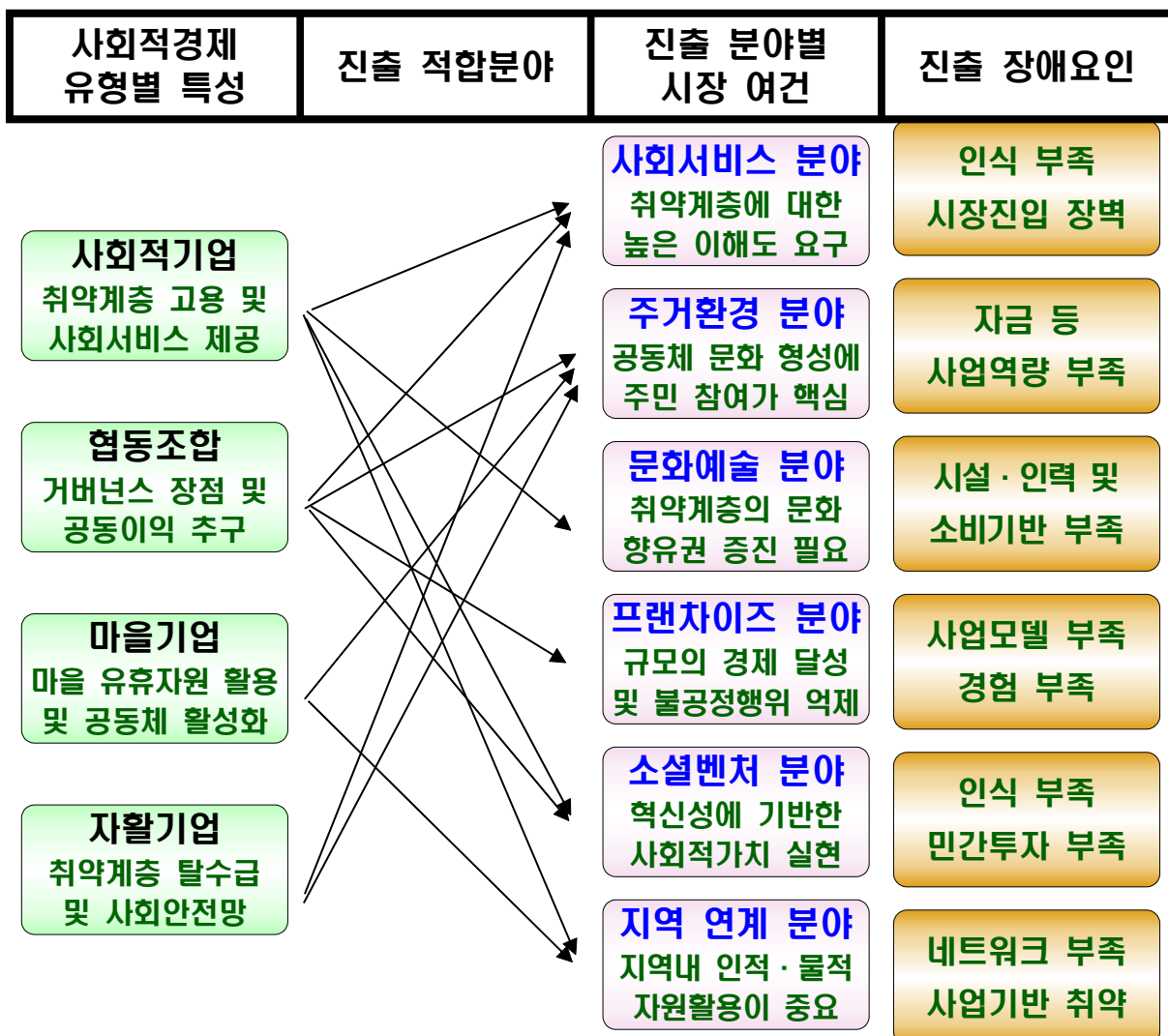
- ③ 국내외 우수 교육과정 벤치마킹 및 학계 협업을 통한 사회적경제 기업을 포함한 대학창업교육 콘텐츠 제작·보급

V. 사회적경제 주요 분야별 진출 촉진

- ◇ 사회적경제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역량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진출분야 확대를 병행하는 입체적 전략 필요
- ◇ 사회적경제기업의 유형별 특성과 진출분야별 시장여건을 고려하여 사회적경제의 장점이 부각될 수 있는 중점 진출분야 선정
- ◇ 사회적경제기업의 주요 분야 진출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파급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정책을 마련

* (예) 사회서비스 분야는 민간 영리기관 중심의 전달체계가 진입장벽으로 작용, 프랜차이즈 분야는 다양한 사업모델 미비로 사업성공 가능성 저하

< 진출 적합분야 및 장애요인 분석(예시) >



1 사회서비스 분야

1. 현황

□ (필요성) 사회서비스 분야의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창출 및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 서비스 품질제고에 기여

- 사회서비스는 고용흡수력이 높은 분야로서, 특히 취약계층 고용 및 소득창출을 통해 계층간 양극화를 완화
- 서비스 수요자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여 기존 공급자와의 경쟁을 통해 품질혁신 유도

*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가 동질적이며 스스로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개발

※ (도우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자활센터의 취약계층 여성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사회서비스 취약계층에게 간병·가사·돌봄서비스를 제공

▪ (성과) '16년 기준 309명 일자리 제공,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이탈리아의 경우 사회적기업 중 약 60%가 사회서비스를 제공

□ (문제점) 민간 영리기관 위주의 사회서비스 공급*,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관심 부족 등으로 사회서비스 분야 참여율 저조**

*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경우 전체 공급자 중 민간기관이 62% 차지

** 참여율(%) : 장기요양 0.5, 보육 0.1, 바우처 1.3, 장애인활동지원 4.1

-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 특화 사회서비스 개발·제공에 있어 사회적경제기업들과의 협력 저조

2. 개선방안

- ① (진입장벽 해소) 사회적경제기업이 사회서비스 분야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 해소를 위한 제도정비 및 지원방안 마련
 - ① 담당 공무원들이 사회적협동조합이 비영리법인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업무편람(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명시
 - ② 문제법인 수탁 금지 등 업무편람 개정을 통해 서비스질 개선
 - * 편람에 수탁시 지역사회 사전의견수렴 절차 명시 및 의견수렴의 이행여부를 지자체 평가지표에 반영 추진, 지자체 교육 강화 등도 병행
 - ③ 담당 공무원 인식 개선을 위한 워크숍 개최, 가이드라인 제작·보급
- ② (바우처 등)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강화
 - 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이용확대를 유도* 하고, 이용자의 제공기관 정보접근성 제고**
 - * 복지부의 기관 평가체계 개편(사회적가치 창출 항목 포함) 및 기관정보 제공사항 구체화, 이용자에 서비스 이용 안내시 사회적가치 창출 기관 소개 권고 등
 - ** 정보제공 채널 확대(온라인→온·오프라인), 이용자 품질평가 실시간 제공 등
 - ② 요양서비스 분야의 고용안정화를 위해 동일기관 근속기간에 따른 종사자 장려금 지급(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 개정)
- ③ (지역복지) 지역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 ①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과 협력하여 취약계층에게 자활훈련 등 취업 지원 서비스를 연계하고,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
 - ② 지역 복지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참여·활동을 지원
 - * 지자체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 등에 참여 중

④ (경쟁력제고) 사회적기업 성장 지원·서비스표준화 등 추진

- ① 지정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진입을 촉진하고(‘17년 11개 지정 → 추가 확대), **지원확대****를 통해 경쟁력 제고

* (예) 자활기업 특성을 고려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유급 근로자 고용, 이윤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등)의 유연한 적용 허용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에 특화된 맞춤형 교육·컨설팅 등 병행

- ②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 등을 **유도***하고, 서비스 품질을 제고**

* 교육·컨설팅 제공, 전환절차 안내, 가점부여 등 인센티브에 대한 홍보

** 표준화된 서비스 매뉴얼 개발·보급 및 R&D, 공동 마케팅 등 지원

⑤ (新사회서비스*) 민관협력 강화를 통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선도적 사회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사업화 등 추진

* 인구구조변화·양극화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복지기능

- ① 지자체·사회적경제기업 등이 공동으로 **지역특화 사회서비스 개발·운영***에 참여하는 **상시 회의체** 구성을 통해 민관협력 강화

* 지역수요를 고려하여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발굴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모델 참고

- ② 사회서비스 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사업비 및 행정적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 (지원내용) 정책펀드·기금, 공동모금회 재원 등 연계 사업비지원, 교육·컨설팅,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안내 등 행정지원 등

** (예) 지역 내 의료사회적협동조합 활용, 사회서비스 종사자 등 감정근로자 힐링 프로그램 운영

2 주거환경 분야

1. 현황

□ (필요성) 구성원 직접 참여·이익공유·취약계층 배려 등 사회적경제의 특성으로 주거문화 개선의 정책효과성 향상

○ H/W 중심의 기존 도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주민참여 기회부족에 따른 갈등 유발* 등으로 정책효과 반감

*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참여가 형식적으로 이뤄질 경우 주민 간 갈등발생 소지

○ 향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여 일자리·소득 증대*, 주거 안정성·공공성 강화(취약계층 입주 확대 등)에 기여

* 주거개선 사업, 공동시설 관리업체 운영 등에 마을주민 참여 확대

※ (두꺼비하우징)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 10호점까지 개설

○ 영국의 사회적기업(민와일 스페이스)은 빈 점포 소유자 - 임대수요자 매칭을 통해 예술공간으로 전환시켜 지역재생 프로젝트에 기여

□ (문제점) 자금사정·사업역량 등이 부족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참여 촉진 및 정책수요자의 정책체감도 제고에 한계

○ (도시재생) 공동시설·미관정비 등 도시외관 재정비에 집중하여 주민참여·도시 공동체 복원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개발에 소홀

○ (임대주택) 자금조달 기반 미흡·사업정보 부족 등으로 공모를 통한 사업참여에 제한*

* 최근 LH 임대주택 공모사업에 사회적경제기업 중심의 기업형임대주택 계획이 선정되어 최초사례 창출 기대

2. 개선방안

- ① 지역활성화 관련 사업기획 단계부터 지역주민의 의견이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업의 역량을 강화(국토부)
 - ① (참여조직) 지역활성화 사업에 사회적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도입*(운영지침 수립)
 - * 지역자원을 활용한 소규모기업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 ② (네트워크) 건축, 사회적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풀을 제공하여 지자체에 컨설팅, 우수 지역사례도 전파
 - ③ (교육) 주민, 도시재생 전문가, 청년·마을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역량교육 지원, 도시재생 경제주체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 (사업화 지원·역량교육 예산) 17년 추경 약 9.5억원, '18년 정부안 약 32억원
 - ④ (부처연계 강화) 도시재생 지역 내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행안부, 고용부)와 연계 강화
- ② 도시재생·임대주택 공급 등 지역활성화 사업에 사회적경제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국토부)
 - ① (기금용자)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기금용자 지원(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개정)
 - (도시재생) 공간조성·조직운영 등 도시재생사업 관련 비용에 대한 용자조건을 개선하고, 용자사업 대상을 확대*
 - * 사업대상 : 코워킹커뮤니티 시설조성, 창업시설조성, 상가리모델링 등
 - (임대주택) 지역내 수요맞춤형 임대주택 공급·관리를 위한 기금용자 및 보증에 대해 별도기준을 마련*하여 자금조달 지원
 - * (기금용자) 사업성·수행능력·신용도 평가요건 완화, 토지담보 등 검토 (보증제공) 금융기관으로부터 건설·매입자금 대출시 대출 원리금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급 보증하는 방안 검토
 - ② (사업심사) 도시재생 지역 선정시 주민주도 조직 역량 강화 및 사업참여 여건을 평가항목에 반영(국토부 공모·선정 지침 개정)

1. 현황

- (필요성) 노동집약적 특성*에 따라 일자리창출 기여도가 높으며,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권 증진에도 기여

* 문화예술 분야 취업유발 계수(명/10억원) : (공연예술) 22.9, (산업평균) 12.9

** 소득양극화 및 문화예술 인프라에 대한 낮은 지리적 접근성에 기인

- 문화예술 자원(지역의 유휴 문화예술 인력, 공연시설 등)을 활용한 사업모델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득창출 가능

* 마을 오케스트라, 미술·무용단 창단, 지역영화관·미술관 확충 등

- 지역기반 인프라 확충으로 지리적 장애 해소 및 문화소비 증진

※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 비수도권 기초지자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작은영화관을 개설하여 지역간 문화불균형 해소

▪ (성과) '16년 기준 19개 영화관에서 주민 108만명이 영화를 관람

- 프랑스의 경우 문화예술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주요 활동분야 중 하나이며, 문화예술 조직의 약 1/3이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에 해당

- (문제점)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의 문화예술 활동은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문화예술 분야에 특화된 지원정책 부족

* (사회적기업) '08년 11개 → '16년 238개(총 1,713개 중 13.9%)

(협동조합) '13년 77개 → '16년 1,641개(총 10,640개 중 15.4%)

- 문화예술 분야에 중요한 안정적 공간확보, 경영마인드를 겸비한 전문인력의 양성, 소비기반 확대 등 정책적 배려 필요

2. 개선방안

① 창작활동 기반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정책을 실시(문체부, 행안부)

- ① 재원조달, 홍보·판로지원, 수요기반 사업개발 지원 등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시장진입 여건을 조성
- ② 문화예술 창작·공연·사업운영 공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유희·공공시설 지원
 - 지자체 공유재산 임대료 할인지역 확대*, 공간 사용료 할인, 공간 우선 사용권 부여 등을 위해 지자체 참여 유도

* 서울시·대구시 사례: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임대료 부과기준 완화 적용(재산평정 가격의 5% 이상 → 1% 이상)

② 사회적경제기업을 중심으로 문화공간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지역 관광·체육 진흥사업을 활성화(문체부)

- ① (문화시설) 지자체 문화시설·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위탁기관 선정시 사회적경제기업에게 가점부여 및 홍보·컨설팅 등 지원
- ② (지역관광) 지역주민 참여형 협동조합 중심으로 지역관광전문인력(관광두레 PD) 및 주민사업체 선발, 자금·교육 등 지원
- ③ (생활체육) 지자체 생활체육시설 및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고,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회적경제기업 등과 연계 추진
- ④ (행사·공연) 정부·공공기관·지역문화재단 등의 행사·공연 위탁시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유도*

* (예) 지역문화재단이 지역문화행사 개최 시 설립 3년 이내 협동조합의 위탁기관 선정대상에 포함

1. 현황

- (필요성) 본점·지점간 이익공유*, 상생·협력기반의 사회적경제 기업 특성상 프랜차이즈 단점 보완 및 사업성공 가능성 제고

* 가맹점이 가맹본부를 공동 소유하는 수평적 조직으로, 분쟁 소지가 없음

- 규모의 경제를 통해 양질의 창업환경을 제공하고, 기존 프랜차이즈 모델의 틈새시장을 공략하여 다양한 분야 일자리 창출

※ (와플대학 협동조합) 와플 판매 노점에서 시작하여 협동조합으로 성장, 초과수익을 본점과 가맹점이 공유하는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운영
 ▪ (성과) '13년 12개 매장에서 '17.上 전국 43개 매장으로 확대

- 프랑스의 경우는 소매점포의 30% 이상이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로서 사회적경제기업의 프랜차이즈 분야 참여가 활발

- (문제점) 불공정행위 억제 등 상생모델로서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진출분야 편중*·경험부족 등으로 활성화 제약

* 외식업 73%, 교육·미용·세탁 등 서비스업 18% 등

- 외식업종 편중 현상 극복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사업 모델 개발, 전문인력 및 네트워크 확보 등 필요

2. 개선방안

- 규모의 경제를 통해 경영성과 달성이 용이하고 기존 프랜차이즈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형 협동조합* 육성(중기부)

* 사업자들(점주)이 공동으로 가맹본부를 협동조합 형태로 설립하거나, 기존 협동조합이 가맹점주(조합원·비조합원)와 프랜차이즈 형태로 사업운영

- ① (공모사업) 프랜차이즈 사업운영이 적합하면서 소경영의 장점이 상대적으로 큰 업종*의 협동조합 설립·운영을 지원

* 소상공인, 음식사업자, 제과점주, 숙박업자, 운송사업자 등

-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스템 구축 컨설팅, 브랜드 개발, IT 환경(모바일·웹페이지) 구축 등 지원

- ② (기반조성) 업종별로 적합한 공동사업 모형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을 통해 프랜차이즈형 협동조합 확산 기반을 마련

- 국내·외 사례 검토, 규모화, 사업영역 개발, 전문인력 확충 등 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5 소셜벤처 분야

1. 현황

- (필요성) 사회문제 해결을 추구하면서 혁신성·성장성을 보유한 소셜벤처 활성화 및 창업 촉진

- 소셜벤처는 경제적 가치 창출과 동시에 양극화 해소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

- (문제점) 소셜벤처는 태동기인 만큼 창업·성장 등을 지원하는 민간 중심의 생태계가 미성숙

- 민간의 임팩트(Impact) 투자* 기관이 적고, 소셜벤처 투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소셜벤처 발굴·육성의 기반이 부족

* 재무적 수익을 달성함과 동시에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2. 개선방안

① 임팩트(Impact) 투자펀드 조성(중기부)

- 모태펀드에서 출자하여 소셜벤처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1,000억원 규모의 'Impact 투자펀드' 신설('18년)
 - 투자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Two-track으로 펀드를 운영
- (i) 민간 벤처캐피탈(이하 VC)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모태펀드와 민간이 8:2로 출자하여 펀드 결성 후 VC가 펀드를 운영
- (ii) 임팩트투자기관 등의 투자촉진을 위해 엔젤 투자자 등이 소셜벤처 등에 先투자 後신청을 하면, 先투자금액에 매칭 투자
 - * 美 중기청(SBA)은 민간출자의 2배를 매칭하는 임팩트펀드 운용('11~'15, 10억\$)

② 소셜벤처 육성을 위한 신규 틱스(TIPS*) 운영사 선정(중기부)

- *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 성공벤처인 등 민간(운영사)을 활용하여 창업팀 선별, 민간투자-정부R&D를 연계하여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 촉진
- TIPS 프로그램을 통해 소셜벤처에 중점 투자하는 운영사를 신규 선정(가점 부여)하여, 우수 소셜벤처 육성*('18년)
 - * 운영사에게 소셜벤처 등 연간 5~10개 내외의 창업팀 추천권 TO를 배정하고, 최종 선정된 창업팀은 정부 R&D자금(5억원), 사업화·마케팅(2억원) 등 최대 10억원 지원
- 등록 액셀러레이터(창업지원법, 41개) 등을 대상으로 참여의사 및 투자실적 조사 후 추진('18)

③ 민간의 임팩트 투자 활성화 지원(중기부)

- 「(가칭) 소셜벤처 활성화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18)하여 민간투자의 저변을 확대
 - * 중기부, VC, 한국벤처투자, 소셜벤처 기업인, 전문가 등 10인 내외
- 소셜벤처 평가모형 개발·보급, 성공사례 공유·확산, 투자애로 의견수렴 및 제도개선 등 임팩트 투자 활성화 지원

④ 소셜벤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정보 제공(중기부)

- 창업정보 종합플랫폼*(K-startup)을 활용하여 지원정책, 관련정보 등을 종합 제공

* www.k-startup.go.kr : 창업진흥원은 창업자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정부, 지자체, 민간 등의 창업지원정보(104개 기관)를 한 곳에 모아 제공 중('14~)

- 소셜벤처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별도의 정보제공 메뉴신설, 정기 메일링 서비스 등으로 맞춤형 창업지원 정보 제공

6 지역기반 연계 분야

1. 현황

- (필요성) 지역사회 기반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하는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내 인적·물적자원 활용이 중요

- 지역내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격차 해소에도 기여
- 사회적경제가 발전한 주요 국가의 경우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기업이 지역사회 내에 뿌리내려 성장한 경우가 다수

* (예) 캐나다 퀘벡주는 이민자 공동체가 생산·소비 등을 공유하면서 형성한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된 대표적 국가

- (문제점) 농·수협 등 지역별 지원기관 또는 지자체 차원에서 개별법에 따라 인건비·사업비 등 보조금 중심으로 지원 확대

- 지역별 네트워크 활용·사업기반 강화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질적 성장보다는 자금지원을 통한 양적 성장만을 유도

2. 개선방안

① 지자체 연계 사회적경제 활성화(행안부)

① (마을기업) 지역주민 중심의 마을기업 집중 육성

- '22년까지 600개 마을기업 추가 설립* 및 6,600개 일자리 창출 목표 달성을 위한 마을기업 발전방안 마련**

* 인증 확대를 통한 마을기업 창출: ('16년) 1,446개 → ('22년) 2,046개

** 청년 전문경영인 발굴·육성, 관광·문화 등 업종 다변화 등

-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사업기획·경영컨설팅 등 인큐베이팅 지원을 위한 예비마을기업* 제도 확산

* '16년 기준 경기·광주·세종 등 6개 시·도에서 시행중

② (공유재산) 유희 공유재산 대부를 위한 지역영향평가*에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0.5~1점, 공유재산운영기준 개정)

* 종합평가 = 능력평가(재무상태·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70%) + 가격평가(입찰가격, 30%)

② 농·어촌기반 사회적경제 활성화(농림부, 해수부)

① 농·어촌 특화형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 (농업 분야) 농업활동을 토대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프로그램을 지원*

* 「(가칭)사회적 농업법」 제정을 통해 사업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

- (수산업 분야) 어촌지역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수산분야 진입* 활성화

* 어촌계 이중 가입제도 개선 등 신규 어업인 어촌 진입장벽 완화 추진

② 농협·수협을 통한 자금지원 강화 및 판로확대

- (수협자금) 담보 및 신용대출 적격성 심사시 신용등급·자금용도 등을 별도로 고려하고, 우대금리를 적용
- (농협자금) '농촌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클라우드 펀딩 활용 등을 통한 자금확보 지원

* 지자체가 기금조성 시 농협이 적극 참여

- (판로지원) 공영홈쇼핑 방영지원(수수료를 인하), 농협·수협 판매장 內 입점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 판로를 확대

③ 지역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산업부, 농림부)

① (에너지연계형) 마을주민 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보급모델 제시·확산

- (지원센터) 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17.7월 개소) 기능 강화를 통한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추진 지원* 및 애로해소 추진

* 사전 사업성 검토, 업체 계약, 자금 조달, 조합지원 등 추진지원

- 농업용 저수지·담수호 등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에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추진

* 저수지 등 활용시 5,966MW(원전 6기) 용량 확보 가능(3만5천명 일자리 창출)

② (맞춤형 지원)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장, 생태계 조성을 지원

- (기술지원) 기술혁신 수요분석·유형화, 공통기술개발·이전
- (판로) 유통, 관광 등 주요 행사와 연계하여 판로 지원

* 지역박람회, 코리아세일페스타, 소비재대전 등과 연계

- (홍보) 지역희망박람회 개최시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전시관 별도 마련

③ (지역별 중점 육성분야) 시도별 중점 육성 분야*를 선정,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장 지원

* 사회적경제가 가지는 긍정적 이미지(안심, 안전), 지역자원 활용성(에너지, 연고 자원), 사회적 가치(취약계층, 복지) 등 분야의 지역의 자율적 선정

** 사회적경제 중간조직, 지역혁신기관, 대학, 출연연 등

VI. 기대효과

성 숙 기 도 약 기 반	역량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 인프라 구축을 통한 자생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으로 경쟁력 제고 ▶ 진출분야 확대를 통한 순기능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별 장애요인 극복 및 사회적경제 파급효과 극대화
	성장 동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적 고용환경 등 양질의 일자리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창출 및 근로여건 개선(임금수준·근속기간 등) 병행 ▶ 유휴인력 고용확대 등 노동력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 소외계층의 고용시장 진입으로 저출산·고령화 대비
	사회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 고용창출 등 소득양극화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저소득계층 등 고용 취약계층 소득창출 기회제공 ▶ 복지 사각지대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외계층의 복지 접근성 제고 등 사회안전망 보완 ▶ 지역공동체 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기반·주민직접참여 등 공동체 구성원 삶의 질 향상
포 용 성 장 견 인	사회적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의 위상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의 인식과 중요성이 확대 ▶ 사회적가치 공감대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신뢰·가치를 우리 사회의 주요 운영원리로 격상
	지속적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관협력 기반구축으로 상생협력 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성장 패러다임 전환 ▶ 정의롭고 따뜻한 성장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의 효과를 공평하게 나누는 포용적성장으로 전환

별첨

과제별 추진일정

연번	정책과제(10개 분야, 88개 과제)	일정	부처
① 통합 지원체계 (2개 과제)			
1-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3법 제정	'17.下	기재부 고용부
1-2	관계부처 협의체 구성 및 사회적경제발전위 설치	'17.下~	기재부
② 금융접근성 제고 (13개 과제)			
2-1	신보·지신보의 보증지원 한도 확대	'17.下	금융위 중기부
2-2	신보·지신보의 보증지원 적용대상 확대	'17.下	금융위 중기부
2-3	정책자금 內 사회적경제기업 총액 대출목표 신설	'17.下	중기부
2-4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평가모형 마련	'18.上	금융위 중기부 고용부
2-5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투자펀드 확대 운용	'17.下	금융위
2-6	사회성과보상사업 확대 (근거법 제정, 표준조례 배포, 운용 매뉴얼 개발)	'18.下	행안부
2-7	사회적기업에 대한 크라우드펀딩 투자기반 조성	'18.上	금융위
2-8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부금 인정제도 사회적협동조합에 적용	'18.上	기재부
2-9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지방세감면 조례 확대 유도	'17.下~	행안부
2-10	사회적경제기업 국유건물 입주시 우대(국유재산특례법 개정)	'18.上	기재부
2-11	정부 불용품 무상양여 대상 확대(물품관리법 개정)	'18.上	기재부
2-12	신협외 대출 외 출자 허용	'18.上	금융위
2-13	투자조합원 제도 도입 (협동조합기본법 개정)	'18.下	기재부
③ 판로확대 지원 (12개 과제)			
3-1	낙찰기준에 사회적 가치 반영 원칙 신설 (국가계약법 개정)	'18.下	기재부
3-2	종합심사낙찰제도 심사기준 조정 (기재부 예규 개정)	'18.上	기재부
3-3	물품·용역 입찰 가점 확대 (기재부 예규 및 행자부 예규 개정)	'18.上	기재부 행안부
3-4	수의계약 제도 신설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18.上	기재부 행안부
3-5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공공구매 우수사례 발굴·공유	'18.上	기재부 고용부

연번	정책과제(10개 분야, 88개 과제)	일정	부처
3-6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제도 개편 (국가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편람 개정)	'17.下	기재부 행안부
3-7	통합온라인 사이트 확대·개편 (예산안 반영)	'18.上	고용부
3-8	기존 유통채널 연계 강화 (예산안 반영)	'18.上	고용부
3-9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 (예산안 반영)	'18.上	고용부
3-10	상품경쟁력 강화 지원 (예산안 반영)	'18.上	고용부
3-11	수출마케팅 지원 대상기업 평가시 가점 부여	'18.上	산업부
3-12	공동 해외진출사업 시 우대선정 및 지원	'18.上	중기부

4 인력양성 체계 강화 (19개 과제)

4-1	사회적경제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18.下	교육부
4-2	시·도 교육청의 교과목 신설 및 인정 교과서 개발 지원	'18.下	교육부
4-3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마련	'17.下~	교육부
4-4	노인·경력단절 여성 등 재취업 훈련 프로그램에 사회적 경제 교육 보급·확대	'18.上	여성부 복지부 행안부
4-5	공무원, 공공조달 담당자 대상 교육과정 신설	'18.上	조달청
4-6	평생학습 도시, 행복학습센터 활용한 교육 확산	'18.上	교육부
4-7	지역 현장조직을 활용한 실무·전문교육 실시	'18.上	행안부
4-8	강사 인력풀 구축, 현장교육 지원 확대	'18.上	행안부
4-9	사회적기업 리더 과정 확대 운영	'18.上~	고용부
4-10	사회적경제 관련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확대	'18.上	교육부
4-11	지역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18.上	고용부
4-12	체계적인 전문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18.上	고용부
4-13	청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확대 (예산안 반영)	'18.上~	고용부
4-14	'소셜캠퍼스 온' 조성·운영	'18.上~	고용부
4-15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대상 확대	'18.上~	고용부
4-16	창업 아이템별 교육, 멘토링, 사업화 비용 지원	'18.上~	중기부
4-17	출연(연), 대학 등과 연계한 R&D서비스 및 사회적경제 기업의 수요 유형별 R&D 지원	'18.上~ 19.上~	산업부 과기부
4-18	기획역량강화교육 사업 선정시 사회적경제기업 우대	'18.上~	중기부
4-19	국내외 우수 교육과정 벤치마킹을 통한 대학창업교육 콘텐츠 제작	'18.上~	교육부

연번	정책과제(10개 분야, 88개 과제)	일정	부처
----	----------------------	----	----

5 사회서비스 분야 (11개 과제)

5-1	사회적협동조합 인식 개선 (업무편람 개정)	'17.下	복지부
5-2	수탁자 선정시 문제법인 수탁금지 (업무편람 개정)	'19.上~	복지부
5-3	워크숍 개최 및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마련 (업무편람 개정)	'18.上	복지부
5-4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이용확대 유도 및 정보접근성 제고	'18.下~	복지부
5-5	요양서비스분야 종사자 고용안정화 (고시 개정)	'17.下	복지부
5-6	지역내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업 강화 (업무편람 개정)	'18.下	복지부
5-7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여 및 활동 지원 (업무편람 개정)	'18.上	복지부
5-8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완화 (지침 개정)	'18.下	복지부
5-9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 ·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 유도	'18.下~	복지부
5-10	지역특화 사회서비스 개발 · 운영	'18.上~	복지부
5-11	사업비 · 행정적 지원을 통한 시범사업 실시 (예산안 반영)	'18.下~	복지부

6 주거환경 분야 (6개 과제)

6-1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도입 (운영지침 수립)	'17.下	국토부
6-2	지역내 전문가 매칭지원 및 타사업 공유	'17.下~	국토부
6-3	역량교육 실시 및 1:1 컨설팅 제공	'17.下~	국토부
6-4	도시재생비용 융자조건 · 사업대상 확대 (기금운용계획 개정)	'17.下~	국토부
6-5	임대주택 기금융자 및 보증 기준 마련 (기금운용계획 개정)	'17.下	국토부
6-6	도시재생사업 공모 참여시 인센티브 부여	'17.下	국토부

7 문화예술 분야 (6개 과제)

7-1	시장진입 여건 조성방안 마련	'18.上~	문체부
7-2	유희 · 공공시설 지원 (지자체 조례 개정 및 지침 마련)	'18.上	문체부 행안부
7-3	문화시설 · 프로그램 위탁기관 선정시 참여 유도 (예산안 반영)	'18.上	문체부
7-4	관광두레 육성사업 지원 (예산안 반영)	'18.上	문체부
7-5	생활체육시설 및 스포츠클럽 확충 (예산안 반영)	'18.上	문체부

연번	정책과제(10개 분야, 88개 과제)	일정	부처
7-6	행사·공연 위탁시 참여 유도 (예산안 반영)	'18.上	문체부
Ⅷ 프랜차이즈 분야 (2개 과제)			
8-1	프랜차이즈형 협동조합 육성 (예산안 반영)	'17.下~	중기부
8-2	과제발굴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예산안 반영)	'17.下~	중기부
Ⅸ 소셜벤처 분야 (4개 과제)			
9-1	임팩트(Impact) 투자펀드 조성	'18.上	중기부
9-2	TIPS 운영사 선정	'18.上	중기부
9-3	(가칭) 소셜벤처 활성화 민관협의체 구성	'18.上	중기부
9-4	소셜벤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정보 제공	'18.上	중기부
Ⅹ 지역기반 연계 분야 (13개 과제)			
10-1	마을기업 발전방안 마련 (예산안 반영)	'17.下	행안부
10-2	예비마을기업 제도 확산 (예산안 반영)	'18.下	행안부
10-3	공유재산 대부 관련 지역영향평가지 가점부여 (운영기준 개정)	'18.上	행안부
10-4	사회적 농업 활성화 (사회적 농업법 제정, 예산안 반영)	'18.下	농림부
10-5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 (표준규약 제정)	'18.上	해수부
10-6	수협 담보·신용대출 적격성 심사 별도 기준 마련	'18.上	해수부
10-7	농협이 기금·클라우드펀딩 등을 통한 자금지원	'18.下~	농림부
10-8	농·수협 온·오프라인 판로를 통한 판매지원	'17.下~	농림부 해수부
10-9	컨소시엄 구성·운영을 통한 성장지원 (예산안 반영)	'17.下~	산업부
10-10	마을주민 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보급모델 확산	'18.上~	산업부
10-11	유통, 관광 등 주요행사와 연계한 판로지원 (예산안 반영)	'17.下~	산업부 농림부
10-12	지역희망박람회 별도 전시관 마련 (예산안 반영)	'17.下~	산업부
10-13	사회적경제 기술 지원 (예산안 반영)	'17.下~	산업부

사회통합적 평창동계올림픽 유산(Legacy) 창출 방안

2017. 12.

관계부처 합동

사회통합적 평창동계올림픽 유산(Legacy) 창출 방안

※ (주요내용) 공감과 치유(소외계층 참여확대 등), 상생과 협력(사회적경제 연계 등), 지역혁신(대회경기 지역발전 기반 조성 등), 평화와 화합(북한참가 등 평화올림픽 개최)의 올림픽 추진

1. 추진 배경

- 최근 개최국민의 자긍심 고취와 사회 통합의 도모, 개최지역의 지역발전 등 올림픽 개최과정에서 창출되는 올림픽 유산*의 중요성이 부각

* 올림픽 유산(Olympic Legacy) : 대회개최 준비, 개최과정을 통해 축적된 유무형의 자산을 의미

- IOC 또한 대회 개최 비용을 정당화하고 대회 유치 및 개최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수단으로 올림픽 유산을 강조*

* IOC헌장 제2조 14항, "올림픽 대회가 개최도시와 개최국에 긍정적 유산을 남기도록 장려한다"

■ (2012 런던올림픽) 사회통합과 지역공동체 발전을 골자로 하는 "올림픽 유산" 계획 수립*을 통해 국민공감대를 조성하고 유치 반대여론을 극복

* ① 대회 후 재사용계획을 포함한 시설투자, ② 슬럼가인 런던 동북부 지역경제 재건, ③ 지속가능한 친환경 올림픽, ④ 대회운영에 소외계층 참여 확대 등

-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사회통합적 유산' 창출 계기로 활용

- 사회적 계층, 경제적 빈부, 지역에 따른 갈등이 나타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올림픽 개최는 사회통합을 이룰 기회
- 올림픽 개최를 통해 취약계층 사회참여, 경제적 파급효과의 지역사회 선순환 등 개최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 사회통합의 유산을 창출

2. 추진 방안

◇ 사회통합과 평화증진에 기여하는 평창올림픽 유산 창출

- ① (공감과 치유) 소외계층 참여 확대, 사회통합 인식 교육, 청년·퇴직자 경력개발 지원 등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올림픽 개최
- ② (상생과 협력) 판매공간 조성 및 대회 관련 물품조달 등 사회적경제·지역경제의 올림픽 참여를 통해 상생과 협력의 경제구조 확산
- ③ (지역혁신) 대회시설 사후활용, 지역관광 활성화 및 관광유산 창출 등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기반 조성 및 지역혁신 달성
- ④ (평화와 화합) 남과 북, 동계스포츠 변방국이 함께하는 올림픽 추진을 통해 인류화합과 평화증진이라는 올림픽 정신 구현

(1) 공감과 치유 -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올림픽 개최

□ 사회적소외계층 및 지역주민의 대회참여 기회 확대

- (자원봉사) 장애인 등 사회적소외계층을 포함한 대회 자원봉사 선발* 및 성화봉송 주자에 소외계층 참여** 추진

* 선발 현황(완료) : 총 20,840명 (장애인 71명, 외국인 1222명 / 20-30대 청년층 17,849명(85.6%))

** (올림픽) 7,500명(10% 이상을 사회적소외계층으로 구성) / (패럴림픽) 800명(소외계층 포함 주자 선발예정)

- (대회관람지원) 공공기관·기업의 사회공헌사업 및 지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소외계층·지역주민 등에 관람 기회 제공

※ 사례 ① (지자체) 자체예산을 활용, 지역 내 소외계층 등에 입장권 우선 배분 예정
② (현대백화점) 순직경찰관·소방관 유자녀 160여명 대상 올림픽경기 관람지원
③ (대한장애인체육회) 17개 시도 교통약자 특별 수송 및 경기 관람프로그램 운영 예정

□ 올림픽 계기 사회통합 인식 제고

- (접근성개선) 패럴림픽 계기 개최도시 민간시설(숙박업소·공중화장실) 장애인 접근성 개선 및 이동편의 지원(저상버스 등) 등 무장애관광도시 유산 창출
-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연계) 패럴림픽 개최 전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18~'22) 발표*, 사회통합에 대한 정부 의지를 표명하고 대회 홍보

* '장애인의 평등한 사회참여' 등 사회통합적 비전 및 새정부의 장애인정책 로드맵 제시

- (인식교육) 패럴림픽 홍보를 법정의무교육인 장애인식개선교육에 포함하고, 패럴림픽 및 장애인식개선에 대한 공동 홍보 추진(조직위-장애인개발원)

□ 장애인·퇴직인력 등 경력개발 지원

- (퇴직인력참여) 만 50세 이상 퇴직전문인력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평창올림픽과 연계하여, 대회운영 등 지원*

* 참여수당(시간당 2천원)을 지급받음에 따라 조직위 단기고용 인력 등 자원봉사자와 역할차별화

- (능력개발) 대회 봉사활동을 통해 습득한 경험·노하우와 연계된 직업 능력개발 훈련과정 수업을 지원*

* (대상) 올림픽패럴림픽 자원봉사자 / (내용) 훈련 상담 및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훈련비 지원 등

[2] 상생과 협력 - 올림픽과 통한 사회적경제 · 지역경제 활성화

□ 사회적경제기업, 지역기업 홍보 및 판매공간 조성

- (팔도장터명품관) 대회 기간 중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의 우수 제품을 홍보·판매하는 팔도장터 명품관 운영(강릉·평창 각 1개소 / 2,100여개 품목)
- (사회적경제상품관) 대회 기간 중 사회적경제기업 상품관을 운영하여 제품 전시·판매 및 사후 판로개척 지원(강릉 1개소 / 200여개 품목)
- (시·도의 날) 대회기간 지역별 문화예술공연 및 홍보관, 대회 집중 관람 등 16개 시·도가 올림픽에 참여하는 '시·도의 날' 행사 개최

□ 올림픽과 사회적경제·지역경제 연계 확대

- (공공조달) 올림픽대회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및 로컬푸드 납품을 추진하여 제품 홍보 및 인지도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실적) 대회인력에 대한 사회적경제기업 도시락 납품(700명), 강원도 특산품 8종(오대쌀, 횡성·평창한우, 인삼, 감자, 영월·정선사과, 솔래원 와인) 공식서포터스로 참여 등
(계획) 메밀차 한과 등 식품서비스 참여 추진 조달공고 시 사회적경제 및 지역기업 우선 사용 권고 등
- (스폰서연계) 대회후원사와 연계한 사회적기업 라이선싱 상품 제조 참여를 통해 후원기업의 이미지 제고 및 사회적경제기업의 수익증대
※ 참여업체(3개) : 공공공간(서울 포장용보자기), 만들레누비(경남, 패션잡화), 쿠키아(전남, 두부과자)

[3] 지역혁신 -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기반 조성

□ 올림픽 계기 지역발전 모색

- (시설사후활용) 관계기관 TF를 운영, 지역 생활체육 시설 등 대회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사후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활성화
- (지역맞춤형일자리) 대회 이후 올림픽 시설을 활용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을 통해 양질의 지역일자리 창출

* 사후활용 일자리 제안(지자체, 18년도 사업공모 시) → 선정 후 실무교육, 취업연계 등 구직자 지원

- (후원사 사회공헌) 대회후원사 중 사회공헌사업을 실시한 기업을 지속가능 파트너로 선정하여 지속적 사회공헌 유도(추가 마케팅권 부여, 홍보 실시 등)

※ (사례) ① KT : 산간오지(평창)에 기가인터넷 인프라 구축 및 IT기기 활용강좌 제공

② 코카콜라 : 평창 삼정호 일대 습지 생태계 유지사업 지원

③ 삼성화재 : 강릉 주영초등학교에 학교 숲을 조성, 교육프로그램 지원

□ 지역관광 활성화 및 관광유산 창출

- (관광인프라) 올림픽 계기 지역 교통인프라(표지판, 터미널 등) 및 숙박업소 (메뉴, 안내판 등) 준비를 통해 도시경관 개선 및 지속가능한 관광유산 창출
- (공정여행) 올림픽과 연계한 취약계층 공정여행프로그램을 기획·운영(사회적기업진흥원 TF구성)하여 사회적가치 창출

※ 공공·민간기업 CSR 네트워크 연계 추진 (CSR 프로그램을 활용한 티켓 기부 등)

- (농촌관광) 대회 개최지역 연계 농촌여행상품 운영*(12종) 및 농어촌 민박 홍보 및 개선**을 통해 내·외국 관광객 대상 농촌관광 활성화

* 내국인 기차여행상품 3종, 외국인 여행상품 9종 운영 중

** 우수 농어촌민박시설 소개, 농어촌민박 시설개선(16년 50개소 완료, 17년 330개소) 추진 중

[4] 평화와 화합 - 평화증진과 인류화합의 올림픽정신 구현

- (지자체서포터즈) 동계스포츠가 생소한 출전국의 선수단과 지자체 결연을 통해 선수단 환영, 경기응원, 결연국가 시·도초청 등 서포터즈 활동 추진

※ 현재 92개국 사전신청, 시도 수요조사 후 약 30개국 선정 및 지자체 매칭 예정(17.12)

- (평화올림픽) IOC 등 국제기구와 지속 협력, 북한선수단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위해 노력하여 평화올림픽 실현

참고

세부 과제별 주요내용 및 일정

연번	정책과제(4개분야 21개 세부과제)	일정	기관
----	---------------------	----	----

① 공감과 치유 -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올림픽 개최

1-1	자원봉사자 및 성화봉송 주자에 소외계층 참여 - (내용)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포함한 자원봉사자 선발, 성화봉송 주자의 10%이상을 소외계층으로 구성	'18.2~'18.3	행안부
1-2	소외계층·지역주민 등 대회관람 지원 - (내용) 지자체별 입장권 단체구매, 사회공헌사업 연계 등을 통한 소외계층 대회관람기회 제공	'17.9~'18.3	행안부
1-3	개최도시 장애인접근성 개선 - (내용) 장애인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숙박업소 및 공중화장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경사로, 자동문 등)	~'17.12	강원도
1-4	패럴림픽 계기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발표 - (내용) 패럴림픽을 앞두고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발표하여 사회통합 메시지를 전달하고 패럴림픽 홍보	'17.11~'18.3	복지부
1-5	장애인식교육과 패럴림픽 홍보 연계 - (내용) 기 추진 중인 장애인식개선 교육에 패럴림픽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대회성공 및 장애인체육 인식 개선	'18.2	복지부
1-7	퇴직전문인력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연계 - (내용) 만50세 이상 퇴직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올림픽 대회 운영 및 부대행사 지원	'17.11~'18.3	고용부
1-8	자원봉사자 대상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 지원 - (내용) 대회자원봉사자에 대해 활동과 연계된 직업개발 훈련과정 수강을 지원(훈련상담, 훈련비 등)	'18.2~'18.6	고용부

② 상생과 협력 - 사회적경제 및 지역경제 연계

2-1	팔도장터명품관 운영 - (내용)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의 우수제품을 홍보·판매하는 명품관 운영(평창, 강릉 / 2,100개 품목)	'18.1~'18.3	강원도
2-2	사회적경제상품관 운영 - (내용) 전국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을 판매 및 홍보하고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는 상품관 운영(강릉 / 200개 품목)	'18.1~'18.3	강원도
2-3	시·도의 날 개최 - (내용) 시도 홍보관, 문화예술공연, 특산품관, 지역별 대회 집중 관람 등 전국 지자체가 참여하는 '시·도의날' 개최	'17.9~'18.3	행안부

연번	정책과제(4개분야 21개 세부과제)	일정	기관
2-4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및 로컬푸드 공공조달 - (내용) 올림픽 행사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및 로컬푸드 납품 추진(사무용품, 식음료 등)	~'18.3	조직위 강원도
2-5	대회스폰서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 연계 - (내용) 대회 라이선싱 상품 제조 등 대회후원사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계 추진	~'18.3	조직위 강원도

③ 지역혁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기반 조성

3-1	대회시설 사후활용을 통한 개최도시 유산창출 - (내용) 관계기관 TF를 통해 대회시설 사후활용방안을 도출하여 스포츠시설 등 대회 유산 창출	~'18.3	강원도 등
3-2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 사업 지원 - (내용) 기 추진 중인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에 올림픽시설을 활용한 사업 제안시, 적극 선정하여 지원	'18.3~	고용부
3-3	대회후원기업 사회공헌사업 장려 - (내용) 개최지역 사회공헌사업 실시 후원사에 '지속가능 파트너' 자격을 부여하여 추가 홍보 등 인센티브 제공	'18.3~'18.12	조직위
3-4	지역 관광인프라 정비(교통인프라, 숙박업소 등) - (내용) 올림픽을 계기로 숙박(간판, 메뉴판 등), 교통인프라(표지판, 도로시설물 등) 및 도시경관 일제 정비	~'17.12	강원도
3-5	취약계층 대상 올림픽연계 공정여행프로그램 운영 - (내용) 공정여행 사회적기업과 연계, 다양한 취약계층대상으로 올림픽을 관망하고 지역문화를 체험하는 여행프로그램 운영	'17.11~'18.2	사회적기업 진흥원
3-6	개최지역 연계 농촌여행상품 운영 및 농어촌민박 홍보 - (내용) 농촌관광상품(12종) 운영 및 농어촌민박 시설개선	'17.10~'18.2	농식품부 강원도

④ 평화와 화합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기반 조성

4-1	동계스포츠 변방국 대상 지자체 서포터즈 활동 - (내용) 대회 참가선수단과 지자체 1대1 결연을 통해 선수단 응원, 지역 초청 등 서포터즈 활동 추진	'18.2~'18.3	행안부
4-2	북한 참가 등 평화올림픽 개최 - (내용) 국제공조를 통한 참가 독려 등 북한선수단의 올림픽 참여 추진	'18.11~	문체부 등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

2018. 2. 8

관계부처 합동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

2018. 2. 8

관계부처 합동

목 차

I . 사회적경제의 개념 및 지원체계	57
II . 사회적금융의 개념·현황 및 평가	59
III . 사회적금융 해외사례	63
IV . 사회적금융 활성화 추진방안	66
1. 기본 방향	66
2. 사회적금융시장 조성 지원	68
3. 사회적금융 공급확대	71
4. 사회적금융 인프라 확충	78
V . 추진 일정	81

I. 사회적경제의 개념 및 지원체계

- 사회적경제는 구성원간 **협력·자조**를 바탕으로 재화·용역의 생산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경제적 활동을 의미
 - 경제활동이라는 측면에서는 시장경제와 유사하나, **연대와 협력, 민주적 운영**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점에서 차이
 - **일자리 부족, 양극화 확대, 복지수요 증대** 등 정부가 모두 감당하지 못하는 **사회문제**를 민간 스스로 해결
-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는 주요한 법·제도적 체계 등을 갖추는 도입기를 지나 고용·매출 등 **양적으로 성장하는 단계**에 진입
 - 개별 부처별로 취약계층 고용확대, 자활지원 등 목적으로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을 정의하여 다양한 지원을 실시중
 - 정부·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정책자금·보증을 제공하고 법인세 등 세제 혜택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혜택을 부여

<우리나라의 주요 사회적경제기업 유형·현황>

구 분 (시 행)	사회적기업 (2007년)	협동조합* (2012년)	자활기업 (2012년)	마을기업 (2010년)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목 적	취약계층 고용 창출, 서비스 제공	조합원 권익 향상, 지역 사회 공헌	수급권자 등의 자활 지원	지역환경 개선, 지역공동체 활성화
근거법률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기초생활보장법	행안부 지침
개수('16末)	1,713개	10,640개	1,149개	1,446개

* 농협, 수협, 신협, 생협 등 특별법에 의한 8개 개별협동조합도 사회적경제기업 범주에 포함

- 사회적경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0.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참고)을 마련·발표
 -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 접근성 확대**'를 목적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금번 사회적금융 활성화방안을 마련

참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목표 및 발전전략

◇ 사회적경제가 포용성장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 전환 및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Two-Track 발전전략 마련

- ① (인프라 구축) 사회적경제 성장단계별 특성에 맞는 시스템 구축
- ② (진출분야 확대) 사회적경제 파급효과가 큰 분야 집중 육성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한 협력성장 및 포용성장 견인

목표

사회적경제의
역량 제고

일자리 창출 등
성장동력 확보

공동체 복원 등
사회통합

추진 전략

성장 인프라 구축

진출분야 확대

정책 과제

통합 지원체계 및
정책방향 확립

* 기본법 제정 및 컨트롤타워 구축

금융접근성 제고

* 공적금융 확대 및 투자환경 개선

판로확대 지원

* 공공조달 확대 및 판로개척

인력양성 체계 강화

* 전문인력 양성시스템 구축 등

사회서비스 분야 진출

주거환경 분야 진출

문화예술 분야 진출

프랜차이즈 분야 진출

소셜벤처 분야 진출

지역기반 연계 분야 진출

추진 체계

민관협업 및 지역주도의 추진체계 구축
공공부문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

II. 사회적금융의 개념 · 현황 및 평가

1 사회적금융 개념

□ 사회적금융(Social Finance)은 사회적 가치(Social Value) 실현을 재무적 이익(Financial Return)과 함께 추구하는 금융

○ 협의로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투자·융자·보증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활동을 의미

*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및 사회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사회적경제활동(공공성이 큰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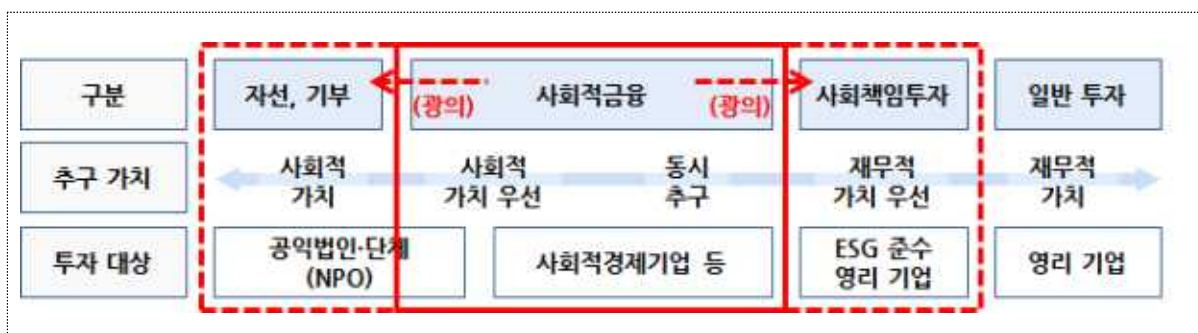
- 임팩트투자(Impact Investing)는 상업성에 기반을 두고 투자 방식으로 사회적금융을 수행하는 비교적 발전된 형태를 의미

○ 광의로는 추후 회수를 전제로 하는 투자·융자·보증뿐 아니라 보조금(Grant)과 자선행위(Philanthropy)도 포함하거나

- 사회적 가치를 넓게 적용하여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우수기업에 투자하는 사회적책임투자(SRI)까지 포괄

➡ 금번 방안은 사회문제의 효율적·효과적 해결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투자·융자·보증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에 중점

<사회적금융 개념>



□ 우리나라의 현재 사회적금융은 정부·공공재원을 중심으로 기존 중소기업·서민 정책금융 지원체계 내에서 수행중(☞참고)

○ 미소금융*과 중소기업정책자금 중 일부를 사회적기업에 대출 ('16년중 각각 9.5억원, 106억원)

* 미소금융은 민간사업수행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대출 실행

○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사업을 실시중이며, 서울시의 경우 별도기금 ("사회투자기금")을 조성하여 저리융자 ('16년중 207억원)

○ 신보와 지역신보에서 사회적기업·협동조합에 대해 일반기업에 비해 보증비율을 높인 특례보증 제공 ('16년중 각각 46억원·94억원)

○ 투자방식으로는 모태펀드內 사회적기업 펀드를 별도조성하여 민간 자금과 매칭을 통해 사회적기업에 투자 ('16년중 15.5억원)

□ 민간재원을 활용한 자발적인 사회적금융은 다양한 시도가 있지만 절대적인 규모는 크지 않음

○ 특정 대기업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사회적기업 및 전문인력 육성*과 함께 사회적금융 관련 사업을 실시

* '13년 KAIST 사회적기업가 MBA 과정 신설 등

○ 일부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은 공공자금外 민간부문에서 재원을 조달 하여 상업적 원리에 기반한 임팩트투자를 수행*

* 자금지원뿐 아니라 재무·회계, 경영, 마케팅 등에 대한 컨설팅을 병행함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의 성공가능성을 제고

○ 사회적경제단체가 공제형태의 자조기금을 조성하여 회원사인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도 존재

참고

사회적금융 관련 공공부문 사업현황

구분	사업명	내용	사업구조
대부	서민금융진흥원 (‘0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기업에 임대차보증금, 시설·운영자금 등을 대출 (대상)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한도) 1억 / (금리) 2~4.5%(사업수행기관별 상이) (상환) 원리금 분할상환(사업수행기관별 상이) (규모) ‘16년 9.5억원 (‘08~16년간 204억원) 	
	중소기업정책자금 (‘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사회적기업 포함)에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융자 / (대상)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한도) 45억원(수도권 이외 기업은 50억원) (금리) 정책자금기준금리에 연동(약 3%대) (절차) 중진공 접수 및 대상 결정 → 중진공(직접) 또는 금융기관(대리) 신용·담보부 대출 (규모) ‘16년 106억원 (‘10~16년간 304억원) 	
	서울시 사회투자 기금 (‘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융자 프로그램 운영 (대상)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한도) 2억 / (금리) 2% / (기간) 최대 5년 (사후관리) 반기마다 재무·사회지표 모니터링 (규모) ‘16년 207억원 (총기금규모 703억원) <p>※ 기금 재원으로 사회적기업 융자 외 소셜하우징 융자,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융자, 사회적 프로젝트 융자 프로그램도 운영</p>	
신용 보증	정책성 특례보증 (‘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신용보증 공급 (대상) (예비)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한도) 1억원 이내 / (상환) 5년 이상 (보증비율) 100% / (보증요율) 연 0.5% (규모) ‘16년 46억원 (‘12~16년간 211억원) 	
	사회적 기업전용 특례보증 (‘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기업에 특화된 특별보증 운용 (대상/한도) 사회적기업(4억원), 협동조합(5천만원) (보증비율) 영리 기업·조합 90%, 비영리 기업·조합 100% / (보증요율) 연 0.5% 이내 (상환) 5년 이내(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규모) ‘16년 94억원 (‘12~16년간 309억원) 	
투자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1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자본시장을 활용하여 사회적기업에 투자 (규모) 제1호 조합(42억원, ‘11년~, 투자종료), 제2호 조합(40억원, ‘12년~, 투자종료), 제3호 조합(60억원, ‘13년~, 투자종료), 제4호 조합(40억원, ‘15년~) (대상)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청년 등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참가자 등 (규모) ‘16년 15.5억원 	

□ 우리나라의 사회적금융은 ①태동단계로서 ②절대적인 자금 공급량이 부족할뿐만 아니라 ③관련 생태계도 미형성된 상황

① 사회적금융시장이 구축된 英·美에 비해 우리나라는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태동단계(“조화되지 않은 혁신”☞참고)에 해당

② 성장기에 들어선 사회적경제의 발전정도*(자금수요)에 비해 금융 공급이 부족한 사회적금융의 과소공급 상태가 지속**

* 사회적기업 평균 매출액(억원) : ('13) 11.7 → ('14) 12.0 → ('15) 13.4 → ('16) 15.8

** 사회적기업 자금조달('15, 고용부): 정부보조금(51.4%), 특수관계인 차입(43.6%)

- 공공부문 주도로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증대되는 사회적경제의 자금수요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

- 사회적경제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만기(인내자본 회망), 지원 수단(융자·보증에 편중) 등에서 수급간 미스매치도 발생

③ 사회적금융중개기관 등 생태계 구축이 미흡하고, 사회적 성과 평가 등 관련 시장 인프라도 미비(→거래·정보비용이 큼)

- 사회적금융을 복지제도로 혼동하거나 기대수익이 낮은 반면 위험은 높다는 인식 등으로 민간의 자율적 참여가 저조

※ (참고) 사회적금융시장의 발전단계

조화되지 않은 혁신 (우리나라)	시장 구축 (英·美)	시장가치의 포착 (英·美의 5~10년후)	시장 성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 요구와 정책 인센티브에 반응하여 산발적인 기업활동이 발생 언뜻 보면 성숙된 시장에서 각각의 혁신가들이 새로운 사업모델을 추구 시장의 상단을 제외하면 시장경쟁이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동의 중심이 발현하기 시작 거래비용을 낮추고 더 많은 활동을 지원하는 시장 인프라가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시장참가자가 사회투자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성장이 일어남 시장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이전 인프라에 투자한 고정 비용을 회수할 수 있음 조직들이 보다 전문화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동이 정상상태에 도달, 성장이 둔화 일부에서는 활동의 축소가 일어나기도 함

* 출처: Monitor Institute(2009), "Investing for Social & Environmental Impact"

III. 사회적금융 해외 사례

- ◆ 영국·미국·일본 등에서는 정부재정 및 공공재원(휴면예금)을 바탕으로 사회적금융 생태계를 구축(☞참고)
- ◆ 협동조합의 전통이 강한 유럽에서는 민간 중심의 사회적금융 지원체계가 자생적으로 발달

1. 정부재정 · 공공재원(휴면예금) 중심의 지원체계

가. 영국의 Big Society Capital (“BSC”)

- 지속가능한 사회투자시장을 형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12년 사회투자도매은행(Social Investment Wholesaler)인 BSC를 설립
 - 휴면예금 4억 £와 4대 대형은행의 2억 £출자로 재원(6억 £)을 조성하고, 정부 관여를 최소화*하여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
- * 최대주주인 Big Society Trust의 이사회(이사 8인으로 구성, 영국 내각부 이사 1인 포함)는 BSC 규정(보수·인사규정) 개정과 이사 선임권만 행사
- BSC는 민간자금과 매칭투자를 전제로 사회적금융중개기관(SIFIs)을 통해 간접지원 → 생태계 구축 및 시장조성 기능 수행

나. 미국의 지역개발금융기관 기금 (CDFI F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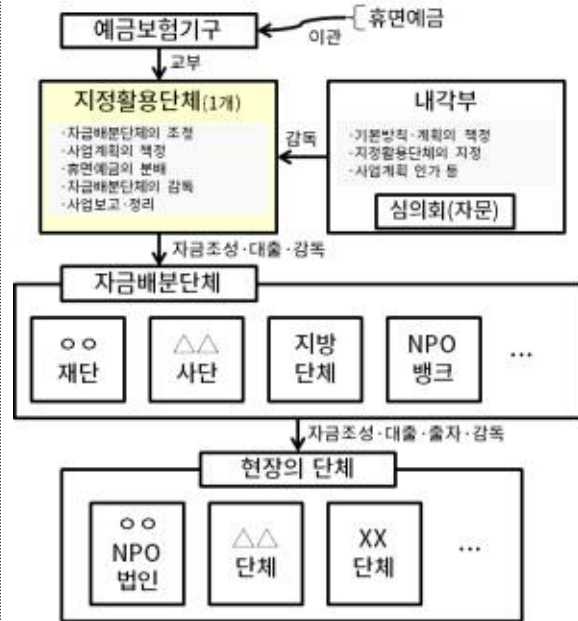
- 재정으로 기금(CDFI Fund)을 조성, 기금에서 인증받은 지역개발금융기관(CDFI)을 통해 저소득지역 개발*을 간접 지원(‘95~)
- * ① CDFI 프로그램: CDFI를 통해 교부금, 대출, 지분투자 등 집행, ② BEA(Bank Enterprise Award): 은행의 CDFI 투자액 일부를 보전, ③ 세제지원(NMTC) 등
- CDFI는 민간자금 매칭방안 등을 마련하여 CDFI 프로그램에 응모 → 기금은 엄격한 경쟁을 통해 지원대상 CDFI를 선정

다. 일본의 휴면예금을 활용한 공익사업 지원체계

- 일본은 최근 휴면예금을 활용하여 비영리재단을 통해 사회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중(‘16년 법제정 → ‘19년 지원 착수)

영국 · 일본 · 미국의 사회적금융 지원 체계

<일본 휴면예금 활용 구조>



* CDFI: 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
 CDE: Community Development Entity
 NMTC: New Market Tax Credit



2. 민간 기반의 자금지원

가. 협동조합금융 방식

□ 협동조합이 발달한 캐나다·스페인 등에서는 **신용협동조합**(협동조합 은행), **협동조합 연대기금** 등의 금융지원체계가 발달

① (加) 데잘랭그룹*은 연대경제금고(Caisse d'économie solidaire, '71)를 설립하여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에 사회적금융을 제공

* 1900년 신용협동조합인 인민금고에서 출발, 금고간 연합·합병, 보험·신탁 등 사업다각화(40's~) 및 금융그룹화('90s~)를 거쳐 성장한 총자산 2,584억\$의 신탁금융그룹

② (西) 몬드라곤 협동조합그룹의 라보랄쿠차(협동조합이 조합원인 신탁, '59)는 그룹내 조합간 자금 재분배 및 사업 총괄조정 기능을 담당

나. 사회적은행 방식

□ 네덜란드·이탈리아 등에서는 예금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여 사회적기업 등에 투융자하는 사회적은행이 활동

① (蘭) 트리오도스은행(Triodos Bank)은 은행업 인가를 받아('80), 저리로 조달한 예금으로 사회적기업, 환경기업 등에 신용을 제공

* 총자산 91억€, 예수금 80억€, 대출 57억€, 세전이익 0.4억€('16末 기준)

② (伊) 방카에티카(Banca Popolare Ethica, 신탁, '99)는 엄격한 윤리성을 갖춘 비영리조직과 사회적경제를 대상으로 신용을 제공

다. 기타

□ 소액 다수의 투자자(기부자)와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 프로젝트 등을 중개하는 **크라우드펀딩** 방식의 지원체계가 존재*

* 미 KIVA, 영 SSE(Social Stock Exchange) 등이 이에 해당

□ 비영리단체·사회적기업에 경영 지원 및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의 성장과 사회문제 해결을 촉진하는 **벤처자선가***도 활동중

* 전통적인 기부·후원 등 비영리금융 수단부터 대출·투자·메짜닌, 구조화 금융까지 다양한 금융수단 제공 → 영국의 Impetus-PEF, 일본의 일본벤처자선기금(JVPF) 등

IV. 사회적금융 활성화 추진방안

1

기본 방향

- ① 지속가능한 사회적금융시장 조성을 위한 촉매제로서 자금의 도매공급 기관인 사회가치기금(가칭, Social Benefit Fund) 설립을 지원
 - ‘자금공급→매출액↑→자금회수→자금공급↑’ 등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 자금공급과 인프라 구축에 중추적 역할 수행
 - 민간이 중심이 되어 사회문제를 해결한다는 사회적경제의 기본취지를 감안, 민간주도로 설립·운영되도록 하고 정부는 간접 지원
- ② 투자자-사회적경제기업간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 금융과 사회 문제에 전문성이 있는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을 육성
 - * 1) 투자자와 사회적경제기업간 사이에서 거래·정보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금융중개를 주된 업무로 하는 기관으로, 2) 투자대상 발굴, 3) 관련 금융상품 개발 등 수행
 - 사회가치기금은 객관·투명한 절차에 따라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중개기관을 통해 자금을 간접 지원
 - 기존 중개기관의 역량강화와 신규 중개기관의 출현을 위해 체계적인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육성방안 마련·추진
- ③ 엄격한 선관주의의무 준수가 필요한 민간투자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과 인센티브 부여 추진
 - 사회·재무적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사회적금융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평가체계 마련
 - 여타 투자기회에 비해 낮은 기대수익률*을 보전할 수 있도록 세제 등 인센티브 부여
 - * 투자자는 사회적경제가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자신의 투자수익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사회적금융의 기대수익률이 낮다고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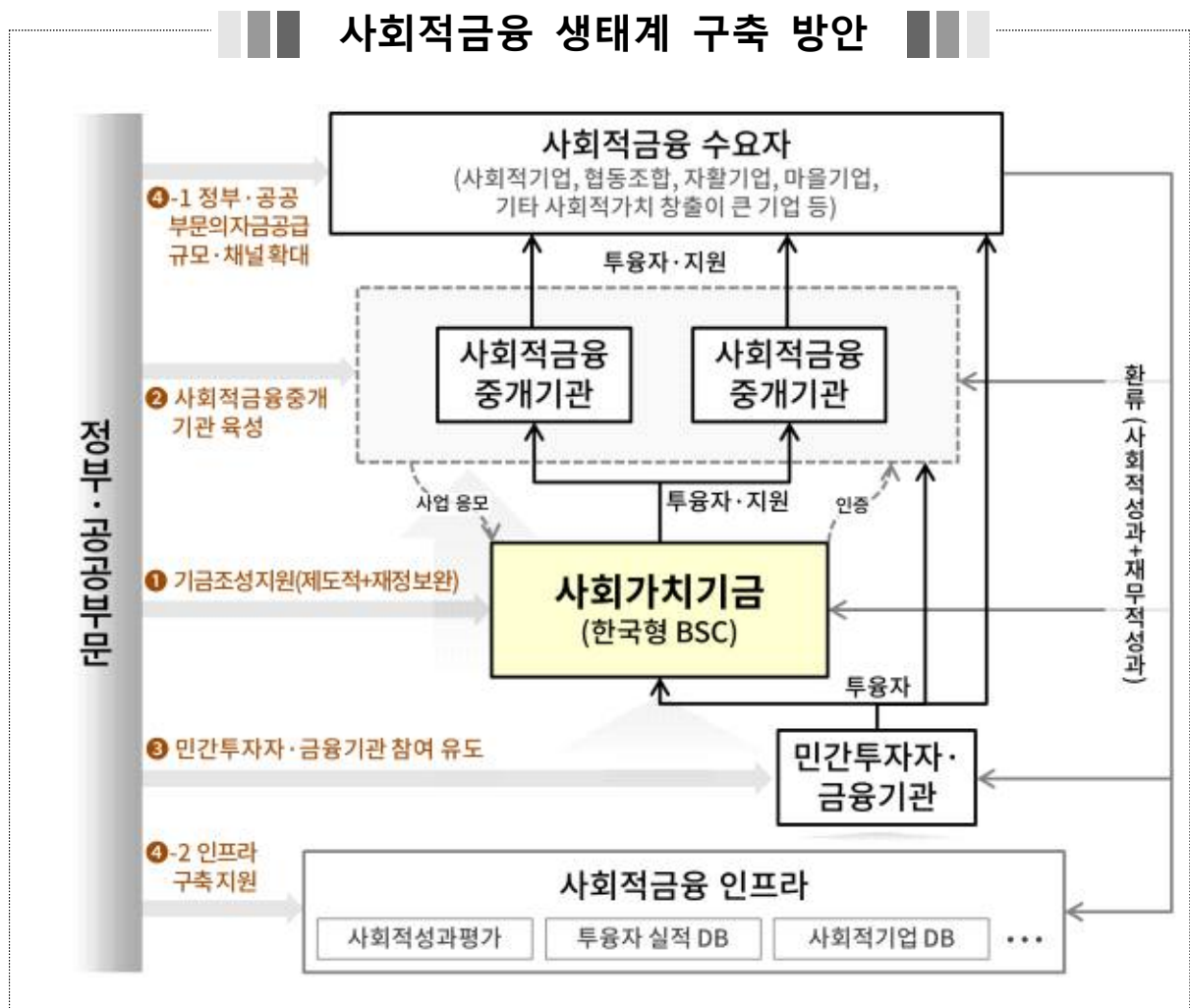
④ 사회적금융시장 구성에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임을 감안, 우선 정부·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

- 정부·공공부문의 사회적금융 지원채널과 규모를 확충하고 신흥·새마을금고의 자발적 참여를 지원

- 투자·대출·보증 등 다양한 지원수단을 확보하여 성장단계에 맞게 자금을 지원하되, 추후부실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

- 정부·공공부문의 자금공급 과정에서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의 참여를 확대하고 투융자실적 DB 등 인프라 구축 병행 추진

⑤ 사회적경제 성장·발달을 위해 인력·판로·보조금 등 여타 지원방안과 사회적금융 방안의 유기적 연계강화 추진



◆ 사회적금융시장의 3대 플레이어로서 ①사회가치기금의 조성, 사회적 금융중개기관 육성 및 ②민간투자자·금융기관 참여 확대 추진

가. 사회가치기금(가칭, Social Benefit Fund, “한국형 BSC”) 설립 지원

□ 민간 자율적으로 사회적금융 민간기금* 설립 추진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해 사회가치기금의 법적 설립근거 명시

-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출자 및 기부 등으로 주요 재원 확보
- 기금 운영주체는 출자·대출·출연·보증 등 다양한 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형태를 채택
- 정부로부터 독립성, 투명성, 책임성,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운영주체의 기금운용 원칙과 소유·지배구조 마련

□ 사회가치기금은 사회적금융중개기관 등을 통해 자금을 간접 지원하는 등 도매기금(wholesaler)으로서 역할을 수행

-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은 사회적경제기업에 주로 투·융자하되,
- 일정한도내에서 사회적가치 창출이 큰 일반 중소기업, 낙후지역 개발사업 등도 투·융자대상에 포함

□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의 규모·자금수요,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5년간 3천억 규모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조성

- 성급한 규모 확대보다는 공급·회수 등 성공사례 창출에 주력

□ 정부와 지자체는 사회가치기금이 자율적으로 설립·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및 재정 보완을 지원

- 정부·지자체에서 사회가치기금에 출연을 추진*하고 미소금융 재원에서도 출자·출연이 가능하도록 서민금융법 개정** 추진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해 정부·지자체의 사회가치기금 출연·출자 근거 마련

** ❶ 법률의 목적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명시, ❷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민간기금에 출연·출자)을 업무로 규정

- 사회가치기금의 독립성 확보차원에서 정부·지자체에서의 출연·출자는 민간재원 이내의 범위에서만 허용
- 정부·지자체 등에서 시행중인 사회적 금융 관련 기존 사업들을 점진적으로 사회가치기금에 이양 추진
- 기금설립·운영에 필요한 제도마련, 민간재원 확보 및 다양한 지원 수단 활용 등을 위한 인센티브 강구 등

□ 민간의 자율적인 논의와 자금모집 등을 통해 기금설립을 추진해 나가되, 정부도 기재부를 중심으로 설립 지원

- 민간주도 「사회가치기금(Social Benefit Fund) 추진단」 설립
 - 사회적경제 연합단체 추천자, 사회적경제 금융기관*, 사회적금융 전문가, 투자 의사가 있는 기관 대표자, 법률가 등으로 구성

* 예)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

- 정부(기재부 등)는 추진단 요청시 논의에 참석
- 추진단은 사회가치기금 설립을 위한 세부사항 검토, 정부에 대한 제도 개선 건의, 자금 모집 등의 활동 전개

- 국제 임팩트투자 민간협의체(GSG*) 가입 지원을 통해 미국·영국 등의 사회적금융 선진사례를 도입·자문하는 창구로 활용

* **Global Social Impact Investment Steering Group** : '13. G8 정상회의시 영국주도로 설립한 임팩트투자 활성화 민간협의체(16개국 가입중), 우리나라에서는 GSG 가입을 위한 민간의 임팩트투자자문위원회가 출범('18.2월)할 예정

□ 올해안에 사회가치기금 설립·운영 개시를 목표로 추진

- 2월초 사회가치기금 추진단 출범과 운영을 적극 지원

나.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인증(Certification)제도 도입

- ☐ 사회가치기금은 금융중개기관의 사회적금융 지원경험·실적* 등을 감안하여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
 - * 인증제도 도입 초기에는 사회적금융협의회에서 구축한 중개기관 DB를 활용하고, 이후에는 매년 중개기관 현황을 조사하여 업데이트
 - 인증대상은 사회적금융을 주로 수행하는 중개기관뿐 아니라 사회적금융을 부수적으로 수행하는 일반 금융기관*도 포함
 - * 사회적금융에 전문성 또는 의지가 있는 신기술사, 벤처캐피탈(VC), 신탁 등
 - 인증요건은 법적형태, 소유구조, 사회적금융 경험·전문성 등 다양한 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설정
- ☐ 사회가치기금은 인증받은 사회적금융기관에게 다양한 사회적금융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
 - 사회적금융기관은 사회가치기금이 공모하는 사업에 응모하거나, 스스로 사업을 제안하여 민간기금에 대해 자금지원* 요청도 가능
 - * (예시) 사회적금융 관련 투융자를 위해 발행한 채권에 대한 사회가치기금의 보증,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투자 유치시 이에 상응한 기금의 출자지원 등
 - 사회가치기금은 중개기관의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미인증 중개기관 등을 대상으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도 운영
 - * 중개기관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금융교육·컨설팅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재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회가치기금이 중개기관을 지원
-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이후, 동법에 반영되어 있는 사회적금융기관 및 사회적경제지원 중개기관 지정제도와 운영상 연계 강화

다. 민간자금·금융기관의 사회적금융 참여 유도

- ☐ 민간기반의 사회적금융 사례분석 등 연구용역을 거쳐 사회적경제기업의 특수성·다양성 등을 고려한 세제지원 등 지원방안 마련
- ☐ 은행 등 금융기관의 지역금융 강화를 위해 도입예정인 지역재투자제도 도입과정에서 사회적금융 관련 실적을 반영하는 방안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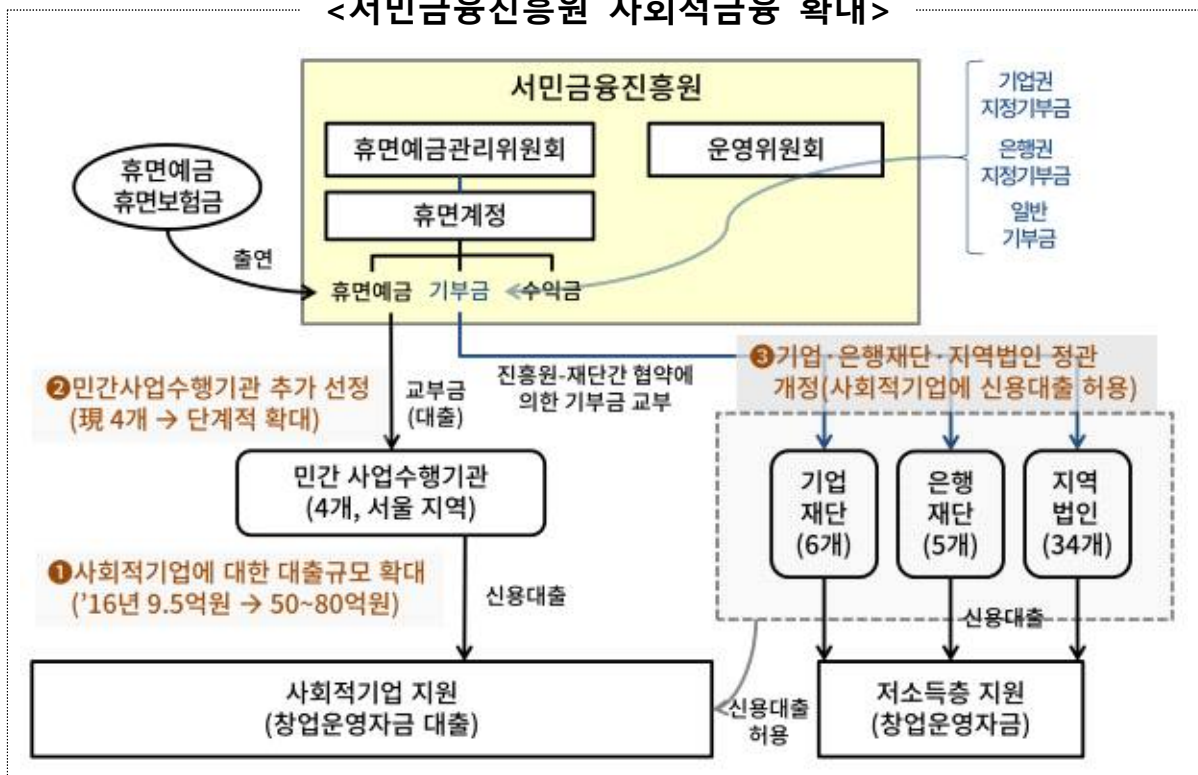
- ◆ 사회적금융에 대한 투자경험을 축적하고 성공사례의 발굴·확산을 위해 정부·공공재원의 공급확대 및 제도개선 추진

가. 대출 확대

1 서민금융진흥원 대출 확대(단계적으로 연 50~80억원까지 확대)

- 휴면예금 재원을 활용한 서민금융진흥원의 (예비)사회적기업 대출 한도를 연간 50~80억원 규모까지 확대('16년 9.5억원 지원)
- 사업역량 및 지역적 배분 등을 감안하여 민간사업수행기관을 추가 선정(現 서울 4개→서울 외 지역포함 단계적 확대)
- 별도 기부금으로 운영중인 진흥원의 기업·은행재단, 지역법인이 사회적기업에의 대출이 가능하도록 정관개정 협의 추진
- 기업·은행재단, 지역법인이 서민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 대출시에도 기존 서민금융과 유사한 수준의 인센티브 부여

<서민금융진흥원 사회적금융 확대>



②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공급 확대('18년 400억원)

○ 사회적경제 관련 중소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저금리(2.0~3.35%)·장기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사업

- 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범위기준에 해당하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지원 확대('17년 200억원 → '18년중 350억원)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 창업, 성장, 긴급경영안정 및 재도약 등 기업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자금 지원

- 시설자금(10년, 45억원 이내), 운전자금(5년, 5억원 이내) 융자지원

○ 사회적경제 관련 소상공인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

- '18년 소상공인 일반경영안정자금 중 사회적경제조직 전용자금으로 50억원 신규편성(자금수요에 따라 필요시 최대 100억원까지 확대)

- 사회적경제조직의 특성을 반영한 전용 대출 평가모형을 개발* ('18년 상반기)하고, 직접대출 방식으로 지원('18년 하반기)

* '18년은 시범사업 성격으로 소상공인 협동조합에 대해 적용

-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수요를 고려하여 자금 구성 및 지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조건(안) >

구 분	시설자금	운전자금
대출한도	2억원	1억원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분기별 변동금리)	
대출기간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대출상환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나. 보증 확대

① 신용보증기금 보증지원 확대('17년 66억원 → '18년 400억원)

- 신용보증기금에 사회적경제 지원계정을 신설하고 재정 등 지원을 통해 향후 5년내 최대 5,000억원까지 보증 공급 추진
- 별도 지원계정 신설前에도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보증을 확대 운영('18년중 400억원 신규 보증공급)
- 현재 운영중인 사회적기업·협동조합에 대한 보증사업의 기업당 보증 한도, 운전자금 한도사정 특례* 등을 확대

* 매출액 등 재무지표가 부족하더라도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구분		현행	개선
기업당 보증한도		1억원	3억원
한도사정 특례	사회적기업	5천만원	1억원
	협동조합	3천만원	5천만원

- 마을기업·자활기업에 대한 보증 신상품*을 도입·운영

* (보증한도) 1억원, (한도사정특례) 3천만원 이하

- 취약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재무상황을 고려하여 우대된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등 맞춤형 평가체계를 운영

* 매출액 대비 차입금 비중 항목, 신용등급·현금흐름 등 신용도취약 항목 적용 배제 등

②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 확대('17년 97억원 → '18년 150억원)

- 현행 사회적기업·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마을기업·자활기업까지 특례 보증 대상을 확대
- 보증한도는 조합·기업당 최대 4억원 이내로, 보증비율은 100% 전액 보증으로 운영하고 보증요율은 연 0.5%로 우대
-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각 지역신보의 특례보증 실적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평가함*으로써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관리

* 평가결과는 중앙회의 재보증료 차등화 등에 반영

다. 투자 확대

① 성장사다리펀드 內 '사회투자펀드' 조성('18년 300억원)

- 성장사다리펀드 출자 및 민간·공공자금 매칭을 통해 우선 300억원 규모로 1차 조성('18년 상반기)

* '17.11.28 사회투자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공고 → '사회적기업 투자 분야' 펀드는 위탁운용사 선정 완료('17.12.20), '임팩트 투자 분야'는 위탁운용사 접수중

- 투자 집행 상황을 보아가며 향후 5년간 최대 1,000억원까지 단계적 확충 추진

- 펀드 결성금액의 일정비율(60~70%)을 인증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등 다양한 사회적 목적을 지닌 기업에 투자

- 인증을 받거나 외부 민간전문기관의 '사회적성과 평가'를 거쳐 사회적 성과가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을 투자대상으로 선정

- 일반 펀드 대비, 기준수익률은 낮추고 성과수익률은 높여* 운용사의 적극적인 투자 및 사회적가치 제고 활동 유도

* 운용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성과보수 지급 기준수익률을 차등 적용
(예 : 성장사다리펀드 2% 내외, 민간 4% 내외)

- 사회적기업의 성숙도·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투자 방식과 대출 방식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

- 성장사다리 또는 희망출자자 출자금의 일정 비율(예: 50%, 30%) 이 내에서 손실을 우선 부담하도록 하여 민간출자자 부담을 경감

- 인내자본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펀드 존속기한을 장기(10년 내외)로 설정

②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추가 조성('18년 75억+α)

* '11년부터 '15년까지 4차에 걸쳐 사회적기업에 투자하는 모태펀드 182억원 조성

- '18년 예산 75억원과 민간출자금(α)*으로 펀드를 조성·운용하고, '19년 이후에는 예산에 추가 반영을 검토

* 민간출자금은 총 출자금(예산 75억+α)의 30% 이상 모집

-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뿐 아니라 마을기업·자활기업 등 으로 투자대상을 확대
- 출자금 총액의 60% 이상을 투자대상에 투자하고, 나머지도 가급적 사회적 기여가 가능한 일반 중소기업 등에 투자
- 펀드 재원별로 기준수익률을 차등화하여 민간출자 활성화 및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
(기준수익률 : 모태펀드 출자 0%, 민간 7%)

③ 소셜벤처*에 투자하는 임팩트펀드 조성·운용('18년 1,000억원)

* 재무적 성과와 사회문제 해결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혁신성·성장성을 보유한 기업

- 총 1,000억원 내외로 펀드를 조성하고, 벤처캐피탈(VC) 등이 펀드를 운용
- 모태펀드에서 펀드에 80%를 출자(800억원 내외)하고, VC 등 운용사가 나머지 20%를 민간 투자자로부터 모집
- 운용사 선정 시, 운용사가 투자기업의 사회적 성과(공공성)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제시토록 할 예정
- 성과창출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투자금 회수에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펀드 존속기한을 장기로 설정
- 모태펀드에서 손실을 우선 부담하고 및 민간투자자에 대해 콜옵션을 부여*하여 민간의 투자 참여확대를 유도
- * 이익발생시 민간투자자에게 모태펀드지분 매입권(콜옵션)을 부여

※ (참고) 사회투자펀드·사회적기업 모태펀드·임팩트 펀드 비교

구 분	사회투자펀드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임팩트투자 펀드
주 재 원	성장사다리	모태펀드(고용부)	모태펀드(중기부)
투자대상	사회적경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등	소셜벤처
조성규모	'18년 300억원(5년내 최대 1,000억원 확대 검토)	'18년 75+α억원(모태 75억원, 민간 α)	총 1,000억원(모태 800억원, 민간 200억원)
존속기간	10년 내외	8년	10년 내외
특 징	투자 및 대출 혼용	지분, 전환사채 등 투자	지분 투자

4 사회적기업의 **크라우드펀딩** 활용도 제고

- 사회적기업이 ‘업력제한’ 없이 주식형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 현행 크라우드펀딩은 업력 7년 이내의 중소기업(벤처기업 등 예외)만 참여 가능 → 상당수 사회적기업이 인증기간 소요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

- 유망 사회적기업의 주식형 크라우드펀딩시 초기단계에서 투자하는 ‘마중물 펀드’를 마련·지원(성장사다리펀드, '18년중 50억원 규모)

- 아울러, 중개업자의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에 사회적기업 전용 별도 페이지(‘사회적기업 전용관’) 마련을 유도

- 예탁결제원-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간 협력을 통해 ‘사회적기업 발굴 프로젝트’를 개최*하여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도모

* 예탁결제원 나눔재단을 통해 중개업자의 실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50% 지원을 추진 (→연간 50개 내외의 사회적기업 지원 예상)

- ‘사회투자펀드’의 투자대상에 사회적기업 크라우드펀딩 중개실적이 우수한 중개업자를 포함 (⇒중개업자 기업발굴 노력 유도)

라. 협동·지역금융의 사회적금융 역할 강화

① 신탁의 사회적금융 역할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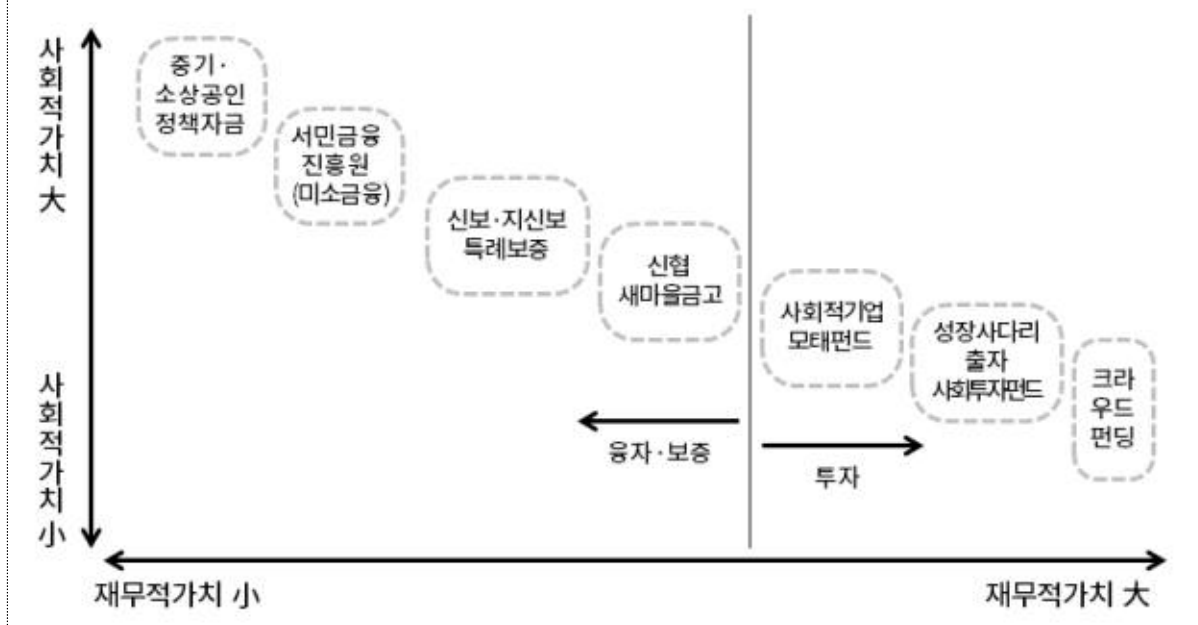
- 신탁중앙회에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위한 전용기금을 설치 (年 100억원 규모)하여 사회적경제기업 대출 및 투자재원으로 활용
 - 전용상품 및 별도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신탁을 통해 지원하되, 거액의 경우에는 중앙회가 직접 심사·지원하는 방안도 고려
- 신탁의 사회적기업 등 他법인에 대한 출자 허용*, 사회적경제기업의 신탁 법인조합원 가입유도 등 상호유대 강화

* 신탁이 他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신탁법 개정을 추진

② 새마을금고의 지역·사회적금융 역할 강화

- 지자체-새마을금고-중앙회 공동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지신보와 연계하여 보증부대출 등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실시
 - * 단, 지역내에서 보증부대출을 취급하는 금고의 범위를 제한하고, 해당 금고가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심사역량을 내재화하도록 유도
- 새마을금고가 사회적경제기업에 출자할 수 있도록 내규 개정

※ (참고) 사회적금융 사업주체별 중점 자금지원 대상



◆ 정부·공공부문의 사회적금융 공급확대과정에서 심사·평가 및 전달체계 등 인프라 구축을 병행·추진

가. 사회적금융 유관기관간 협력 강화

① 사회적금융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사회적금융협의회' 설치·운영

- '사회적금융협의회'에는 관계부처, 담당기관* 및 사회적경제 조직이 참여하여 상호 연계·협력을 강화

* 서민금융진흥원, 성장사다리펀드, 모태펀드, 신보.지신보, 신협, 새마을금고 등

- 사회적금융 담당기관간 지원 연계 강화*, 지원정보 공유, 인프라 공동조성, 사후관리방안 등을 협의

* 사회적경제기업의 인큐베이팅·창업단계에서 성장·재기단계까지 유기적 연계

- 정부보조금사업·인력·판로지원사업 등과도 연계지원이 가능하도록 사회적금융 담당기관과 기타 사업담당기관간 협력도 강화

② 사회적금융 유관기관간 대출·보증·투자 등 정보공유 확대

- 지원내용·실적과 재무·사업 등 기업정보를 사회적금융 담당기관간 공유하여 중복지원 방지와 심사·평가방법 개선에 활용

- 사회적금융 담당기관은 주기적으로 세부 금융지원 실적을 외부에 공개함으로써 금융지원의 투명성 제고

- 사회적기업진흥원과 협력하여 기업정보투자마당내(IBK) 전용페이지를 개설하고, 유망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보를 게재

③ 기업마당*내 사회적금융 지원메뉴를 개설하여 사회적금융 담당기관이 제공하는 금융지원 상품·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공시

*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중소기업 지원정보를 한 곳에 모아 알기 쉽게 제공하는 정책포털사이트(www.bizinfo.go.kr)

나.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육성

①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을 통한 자금지원 확대

- 서민금융진흥원의 민간 사업수행기관을 사업역량 및 지역적 배분 등을 감안하여 추가 선정(현재는 서울지역에만 4개)
 - 서민금융진흥원내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사회적기업지원 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업수행기관 선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 동 위원회에서 민간 사업수행기관 실적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우수 기관에 대해 운영비 지원, 교부금 확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
- 사회투자펀드 등 사회적금융 관련 투자자금 운용시도 일반 운용사 외에 사회적금융에 전문성을 갖춘 중개기관의 참여 확대
- 신보·지신보 보증 및 기타 정책자금 운용에 있어서도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안 검토

② 사회적금융중개기관과 사회적금융 담당기관간 연계 강화

- 중개기관의 법적형태 및 지원실적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주기적인 현황 조사*를 통해 중개기관 DB를 구축·운용
 - * 대출 중심 중개기관은 서민금융진흥원 투자 중심 중개기관은 성장사다리펀드에서 담당
 - 중개기관 DB는 사회적금융협의회 공동의 자산으로 구축하여 위탁 기관 및 지원 대상 선정 등에 활용
 - 사회가치기금 설치 이후에는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인증제도의 기초 자료로 활용
- 중개기관이 사회적금융협의회에 참여함으로써 업계의견 전달 및 네트워크·파트너십 형성을 촉진

다. 사회적 성과 평가체계 마련 등

① 사회적가치에 대한 객관적 평가체계 마련 → 금융지원에 활용

- 우선, 사회적금융 담당기관별로 사회적 목적 실현, 사회적 기여도 등을 반영한 맞춤형 심사·평가체계* 구축·운영

* 고용부의 '사회적가치지표' 등을 참고하여 고용안정, 지역사회 기여, 사회적 환원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재무적 특성과의 적정 가중치를 설정

- 추후, 사회적금융 담당기관이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표준 사회적성과 평가체계' 마련

- 고용부 등 현재 사회적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과 공동 작업으로 추진 하고,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평가체계의 수용성을 제고
- 성과 측정시 자의성을 배제하고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량 가능한 성과(outcome) 위주의 평가체계를 마련
-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포괄하면서 측정대상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평가지표를 구성하고 각각 객관적 측정방법을 마련

- 개별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 가치도를 등급으로 평가·표시할 수 있는 사회적가치 등급제로 발전시키는 방안 검토

② 정부·공공재원의 사회적금융 선별기능 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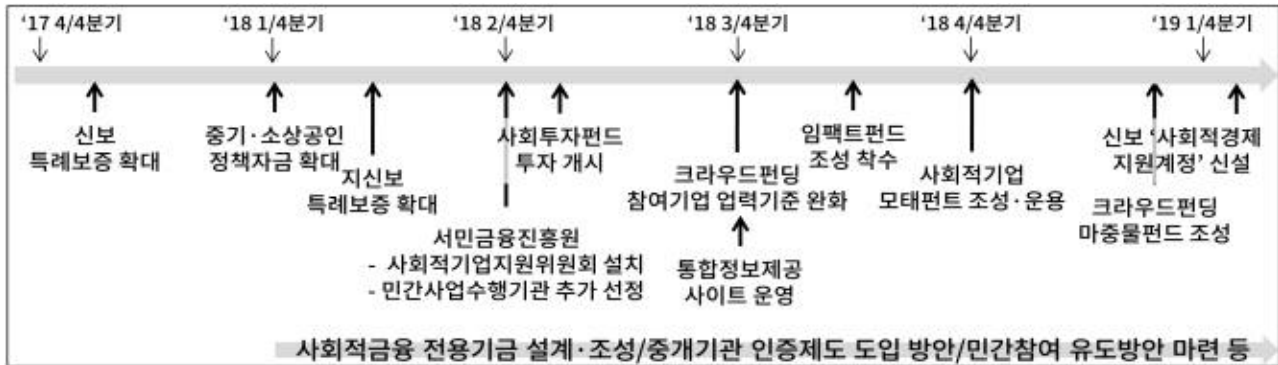
- 정부·공공재원으로 지원시 민간자금과의 매칭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선별기능 보완을 추진
- 신보과 지역신보의 보증에 있어서도 부분보증을 점진적으로 도입 하여 민간 금융기관의 선별기능 활용

※ 이러한 시장의 선별 기능의 활용은 민간의 사회적금융 투융자 경험을 확대 시키는 효과도 존재

③ 사회적금융 담당기관별로 사회적금융을 통해 창출한 사회적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성과보고서로 작성하여 외부 공개

V. 향후 추진 일정

- '18년중 사회적경제기업에 총 1천억원 이상의 금융지원(대출 450억원, 보증 550억원 등)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



- 개별 정책과제는 다음 일정에 따라 추진하고, 주기적으로 사회적금융 협의회를 통해 이행 현황 및 성과를 관리

<과제별 추진 일정>

정책과제	조치사항	일정 · 부처	
1. 사회적금융시장 조성 지원			
① 사회적금융 전용기금 조성		'18년중	기재부
②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인증제도 도입		'18년중	기재부
③ 민간자금 · 금융기관의 사회적금융 참여 유도		'18년중	기재부
2. 사회적금융 공급 확대			
가. 대출 확대			
① 미소금융 금융지원 확대	▶ 미소금융 재원 활용 확대	'18.2분기	금융위
	▶ 기업·은행재단 등 정관 개정	'18.2분기	금융위
② 중기·소상공인 정책자금 확대	▶ 중기 정책자금 확대	'18.1월	중기부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확대	'18.1월	중기부
나. 보증 확대			
① 신보 보증지원 확대	▶ 사회적경제 지원계정 신설	'19년	금융위
	▶ 특례보증 지원 확대	'17.10월	금융위
② 지신보 보증지원 확대	▶ 특례보증지원 확대	'18.2월	중기부

다. 투자 확대

① 사회투자펀드 조성	▶ 사회투자펀드 조성·운용	'18.2분기	금융위
②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조성·운용	'18.4분기	고용부
③ 임팩트펀드 조성	▶ 임팩트펀드 조성·운용	'18.하반기	중기부
④ 크라우드펀딩 활용도 제고	▶ 참여기업 업력기준 완화	'18.6월	금융위
	▶ 마중물 펀드 조성·운용	'18.12월	금융위
	▶ 사회적기업 발굴 프로젝트	'18.상반기	금융위

다. 협동·지역금융 역할 강화

① 신협·의 역할 강화	▶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기금 설치	'18년중	금융위
	▶ 신협·의 타법인 출자 허용	'18년중	금융위
	▶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상품 마련	'18.6월	금융위
② 새마을금고 역할 강화	▶ 새마을금고 사회적경제기업 조성	'18년중	행안부
	▶ 지자체 시범사례 발굴	'18년중	행안부
	▶ 새마을금고의 사회적경제기업 출자 허용	'18년중	행안부

3. 사회적금융 인프라 확충

가. 사회적금융 유관기관간 협력 강화

① 사회적금융협의회 설치	▶ 사회적금융협의회 설치·운용	'18년중	금융위
② 유관기관간 정보공유 확대	▶ 세부 금융지원 실적 공개	'18.하반기	관계부처
	▶ 기관간 지원실적 등 공유 확대	'18.하반기	관계부처
	▶ 기업·마을·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정보 게재	'18.6월	중기부

나.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육성

①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을 통한 자금지원 확대	▶ 민간사업수행기관 추가 선정	'18.2분기	금융위
	▶ 기타 중개기관 활용 확대 검토	'18년중	금융위/중기부
② 사회적금융중개기관과 유관기관간 연계 강화	▶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실태조사	'18.하반기	협의회
	▶ 사회적금융중개기관 협의회 참여	'18.하반기	협의회

다. 사회적 성과 평가체계 마련 등

① 사회적성과 평가체계 마련	▶ 담당기관별 맞춤형 평가체계 운영	'18년중	관계부처
	▶ 표준 평가체계 마련	'19년	협의회
② 정부공공재원의 선별기능 보완	▶ 신보·지신보 선별기능 보완방안 검토	'19년	금융위/중기부
③ 성과보고서 작성·공개	▶ 담당기관별 성과보고서 작성·공개	'19년	관계부처

소셜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2018. 5. 16

관계부처 합동

소셜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2018. 5. 16

관계부처 합동

목 차

I. 추진배경	87
II. 소셜벤처 현주소	88
III. 기본방향	89
IV. 추진방안	90
1. 소셜벤처 판별 및 가치평가체계 구축	90
2. 청년 소셜벤처 HUB 구축	94
3. 소셜벤처 창업 활성화	96
4. 소셜벤처 성장 촉진	98
V. 향후 추진일정	103
<참고> 소셜벤처 국내외 성공사례	104

I. 추진배경

□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의 대안으로 사회적경제가 부각

- 유럽 등은 사회적경제가 이미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우리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17.10월)'을 계기로 본격 추진중

* 사회적경제의 고용비중('15년) : (EU) 6.5%, (한국) 1.4%

- 다만, 지속가능성과 성장성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아직 부족

* 사회적기업 영업이익 발생기업 비중(% , 노동부) : ('14) 20.8 → ('15) 24.4 → ('16) 50.1

□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소셜벤처가 청년들을 중심으로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출현중

- 성수동을 중심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관심이 높은 청년 소셜벤처 기업가 등이 모여 Open Innovation을 실현하는 소셜밸리 형성

* 헤이그라운드, 소셜캠퍼스 溫 등에 약 250여개 소셜벤처 기업, 투자·지원 기관 입주

□ 청년 일자리창출 잠재력과 성장성이 큰 소셜벤처 활성화 여건조성 필요

- 소셜벤처는 ① 청년고용 비중이 높고, ② 창업에 따라 고용창출 기대

① 소셜벤처 대표 20개사('18) : 창업당시 대표자 평균연령 30.3세, 근로자중 청년 비중은 81.2% (전체 근로자수 469명, 청년 381명, 업체당 19.1명)

② 소셜벤처 경연대회 평균경쟁률('13 ~ '17) : 28.2대1 (183팀 수상에 5,163팀 지원)

- 혁신적 제품 생산과 사회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소셜벤처의 성공사례가 나타나고, 일부 기업은 매출증가* 시연

* 소셜벤처 대표 20개사 평균 매출액(억원) : ('15) 4.1 → ('16) 6.8 (68.6% 증가)

사례

- ▶ **(주)루미르('14. 창업)** 적정기술을 활용, 폐식용유, 양초 등 저가 자원을 이용하는 고효율 램프 개발(기존 태양광 램프 대비 50% 이상 저렴), 저개발국 보급 및 판매
→ 대표 나이 29세, 청년고용비중 100%(전체 9명)



- ▶ **토도웍스('16. 창업)** 수동휠체어에 대해 전동 조작이 가능하도록 토도드라이브 개발, 큰 개조없이 간단하고 저렴하게 장착 가능(전동휠체어 가격 약 700만원→토도드라이브 176만원),
→ 대표 나이 43세, 청년고용비중 54.5%(11명중 6명)



II. 소셜벤처 현주소

□ 민간의 자생적 움직임을 사회경제 전반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정책·제도적 뒷받침은 부족한 수준

- ① (개념·인식) 소셜벤처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고, 사회적기업과 혼동하는 등 소셜벤처의 혁신성에 대한 인식도 부족

일반인 "소셜벤처요? 사회적기업과 같은 건가요?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겠네요."

소셜벤처 기업가 "사람들이 소셜벤처를 잘 모르고 사회적으로도 중요하게 인정 해주지 않네요. 그렇다고 굳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고 싶지는 않고요"

- ② (가치평가) 기업가치 평가에 재무적 성과만이 반영되고 계량화가 어려운 사회적 가치는 제외되어 소셜벤처의 실질가치가 저평가

- 반면, 영국·미국 등은 GIIRS, SROI 등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는 다양한 모형이 통용되어 유망 소셜벤처 발굴 및 투자에 널리 활용

* GIIRS(사회적기업 평가모형) : 분석 플랫폼을 통해 사회적기업 성과 평가 및 비교분석
SROI(사회적 투자수익률) : 금융투자 대비 사회적·환경적 순이익을 화폐가치로 환산·측정

- ③ (자금) 투자·융자 등 외부자금조달이 어렵고, 소셜벤처에 적합한 수단인 **임팩트투자***는 아직 미미한 수준 ('15년 540억원)

* 재무적 성과를 넘어 사회적·환경적 성과를 추구하는 투자를 의미

세계 임팩트투자 규모(조원) : ('14)10.5→('15)15.2→('16)22.1→('17) 25.9

소셜벤처 기업가 "일반 VC들에게 우리는 수익성이 낮고 회수에 장기가 소요되어 투자받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우리가 창출하는 사회성과도 함께 고려해주고,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내해 줄 수 있는 투자자를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④ (판로) 브랜드의 낮은 인지도, 취약한 영업망 등으로 **국내외 판로 확보가 제한적**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음**

Ⅲ. 기본방향

지속성장 가능한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청년 소셜벤처
집중지원 HUB 구축



소셜벤처
청년창업 활성화



금융·기술개발·판로 등
분야별 특화지원

소셜벤처 개념 명확화 및 가치평가체계 확산

《참고 : 기존 정책대상과 차이점》

구분	벤처기업 (3만5천여개)	사회적기업 (1,937개)	소셜벤처기업 (500여개 추정)
법적정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없음
정책대상 판별기준	확인서 발급 * 벤처기업에 금융을 공급하는 기관이 선별·확인	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 * 조직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여부 등 인증요건 충족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유연하게 판별
추구가치	사회성《혁신성 * 신기술기반 고수익 창출	사회성《혁신성 * 취약계층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성&혁신성 동시 추구 * 혁신기반 사회가치 창출

IV. 추진방안

1 소셜벤처 판별 및 가치평가체계 구축

① 민간 주도의 소셜벤처 판별 가이드라인 마련

- 소셜벤처 개념 명확화와 소셜벤처 여부 판별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유연한 판별 가이드라인(Guide line) 제시(‘18.하)
- 인증제는 진출분야의 다양성 및 자율성을 저해하고 해외(미국, 영국 등) 역시 획일적 기준을 도입하지 않는 점을 고려, 소셜벤처 저변 확대를 위해 유연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

< 광의의 소셜벤처(예시) >

사회성 판단기준(1개 이상 충족)	혁신성 판단기준(1개 이상 충족)
① 사회적경제기업	① 법령상 인증·확인 보유 (벤처기업·이노비즈 기업 등)
② UN SDGs 17개 분야 영위(물, 환경 등)	② 지적재산권 보유 여부
③ 정관, 미션 등 경영 방침에 사회적 가치 추구 명시	③ 연구개발조직 보유 여부
④ 취약계층(어르신, 장애인 등) 고용	④ 매출액·영업이익 등 재무지표, 고용 등 지속적 성장여부

* 사회성(1개 이상)과 혁신성(1개 이상)이 동시에 충족시 광의의 소셜벤처로 인정

- 광의의 개념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민간 자문단*을 구성하여 소셜벤처 판별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 민간 전문가, 소셜벤처 기업가, 임팩트투자사, 공공기관(기보, KVIC, 사회적기업진흥원 등)이 협의회를 구성, 자율적으로 기준을 설정(정부는 필요시 참여)

- 기관별(임팩트투자사, 은행, 공공기관 등) 지원분야 특성을 반영하여, 가이드라인을 탄력적으로 수정·보완하여 자체적으로 활용

- 정책(보증, R&D, 판로 등) 대상으로 구분가능한 소셜벤처 기업군 확인을 위해 소셜벤처 현황 파악을 상시적으로 실시(‘18.하)

* 임팩트투·융자 지원을 받은 기업, 사회적기업 등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조사하되, 자체적으로 소셜벤처 여부를 판단받고 싶은 기업도 포함하여 현황 파악 시행

소셜벤처 판단 프로세스(예시)



< 사전제외 대상 >

- ① 순수 비영리조직
- ② 창업지원법상 제한 업종 (gambling, 베팅업 등)

<사회성 확인 지표(예)>

- ① 사회적경제기업
- ② UN SDGs 17개 분야 영위
* 물, 환경, 교육 등
- ③ 경영 방침에 사회적 가치 추구 명시 여부
- ④ 취약 계층 대상 고용
- ⑤ 이윤의 사회 환원
- ⑥ 지역사회 기여

<벤처성 확인 지표(예)>

- ① 법령상 인증·확인 보유
* 벤처, 이노비즈 등
- ② 지식재산권 보유
- ③ 연구개발활동 조직 보유
- ④ 재무지표, 고용 등 증가
- 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보유
- ⑥ 사회문제(환경, 고령화 등) 해결형 신기술 보유 여부

<민간자문단>

- ① (역할) 소셜벤처 적합 여부
이건 발생시 최종 결정
- ② 구성(민간중심)
 - 선배 소셜벤처기업가
 - 사회적경제 전문가
 - 임팩트투자사 등

2 소셜벤처 가치평가체계 구축 및 확산

□ 소셜벤처 가치평가모형 개발('18.하)

- 경제적 성과와 소셜벤처가 창출한 사회적가치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위해 혁신성·성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가치평가모형 개발

* 경제적성과 위주의 현행 평가 체계에서는 소셜벤처에 대한 명확한 가치평가가 곤란하여, 일반 기업에 비해 성과가 낮게 측정될 가능성이 높음

< 기업가치 평가체계 변화 >

현행	→	소셜벤처 가치평가체계
경제적성과 * 재무제표상 지표, 고용현황 등		경제적성과 + 사회적성과(추가) * 등급(5~10개), 점수(100점 만점) 등

- 기보·사회적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사회적금융협의회*(금융위)와 연계하여 민간**과 공동 개발하고, 등급(5~10개), 점수(100점 만점)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결과 산출

* 금융위, 신한, 은행연합회, 신보, 중진공, 소진공, 서민금융진흥원, KVIC 등

** 임팩트투자사, 엑셀러레이터 등

< 기존 사회적가치 평가 모형 비교 >

구분	사회적기업진흥원 (SVI: Social Value Index)	SK행복나눔재단 (SPC: Social Progress Credit)	B-Corporation 제도(미국)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성과를 14개 세부 측정지표 측정 (계량 11개, 비계량 3개) ○ 100점 만점으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성과를 화폐 가치로 환산하여 측정 ○ 화폐화가 어렵거나, 간접적 사회변화분은 측정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리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평가 ○ 200점 만점에 80점 이상 획득,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중
평가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가치 추구 여부, 지역사회협력 수준, 근로자 임금수준, 근로자 역량강화노력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 서비스 제공을 통한 편익증진, 자원소비 절감 성과, 공공예산 효율성 증대 성과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미션, 소비자에게 유익한 상품 여부, 환경 개선 여부 등

- 임팩트 투자사, 은행, 보증기관, R&D·판로 정책지원 기관 등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범용모형으로 개발**
- 다양한 지원기관이 각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 수정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치평가센터 홈페이지에 평가모형 공개**
- 지원기관 등이 별도로 정한 소셜벤처 지원 기준에 따라 **등급이나 점수별 우대 지원 등에 활용**

< 우수 소셜벤처에 대한 공공 및 민간 부분 활용 사례 >

공공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보) 보증비율 상향(전액보증), 보증료 추가 감면 ($\Delta 0.5\%p \rightarrow \Delta 0.7\%p$) 등 ○ (투자) 임팩트투자펀드 인센티브 성과 계산 ○ (창업) 생활혁신형 청년창업가 발굴, 청년창업사관학교 등 ○ (기술개발) 사회가치증진 제품 R&D 대상 발굴 등
민간 부문 * 가치평가 결과 자율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 SK 사회성과인센티브(SPC) 제도, 현대차그룹, LG전자·화학 등 사회적경제기업 지원대상 선발 ○ (투자) 임팩트투자사의 투자처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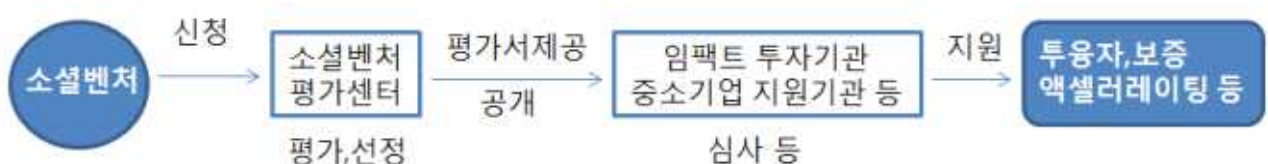
- 유망 소셜벤처를 발굴하거나 소셜벤처 기업이 자체적으로 우수성 확인을 받고싶은 경우, **가치평가 실시 및 결과 공개**

□ 소셜벤처 가치평가센터(가칭) 운영('18.하)

- **기보***를 통해 소셜벤처 가치평가를 조속히 실시하고, 민간의 자율적 가치평가체계 구축을 유도

* 벤처확인제도 및 기술가치평가 운영 경험, 가치평가 수준에 따른 보증연계 가능

- 공신력있는 평가자료 제공, 민간자문단 운영, 판별 가이드라인 관리, 현황파악 및 DB 관리, 소셜벤처 지원사업 안내 등 수행



1 [수도권] 성수동 소셜벤처 밸리 조성

- 성수동* 일대에 소셜벤처 지원 역량을 집중·연계하여 소셜벤처 창업·성장 및 성공사례 창출 중심지(Hub)로 육성

* 헤이그라운드, 소셜캠퍼스 溫 등 창업지원 공간이 구축되어 있고, 소셜벤처·사회적 혁신가 등 250여개 기업, 3천여명이 모여 소셜벤처 집적지를 형성

- 既 구축·운영중인 소셜캠퍼스 溫(노동부), 헤이그라운드(민간), 성동 소셜벤처 허브센터(성동구청)를 중심으로, 창업공간, 시제품 제작, 제품 전시 공간 등 제공

- 소셜벤처 밸리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논의기구(분기당 1회)를 설치하여 지원기관간 역할분담, 입주기업 대상 애로사항 해결* 등 실시

* 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One-Stop 서비스지원단(가칭 소셜벤처지원단, 민관전문가 구성)

- 민간의 아이디어를 제안*(Bottom-up) 받아 지원하는 방식으로, 소셜벤처기업 집중 지원 ('19년)

* 임팩트투자사, 액셀러레이터 등 지원 관계자와 정기적 교류 기회 마련, IR·피칭 실시, 스토리텔링 홍보 동영상 제작, TED형 포럼 정기운영 등

- 공유형 물류창고 운영, 기업간 네트워킹 기회 제공을 위한 “소셜벤처기업 맵” 구성·제공



<중기부>

논의기구 운영, 민간 주도 전문지원기관 운영 등 성수 소셜밸리 협업 체계 구축·지원

<노동부-성동구청-민간>

입주기관별 특성에 맞는 창업공간 제공, 시제품제작, 제품 판매·전시공간 등 제공

2 [지방]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소셜벤처 육성

- 지역 수요 및 해당 지자체의 지원의지가 높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공모(5개 내외)하고 지역 혁신기관**과 협업 ('19년)

* 지자체 소유 건물을 소셜벤처 창업공간으로 제공하는 경우 등

** 액셀러레이터, 창업보육센터, 테크노파크, 대학·공공기관, 사회적경제 지원조직 등

- 소셜벤처 (예비)창업자 100개팀에게 창업공간, 네트워킹, 컨설팅, 제품 홍보·판로지원 등을 집중 실시

* 창업공간 제공, 민간전문가의 비즈니스모델 검증, 분야별 멘토링, 투자자들과 정기적 네트워킹 구축 등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 소셜벤처 지원방안(예시)>

- ◆ **(지원실적)** 대전센터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유망 소셜벤처를 발굴·육성(소셜벤처 전용 사업은 없음)
 - 유메인('독거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센서 기술, '17년 26억원 투자유치), 넥스트이노베이션(시각장애인용 점자 기술, '17년 TIPS 선정) 등
- ◆ **(향후계획)** 지자체(입주공간), 액셀러레이터와 협업하여 대전 원도심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을 위한 소셜벤처 발굴 → 창업 → 성장을 체계적 지원

발굴단계	창업단계	성장단계
사회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예비)창업자 공동 발굴	(센터) 사업화 지원(역량강화, 시제품제작, 시장검증, IP확보, 제품고도화 등) (지자체) 입주공간 제공 (민간AC) 씨드투자(0.3억), BM개발, 집중멘토링(13주) 등	판로 확보 등 타부처 사업연계 글로벌 진출지원 등
센터, 민간 액셀러레이터 등	센터, 지자체, 민간 액셀러레이터 등	센터(파트너기업 등)

* 대전시 및 대전창경센터는 대전시청과 충남도청 이전으로 인한 도시재생 문제 해결에 대전 과학기술기반(출연연, 대학)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소셜벤처 육성에 관심

3 소셜벤처 창업 활성화

□ 소셜벤처 예비창업가 육성 및 초기창업 지원(노동부)

-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예비 창업자나 초기창업자(1년미만) 대상, 공간·창업비용(팀당 최대 5천만원) 등을 지원하는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소셜벤처를 포함하고, 지원규모 확대
- 사업 공간, 교육, 멘토링 등을 통해 성공창업 및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소셜캠퍼스온(溫)' 확대('18, 6개→'19년 9개)하여 인큐베이팅 서비스 확대

□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우수 소셜벤처 청년창업가 발굴('18.하, 중기부)

- 가치평가 활용, 사회가치 창출 및 혁신성이 우수한 청년 소셜벤처 창업기업*에게 1억원까지 창업사업화 비용 지원('18년 추정, 연 100개 발굴)

*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오픈바우처) : 만 39세 이하 예비청년창업자 및 창업 6개월 이내 청년창업자

- 창업활동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물품구매, 마케팅비 등)을 지원하되, 유흥비 사용, 친족기업과 거래 등 최소한 제한 설정
- 바우처 사용전 창업교육 실시, 전담멘토를 매칭하여 바우처 관리

- 일상 생활 불편이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생활혁신형 소셜벤처 청년창업가를 발굴·지원(예: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을 위한 생리컵 개발 등)하여 누구나 쉽게 창업가능한 환경 조성('18년 추정, 482억원)

- 소셜벤처 가치평가 모형을 활용, 즉시 사업화 가능성있는 창업자는 사업 실패시 상환 의무가 없는 정책자금(성공불용자) 최대 2천만원 지원

* 대출 3년 이후 성공시에는 심사를 거쳐 5천만원 한도 추가대출, 성실실패자 상환의무 면제

-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창업자 선발시 소셜벤처에 대해서는 우대 가점(최대 3점)을 부여, 추후 소셜벤처 수요와 성과를 반영한 별도 과정 신설 검토

* 1년간 사업비(최대 1억), 교육·코칭 및 기술지원, 창업공간 제공 등을 지원

□ **민관 협력을 통한 우수 청년소셜벤처 창업 지속 지원**

- 우수 청년 소셜벤처에 대해 대기업·공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창업성공률 제고 및 글로벌 소셜벤처로 육성
- (우수 소셜벤처 정보 공유) 지원대상 선발시, 우수한 소셜벤처를 정부·민간 상호간 추천하거나, DB화 하여 공유
- (분야별 특성 반영 및 매칭) 친환경분야는 LG전자·화학, 제조 기술기반 소셜벤처는 현대차그룹, 도시재생·주거는 LH, 물관련 기업은 K-Water 등과 지원 연계

< 민간 대기업의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 현황 >

SK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성과인센티브:사회적경제기업이 창출한 사회성과를 화폐단위로 측정, 사후 금전 보상 ○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생태계 지원 (펀드 투자)
현대차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30여개 사회적기업을 오디션 방식으로 선발 ○ 기업당 최대 1억원 사업비 지원, 멘토링 등 실시
LG전자·화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분야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 및 성장 지원 ○ 공간지원(LG소셜캠퍼스), 금융지원(무상 최대 5천만원, 대출 최대 1억원) 등
L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재생·주거 관련 소셜벤처 예비창업팀 지원('18년 10억원) ○ 창업자금, 공간, 컨설팅 지원, 클라우드 펀딩 및 홍보
K-Wa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산업플랫폼(물산업분야 벤처기업 종합시스템) 활용 ○ 대전 대덕특구 내 "K-water 스타트업 HUB"에 입주지원, 기술·연구인력 매칭, 실증 테스트베드 제공, 해외진출 지원 등

- (가치평가모형 활용) SK가 既 운영중인 사회성과인센티브(SPC) 제도와 연계, 사후보상 실시 및 가치평가모형 확산
- 향후 소셜벤처를 육성하는 민간 사업과의 연계 모델을 지속 확대 하고, 공기업과 연계를 통해 지원사례 확산

4 소셜벤처 성장 촉진

1 소셜 임팩트투자 펀드 조성 및 TIPS 통한 투자확대

□ 소셜벤처에 투자하는 소셜 임팩트투자 펀드 조성

- 모태펀드 출자(800억원, 80%)를 기반으로 소셜벤처에 투자하는 1,200억원* 규모의 '소셜임팩트투자 펀드' 조성 (중기부)

* 모태펀드 내 1,000억원(중기부) + 한국성장금융 임팩트펀드 200억원(금융위)

☞ 시각 장애인용 점자 보조기기 등 사회적임팩트는 크지만 상업성이 높지않아 일반 VC관심이 낮은 분야의 혁신적 소셜벤처들도 투자를 받아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증가

- '18년도 운용성과를 반영하여, '22년까지 조성규모 확대 검토

* (향후 계획) ('18) 1,000억원 → ('22) 총 5,000억원

□ 소셜벤처 특성에 맞게 운용방식 차별화 및 민간자본 유인('18.하)

- 펀드 총액의 70% 이상을 소셜벤처에 투자, 성과 창출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므로, 펀드 존속 기한 장기화(보통 7년 내외→10년 내외)

- 소셜벤처에 대한 투자 위험을 낮춰^① 민간 자본^②의 임팩트 투자 참여 확대를 유도

① 모태펀드의 우선손실충당, 이익 발생시 모태 지분 인수할 수 있는 콜옵션 확대 등

② 옐로우독, D3주빌리, 소풍, 크레비스 파트너스, HGI, MYSC 등 민간 임팩트 투자사

- 소셜벤처에 적합한 표준 투자해설서*(추구하는 사회적가치 등 반영) 제작 및 보급

* (소셜벤처 간담회) 現 투자계약서의 경우 소셜벤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곤란

< 소셜 임팩트투자 펀드 운용방식 >

구 분	기존 펀드	소셜 임팩트투자 펀드
투자범위	40~60% 이상	소셜벤처 70% 이상
존속기한	7년 내외	10년 내외
인센티브	초과수익 20% 이내	전체 초과수익

□ 펀드가 창출한 사회적 성과에 따라 성과보수 지급('18.하)

- 소셜벤처 가치평가센터를 통해 펀드 투자기업의 사회성과(투자기간중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산정
- 모태펀드 초과수익 범위*내에서 운용사에 사회성과 환산 금액의 20%까지 인센티브로 지급 검토

* (현행) 초과수익의 20% 이내 → (개선) 전체 초과수익중 사회성과 환산금액의 20% 이내

□ 기술기반 소셜벤처에 특화된 팁스(TIPS) 운영사 선정('18.5월)

- TIPS 프로그램을 통해 소셜벤처에 중점 투자하는 운영사를 신규 선정하여, 우수 기술기반 소셜벤처를 육성
- 소셜벤처 전문 운영사는 최대 6년간, 매년 5~10개 내외의 창업팀을 추천*할 수 있으며, 이 중 50% 이상을 소셜벤처에 투자

* 선정된 창업팀은 민간선투자 1억 외에 R&D 등을 위해 9억까지 추가 정부지원

2 소셜벤처 맞춤형 금융 지원 확대

□ (보증) 소셜벤처 임팩트 보증(기보)을 통한 보증 공급지원 ('18.6월)

- 향후 5년간 5천억원 규모 보증 공급 확대 검토

* 기보(억원) : ('18)300 → ('19)700 → ('20)1,150 → ('21)1,350 → ('22)1,500

- 보증료 감면($\Delta 0.5\%$ p), 전액보증 등 소셜벤처에 대한 우대지원 강화

□ (융자)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규모 확대('17, 200억원 → '18년, 350억원)

* ('17년도 지원현황) 총 225억원 지원, 지원업체 127개, 평균 대출금액 178백만원

3 소셜벤처 R&D 혁신역량 강화 지원

□ 소셜벤처의 혁신성 강화를 위한 R&D 지원 확대

- (준비) 인력·과제기획역량 등이 부족한 소셜벤처기업 대상,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는 R&D기획지원사업 실시 (20개사 지원, 중기부)
 - R&D기획역량강화 교육, 개발대상 기술·시장 분석, 사업화 전략 수립 등을 위한 기획기관 매칭 및 지원
 - * (소셜벤처 간담회) R&D 지원을 받으려면 창출하는 사회적가치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나,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R&D기획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수행) 지역·사회 혁신형 R&D 과제 소셜벤처 참여 확대
 - 기업 주도로, 취약계층 생활불편 해소 및 건강·환경·안전 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회가치증진 제품R&D’ 시행(창업성장기술개발지원사업 활용, 중기부)
 - * (예시) 저가 점자 스마트 워치(닷), 전동 휠체어(토도웍스), 장애인 교육용 앱(에누바) 등
 - ‘과학기술기반 지역수요맞춤형 R&D 지원사업*’, 다부처 R&D사업 기획·선정시, 가점대상인 사회적경제기업 범위에 소셜벤처 포함 등 제도개선 추진(과기정통부)
 - *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R&D과제를 제안한 지자체 대상으로 선정('18년 55억원)

4 국내외 판로 확충

□ 국내 판로 확충 및 마케팅 촉진

- 성장가능성이 높은 소규모(10인 이하) 소셜벤처에 대해 기업당 1억원 한도내 지원사업(판로확보, 제품개발 등)을 패키지로 지원('18년 20억원, 중기부)
- 선정된 기업에 기업진단팀(사업주관기관, 경영컨설턴트 등) 배정, 필요한 지원사업 구성 및 지원성과 점검, 추가 컨설팅 등 성장경로 관리

- 온·오프라인 정책매장 입점 우대 및 소셜벤처 제품정보 DB 구축을 통한 판로 확대 지원

* 공영홈쇼핑(아임쇼핑) 등 온라인을 통한 제품 홍보 및 유통지원 포털(아임스타즈, www.imstars.or.kr)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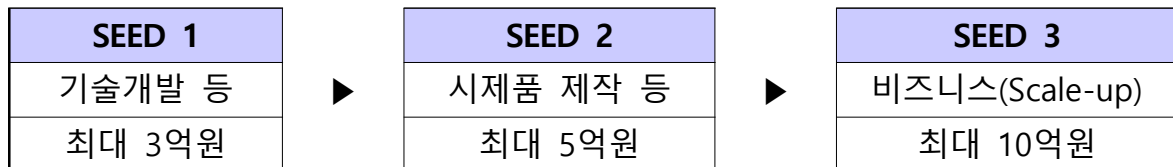
- 방송·언론, 뉴미디어(SNS 등) 매체를 활용한 우수 소셜벤처 제품의 소비자 노출 및 확산을 유도하고, 유동 인구가 많은 공간을 활용한 소셜벤처의 사회적 가치를 콘텐츠화한 전시·홍보

□ ODA 연계를 통한 소셜벤처 해외 판로 활성화(중기부, 외교부)

- 코이카(KOICA)의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을 통해 개도국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해외시장 개척이 가능한 소셜벤처 육성('18년 86억원)

* (사례) 힐세리온(휴대용 초음파 진단기기 개발, 베트남에 보급), LS테크놀로지(저가형 고도정수처리장치 개발, 라오스에 깨끗한 물 제공에 기여)

< CTS 단계별 지원 >



- CTS 참여기업의 해외시장 본격 진출시, 베트남, 미얀마 등 개도국에 설치된 수출인큐베이터 입주공간 활용 지원

* 미국, 중국 및 베트남, 미얀마, 인도, 칠레 등 총 14개국 22개소 설치

- CTS 참여기업의 비즈니스 역량강화 해외연수 프로그램* 실시

* 해외 소셜벤처 투자자 피칭, 인큐베이팅 기업운영 프로그램 참여 등 1주일간 연수('17년 총 12개팀 참가)

- 기업주도 프로그램 기획을 통해 수요자맞춤형 연수 실시, 연수기간 연장(1주일→2주일) 등 프로그램 개편

5 소셜벤처 활성화 문화 확산

□ 소셜벤처 성공사례 및 우수 기업인 발굴·홍보 및 포상

- 혁신적 사업모델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소셜벤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지상파 방송(다큐멘터리)·SNS 등을 통해 홍보 확대
- 소셜벤처 및 사회적기업가정신(Social Entrepreneurship) 포상을 신설*하여 자긍심 고취

* 벤처창업페스티벌(11월), 세계기업가정신주간행사(GEW, 11월) 등 행사의 유공자 포상부문에 해당 분야 신설

□ 사회적기업가 정신(Social Entrepreneurship) 교육 활성화

- (청소년) 초중고 비즈쿨 지원학교 확대('18, 560개교 → '19, 600개교) 및 사회적기업가정신 교육 강화, '소셜벤처 창업동아리 운영' 지원
- (대학생·일반인) 소셜벤처 및 사회적기업가정신 캠프·포럼을 개최, 소셜벤처 창업 및 사회혁신 성공사례 등을 공유·확산

* 대학기업가센터(9개) 및 청년기업가정신재단 주관

- 창업선도대학*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과정을 필수 설치, 기업가정신 교육과정 10% 이상을 소셜벤처교육으로 운영

* 창업지원 인프라가 우수한 대학을 통해 창업자 발굴-교육-사업화자금(최대 1억원)-성장지원까지 창업 쉼단계 지원

❖ 소셜벤처 활성화 방안의 추진으로 2,500여개의 일자리(청년 일자리 2,000여개)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19년)

- 360여개 소셜벤처가 창업하고, 약 250개 기업이 임팩트투자·보증·R&D 등의 지원을 받아 성장 가능
-

V. 향후 추진일정

정책과제	일정 · 주관부처	
1. 소셜벤처 판별 및 가치평가체계 구축		
(1) 민간 주도 소셜벤처 판별 가이드라인 마련	'18.3분기	중기부
(2) 소셜벤처 실태조사 실시	'18.3분기	중기부
(3) 소셜벤처 가치평가 모형 개발	'18.3분기	중기부
(4) 소셜벤처 가치평가센터(가칭) 운영	'18.3분기	중기부
2. 청년 소셜벤처 허브(HUB) 구축		
(1) (성수동) 소셜벤처 인큐베이팅 기능 강화	'19.1분기	성동구청·노동부
(2) (성수동) 소셜벤처 지원 전문 지원기관 선정·운영	'19.1분기	중기부
(3) (지 방)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지역 소셜벤처 육성	'19.1분기	중기부
3. 소셜벤처 창업 활성화		
(1) 청년 소셜벤처 바우처 방식 사업비 지원	'18.4분기	중기부
(2) 대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과 연계 강화	'19.상	대기업·중기부
(3) 소셜벤처 육성 팁스(Tips) 운영사 선정 및 창업 지원	'18.2분기	중기부
(4) 생활혁신형 소셜벤처 정책자금(성공불용자) 지원	'18.4분기	중기부
(5) 청년창업사관학교 소셜벤처 우대가점 부여	19.1분기	중기부
(6)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및 소셜캠퍼스 온 확대	'18.3분기	노동부
4. 소셜벤처 성장촉진		
(1) 임팩트투자 펀드 조성	'18.2분기	중기부
(2) 소셜벤처 맞춤형 금융(보증, 융자) 확대	'18.2분기	중기부·금융위
(3) 소셜벤처 R&D 지원 확대(R&D기획, R&D 수행)	'19.1분기	중기부·과기정통부
(4) 소규모 소셜벤처 제품개발·판로 패키지 지원	'18.2분기	중기부
(5) ODA 연계를 통한 소셜벤처 해외 판로 진출 지원	'18.3분기	외교부
(6)소셜벤처 성공사례 포상·홍보 및 교육 강화	'18.4분기	중기부
(7)창업선도대학 내 CSR 과정 설치	19.1분기	중기부

참고

소셜벤처 성공사례

 <p><모어댄(한)></p>	<p>(혁신) 폐자동차 시트 등 재활용 가죽을 활용한 친환경 제품 제작 (사회성과) 경력단절여성, 새터민 등 취약계층 고용, 폐기물문제 해결 (경제성과) 스타필드 고양, 교보 핫트랙스 등 11개 매장 입점</p>
 <p><레드스톤 시스템(한)></p>	<p>(혁신) 컴퓨터 CPU 전력절감기술 등 다수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 성능 개선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사회성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제공 및 정보화 교육 실시 (경제성과) '17년도 381억원 매출, 장애인 39명 고용(총근로자 113명)</p>
 <p><이지앤모어(한)></p>	<p>(혁신) 국내 최초 '월경컵' 식약처 허가, 생리대 등 다양한 월경용품에 대해 온라인을 통한 정보 제공, 경험 공유 및 제품 판매 (사회성과) 제품 구매, 온라인 리뷰 적립 기부포인트로 저소득층 아동(매월 600명→1,000명 확대 예정)에게 월경용품 지원 (경제성과) 올리브영.왓슨스 등 입점, 여성.청년근로자 비중 100%</p>
 <p><에누마(미)> 실리콘밸리 한인기업</p>	<p>(혁신) 신체적 장애, 문화.경제적 취약층 아동을 위한 읽기, 셈하기 학습용 게임 개발과 서비스(원손잡이 사용모드, 난독자용 폰트 등 적용) (사회성과) 1,400개 미국 초등학교가 수업 교재로 활용, 8개 언어 약 150개 국가에서 활용, 하루 평균 약 40만 번의 셈하기 학습이 실행 (경제성과) 전 세계 누적 다운로드 500만 이상, '18년 4월까지 총 101억 원의 투자 유치, 글로벌 러닝X프라이즈 (XPRIZE) 경진대회 결선진출 1백만불 상금 획득</p>
 <p><오파테크(한)></p>	<p>(혁신) 시각장애인이 재미있고, 쉽고, 빠르게 점자를 익힐 수 있는 점자 교육보조기기 탭틸로 개발. 블루투스를 통해 모바일 앱과 연결해 점자를 읽고 쓰는 방법을 학습 (사회성과) 시각장애인 중 점자를 아는 사람은 10%미만, 탭틸로를 통해 시각장애인이 쉽게 점자를 배워 세상과 소통가능 (경제성과) '17.3. 미국 최대 보조공학박람회 CSNU 참가, '17.7월 미국 첫 판매 개시(개당 900달러), 유럽, 중동, 아프리카, 인도 등 진출 계획</p>

 <p><이노마드(한)></p>	<p>(혁신) 세계 최초로 물병 사이즈의 휴대성을 강조한 수력발전기 제품을 개발(강이나 계곡의 물을 전력 에너지로 변환해 모바일 기기를 충전할 수 있는 배터리 일체형 발전기)</p> <p>(사회성과) 전기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계 1/3 인구에게 '휴대용 발전기'를 보급해 꼭 필요한 만큼의 전기를 만들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p> <p>(경제성과) '16.9월 미국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킵스타터'를 통해 펀딩 성공, '17년 9월 생산을 완료하여 '17.12월까지 총 3,200대(약580,000천원) 판매</p>
 <p><토도웍스(한)></p>	<p>(혁신) 기존의 수동휠체어에 조이스틱과 모터, 컴퓨팅 보드, 배터리를 장착하여 전동 조작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토도드라이브 개발</p> <p>(사회성과) 자기 몸에 맞는 기존 휠체어에 큰 개조 없이 간단하게 장착,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p> <p>(경제성과) '16.3월 설립, 개당 176만원, '16년 매출(136백만원)</p>
 <p><빅이슈(영)></p>	<p>(혁신) 홈리스에게만 잡지 판매권을 부여하는 비즈니스모델로 빈곤 문제 해결('91년도 창간, 판매금액 50%를 판매원 귀속)</p> <p>(사회성과) 총 1억5천만 파운드 사회적자금 조성, 약 1백만명 고용지원, 임대주택을 통해 3.4백만명에게 거주지 제공</p> <p>(경제성과) 약 300개가 넘는 사회적기업에 투자하여 3천만 파운드 이상 매출 창출 및 재투자</p>
 <p><에그리쿨(프)></p>	<p>(혁신) 대도시에서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면서 무농약의 신선한 과일 재배가 가능한 스마트 컨테이너 개발('15년 창업)</p> <p>(사회성과) 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해 물과 비료 사용을 90% 감소, 새로운 도시형 농업일자리 창출</p> <p>(경제성과) '17년까지 약 43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p>
 <p><킵스타트(미)></p>	<p>(혁신) 저가의 즉동식 펌프 개발(약 95불)</p> <p>(사회성과) 아프리카 농민에게 저가 펌프 판매와 농작물 재배 컨설팅 제공, 연간 1천2백만명을 기아에서 해방</p> <p>(경제성과) 총 21만명 고용 창출, 연간 2억불 매출 창출</p>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

2018. 7. 3

관 계 부 처 합 동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

2018. 7. 3

관 계 부 처 합 동

순 서

I . 추진 배경	111
II . 현황 및 문제점	112
III . 기본 방향	117
IV . 정책 과제	118
1. 인재 유입 활성화	118
2. 사회적경제 핵심리더 육성	122
3. 사회적경제 종사자 역량 및 전문성 강화	124
4. 풀뿌리 사회적경제 토대 구축	127
5. 인재양성 종합지원체계 구축	131
V . 추진 일정	134

I. 추진배경

- 고령화, 양극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 증가
 - EU는 경제와 고용위기 속에서 사회적경제가 긍정적 역할을 수행했고, 특히 취업애로계층의 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
 - 우리나라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통해 고용창출 및 소득양극화 해소, 지역공동체 복원 등에 기여
 - * 사회적기업(노동부), 협동조합(기재부), 마을기업(행안부), 자활기업(복지부) 등
 -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전체 고용규모에서 사회적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여 활성화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이 확대되고 있으나, 고용비중은 여전히 EU의 1/4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
 - * '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기업 고용비중은 1.4%인데 비해 EU 28개국 평균은 6.3%
 - ↳ 다만, EU의 사회적경제조직 범위(협회·공제회 등 포함)가 우리나라(사회적경제기본법상 조직)에 비해 더 포괄적
 - 사회적경제가 확산되고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영역에서 활동할 “사람”을 키워야 하나, 현재 인재양성을 위한 여건은 열악한 상황
 - 사회적경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여 청년·신중년 등 다양한 계층의 신규 인재 유입 저조
 - * 일반 국민들의 인지도 조사 결과, 응답자 87.5%가 사회적경제를 들어본 적이 없거나 들어본 적은 있으나 무엇인지 모른다고 응답('17년,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中)
 - 부처별 창업 지원에만 편중되어 종사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교육 전문가·지원인력 등 분야별 전문가 양성과정 등은 거의 부재한 상황
- 이에 따라, 새로운 인재가 사회적경제로 지속 유입되고, 전문성을 갖춰 성장할 수 있는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 시스템 마련

Ⅱ.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 정부기관의 사회적경제관련 교육훈련 현황 실태조사*에 기반한 분석('17.10월~12월)

* 노동부 등 6개 부처(28개 프로그램), 서울시 등 101개 지자체(283개), 강원 등 7개 교육청(10개) 등 총 114개 기관에서 321개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 제출

** (한계) 민간이 자체 재원으로 수행하는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현황은 미포함

❖ 조사내용: 각 기관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프로그램의 유형, 대상, 운영기관, 지원조건, 지원내용, 수료인원, 예산 등

* (유형) 일반교육(기초, 전문), 창업교육, 창업지원, 기타 등으로 구분

** (대상) 학생, 일반인, 구직자, 창업희망자, 사회적경제 종사자, 공무원, 기타로 구분

*** (운영기관) 직접수행, 공공기관, 중간지원기관, 민간기관, 기타로 구분

□ (총괄) '17년 114개 기관에서 총 321개 사회적경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며, 교육인원은 58천여명

○ (교육기관) 중간지원기관*(48%)에서 가장 많은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학 등 민간기관에서 13% 수행

* 정부나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관련 제반 시책을 집행하는 비영리법인, 자치단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 기관·대상별 교육인원 >

기관 대상	민간기관	공공기관	중간지원 기관	부처·지자체 직접	무응답	계
학생	592	1,069	1,611	5,652	220	9,144
일반인	1,218	3,029	4,081	1,170	564	10,062
창업희망자	1,314	4,453	10,470	408	491	17,136
종사자	4,762	2,466	8,894	277	555	16,954
공공/기타	0	0	3,209	2,178	0	5,387
계	7,886 (13%)	11,017 (19%)	28,265 (48%)	9,685 (17%)	1,830 (3%)	58,683 (100%)

- (프로그램) 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기초 소양 수준의 일반교육과 창업 입문교육 중심 프로그램이 제공



< 유형별 프로그램, 교육인원, 예산 >

	창업 교육·지원	기초 소양	전문 교육	정부 제도	강사 양성	기타	계
프로그램 수(개)	116 (36%)	102 (32%)	31 (10%)	29 (9%)	6 (2%)	37 (12%)	321 (100%)
교육인원 (명)	9,071 (15%)	30,440 (52%)	12,776 (22%)	3,293 (6%)	155 (1%)	2,948 (5%)	58,683 (100%)
예산 (백만원)	24,342 (87%)	905 (3%)	2,076 (7%)	118 (1%)	61 (1%)	428 (1%)	27,930 (100%)

- 강의방식 교육이 82%에 이르며, 실습·탐방 등 체험 형식은 약 3%에 불과

* (전달방식) 강의식 82%, 강의·실습 병행식 8%, 실습형 2.8%, 현장탐방 0.4% 등

- (교육대상) 창업 희망자(29%)와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29%)가 교육 인원의 절반을 넘게 차지하며 초·중·고 학생은 약 9천명(16%)에 불과



< 대상별 교육인원, 예산 >

	학생	일반인	구직자	창업 희망자	종사자	공공/ 기타	계
교육인원 (명)	9,144 (16%)	9,764 (17%)	298 (1%)	17,136 (29%)	16,954 (29%)	5,387 (9%)	58,683 (100%)
예산 (백만원)	448.6 (2%)	990.25 (4%)	612.2 (2%)	23,676.26 (85%)	1,524.05 (5%)	678.7 (2%)	27,930 (100%)
1인당 교육비	5만원	10만원	205만원	138만원	9만원	13만원	48만원

○ (인지도) 일반 국민의 47.3%가 사회적경제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

* 일반시민 1,000명 대상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기업 인지도 조사, '17년 5월~7월



2. 문제점

1 | 인재유입의 부족

□ 다양한 분야의 유능한 인재 유입을 위한 프로그램이 미비

○ 청년, 신중년, 퇴직전문인력 등 구직자들의 사회적경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유인 제공 및 프로그램이 부족

*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교육 중 구직자 대상 프로그램(서울시 청년혁신활동가 사업, 강원 JOBS 사업 등 인건비 지원 사업)은 전체의 1% 수준에 불과

현장 의견 ('17.10.26, 창업지원기관, 소셜벤처 대표 현장간담회)

■ “일반 구인시장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특성과 미션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인재를 구하기가 어렵다. 이에 따른 생각의 차이로 근속률이 높지 않다.”

- 높은 비율의 예산이 창업지원에 집중 되고 있으나, 주로 초기 입문단계의 창업교육이 제공
- 창업기 이후 지속 성장에 필요한 인재육성 전략 및 투자가 부족
 - * 사회적경제 기업은 R&D를 통한 성장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83%), 자금 부족(60.8%) 등의 사유로 실행하지 못한 기업이 많음('17년 기업대상 수요조사 결과)

2 | 리더·종사자 대상 맞춤형 전문교육의 미비

- 교육내용, 주제, 전달방식 등이 단조로우며 대상별·분야별 특성이 고려되지 못한 획일화된 프로그램이 주로 제공
- 리더·종사자 역시 전문교육 보다는 기초 소양수준의 교육이 주로 제공
- (리더) 일부 대학에서 학위과정을 개설 중(총 160명 규모)이나, 학사과정 운영대학은 2개교*에 불과 하는 등 학계 기반 확충이 절실
 - * 한양대학교 · 숭실대학교 ('18년 개설)
- (종사자) 종사자들의 전문인력화 등 사회적경제 내부 인력의 핵심 인재로의 육성에 소홀했으며, 양질의 교육 콘텐츠가 부족
- 기업규모가 영세하여 교육 참여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종사자*의 18.6%만이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장 맞춤형이 아닌 사회적경제 기초 소양위주 교육이 제공되어 효과성도 미흡
 - *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 마을 · 자활기업 현황('16년) : 총 14,948개, 종사자 91,100명

3 | 일반국민 인식 및 이해도 저조

- 우리사회 사회적경제 역사가 짧고, 초중고 교육과정이나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아 인식과 이해가 저조*
- * 일반시민의 47.3%가 사회적경제를 들어보지 못했다고 응답했으며, 40.2%도 들어본 적은 있으나 무엇인지 모른다고 응답('17.7월 일반시민 1천명 대상 실태조사)

- 일반 경제교육의 경우 교과과정에 반영되어 대부분의 학생이 교육을 접할 수 있으나, 사회적경제는 전체 초·중·고 학생('16년 기준 663만명)의 1%가 채 되지 않는 학생(9,144명)만 교육을 이수
- 교육을 희망하는 시민들도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 * 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협동조합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평균 정원의 2배 이상 인원이 신청

현장 의견 ('17.11.1,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등 당사자 조직 현장간담회)

- “사회적경제 조직이 지속 가능하려면 사회적경제 가치에 공감하고 후원하는 주체로서의 시민 양성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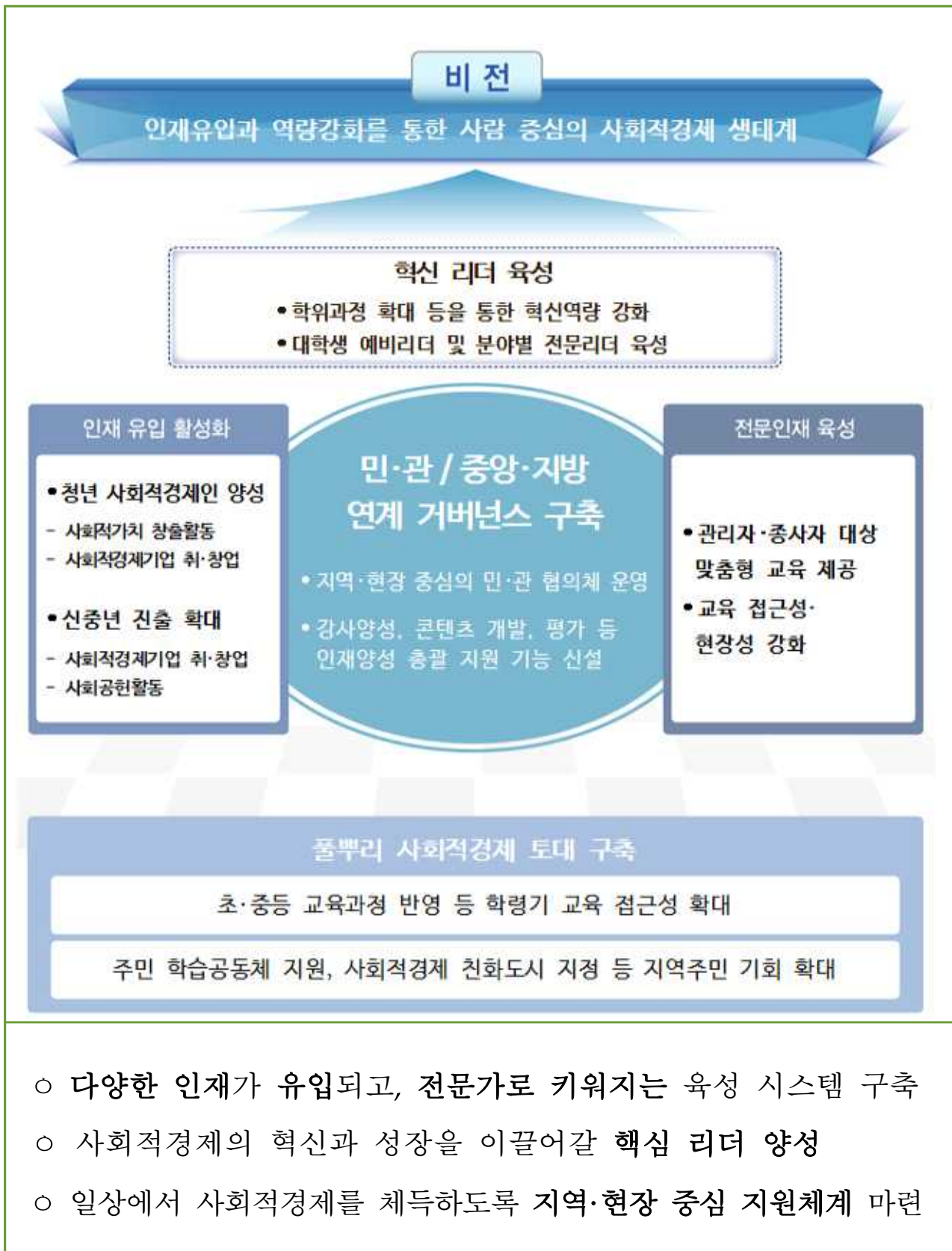
4 | 종합적인 지원체계 미비

- 온라인 플랫폼 등 인프라가 부족하고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미비함에 따라 연구·개발, 콘텐츠 보급, 전문가 양성 등 체계적인 인재양성이 곤란
-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및 교육이 부처별*로 파편화되어 진행됨에 따라 프로그램 연계성, 사회적 경제 교육 실태 파악 및 평가 등에 한계
 - * 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 협동조합 : 기재부, 자활기업 : 보건복지부, 마을기업 : 행정안전부
- 온라인 교육 등 쉽게 접할 수 있는 인프라가 미비하며,
 - 중간지원기관이 높은 비중(48%)으로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나, 교육 요원이 부족하며 지원 미흡으로 역량향상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현장 의견 ('17.12.6, 교육전문가 그룹 현장간담회)

- “사회적경제 교육을 총괄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연구·개발, 콘텐츠 보급, 강사 양성, 평가 등 체계적인 인력양성을 가능케 하는 인프라가 필요한 시점이다..”

Ⅲ.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 기본방향



IV. 정책 과제

1. 인재 유입 활성화

◇ 유능한 인재들이 사회적경제를 찾아오도록 매력적인 취·창업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① 청년 사회적경제인 양성

- (청년 창업 확대) 성장단계별 맞춤형 창업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혁신적이고 유능한 청년의 유입을 확대
 - (아이디어 발굴 확대) 사회적경제 창업입문과정을 확대*하고 도시재생·태양광 등 분야별 맞춤형 특화 창업입문 교육과정 확대
 - * ('18년) 일반 창업입문과정(240명, 30시간) → ('19년) 도시재생·사회서비스 등 사회적경제 장점이 부각되는 분야별 특화 과정 포함 입문과정 확대
 - 소셜벤처 경연대회에서 발굴된 아이디어에 대한 투자 연계, 창업 지원사업 선발 우대 등을 통해 우수 아이디어 발굴을 확대
- (사업화 집중지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팀 선발규모를 확대하고, 자금·공간·멘토링 등 창업의 전 과정 밀착지원(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 청년·베이비부머 등 창업 수요에 대응, 선발규모 확대(연 500팀→연 1,000팀)
 - 초기 성공적 정착을 위해 지원기간 연장(1년→2년) 및 지원수준 현실화
- (체계적인 성장지원) 창업기업의 조기 도약을 위해 성장 인프라를 확충하고 판로·R&D·투자 등 통합지원을 통해 우수기업을 집중 육성
 -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창업지원그룹과 협력하여 소셜벤처 등을 발굴하여 집중 육성(중기부)
 - * ('19년) 5개 센터 시범 운영 후 성과에 따라 타지역 혁신센터로 확산 추진
 - 창업팀의 생존률 제고를 위해 성장지원센터*를 확대 조성('17년 3개소 → '19년 전국 9개소) 하고 컨설팅, 투자연계 등을 강화(노동부)
 - * 사회적경제기업 창업팀에게 입주공간, 멘토링,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 제공

- 판로, R&D, 컨설팅 등 분야의 관련 정부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스타 사회적경제기업을 집중 육성

* ('18년) 20개사 → ('20년) 50개사로 확대, '22년까지 200개 스타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 (금융지원 확대) 사회가치연대기금 등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을 통해 기업의 성장단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

* '18년 중 정부·공공자금을 중심으로 1,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하고, '22년까지 민관합동으로 3,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여 체계적인 성장을 지원

- (사회가치창출 활동) 청년(단체)이 교육·돌봄·환경 등 지역 내 사회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를 통해 일경험 및 소득을 지원

- 공공부문과 청년·기업 등 민간부문 합동으로 지역사회 내에 산재한 현안 문제점·수요에 대응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 풀타임 근무 시 2,250만원 지원, '18.하반기 2,000명 예정(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내 민간취업연계형의 50%)

- (사회적경제기업 취업지원) 금전적 보상보다는 보람, 사회적가치 등에 관심이 있는 청년을 적극 유입하여 청년 실업 극복 및 지역사회 활력 제고

- 청년 구직자가 지역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에서 근무 시 인건비 등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의 혁신에 필요한 심화교육을 제공하여 청년 인재 유입을 통한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의 혁신을 유도

* 초기 2년간 연 2,400만원 인건비 지원, 이후 해당지역 취·창업 시 추가 인센티브 지원, 참여 청년에게 사전 직무훈련 및 취업기간 중 주기적 교육·컨설팅 제공

** '18.하반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내 지역정착지원형(3,750명) 중 2,000명 취·창업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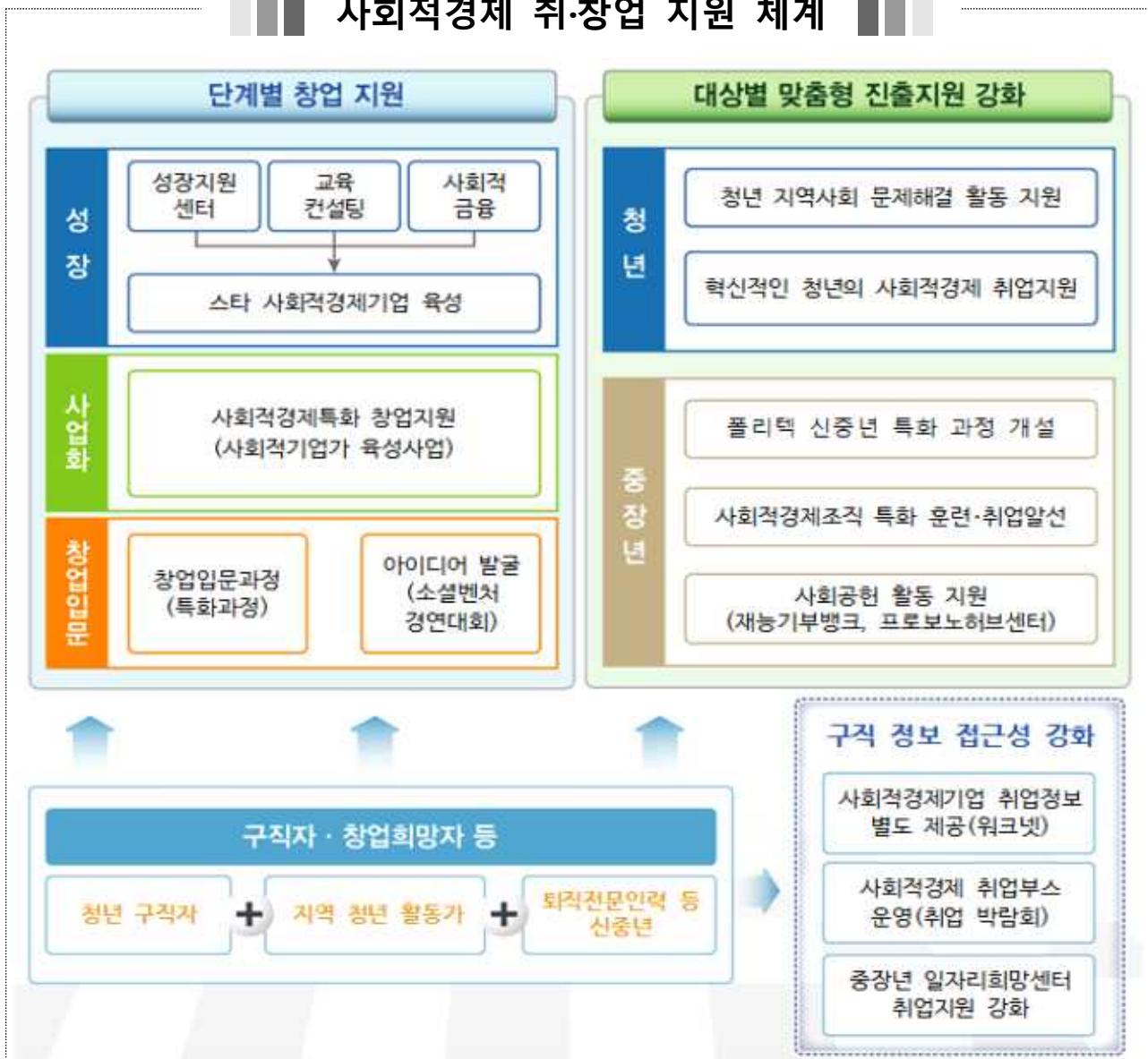
※ 유사사례: 일부 자치단체에서 사회적경제 분야 청년 인턴 지원사업 추진 중

- 서울시 사회적경제 청년혁신활동가 사업: 청년 구직자들에게 사회적경제 조직 현장의 프로젝트 수행 및 일경험 지원 (시급 8,200원, 최대 23개월 지원)
- 강원 JOBS 프로젝트: 청년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조직 일터기반 학습 지원과 실무 교육을 통해 사회혁신 청년활동가 양성 (월 60만원, 5개월 지원)
- 미국 AmeriCorps: 청년들이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빈곤퇴치 등 사회문제 해결 추진, 풀타임(연 1,700시간이상) 근무 시 연 3만달러(생계비 2.5만, 교육비 0.5만) 지원

- (취업) 사회적경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취업 시 인건비를 지원하여 전문성 있는 신중년 유입을 촉진
 - (교육) 폴리텍 內 신중년 대상 사회적경제기업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단계적으로 **쏘 폴리텍 직업훈련과정으로 확대**
 - * ('18년) 서울 강서·대구 등 4개 캠퍼스→('20년) 20개 캠퍼스→('22년) 34개 쏘 캠퍼스
 - 사회적경제조직 전문가 양성 등을 위해 민간기관을 통해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중년 취업교육 과정 개설**
 - * 사회적경제조직 총괄관리자 과정('18년 하반기~, 노동부)
 - (취업지원)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전국 31개소)와 권역별 중간지원기관을 연계하여 사회적경제조직 특화 **훈련·취업알선 서비스** 제공
 - 민간기업 **사회공헌활동을** 연계하여 베이비부머 등 퇴직인력대상 사회적경제기업 **재취업 프로그램** 제공
 - * 노동부-현대자동차-서울50플러스재단 공동으로 퇴직전문인력 및 신중년 대상 교육훈련 및 취업연계 프로그램 제공('18년 200명, '22년까지 1천명 지원)
 - 워크넷 內 사회적경제기업 취업정보를 별도 제공하고, 각종 **취업 박람회** 시 사회적경제 **홍보 부스** 별도 운영을 추진
 - * 워크넷 內 기업유형별 채용정보에 '사회적경제기업' 분류를 신설
 - (인건비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사업*에 사회적경제기업을 우대하여 신중년 유입을 **활성화**(노동부)
 - * 50세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인사·노무 등)에 채용 시 인건비 지원(월 80만원, 최대 1년)
- (창업) 전문성을 가진 신중년의 사회적경제기업 창업활성화를 위해 **시니어 특화 창업과정을 확대***
 - * '18년 민간 시니어 특화 창업전문기관을 통해 창업입문과정 30명 제공 중
- 특히,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을 위해 **맞춤형 사업화 지원*** 및 **씨앗자금** 신설 검토(과기부)
 - * 일반·심화·고경력으로 구분하여 맞춤형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사업화 지원('18년 22개)

- (활동지원) 퇴직인력의 사회공헌활동 활성화를 위해 전문위원제도를 확대하고 재능기부뱅크·프로보노 허브센터 등 인프라를 확충(노동부)
- 마케팅·회계·법무 등 경영분야별 퇴직전문인력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기업 컨설팅 및 멘토링 서비스 제공
 - * ('18년) 30명의 전문위원을 선발하여 서비스 제공(월 8회 컨설팅, 100만원 수당 지급)
 - 서비스의 질적수준 제고를 위해 교육 등 강화
- 컨설팅이 필요한 사회적경제기업과 재능기부 의지가 있는 퇴직전문인력을 연결하고 활동을 지원하는 온·오프라인 플랫폼* 구축
 - * (온라인) 재능기부 뱅크, (오프라인)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內 프로보노 허브센터 마련

사회적경제 취·창업 지원 체계



2. 사회적경제 핵심리더 육성

◇ 사회적책임의식과 경영마인드를 겸비한 리더를 양성하겠습니다.

①

대학 내 전문교육과정 확대

- (선도대학 지정) 노동부·교육부 협력으로 사회적경제 선도대학**을 지정(노동부), 연구개발·학부개설 등 관련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
 - 노동부는 학부개설 준비를 위한 리더과정(비학위과정)을 2년간 지원, 교육부는 사회적경제 연구 확충 등을 위한 소요비용을 지원
 - * 현재 한양대와 숭실대 학부과정 개설('18.3월) → '19년 신규 3개 대학 지정, '22년까지 20개 대학에서 500여명 학부 전공자 육성 지원
- (학위·비학위 확대) 사회적기업 리더과정을 사회적경제 리더과정*으로 개편, 지원금 및 지원 대학 수를 확대하여 핵심리더를 집중 육성
 - * ('18년) 4개교 지원 → ('22년) 20개교 지원 추진
 - SK 등 민간기업 등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하여 학위운영대학을 확대
 - * 학위과정 운영 10개 대학 중 KAIST, 이화여대, 한양대 등 5곳은 SK그룹에서 지원
- (국제교류 확대) 외국 대학 교류 및 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사회적경제 리더의 글로벌 역량 제고
 - 사회적경제 선도대학과 외국의 사회적경제 주요 대학*간 교류·협업 체계 구축 지원
 - * 스페인 몬드라곤대학, 영국 협동조합대학, 이탈리아 트렌토대학 등
 - 리더의 글로벌 역량 제고를 위한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확대*
 - * 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가 정책연수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18년 7명)

②

대학생들을 예비리더로 육성

- ☐ 중소기업 취·창업을 희망하는 희망사다리 장학금* 수혜 대학생 대상 사회적경제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수혜 대학생에게 등록금과 취·창업 장려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수혜기간 만큼 취·창업을 유지('18: 356억원, '17년 4,152명 지원)

- ☐ KOICA 등 장기 해외봉사단('18년 2천명 → '21년 4천명)에게 국내외 비영리기관, 사회적경제 등 다양한 분야 진출을 위한 교육·컨설팅 제공

- ☐ '중소기업 탐방사업'*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을 탐방, 실제 일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노동부)

* 학생에게 탐방 기회를 제공(1천명, 최대 5일), 기관 선정 시 사회적경제기업 우대

- ☐ 대학생 대상 대학생협 창업, 운영 관련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국유 시설 사용료 감면 등을 통해 대학 생협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

* 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 맞춤형 아카데미 內 교육과정 개설('19년)

③

사회적경제 유망분야 리더 육성

- ☐ (분야별 전문리더 육성지원) 사회적경제 진출 유망 분야별* 전문 리더 육성을 위한 심화교육 과정 신설('19년, 사회적기업진흥원)

* 도시재생, 신재생에너지, 사회서비스, 문화예술, 개발원조 등

- ☐ (포럼 운영) 최근 주요 경제 동향 및 트렌드, 국내외 사회적경제 변화 공유 등을 주제로 사회적경제 리더 대상 권역별 포럼 운영

- '18년 사회적경제 국제 리더포럼 개최 시 '사회적경제 유망진출 분야'에 대한 분야별 해외전문가와의 토론 프로그램을 제공

* 국제 리더포럼(6.15, 서울) 및 사회적경제박람회 시(7.13~15) 국내외 전문가 세미나 개최

3. 사회적경제 종사자 역량 및 전문성 강화

◇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인재'를 적극 육성 하겠습니다.



①

교육의 접근성 제고

- (온라인 교육) 지역에서도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 민간 교육기관을 활용하여 고품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
 - 사회적경제 전용 온라인 교육 플랫폼(가칭 SE-배움터)을 운영('19년, 사회적기업진흥원)하여 민간 전문교육 콘텐츠를 탑재,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
 - 사회적경제 우수강좌를 발굴·개발하여 K-MOOC* 강의에 탑재,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업무공백·교육비용 부담 해소('19년)
 - * K-MOOC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 제한 없이(Massive) 모든 사람이 수강 가능한(Open) 웹 기반(Online) 강좌(Course), 서울대·KAIST 등 70개 대학에서 324개 강좌 무료 제공
- (지역중심) 권역별 중간지원기관,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 지역내 평생교육기관·전문교육기관 등을 통한 교육을 확대하여 접근성·현장성 강화*
 - 중간지원기관과 사회적경제기업, 교육기관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훈련 제공시 시설비, 프로그램 개발비, 운영비 등 지원
 - *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최대 20억원 지원, 노동부)
 - 지역 내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 시 평생교육기관, 지역교육기관 등의 교육·공간·강사 등 지원
 - 도서관, 주민센터 등 지역 시설을 학습공간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지원
- (교육비용 지원) 종사자 교육훈련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기업 자체 훈련 및 위탁 교육에 대한 훈련비 지원* 확대
 - 사회적기업에서 종사자를 위한 자체교육을 실시할 경우 고용보험 재직자 훈련요건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지원 확대
 - * 예시) 이주여성 종사자를 위한 어학교육 등 교육과목을 폭 넓게 인정

- (중간관리자) 현장에 요구되는 실무 역량 향상을 위해 경영분야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 단위 워크숍 개최를 지원
 - 회계·마케팅·인사 등 필요역량별 특화 교육프로그램 신설 및 확대(진흥원)
 - * ('18년) 중간관리자 과정 신설(실무역량 통합교육) → ('19년) 세무·마케팅·인사 등 중간관리자 필요 역량별 교육과정 개설(5개 과정)
 - 사회적경제기업 업종·분야·지역별 우수사례 공유 및 발전방안 토론, 중간관리자 간 네트워킹을 위한 워크숍 지원
- (종사자) 업무공백·이동시간 등 교육훈련으로 인한 기회비용 감소를 통해 종사자 훈련 비율을 확대하고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지원
 - (맞춤형 훈련 제공) 권역별 중간지원기관이 훈련 수요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 조사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직업훈련 서비스 제공
 - *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선정한 공동훈련센터를 통해 훈련 모집 및 실시
 - (훈련비용 지원) 사회적경제기업이 종사자 경력 개발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자체 교육 등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용을 지원
 - * 시제품 제작, R&D, 마케팅 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개발비 사업의 규정을 개정하여 1억원 범위 내에서 종사자 훈련에 사용가능하도록 지원('18년)
 - (일학습병행 확대) 사회적경제기업의 일학습병행 참여 확대를 위해 선정지표를 개선하고, 선정기업에 프로그램 개발, 훈련비용 등을 지원
 - * 선정 지표 중 사회적경제기업에 불리한 항목(신용등급, 매출채권 회전을 등)을 개선하고 일학습병행 훈련에 적합한 사회적경제기업 분야 적극 발굴
 - (역량진단 컨설팅) 기업 및 종사자의 역량진단을 실시하여 훈련이 필요한 역량을 파악·제시하고 적합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매칭*(인력공단과 협업)
 - * 노동부 “맞춤형 인적자원개발(HRD) 컨설팅 지원사업” : ① 기업이 컨설팅 신청 → ② 전문기관을 통한 컨설팅·HRD 안내 → ③ 정부 훈련프로그램과 매칭·연계

4. 풀뿌리 사회적경제 토대 구축

①

초·중고 교육과정 반영 등 학령기 교육 확대

□ (1단계) 교육과정 개편 전 조치 가능한 방안 시행*

* '15년 개정 교육과정이 '20년까지 단계적 적용 중이므로 당장 교과서 개편은 어려운 상황임

- (과목개설 지원) 사회교과 등에서 보조교재로 활용하거나 사회적경제 관련 과목을 선택과목 등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교재·교수자료 개발·보급*

* ('18년) 스토리텔링, 사례중심의 초·중고 교재·교수자료 개발·보급('18년, 교육부), ('19년) 시·도교육청의 사회적경제 관련 교과서 개발 및 교과목 개설 지원

- '사회적경제 연구학교' 운영을 통해 사회적경제 관련 학습 및 학교 협동조합, 공정 무역 등을 실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19년 6개교)

- (교원 역량 강화) 초·중등 교원이 사회적경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연수 과정을 확대*하고 교원 교육과정에 사회적경제 내용을 포함**

* ('18년) 경기·강원 등 4개 권역(권역 당 초·중등 교사 40명 대상 30시간 이내) 교사연수 실시→ ('22년) 전 권역(17개 시도)으로 확대

** ('19년) 교장 연수과정(교원대, 서울대 등)에 사회적가치 등 사회적경제 관련 내용 반영

- 특히, KDI에서는 사회과 교강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교육 전문인력 양성과정에 사회적경제 교육강좌를 개설('18.6)

- (체험학습 확대) 사회적가치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해 액션러닝, 일체험, 동아리 활동 등 체험 학습을 확대·강화

- 학생 대상 사회적경제 캠프를 확대*하고 신기술 체험 중심의 창업 체험 교육을 '사회적 문제해결 창업체험교육'**으로 확대 운영

* ('18년) 사회적경제 캠프 2회(청소년·대학생) 개최(160명)

** (예시) 창업경진대회 내 사회적 문제해결 부문 신설, 청소년기업가체험 프로그램(YEEP) 내 사회적 문제해결 관련 콘텐츠 탑재·미션 제공하여 학생 흥미 제고

- 초·중·고 사회적경제 학습모임 활성화 및 자유학기제 연계 학습 지원, 사회적경제 대학 동아리 지원 확대*

* ('18년) 대학 사회문제 해결 동아리 20개소 지원 → ('22년) 초·중·고 사회적경제 학습동아리 지원 신설 및 대학 동아리 지원 확대

** (우수 사례) ▲ 연세대 인액터스: 신진작가 작품을 홍보·판매를 위한 온라인플랫폼 개발 ▲ 한양대 키다리은행: 대학생들의 자발적 출자금으로 조성된 쏘다리 펀드 운용

- 학생 대상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 내 다양한 사회적경제 기관(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지속 발굴

* 사회적경제 기관에서 진로체험 프로그램 제공에 어려움이 없도록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핸드북 제작 및 배포

- (학교 협동조합 활성화) 학생들이 학교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직접 참여하여 사회적경제를 체득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 마련

- 학교협동조합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교육부, '18.12)

* 학교협동조합: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공통의 교육·경제·사회·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공동으로 설립하는 사회적협동조합('18.2월 기준 56개 인가)

** (사례) 삼각산고등학교(서울 강북구), 학생·학부모·졸업생·지역주민·교사가 조합원으로 참여, 친환경 안전한 먹거리를 파는 학교매점 운영 및 사회적경제 교육 실시

- (2단계) 차기 교육과정 개정 시, 초·중·고 필수과목(사회, 도덕, 통합사회 등)에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가치 내용 추가 반영

② 지역 주민의 사회적경제 교육 접근성 강화

- (지역 학습 활성화) 사회적경제 상시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내 사회적경제 교육을 확대하고 지역 학습공동체를 활성화

- 지역 주민들이 일상에서 사회적경제를 이해·체험 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친화도시'*를 지정(노동부, 행안부)

- 사회적경제 교육 프로그램 및 인프라 지원, 창업지원, 사회적경제 관련 행사 개최 등 관련 정부지원사업 선정 시 우대

* '19년부터 신규로 매년 3개 시군구 지정

○ **지역교육센터 교육과정 內 사회적가치, 사회적경제 교육 확대**

- 시군구 평생교육기관, **지역경제교육센터***의 교육과정에 **사회적경제 관련 과목을 포함**하여 시민들이 **균형 있는 경제인식**을 갖도록 지원

* ('17년) 전국 15개 센터, 취약계층 등 지역주민 대상 일반경제교육 실시(약 16만명)

- **지역사회지도자 교육과정***에 **사회적경제 과목**을 **개설**하여 지역현장에서 활동하는 리더들의 사회적경제 이해도 제고

*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 교육과정에 사회가치·사회적경제 교육과목을 개설하여 새마을지도자 등 지역사회 리더들에게 연 16회, 약 6천명 대상 교육 실시

□ **(주민의 사회적경제 활동 지원)** 주민들이 도시재생, 신재생에너지 등 유망 분야의 사회적경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도시재생) 지역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 주민,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관련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적경제 주체로 육성**

* 교육대상별·사업유형별·사업단계별 교육과정을 표준화한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최대 1천만원의 교육예산 지원

○ **(에너지)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출모델 발굴 및 지원방안 마련**

* 인센티브 규모, 대상설비 범위, 주민인정 범위 등 지원방안 마련 ('18년)

- 협동조합 태양광 발전의 수익 창출을 지원하는 등 주민이 **안정적으로** 재생 에너지 관련 **전문인재**로 성장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 협동조합의 100kw 미만 태양광 발전 전력의 경우 한국전력 발전 6사가 의무 구매

○ **(관광) 지역 주민 및 활동가를 관광두레 PD로 육성하여 지역 고유의 특성(문화유산, 음식, 자연 등)을 지닌 주민사업체를 발굴하여 창업을 지원**

* '22년까지 관광두레PD 256명 선발하여 양성, 주민사업체 1,125개 발굴·육성

** (우수 사례) ▲ 경남 거창: 일본 결혼이주여성인 중심이 되어 로컬푸드 기반 일본가정식 판매, ▲ 강원 홍천: 귀농청년과 홍천주민이 함께 지역 대표 농산물 '흙'으로 만든 맥주를 관광 상품화

- (사회적경제 통합행사 개최) 사회적경제기업 우수 제품 및 사회적 기여도 등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통합 박람회를 개최**(18.7. 대구 EXCO)
 - * 사회적기업 박람회, 협동조합 박람회, 마을기업 박람회를 통합하여 개최
- **‘사회적가치 창출대회’***를 신설, 높은 수준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기업, 공공기관 포상 및 우수사례 적극 확산(노동부)
 - * 참여를 희망하는 사회적경제조직, 공공기관 등이 1년간 창출한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측정하여 우수기업 포상 및 사례집 발간 등(19년~)
- (민관협업을 통한 인식 확대) 시민사회·종교·언론과의 협업을 통한 사회적경제 인식 개선 캠페인 확대
 - (시민사회) 지역과 민간 중심의 사회적경제 친화적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인식 개선 활동 진행
 - 윤리적 소비 캠페인, 자치단체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순회토론회,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어워드* 등 개최 지원
 - * 시민사회(네트워크)가 사회가치 평가를 통해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에 기여한 사회적경제조직, 자치단체, 민간기업 등에게 공로상을 수여
 - (종교) 1성당·1교회·1사찰-1사회적경제 연계 운동*, 3대 종교 공동행사 개최 지원 등을 통해 종교 내 사회적경제 저변을 확대
 - 3대 종교(가톨릭, 기독교, 불교) 지도자의 범종교 선언 및 지원 활동을 통해 종교계 인적·물적 자원을 사회적경제에 연계
 - * (주요사례) 샬트르 성바오로 수녀회(서울관구): 사회적기업(위캔센터)을 설립하여 37명의 발달장애인을 고용, 수제쿠키 판매 수익금은 발달 장애인 직업훈련에 사용
 - (언론) 언론사와 공동으로 기획 기사 및 캠페인을 추진하고 사회가치에 대한 공익 광고 송출 등도 추진
 - *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사례 발굴 및 홍보, 청년 사회적경제기업 창업가 기획 기사 등
 - **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등 사회적경제 성공사례 등을 EBS를 통해 개발·방영하여 학생들에게 사회적 경제에 관한 긍정적 인식 유도

5. 종합지원체계 구축

◇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① 인재양성 통합 추진체계 구축

- (지역중심·중앙뒷받침 시스템) 지역·현장 중심으로 인재를 양성하되, 중앙은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등 인프라 구축 및 지원 기능 수행
 - (지역·현장중심) 시·도 중간지원기관, 민간교육기관, 당사자조직, 시민사회 등을 통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현장·사례중심 교육을 제공
 - 지역 간 교육편차 해소 및 지역 단위 사회적경제 교육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교육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 중앙교육기관, 중간지원기관, 자치단체, 지역교육기관과의 네트워크로 연결. 콘텐츠, 강사, 공간 활용 등 교육 인프라를 전 지역에 공유
 -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등 당사자조직이 돌봄, 공정무역 등 특정 업종에 대한 개별 직무관련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 (‘18년) 선배 노하우 전수과정 개설, 2개 업종 네트워크 지원 → (‘22년) 20개 네트워크 지원
 - 지역의 시민사회·사회적경제조직간 협업*을 통해 도시재생·농업 등 지역 특화 분야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설·지원
 - * 경실련, YMCA, YWCA 등 시민사회와 NGO, 종교, 사회적경제조직, 정부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축한 지역 중심의 민관네트워크 활용(16개 네트워크)
 - (중앙 뒷받침) 연구,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강사 양성, 온라인 교육 플랫폼 운영, 민·관/중앙·지방 교육기관 네트워킹 등 교육 총괄 지원
 - (1단계) ‘19년 사회적기업진흥원 부설 연구개발센터 설치
 - * ▲ (연구) 사회적경제 연구·개발, 교육과정 및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등
 - ▲ (교육·네트워킹) 온라인 교육 플랫폼 운영, 당사자조직 연수, 네트워킹 지원 등
 - ▲ (성과평가) 교육성과 평가 및 정책개발 지원, 인재양성 백서 발간 등
 - ** 연구 및 콘텐츠 개발이 가능한 사회적경제 연구인력 총원 추진

- (2단계) 중장기로 연수 시설을 갖춘 인재개발원 조성 검토('20~)

- * 당사자 조직 등 사회적경제 유관기관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민간교육기관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교육 서비스 품질을 향상

②

컨텐츠 및 강사양성 등 인프라 구축

□ (교육 컨텐츠 개발) 사회적경제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대상별 역량 모델 및 교육 표준안 개발·보급

- 일반교육과정에 활용 가능한 사회적경제 교육 표준안 마련 및 보급('18년)
- 리더, 실무자, 지원인력 등 대상자별 역량모델을 개발하고 민간 교육역량 활용을 위한 우수 프로그램 공모 추진('19년, 10개 발굴)
- 성인학습자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사회적경제 역량강화 콘텐츠 개발 및 운영('19년, 교육부)
 - * 협력학습 특성화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대상 : 소상공인, 직장근로자 등)
- 대학에서 활용하는 온라인 창업교육 교재에 사회적경제 관련 콘텐츠를 포함하고 교재 활용이 확대 되도록 적극 유도
 - * 사회적기업가, 창업실무 분야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5개 내외 대학에 사회적경제 취·창업 관련 교육과정 반영을 위한 컨설팅 실시

□ (강사 양성) 사회적경제·사회적가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강사를 적극 발굴·양성하고, 강사 DB를 구축하여 교육기관 등에 공유

- 사회적경제 강사 양성과정을 확대*하고 금융·R&D·신재생에너지 등 분야별 전문 강사를 육성
 - * ('18년) 연간 25명 양성 → ('22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연간 300명 강사 양성
- 사회적경제 전문가 및 현장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강사 인력풀을 구축, 부처·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교육기관 등에 제공

- (지원조직) 지원조직에게 요구되는 소통·조정·협업 능력 등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제공 및 지원조직간 정보공유와 연대·협업 강화
 - 코디네이터·인큐베이터·네트워커 과정 등 **기능별 특화과정** 신설
 - * 사회적기업 진흥원 아카데미 內 중간지원인력 특화과정 신설
 - 중간지원기관 종사자의 근무여건 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 마련('19년, 노동부)
 - * 현재 16개 시도(서울시 제외)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중간지원기관: 평균 7명, 연봉 약 2,200만원
- (공직자) 공직자들의 **사회적경제** 이해도 제고를 위해 공직자 **교육과정** 內 **사회가치·사회적경제** 교육과정 신설·확대
 - '18년 주요시책 교육으로 '사회적경제'를 명시하고, 부처별 직장 교육 시 필수 과목으로 반영하도록 공무원 인재개발지침 개정('18.3)
 - **각급 기본 교육과정**에 **사회가치, 사회적경제 교육과정** 반영
 - * 5·7·9급 신규자 교육과정, 고위공무원단 교육, 국세공무원교육원, 고용노동 연수원 등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사회혁신방법론을 적용한 프로그램 운영
 - **지방 공직자 대상 전문·사이버과정** 개설 및 운영 확대
 - * ('18년) 전문/사이버 과정(1,200명 수강 계획) → ('19년) 과정 추가(2,000명 이상)
 - **공무원 해외 연수과정**(장단기 연수, 직무훈련 등)에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 가치를 포함하여 **사회적경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고위공직자 육성**
 - * 제1차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가치 해외 단기연수과정 실시('18.4.22~29, 영국 LSE 대학)

→(사후관리) **민관 합동으로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인재양성 종합계획'의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여건변화에 따라 **정책과제를 추가·보완**

* 위원장(노동부 장관, 민간위원 공동), 위원(당사자조직, 중간지원조직, 전문가, 관련부처등)

V. 과제별 추진 일정

- 노동부, 교육부, 행안부, 중기부 등 12개 부처에서 32개 주요과제 추진
- 연내 시작과제 26개, '19년 이후 과제 6개 과제

정 책 과 제 명	추진일정	주관부처
1. 인재 유입 활성화(6개 과제)		
1-1. 청년 사회적경제인 양성		
① 청년 사회적가치창출활동 지원	'18.6~	행안부
② 청년 사회적경제기업 취업 확대	'18.6~	행안부
③ 청년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확대	'18.6~	노동부 중기부 금융위
1-2. 신중년 사회적경제 진출 확대		
④ 신중년 사회적경제 교육 및 취업지원 확대	'18.9~	노동부
⑤ 신중년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지원	'18.6~	노동·과기부
⑥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18.6~	노동부
2. 사회적책임 의식과 경영마인드를 겸비한 리더 육성(9개 과제)		
2-1. 대학 내 전문교육과정 확대		
① 사회적경제 학부 개설 지원	'19.3~	노동·교육부
② 사회적경제 석·박사 학위과정 확대	'18.6~	노동부
③ 외국 대학과 교류 지원 및 해외연수 프로그램 확대	'18.6~	노동·교육부

정 책 과 제 명 (5개 분야 32개 과제)	추진 일정	주관부처
2-2. 대학생들을 예비 사회적경제 리더로 육성		
④ 희망사다리 장학생 대상 사회적경제 교육 제공	'18.9~	교육부
⑤ 사회적경제기업 탐방 프로그램 제공	'18.9~	노동부
⑥ KOICA 등 해외봉사단 사회적경제 교육 및 컨설팅 제공	'18.9~	외교부
⑦ 대학생협 활성화 지원	'19.3~	기재·교육부
2-3. 사회적경제 유망분야 리더 육성		
⑧ 권역별 사회적경제 리더 포럼 운영	'19.3~	노동부
⑨ 도시재생 등 사회적경제 진출 유망분야 전문리더 육성 지원	'18.7~	노동부
3. 사회적경제 종사자 역량 및 전문성 강화(5개 과제)		
3-1. 대상별 맞춤형 교육훈련 제공		
① 사회적경제기업 중간관리자 대상 회계·마케팅 등 업무분야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18.7~	노동부
② 훈련비용 지원 등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 대상 맞춤형 교육·훈련 제공	'18.9~	노동부
3-2. 교육의 편의성 제고		
③ 사회적경제 전용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K-MOOC 강좌 개설	'19.3~	노동·교육부
④ 지역 중심 사회적경제 전문교육 확대	'18.9~	노동부
⑤ 사회적경제기업 훈련 프로그램 개발비 및 인건비 지원	'18.12~	노동부

과 제 명	추진일정	주관부처
4. 풀뿌리 사회적경제 토대 구축(6개 과제)		
4-1. 초·중·고 학령기 교육접근성 확대		
① 사회적경제 과목개설 지원 및 교원 역량 강화 등	'18.6~	교육부 노동부 기재부
② 차기 교육과정 개편 시 사회적경제 내용 반영	차기교육 과정 개편시	교육부
4-2. 지역주민의 교육 접근성 강화		
③ 지역교육센터 등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상시학습 지원	'18.7~	행안부 노동부 기재부
④ 지역주민의 다양한 사회적경제 활동 지원	'18.9~	국토부 산업부 문체부 등
4-3. 국민의 이해도 및 인식 제고		
⑤ 사회적경제 통합행사 개최	'18.7~	기재부 노동부 행안부
⑥ 민관협업을 통한 사회적경제 인식 확대	'18.6~	노동부
5. 종합지원체계 구축(6개 과제)		
5-1. 인재양성 통합 추진체계 구축		
① 지역·현장 중심 사회적경제 교육 제공	'18.9~	노동부
② 사회적경제 관련 연구·개발 등 중앙 뒷받침 시스템 구축	'19.3~	노동부
5-2. 콘텐츠 및 강사양성 등 인프라 구축		
③ 사회적경제 교육 콘텐츠 개발	'18.9~	노동부
④ 신재생에너지 등 분야별 사회적경제 전문 강사 양성	'18.9~	노동부
5-3. 공무원 및 지원조직 역량 강화		
⑤ 기능별 특화과정 개설 등 지원조직 역량 강화	'18.9~	노동부
⑥ 공무원 교육과정 內 사회적경제 교육 반영	'18.3~	노동·인사처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 주요 목표



기반조성 (2017 ▶ 2022년)

플뿌리 사회적경제 토대 구축

일반국민의
사회적경제 인지도



52.7%

5년후

80%

초·중·고 교육



9천명

5년후

60만명



신규진입 (2017 ▶ 2022년)

인재 유입 확대

청년 사회적경제
기업가 양성



1,600명

5년후

16,000명

신중년 진출 촉진(교육)



150명

5년후

5,000명



전문가 (2017 ▶ 2022년)

전문인재 육성

주요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 교육훈련



19%

5년후

50%

사회적경제 학위과정



10개교

5년후

40개교

- 협동이 혁신이다 ! -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2단계 혁신성장전략
[2018~2022]

2018.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협동이 혁신이다 ! -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2단계 혁신성장전략
[2018~2022]

2018.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 . 추진배경	143
II .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현주소	144
1. 설립·운영현황	144
2. 문제점 및 한계	145
3. 과기협동조합의 장점 및 가능성	146
4. 추진방향	147
III . 비전, 목표 추진과제	148
IV . 기존 과기협동조합의 발전 촉진	149
① 매머드급 과기협동조합 운영	149
② 과기협동조합의 성공스토리 확산	150
③ 과학기술 서비스 시장 활성화	151
④ 과기협동조합 활성화 제도 보완	152
V . 새로운 과기협동조합의 결성 촉진	153
⑤ 다양한 과기협동조합 BM 개발 및 확산	153
⑥ 연구기관·대학의 협동조합 결성 주도	155
⑦ 예비조합원 대상 교육과 홍보 확대	156
⑧ 과기협동조합의 과기협동조합 운영	157
VI . 기대효과	158
VII . 추진일정	159
참고1 과기협동조합과 일반 협동조합간 비교	160
참고2 과기협동조합 우수사례(국내)	161
참고3 과기협동조합 우수사례(해외)	162
참고4 과기협동조합 빅데이터 분석 결과	163

I. 추진배경

◆ (정의)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이하 과기협동조합) 이란?

- (구성원) 「이공계특별법」상 이공계 인력이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과학기술 관련 서비스 등의 활동을 하는,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
- (사업내용) 연구개발을 포함한 모든 과학기술 활동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협동조합

□ (사회 환경 변화)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 증대와 잠재 과학기술인 활용 및 유연한 일자리에 대한 요구 증가

- (사회적 경제 활성화) 최근 정부는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를 일자리 창출과 사회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주목

※ 국정과제(26번)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17.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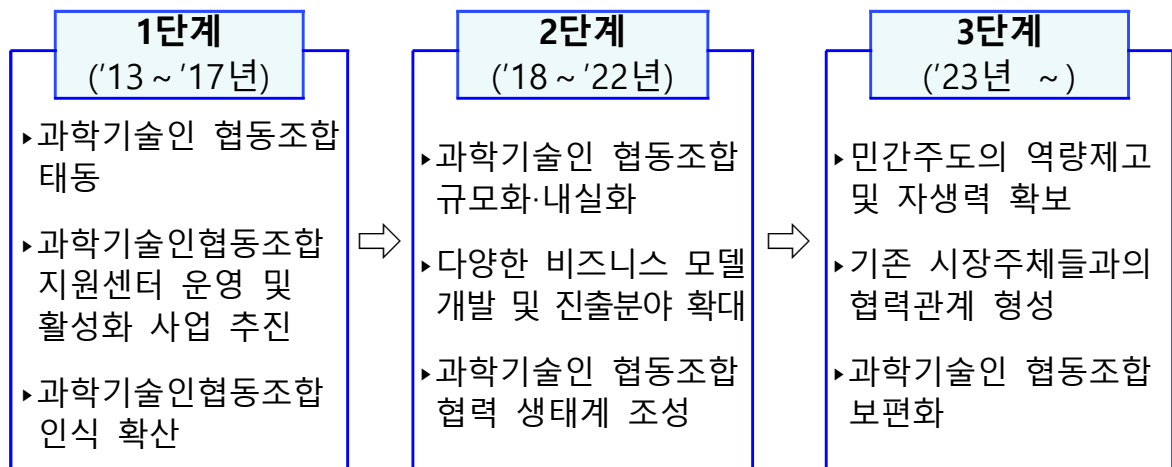
- (과학기술 일자리) 퇴직 과학기술인 및 경력단절 여성과기인 증가 등 과학기술분야에서도 다양한 창업·고용형태를 요구하는 목소리 확대

□ (지원 성과와 한계) 정부는 '13년부터 과기협동조합을 지원(1단계), 그간 수가 크게 증가했으나, 여전히 전체 협동조합의 2%에 불과

※ 일반협동조합 11,637개 대비 과학기술인협동조합 264개 ('17.12월)

- 과기협동조합의 운영 내실화, 지속가능성 증대를 위해 그간의 성과를 강화하고 한계를 보완하는 “과기 협동조합 2단계 혁신성장 전략” 필요

<과기협동조합 발전단계(안)>



Ⅱ.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현주소

1 설립·운영 현황

□ 국내 과기협동조합 운영 현황

- (규모 및 분야) '17년 기준 총 264개 과기협동조합이 운영 중이며 사업 분야 중 “기술서비스(42.0%)”가 가장 높은 비중

<분야별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설립 현황('17.12)>

분야	기술서비스 및 기술거래	과학교육· 문화	연구개발	IT 서비스	조사분석	합계
조합수(개)	113	61	38	34	18	264

- (유형) 설립유형은 사업자(33.6%), 프리랜서형(29.5%), 융복합형 사업자(20.5%) 순으로 최근 프리랜서형 협동조합의 증가가 두드러짐
※ 프리랜서형 협동조합의 증가 ('14) 18% → ('17.6) 29.5%
- (매출과 고용) 조합당 매출은 연 1억원, 평균조합원은 14.3명
※ 조합당 평균 고용인원은 4.3명, 유급직원의 월평균 임금은 159만원 수준
- (주요고객) 정부·지자체(50%), 기업(39.2%), 개인(11.8%) 순
※ 매출발생 주요 분야 : 연구개발(33.3%), 과학교육·문화(22.2%) 순

□ 정책지원 현황

- (사업지원) 과학기술 인재가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협동조합 구성 및 운영을 위해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 지원사업” 추진('13~)
※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시장진출 및 사업화 지원, 설립·운영을 위한 지원 ('18년 약 8억)
- (주요성과) 우수사례 홍보, 설립경영 교육 등 통해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수 증가, 사업화 지원을 통해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초기 안정화 지원
※ (과학기술인협동조합 수 증가) ('13) 42개 → ('17) 264개



2

문제점 및 한계

- (규모의 영세성) 급격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일반협동조합 수에 비하여 전체 수가 부족하고, 협동조합의 영세성이 두드러짐
 - (수 부족) 전체 협동조합 규모 대비 과기 협동조합은 2%에 불과, 일반 협동조합 수에 비해 크게 적은 수준
 - ※ 일반협동조합 11,637개 대비 과기협동조합 264개 ('17.12월)
 - (영세성) 낮은 사업 운영율(60%) 낮은 임금수준(월 평균 159만원), 낮은 매출액(연평균 99백만원) 등 전반적으로 규모 영세
 - ※ 과기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17.12, 과기협동조합지원센터)
- (인식·자원부족) 과기협동조합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신뢰도, 사업 운영에 필요한 금융자원과 전문인력 부족으로 설립과 운영에 애로
 - (인지도·신뢰도) 운영모델, 사업적 가능성 등에 대한 대중적 인지도가 부족하고, 협동조합의 기술적 역량,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불신 존재
 - ※ 과기협동조합에 대해 잘 모른다는 비중 높 (기업 58.3%, 연구기관 77.9%)
 - ※ 과기협동조합 인증 등 신뢰성 지원요구가 가장 높 (기업 42.7%, 연구기관 46.7%)
 - (금융, 인력) 출자금과 같은 자기자본에 의존하고 있어 수요에 비해 체계적 자금조달이 어렵고 기술전문가가 아닌 경영 전문가 부족
 - ※ 정책요구사항 1순위 : “정부 보조금(61.8%)”, “판로 지원(14.7%)”, “자금 융자(5.9%)” 순
 - ※ 연구기관 종사자의 조합 설립 및 참여 의향은 높으나(82.4%), “협동조합의 원리를 반영한 비즈니스 모델 설계(39.4%)”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비중 높
- (경쟁력 미흡) 과기 협동조합 운영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 정립과 접근이 어렵고 既 결성된 협동조합의 경우도 성공적인 사업화에 어려움
 - (사업모델) 과학기술분야 협동조합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확보하지 못하여 협동조합 설립에 장벽
 - ※ 설립애로사항 1위 “비즈니스 모델 설계(39.4%)”
 - (사업 경쟁력) 과학기술분야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사업성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관련 시장과 판로 미비
 - ※ 운영애로사항 1,2위 “판로개척 등 사업의 경쟁력 확보 미흡(30%)”과 “비즈니스 모델 구축 어려움(25.7%)” 등

3 과기협동조합의 장점 및 가능성

□ 혁신동력을 갖춘 사회적 경제조직

- (작지만 튼튼한 조합) 일반 협동조합에 비해 조합원의 전문성*이 높고 조합당 출자금액은 작으나, 조합원당 출자금액이 높은 편

* 과기협동조합 조합원의 42%가 박사학위 소지자

※ 과학기술인협동조합 조합당 출자금액 2,141만원 (일반협동조합 4,064만원)

과학기술인협동조합 조합원당 출자금액 148만원 (일반협동조합 74.8만원)

- (부가가치 창출) 기술기반 특성으로 인하여, 일반협동조합에 비해 부가가치가 큰 사업영역(연구개발, 기술서비스 등) 수행

□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新 조직 형태

- (융합사업) 전통적 사업자 협동조합과는 다른, 이기능·이업종간 융복합형 사업자 협동조합(20.5%)이 다수 존재

※ (사례) “기술융합협동조합”은 3D 프린팅 관련 다양한 분야 중소기업이 모여 3D 프린팅 관련 공동사업 추진(3D 프린터로 무인항공기 제작 등)

- (유연한 일자리) 전통적 직원·노동자 협동조합과는 다른, 프리랜서형 협동조합 비중(29.5%)이 높게 나타나 IT등 기술 전문가의 유연한 일자리 가능성 존재

□ 연구산업 등 관련 시장 활성화 전망

- (연구산업 활성화) 주문연구산업('22년 8조780억원) 및 연구관리산업('22년 1조 2,120억원) 시장 확대 등 과학기술 관련 산업 성장 전망

※ 연구기관이 생각하는 과기협동조합 적합 일거리는 ‘기술컨설팅(30.2%)’, ‘교육프로그램 운영(20.7%)’, ‘연구개발 제도 및 정책동향 정보 제공(15.9%)’ 순 (2018, STEPI)

<연구산업 관련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현황 ('18, STEPI)>

분야	주문연구	연구기획	연구관리 (연구실안전 등)	연구관리 (기술사업화 등)	연구관리 (신서비스)	장비	합계
조합 수(개)	129	13	23	7	16	3	120

□ 과학기술관련 환경 변화

- (과학기술 인력변화) 과기 협동조합 창업 의향이 높은 고경력 과학기술인이 전체 과학기술 인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
 - ※ 50세 이상 연구개발인력 비중 증가 : ('00) 6.5% → ('16) 13.6%
 - ※ 연구기관 연구원 대상 조사결과 과기협동조합 '설립할 의향(13.6%)', '조합원으로 참여할 의향(68.8%)' 등 높게 나타남(STEPI, 2018)
- (지역 과학기술 역량강화) 지역 클러스터, 강소특구 등 지역 지원정책으로 지역에 기반을 둔 협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확대
 - ※ (강소특구) 지역 기술핵심기관 중심으로 강소특구 지정 및 육성 추진('18~)

4 추진방향

- (규모화·성공사례 확산) 규모가 있는 협동조합을 육성하여 자생력과 일자리 창출 역량을 강화, 우수 성공사례 발굴 및 확산
 - 상호협력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중대형 협동조합을 육성하여 지속가능성과 부가가치 창출 측면에서의 우수 성공사례를 창출
- (과학기술 서비스 시장 활성화) 과학기술분야 사업모델 확보를 지원하고 과학기술분야 협동조합 일거리의 수요와 공급 매칭 활성화
 - 우수 비즈니스 모델(BM) 아이디어 발굴 및 창업을 활성화하고, 판로 지원을 통해 과기 협동조합의 조기 정착을 지원
- (과기협동조합 인식 제고) 협동조합 성공모델 확산, 창업 교육 등을 활성화하여 협동조합 창업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 신뢰도 제고
- (체계화된 지원) 금융 및 인력 지원을 과기협동조합의 특성에 맞게 체계화하고 협동조합 경영원리에 기반한 지원 강화

Ⅲ. 비전, 목표, 추진과제

비전 및 목표

- ◎ (비전) 혁신성장에 기여하는 과학기술 新산업 주체 육성
- ◎ (목표) ① '22년까지 1,000개의 과기협동조합 육성 1만개 조합 일자리 창출
- ② 과기협동조합을 통한 과학기술서비스의 고도화, 전문화

추진 과 제

중점전략

1. 기존 협동조합의 발전 촉진

2. 새로운 협동조합 결성 촉진

추진과제

① 메머드급 과기협동조합 육성

- 대기업, 대학 등을 활용한 중대형 융복합 협동조합 육성
- 협동조합 연합회 활성화

② 과기협동조합의 성공스토리 확산

- 고경력 경력단절여성 등 정례적 성공 스토리 발굴 및 표창
- 협동조합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

③ 과학기술 서비스 시장 활성화

- 연구산업, 과학문화, 연구안전관리산업 등 과학기술 서비스 산업 활성화
- 일거리 수요-공급자 네트워크 강화
- 협동조합 제품 서비스의 사업화, 시장진출 지원

④ 협동조합 활성화 제도 보완

- 출연(연) 연구원 겸직 제한 완화
- 금융 지원 및 투자 연계 강화
- 협동조합 ERP 개발 및 보급

⑤ 다양한 과기협동조합 BM 개발 확산

- 우수아이디어 발굴 경진대회 개최
- 과기협동조합 원스톱 창업지원
- 연구산업, 과학문화, 교육형 협업모델 개발
- ICT 기술 활용 협동조합 신 모델 확산

⑥ 연구기관·대학의 협동조합 결성 주도

- 출연(연), 대학 등 혁신자원을 활용한 전문성 기반 협동조합 강화
- 특구 등 지역 공동체 혁신 플랫폼구축

⑦ 예비 조합원에 대한 교육과 홍보 확대

- 선배 협동조합과 연계한 현장교육
- 특성별 맞춤형 창업 교육 및 홍보 강화
- 사회적 경제 교육과정 지원
- 창업 인턴제

⑧ 과기협동조합의 과기협동조합 운영

- 창업지원형 협동조합 육성
-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
- 사업자 고용협동조합 운영

IV. 기존 과기협동조합의 발전 촉진

① 매머드급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

※ 매머드급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 조합원수가 많거나, 매출액 규모가 크거나, 사회·과학기술 파급효과가 큰 협동조합

□ (중대형 융·복합 조합 육성) 대기업, 출연(연), 대학 등 다양한 혁신 주체가 함께 구성하는 중대형 규모의 과기협동조합 육성

○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기술 및 사업지원이 가능한 형태 육성

※ 대기업 CSR 프로그램 및 대기업의 협력업체 육성 지원요구 등을 활용

<(예시) 대기업과 협력방안>

- ▶ '기술분야' 공동 사업을 위한 대기업-중소협력업체간 협동조합 구성 지원
 - ▶ "원스톱 창업지원사업('19년~)" 중 '사회혁신형 모델'에 대기업-정부 공동투자
 - ▶ "원스톱 창업지원사업('19년~)" BM 모집 시 대기업 참여 모델 지원
- ※ '기술창업 및 연구산업형 모델' 또는 '지역사회혁신형 모델'에 직접 출자를 통해 참여

○ 대학·출연(연)이 기술·설비 등을 제공하여 보육한 창업기업들을 협동조합으로 구성, 상호 협업이 가능한 플랫폼으로 육성

※ 협동조합 구성 후 조합원사끼리 기술인력, 시설, 공간, 기자재 등을 공유

※ (예시) 출연(연) 혹은 대학+연구소기업+기술기업+개인 연구자+판매·유통법인 등

□ (협동조합연합회 활성화) 과기 협동조합의 협동 경험을 공유하고, 자생력·성장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체인형 연합회 구성·지원

○ 규모화를 통해 대규모 사업 및 기술개발을 할 수 있도록 기술분야별, 산업분야별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연합회” 설립 지원

* (협동조합연합회) 3개 이상의 협동조합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 (예시) 드론관련 협동조합끼리 연합회 구성, 드론 개발 대규모 공동사업 및 기술협력

○ 과기협동조합의 융합·공동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과기협동조합 사업화 지원사업 중 “혁신형 사업화 지원” 신설하여 협업 프로젝트 지원

② 과기협동조합의 성공스토리 확산

- (성공스토리 발굴) 고경력 과학기술인, 여성과학기술인 등 다양한 과기협동조합 설립·운영 성공사례를 정례적으로 발굴·확산
 - 설립·준비과정, 조합원 구성, 비즈니스 모델 수립, 수익창출·배분 등 정착과 운영에 관한 성공사례 발굴 공모전 운영, 홍보물 제작 배포
 - ※ 추천 및 자기신청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우수사례 발굴
 - ※ 온오프라인 홍보물 제작하여 과기협동조합 예비 설립자 및 관심자에게 배포
 - 발굴된 성공스토리 중 대국민 파급력이 높고 일자리 창출과 우수한 협력모델에 대해 표창, 시상식 등 개최
 - ※ '22년까지 연 10개 성공스토리를 시상하여 총 50개 성공사례(Best Practice 확보)

<과기 협동조합 설립·운영 성공스토리(예시)>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고경력과학기술인	중소기업
<온과학교육문화협동조합> 	<과학기술문화협동조합> 	<광주스마트콘텐츠개발자협동조합> 
각기 다른 전공분야의 경력단절 여성 조합원들이 통합·융합 교재 및 교구 개발, 개발된 과학 키트를 활용하여 초·중·고교의 3D프린팅 과학수업 등 체험수업 진행	공과대학 교수, 과학교사, 과학기자 등 은퇴 과학기술자들이 모여 과학문화 홍보, 문화확산을 위한 위탁용역 및 정책연구 추진	모바일 콘텐츠 분야 청년 스타트업 대표가 모인 협동조합으로, 조합원사가 생산한 콘텐츠를 협동조합이 전문 퍼블리싱하여 관리·운영

-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 국내외 협동조합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과기협동조합 우수 성공스토리 확산 및 조합간 정보교류 활성화
 - (국내) 지역별 과기협동조합 협의회* 등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우수사례 공유 및 정보 및 일거리 교류 등 활성화
 - *현재 총 4개(전북, 경북, 경남, 충청) 지역별 협의회 운영중
 - (국제) 해외 우수 기술기반 협동조합 사례 탐방 및 초청, 공개 토론회 및 소그룹 간담회 등을 통해 해외사례 벤치마킹, 교류 활성화

③ 과학기술 서비스 시장 활성화

- (과학기술 서비스산업 활성화) 연구산업, 과학문화산업 등 과학기술 서비스분야 산업을 활성화하여 과기협동조합의 판로, 시장 확대
 - (연구산업) 연구자·연구산업 기업 매칭 활성화, 정부 R&D 바우처 사업의 연구산업 참여 확대 등을 통한 연구산업 시장 확대 추진
 - ※ “연구산업 혁신성장 전략” 수립('17.12)
 - (과학문화산업) 공공구매 확대 등을 통한 콘텐츠산업 육성, 과학문화 유통채널의 발굴 및 확대, 과학놀이산업 창출 등으로 산업 생태계 조성
 - ※ “과학문화산업성장지원 전략” 수립 추진('18.下)
 - (연구안전관리산업) 연구실사고 문제 해결중심의 R&D 추진 및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관련 기업성장 지원 및 시장형성 촉진
 - ※ “연구안전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 방안” 수립 추진('18.下)
- (일거리 매칭) 과학기술서비스 분야 협동조합의 일거리 공급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공급자와 수요자간 상시적 네트워크 강화
 - (수요공급자 네트워크) 대학·연구소 및 산학연 집적단지 등 협동조합 업무 외부위탁 수요기관과의 네트워크 마련, 교류 활성화
 - ※ 협동조합 협의회 활동 및 매칭데이 등을 통해 위탁관리 수요-공급 연계
 - (공공부문 일거리 연계) 출연(연) 등 공공기관 외부 주문연구 수요 우선 연계 및 중소기업 R&D 서비스 지원 사업 등 연계
 - ※ 중소기업 R&D 바우처 사업('17년 5,603억원) 등에 과기협동조합이 참여 추진
- (사업화 지원) 협동조합의 제품 및 서비스의 시장진출과 시장경쟁력 증대를 위해 유형별 사업화를 지원하고 사업화 성과 도출 지원
 - (성장단계별 차별지원) 일반형, 심화형, 고경력형 등 협동조합의 성장 단계별 및 지원분야별로 차별화된 사업화 지원
 - (클라우드 펀딩) 협동조합의 제품·서비스에 대한 일대일 전략 컨설팅 및 상품홍보 등을 통해 대중을 대상으로 성공가능성 있는 펀딩 모델 발굴

④ 협동조합 활성화 제도 보완

- (연구자의 겸직제한 완화) 겸직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제도 활용이 저조한 연구자 겸직을 활성화하여 협동조합 창업 유도
 - ※ 연구인력 대비 휴·겸직 창업자 비율(중소기업청, 2011) : 공공연구기관 0.14%
- (휴·겸직 규정) 벤처기업에 허용되어 있는 교육공무원 및 출연(연) 연구원 겸직 규정을 기술기반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에 확대 검토
 - ※ 벤처기업법 제16조(휴직 허용), 제16조의2(겸임이나 겸직에 관한 특례) 개정 등
- (출연연 내규 개선) 연구소 기업에만 허용되어 있는 출연(연) 창업 겸직 제도를 확장하여 협동조합 대상으로 허용
- ('기술클리닉' 시범사업) 고경력 연구자의 퇴직 3~5년 전 협동조합 창업 겸직을 지원, 이들을 통한 기업 기술사업화, 기술컨설팅 등 제공
 - ※ 특구재단 시범실시('18년~), 출연연 연구자의 사회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자 EXIT 프로그램 추가 운영('19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금융·투자의 연계강화) 자본시장 접근성이 낮은 협동조합에 금융 지원 확대, 외부 투자 허용 등을 통해 자본 조달 활성화
 - ※ 과기협동조합 자본조달 방안 : 출자금(70.8%), 부채(29.2%), 금융기관 대출경험(9.2%)
- (금융지원 확대) 신용보증기금에 신설하는 사회적경제 지원 계정을 통해 과기협동조합 대상 보증 공급이 가능하도록 지원
 - ※ 향후 5년 내 최대 5,000억원까지 확대 추진
- (외부투자 허용) 협동조합의 외부투자를 허용하는 투자조합원 제도 도입방안 검토하여, 과기협동조합에 적용 (기재부)
 - ※ 임팩트 투자 주체가 출자를 통해 투자 방식으로 참여
- (협동조합 ERP* 지원) 일반 기업과는 다른 협동조합의 회계원리를 감안 과기협동조합 맞춤형 ERP 개발 및 확산 검토
 - * 전사적 자원관리(Enterprise Resource Planning) : 인사, 회계, 생산등 회사 자원관리 시스템

V. 새로운 과기협동조합의 결성 촉진

⑤ 다양한 과기협동조합 사업화 모델(BM : Business Model) 개발 확산

- (사업모델 발굴) 과학기술분야 기관 및 전국단위 공모전 등을 통해 새로운 협동조합 사업모델(BM) 아이디어를 발굴('18~)
 - 기관, 또는 전국민 대상으로 연구산업형, 과학문화형, 국민생활밀착형 등 분야별 협동조합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 시상 및 인큐베이팅 연계
 - ※ 과학기술인 누구나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아이디어를 공개 및 개방

<과기협동조합 BM 아이디어 분야(안)>

<연구산업형>	<과학문화·교육형>	<국민생활밀착형·지역사회형>
· R&D 위한 사업자 협동조합 / R&D 서비스형 협동조합 · 주문연구, 연구관리 등	· 과학기술·ICT관련 교육 및 문화 지원 협동조합 · 교육프로그램, 교구 등 개발	· 사회문제해결, 사회적 가치와 과학기술을 연계한 협동조합 · 기초지자체와 컨소시엄 추진

- (원스톱 창업지원) 기술혁신성 기반의 창업 아이디어에 대한 원스톱 창업지원을 통해 새로운 BM에 기반한 협동조합 신설 지원 추진('19~)
 - ※ 창업 아이템 발굴 → 컨설팅/교육을 통한 사업역량 배양 → 과기 협동조합 설립 → 사업화 지원 → 사업화 안정까지 전 단계에 대한 지원
- 청년 협동조합 창업 지원시 과학기술 혁신성을 기반으로 하는 BM 발굴 및 지원 (기재부)
- 협동조합 운영 원리를 기반으로 기술성, 혁신성, 사회적 가치 등을 보유한 특화된 BM 발굴하여 과기 협동조합 창업 실현 지원
 - ※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과기 협동조합 설립 희망팀과 희망아이디어 활용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원스톱 창업지원 추진체계(안)>

STEP	① 홍보·발굴	② 설립 인큐베이팅	③ 초기 사업화 지원
내용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창업 아이디어 발굴	기술기반 협동조합 설립 교육, 아이템별 비즈니스모델 확립, 액셀러레이팅	프로토타이핑(시제품), 상품화 전략 등 초기사업화 지원
방향	고경력, 경력단절여성, 청년 각 트랙 대상 창업 아이템 발굴	시장진출 가능 비즈니스모델, 조합원 및 조합 구성, 경영인프라 구축	시장 진입
방식	전국단위 홍보, 공모전	분야별 전문 컨소시엄 구성, 액셀러레이팅 지원	R&BD 지원

□ (연구산업, 과학문화·교육형 협업모델 개발) 연구산업과 과학문화·교육 전문 협동조합 확대를 위한 사업모델 발굴과 홍보

- 연구산업형*, 과학기술·ICT관련 문화·교육서비스형** 비즈니스 모델 등 특화하여 여성, 고경력 과학기술인 등의 참여 확대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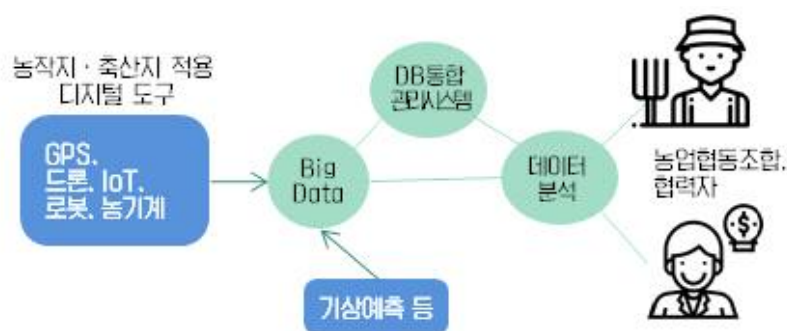
* 주문연구, 연구관리 등 ** 교육컨텐츠, 교구개발 등

연구산업형	과학교육문화산업형	기술융합형
<p><한국정책플랫폼협동조합></p> 	<p><매쓰에듀테인먼트센터 협동조합></p> 	<p><기술융합 협동조합></p>  <p>기술협동조합, 3D프린터로 무인항공기 제작</p>
<p>연구개발서비스업, 연구개발 전담부서 인증 기업으로, 기술정보 소요기업 지원을 통해 정부 정책과 중소 영세기업 사이 공백 연계</p>	<p>공과대학 교수, 과학교사, 과학기자 등 은퇴 과학기술자들이 모여 과학문화 홍보, 문화확산을 위한 위탁용역 및 정책연구 추진</p>	<p>3D 프린팅관련 회로개발,소프트웨어, 기구설계 및 구조해석 등 다양한 분야 기업들이 모여 3D 프린팅 기반 사업 추진</p>

□ (디지털 기술기반 모델) 기술개발 관련 혁신주체들이 IT 기반 플랫폼을 통해 지식·정보를 교류, 협동조합으로 발전하는 모델 탐색·발굴

- ※ (예) 스위스 MDATA협동조합은 IT개발자, 의사, 학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데이터저장 및 공유를 통해 의학, 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를 2차적 활용, 사업화 지원
- ※ (예) IoT, Drone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농민에게 농업정보를 제공하는 협동조합

<디지털 기술기반 협동조합 모델(안)>



⑥ 연구기관, 대학의 협동조합 결성 주도

- (연구기관 기반 과기협동조합) 연구소 인적·기술적 자원을 활용하여 과기협동조합의 창업 및 운영 활성화, 기술 사업화로 연계
 - (아이디어 발굴) 과기특성화대학, 연구소, 과학기술단체 등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아이디어 발굴, 창업 연계 활성화
 - ※ 청년창업/기술사업화 분과, 과학교육 문화 분과, 사회혁신분과로 나누어 우수 아이디어 공모 및 시상 추진
 - (고경력 연구원 활용) 고경력 연구인력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창업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기술지원이 가능한 기술 서비스 협동조합 육성
 - ※ 특구재단 시범 사업 실시('18~)
- (대학 기반 과기협동조합) 대학이 보유기술로 인큐베이팅한 다수의 기업들을 협동조합으로 구성, 상호 협업 등 촉진
 - ※ 협동조합 구성 후 조합원사끼리 기술인력, 시설, 공간, 기자재 등을 공유
- (지역 혁신플랫폼 구축) 지역 과기특구 등을 중심으로 출연(연), 대학 등 지역혁신주체들의 협동조합 결성 및 운영을 지원하는 플랫폼 마련
 - 지역단위로 협동조합의 창업, 운영활성화,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자원을 연계하는 과학기술 협동조합 지원 플랫폼 설치·운영
 - ※ 과기특구가 설치된 5개 지역(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우선 설치
 - ※ 설치방식 : 특구, TP,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기관,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위탁

<지원 플랫폼 주요 기능 (예시)>

<출연(연)+기업, 대학+기업 기술협업 협동조합 창업 및 운영지원>

- 연구소기업간, 연구소기업+지역기업간 협동조합을 통한 공동사업 지원
- 연구소기업+기술사업화 전문가(특허, 법률, 경영 등) 간 협동조합 지원 등
- 지역별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자원 연계(지역기반 산·학·연)
- 지역기반 혁신조직과 사회적경제조직간 오픈 네트워크 지원

⇒ 지역 협동조합을 통해 지역 공동체 혁신동력 강화

⑦ 예비조합원에 대한 교육과 홍보의 확대

- (설립 희망자 현장교육) 협동조합 예비 설립자를 대상으로 관련분야 협동조합에 탐방을 지원하는 “협동조합의 날(Coop-Day)” 확대 운영
 <“협동조합의 날” 운영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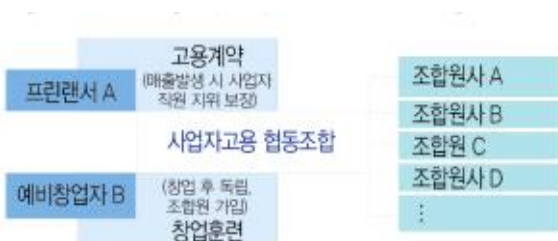
- ▶ (내 용) 예비조합원이 과기협동조합 실제 사업 현장을 탐방하여 창업을 구체화하고 애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
- ▶ (계 획) 운영규모 확대('18년 5회 →연10회), 이공계 연구팀 등 청년층 참여 확대로 청년 과기 협동조합 설립 확대 유도

- (특성별 맞춤형 교육·연계) 설립 희망자 특성별 맞춤형 교육 실시
 - 이공계 대학생, 기술사, 경력단절 여성, 은퇴 예정자 등 과기 협동조합 설립 희망자 그룹별 전문강좌 개설·운영
 -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설립단계에 이르기까지 창업컨설팅 지원
 - ※ 시설립 과기 협동조합, 분야별 경영컨설팅기관 등 직접적인 창업 컨설팅 연계·지원
- (창업인턴제) 이공계 청년 등이 협동조합의 운영원리를 경험하고 향후 협동조합 구성 및 운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원
 - 과기협동조합 대상으로 협동조합을 경험할 수 있는 “창업인턴” 고용을 지원하고 이들의 협동조합 창업 및 운영 노하우 습득을 지원
- (지역 사회문제해결 해커톤*)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과기협동조합 사업모델 도출하기 위한 해커톤 실시
 - * 해 커 톤: 해킹과 마라톤의 합성어로, 일정기간 특정 목적 달성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대회
 - ※ 과학기술전문가, 지역사회 당사자, 지지체 등 기술수요자와 공급자간 만남을 통해 문제해결 모델 발굴 및 협동조합 창업 기반 마련
- (사회적경제 교육과정 지원) 사회적 경제 관련 교육을 통해 과기 협동조합의 사회적 가치 창출 역할을 강화 (노동부)
 - 사회적경제기업 단기 교육과정 연계*, 회계·마케팅·인사 등 역량별 특화 프로그램 지원, 사회적 경제 특화 창업 교육 지원 등
 - * 사회적경제선도대학 또는 SEMBA 운영대학 교수진 활용 과기협동조합 지원

⑧ 과기협동조합의 과기협동조합 운영

- (과기협동조합 창업지원 협동조합) 과기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운영 및 사업모델 개발을 지원하는 과기협동조합 운영
 - 협동조합 출자, 설립운영 컨설팅, 관련 행정 지원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협동조합 창업지원” 협동조합 모델 구축
 - 협동조합 전문가, 기술기반 창업기업, 기술사업화 기업 등 모여 구성
- ※ 초기에는 과기특구가 중심이 되어 추진(출자, 설립 등) 중장기적으로 비즈니스 모델 확보
- ※ (예) 신나는 조합 : 협동조합·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 투자 등 자금조달과 협동조합 설립 컨설팅 등 전문적으로 시행
- (예) 엔슬협동조합 : 대기업 임원출신이 모여 벤처 육성 컨설팅 수행
- (사업자고용협동조합 운영) 예비창업자, 프리랜서를 협동조합이 직접 고용하여, 과기협동조합을 경험하고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
 - 과기협동조합이 예비설립자(사업자)*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기술개발 등 비즈니스 노하우 습득 후 창업(독립)하도록 인큐베이팅 지원
 - * 프리랜서, 1인사업자, 예비창업자 등
 - 참여자와 협동조합 간 고용계약을 통해 사회보험, 행정업무, 세금 처리 등 체계를 공유, 현장 인큐베이팅을 통한 성장 지원

□ 프랑스의 IT 테마형 사업고용협동조합 모델 “Coopetic”



▶ (운영모델) IT, 커뮤니케이션, 영상 분야에 특화하여 프리랜서들과 협동조합이 고용계약을 맺고 교육, 훈련, 사회보험, 홍보 등 행정지원을 하는 “사업자고용협동조합(CAE)” 모델

▶ (지원사항) 조합원에게 법률, 행정, 재무, 홍보 마케팅 등 기업 경영 기반을 제공하고, 조합원은 별도의 사업자 등록 없이 협동조합 법인을 통해 일거리 계약이 가능하며, 사업개발을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 가능

VI. 기대효과

□ 과기협동조합 수 확대 및 우수 비즈니스모델 확산

- (양적 확대) 2022년까지 과기협동조합을 1,000개 규모로 육성, 10,000명 규모의 조합 일자리* 창출

* 조합당 평균 10명 내외의 조합원 및 고용인 추정

<과학기술인협동조합 그간 추이 및 향후 계획(안)>

분야	2014	2015	2016	2017	2022년*
1. 연구개발	14	28	34	38	140
2. 조사 분석	13	17	17	18	125
3. 기술서비스	30	64	95	113	289
4. IT서비스	16	23	31	34	160
5. 과학교육, 문화	25	32	42	61	250
합계	108	164	219	264	1,064

* 원스톱 창업지원사업('19년~)을 통해 연 100개 창업협동조합을 육성하는 것을 가정

- (질적 다양화) 협동조합의 조합원 구성, 조합의 유형, 규모, 비즈니스 방식 측면에서 다양성 확대

- ▶ (조합원 구성) 원스톱 창업지원, 사업자고용협동조합 등으로 고경력, 남성 외에도 여성과 청년 과학기술인 비중 확대
- ▶ (유형) 프리랜서형, 융복합형 등 다양한 유형의 협동조합 창출 및 현재 수도권 중심(50%이상)에서 지역플랫폼을 통한 지역으로의 확산
- ▶ (규모) 대학 등 혁신주체 주도의 협동조합 육성, 협동조합 연합회 등을 통해 다양한 규모의 협동조합 육성
- ▶ (사업모델)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BM 발굴을 통해 다양한 협동조합 사업모델 추진

□ 과기협동조합을 통한 과학기술서비스의 고도화, 전문화

- (서비스 역량 강화) 연구산업, 과학문화산업 등 산업의 주체 육성
 - 특히 이업종간 융합형 과기협동조합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연계 서비스 및 융복합 사업 추진 가능
- (과학기술의 현장 착근) 과학기술전문가 풀을 확보하여 산업현장 및 국민생활문제 해결에 적합한 전문인력 및 자원 적시 공급 가능

Ⅶ. 추진 일정

번호	정책과제	일정	담당
① 기존 협동조합의 발전 촉진			
①-1	중대형 융복합 조합 육성	'19上~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양성과)
①-2	협동조합 연합회 활성화	'19上~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양성과)
②-1	10대 성공스토리 발굴	'18下~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양성과)
②-2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	'18下~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양성과)
③-1	과학기술서비스 산업 활성화	'18下~	과기정통부 (연구성과활용정책과 등)
③-2	일거리 매칭 강화	'18下~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양성과) (연구성과활용정책과)
③-3	과기협동조합 맞춤형 사업화 지원	'18上~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양성과)
④-1	연구자 겸직허용	'18下~	과기정통부 (연구기관지원팀 지역연구진흥과)
④-2	금융지원 및 투자강화	'18下	금융위 기획재정부
④-3	협동조합용 ERP 개발 및 보급	'19下~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양성과)
② 새로운 협동조합의 결성 촉진			
⑤-1	다양한 BM 아이디어 발굴	'19上~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양성과)
⑤-2	원스톱 창업지원	'19上~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양성과)
⑤-3	연구산업, 과학문화·교육형 협업모델 개발	'18下~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양성과)
⑤-4	디지털기술기반 협동조합 모델 육성	'19上~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양성과)
⑥-1	연구소 단위 창업 촉진	'18下~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양성과 지역연구진흥과)
⑥-2	대학 단위 창업 촉진	'19上~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양성과)
⑥-3	지역단위 플랫폼 구축	'19上~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양성과)
⑦-1	설립희망자 현장교육	'18上~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양성과)
⑦-2	특성별 맞춤형 교육연계	'18上~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양성과)
⑦-3	창업 인턴제	'19下~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양성과)
⑦-4	지역사회 문제해결 해커톤	'19上~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양성과)
⑦-5	사회적경제 교육과정 지원	'18下~	과기정통부, 고용노동부
⑧-1	과기협동조합 창업지원 협동조합 운영	'19下~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양성과)
⑧-2	사업자 고용협동조합 운영	'19下~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양성과)

참고1

과기협동조합과 일반 협동조합의 비교

	2017년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운영 실태조사('17.12)	제3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기재부, '18.2 발표)
<조사개요>		
조사목적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지원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현황 파악	협동조합 정책 수립 등에 활용 (협동조합기본법, 2년 마다)
조사대상	설립현황 파악이 완료된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240개	신고·인가된 10,615개 협동조합
조사기준일	2017년 6월 30일	2016년 12월
<항목>		
사업 운영율	60.0%	53.4%
평균 조합원 수	14.9명	61.6명 *일반협동조합 53.1명, 사회적 협동조합 128.5명
조합 유형	사업자(68.8%) > 다중 이해관계자 (11.7%) > 직원(9.1%) 順	사업자(70.2%) > 다중 이해관계자 (16.3%) > 직원(4.1%) 順
조합유형별 평균 조합원 수	(사업·생산자) 12.0명, (소비자) 13.8명, (직원) 9.9명, (후원자) 6.1명	(사업·생산자) 30.9명, (소비자) 22명, (직원) 18명, (후원자) 5.7명
평균 출자금	2,141만원	4,064만원
조합원당 출자금	148만원	74.8만원
평균 유급종사자 수	4.3명	4.3명 *일반 3.4명, 사회적 12.0명
유급종사자 중 정규직 비중	49.0%	81.0%
유급종사자의 월평균 급여	(정규직) 235.6만원 (비정규직) 146.2만원 (평균) 159만원	(정규직) 147만원 (비정규직) 92만원 (평균) 135만원
평균 매출액	99백만원	2.7억원
매출비중 (주요고객)	정부·공공기관(50.0%) > 기업(39.2%) > 일반 개인(11.8%) 順	일반 개인(36.1%) > 정부·공공기관 (19.8%) > 조합원(19.8%) 順
교류·연대 참여율	53.3%	30.9%




참고2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우수사례(국내)

분야	조합명	소개	주요사업
고 경 력 과 기 인	<p>한국법과학 협동조합 (2016.10 설립, 조합원수 36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 감식분야 전문가 등 전현직의 법과학 현장수사 전문가들이 모여 설립한 협동조합 ▶ 사고재구성, 범죄현장 클리닝, 법과학 관련 교육 및 자문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며,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컨설팅과 자문 활동으로 사회적 기여 활동도 활발히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수사 장비 개발 및 판매, 법과학 관련 교육 및 자문, 범죄현장 크리닝 등 ▶ 경북대학교 수사과학대학원 MOU 체결(2016) ▶ OCN 드라마 '터널', '블랙' 감식 장비 협찬(2017) ▶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MOU 체결(2017)
경 력 단 절 여 성	<p>굿잡마미 협동조합 (2016.10 설립, 조합원수 9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웹기획자, 웹디자이너, 웹퍼블리셔 등 여성 IT전문가들이 모여 IT 업계에서 여성의 짧은 근속연수,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의 어려움 등 구조적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설립 ▶ IT분야 제작/서비스 사업,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IT취업교육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사업(홈페이지, 앱 제작 등), IT 및 S/W 교육사업 등 ▶ 웹사이트 및 모바일사이트 구축 (경기도직업교육센터, 경기행복 교육사업단, 전북대학교 등 2016~2017) ▶ IT 및 S/W 교육(HTML5, 반응형 웹디자인 등, 경기도 여성새일센터, 2017)
중 소 기 업 기 술 융 합	<p>기술융합 협동조합 (2013.7 설립, 조합원수 12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 기계, 디자인, 3D프린팅, 해석 등 전문기술을 보유한 12개의 법인들이 모여 원스톱 시제품 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동조합 ▶ 시제품개발대행, 공동 R&BD, 기술컨설팅, 기술교육(하드웨어 설계, 로봇교육, 구조설계해석, 목공 등), IP경영 지원 등 조합원사의 기술융합을 통한 다양한 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제품 설계, 개발, 제조 ▶ 창업인턴제 인턴연수기업(창업진흥원 2014) ▶ 5개 기관 MOU체결(경상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항공우주센터 등, 2014)

참고3

과학기술분야 협동조합 우수사례(해외)

조합명	주요내용
 <p>CoTech (영)</p>	<p><작은 협동조합의 연합체 : CoTech(Cooperative Technologists, 영국)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 '16년 설립, '18년 총 30개 협동조합의 네트워크로 성장(직원 수 252명) ▶ (분야) 디자인, 3D, DB관리 및 분석, 브랜딩, IT서비스 등의 기술 분야 작은 노동자 협동조합들의 기술공유, 협력촉진을 위한 연합체 ▶ (운영) 협동조합간 기술 공유·협력 위해 “공동창조”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거버넌스는 온라인 플랫폼(Loomio)에 의거하여 전 구성원 참여
 <p>Up & Go (미)</p>	<p><사회공헌형 플랫폼 협동조합 : Up & Go (미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 뉴욕 IT개발자 협동조합(Colab Co-op), 뉴욕 노동자 협동조합, 로빈후드 재단, Barclays은행 등이 협력하여 설립 ▶ (분야) 청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협동조합으로, IT 개발자 협동조합이 IT 플랫폼을 개발·구축하고 돌봄 서비스 노동자들은 플랫폼의 공동소유자로서 출자 ▶ (운영) 지역 서비스노동자 지원조직과 은행의 사회공헌기금 지원을 바탕으로 설립, 기존의 이윤추구형 플랫폼 기업의 수수료 대비 15% 수준으로 수수료 절감
 <p>France Barter (프)</p>	<p><조합간 B2B 거래를 위한 플랫폼 협동조합 : France Barter (프랑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1000명 이상의 기업가(중소기업 및 협동조합)이 참여 ▶ (분야) 협동조합의 온라인 비즈니스 매칭 플랫폼이자 핀테크 플랫폼이며, 협동조합들의 B2B 사업을 지원 ▶ (운영) 각 협동조합들간 서비스와 제품을 현금거래가 아닌, '교환'의 형식으로 거래, 서비스 수요자인 협동조합/기업들이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 또 다른 협동조합/기업의 공급업체가 되어, 연쇄적 비즈니스로 연결

과학기술인협동조합 빅데이터 분석 결과

□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주요 업무영역 분석(워드 클라우드)

<과학기술인협동조합 조합명 분석>

<과학기술인협동조합 사업내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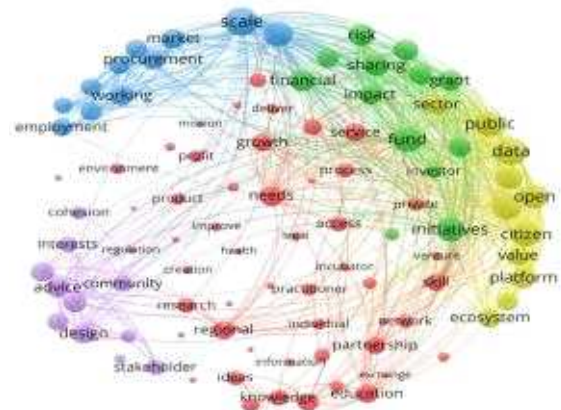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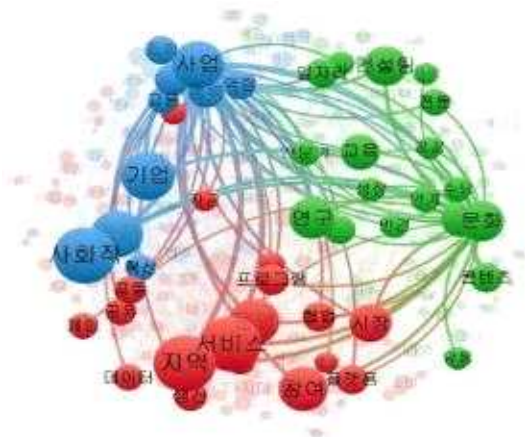


- 조합명으로는 3D 프린팅, 에너지, 드론 등 신산업 관련 키워드가, 사업내용으로는 컨설팅, 교육, 콘텐츠 등 과학기술서비스 관련 키워드 다수

☐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네트워크 분석(국내외 문헌기준)

<(국내) 주요 문헌 네트워크 분석>

<(국외) 주요 문헌 네트워크분석>



- (국내) ① 정책지원 (“사회적경제”, “고용기업”),
② 연구산업 및 과학문화 (“연구”, “시장”, “문화, 콘텐츠” “컨설팅”),
③ 지역공동체 참여 (“지역”, “서비스” “참여”) 관련 키워드 주도적
- (국외) ① 협동조합 방식을 통한 리스크 경감 (“risk”, “financial”, “crowdfunding”),
② 시민 협력 플랫폼 (“public”, “citizen”, “platform”),
③ 공공조달을 통한 판로지원 (“procurement”, “market”, “inclusive”),
④ 지역공동체수요를 반영한 기획 (“community”, “interests”, “planning”),
⑤ 협동조합 활성화 교육 (“education”, “learning”) 관련 키워드 주도적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

2018. 7.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

2018. 7.



목 차

I. 추진 방향 및 목표	170
II. 제도개선 방안	171
1. 청년 취·창업 지원 강화	171
2. 자활사업 참여절차 개편 및 참여자 역량 강화	172
3. 자활기업 문호 개방, 규모화 지원 및 부처간 칸막이 제거	173
4. 자활기업 지원 인프라 개편	174
5. 자활기금 적극 지원 체계 마련	176
* 참고자료	178
1.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 경로	
2. 자활기업 지원유형 및 관리체계 구축방안	

자활기업 활성화 추진 개요

국정과제 26. 사회적경제 활성화 :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좋은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혁신, 도시재생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국정과제 42.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자활대상자 확대, 자활급여 단계적 인상 등 취약계층 자립 지원

□ 자활기업의 의의

○ 일자리 제공을 통해 수급자, 차상위층의 탈수급·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자활급여를 제공하는 수단

○ 다양한 문제*를 가진 빈곤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보호된 작업장

* (일반저소득층:자활대상자) 이혼비율(5%:28%), 만성질환보유(37%:53%), 중졸이하(22%:49%)

< 자활기업 현황('17년) >

- ▶ (개수·유형) 1,092개 운영중, 개인사업자(65%), 주식회사, 유한회사, 협동조합 순
- ▶ (업종) 청소(24%), 집수리(17%), 돌봄(15%), 폐자원·음식물재활용 등
- ▶ (매출액) 총 2,399억원(기업당 2.2억원)이나, 3개 전국기업의 매출액 1,615억원(중복집계 825억원)을 제외하면 지역 자활기업 1개소당 매출액은 1.3억원 수준
- ▶ (고용) 11,029명(차상위·수급자 3,489명)으로 기업당 10명 수준이나 3개 전국기업의 고용 규모 (5,685명 / 중복 1,936명)를 제외하면 기업당 6.9명 수준으로 영세
- ▶ (인건비) 합계 1,230억원, 기업당 97백만원, 정부 인건비 지원*은 36억원(3% 미만)

* 자활기업 고용 수급자에 시장형 근로사업단 인건비의 100%(2년), 50%(이후 3년) 지급

□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 마련의 필요성

○ (저소득층 지원) 수급자, 차상위자 대상 일자리 확대와 근로소득 증가를 통한 소득재분배 강화 및 빈곤층의 상위소득 계층으로 이동 유도

○ (일할 권리 내실화) 저소득층 고용안정성이 우수한 자활근로·자활기업 강화

* 생계급여수급자(119만명)중 근로능력을 갖춘 사람에게는 근로조건이 부과되어 취업성공 패키지(26천명), 자산형성지원사업(72천명), 자활근로·기업 취·창업(41천명)으로 경로가 나뉘

- 청년키움통장 등 자산형성지원사업은 높은 탈수급(64%) 기여 등 순항, 취·창업지원제도(자활근로, 자활기업)는 낮은 참여 등으로 재편 필요

⇒ 자활기업(자활근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추진,
2022년까지 자활기업 1천개, 저소득층 일자리 2만개 창출

I. 추진 방향 및 목표

- ☐ (사회적경제) 자활기업은 근로빈곤층의 공동창업을 통한 탈빈곤의
통로뿐 아니라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기저*로서 역할

* 자활기업 약 37%(407)가 사회적기업(178/1,713), 사회적협동조합(31/949) 등으로 성장

- ☐ (논의방향) 종전의 창업 前단계 집중지원에서 탈피, 자활기업의 창업과 시장에서의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

- ‘수급자’에 대한 ‘복지부’의 ‘획일적’ 지원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부처간 협업으로 자활기업 1,000개, 일자리 2만개 창출('22) 추진

- 맞춤형 취·창업 인큐베이팅으로 사업실패·실직 저소득층이 스스로 소득을 만드는 선순환 사회보장구조(패자부활기회) 마련

비 전

자활기업 성장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과 빈곤·양극화 극복



현황 (2017년)	연간 자활기업 창업 수 총 자활기업 수 총 고용수	목표 (2022년)
113개		200개
1,100개		2,100개
11,000명		31,500명 (20,500명 ↑)
10명	평균 고용 수	15명
3%	청년 고용 비율	10%
1.3억원	지역자활기업 평균 매출액	1.8억원
최저임금	평균 임금	최저임금 120%

II. 제도개선 방향

1 청년 취·창업 지원 강화

- (청년참여) 저소득 니트(NEET)족* 및 보육원 보호종결아동(3천명)의 자활근로사업 참여 확대를 통해 청년층의 급여수급자 편입 방지

* 근로의지가 미약한 소득하위계층 청년이 일하지 않는 니트족으로 머물 가능성이 중산층 이상 가구 청년의 1.6배(서울대 이봉주 교수)

- (청년창업) 청년 자활근로사업단을 도입하고, 사업단을 기업으로 창업시키는데 성공한 자활센터에는 복지부 평가시 가점 부여

<지자체 청년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및 창업지원('18.下~) 개요>

- ▶ (대상) 자활근로사업 신규참여 또는 참여기간 2년 이내인 만18~34세 청년
- ▶ (업종) 요식업, 문화, 스포츠, 쇼핑물·유통 등 청년선호 업종 중심
- ▶ (과정) 심리적 자립·사회적응 스킬훈련(1년차), 기술훈련, 사업단 운영(2·3년차)
- ▶ (지원) 사업준비금(최대 3천만원), 근로사업비(30%)를 50%로 확대, 창업포상

- (청년취업) 청년채용 자활기업과 고용유지 청년에 대한 추가 지원으로 일손 부족 자활기업과 구직 중인 청년층의 매칭 유도

- 자활기업 참여 청년에 자활장려수당(소득의 최대 30%) 지급

- 수급자 청년을 고용한 자활기업에는 5년간 인건비 지원*

* '17년 인건비 지원액(101만원/인) 기준 처음 2년간 100%, 이후 3년간 50%

- 청년의 지역 사회적경제기업 취업 지원(2년간 최대 2,400만원, 행안부) 등 타부처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과 적극 연계

*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청년 3명 고용시 1명 최대 2천만원 지원, 중기부), 지역주도사업(도시청년 시골파견, 농식품부) 등

※ '22년 자활기업(31천명) 청년고용비율 10% 달성으로 청년일자리 3천개 창출

2

자활사업 참여절차 개편 및 참여자 역량강화

- (맞춤형경로) 참여대상자의 자활역량과 가구여건을 종합 평가하여 최적의 자활경로 설정이 가능하도록 역량평가제도 개선

* 자활사업 참여자의 1년 고용유지율이 취성패 참여자의 2배 수준

- 종전에는 자활사업 참여대상자를 주로 '취업경로'로 유도했으나, 당사자 의지와 여건에 따라 '창업경로' 선택 가능성 제고



* 조건부수급자 역량평가 및 취업우선지원제도 개선(복지부-고용부 협의)

- (절차 간소화) 사업 참여자의 편의와 종합적·심층적 상담을 위해 자활역량·취업준비도 등 평가를 통합하여 원스톱 상담 실시

- 4개 평가*(4개 기관 수행)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통합 수행

* 현재 근로능력은 국민연금관리공단, 자활역량은 지자체, 취업준비도는 고용센터(고용부), 자립역량평가는 지역자활센터(복지부) 등 여러 기관에서 평가중

- (참여환경조성) 자활사업 미참여 수급자의 자활근로 참여 유도

- 가족 보육·간병 때문에 근로조건부과가 유예된 수급자(14천명)에게 돌봄서비스 바우처 등을 제공하고 시간제 근로에 참여토록 유도

- 자활근로 인건비 인상* 및 근로 미참여자 모니터링 병행 추진

* 수급자의 근로 미참여 이유는 낮은 자활근로 인건비, 수급자격 유지 선호 등

- 최저임금 대비 자활근로 인건비 수준 인상 추진 ('18. 70% → 80%)

- (교육·관리 강화) 청년층·차상위층 등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관리를 강화하는 등 자활기업 리더 육성

- 창업과정에서 필수적인 직능·자격·마케팅 기초과정 교육 등을 자활연수원에서 제공(자격증 취득까지 지원)

- 자활사업에의 자발적 참여 대상인 차상위 이상 계층의 자활기업 창업 등 보호된 취·창업사업 참여 유도로 수급층으로 전략 예방

□ 자활기업 문호 개방 및 사회적경제조직간 협력 강화

- (문호개방)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종사자 요건 (1/3 이상 수급자)을 지속적으로 유지시 자활기업 인정
 - 지역자활센터를 중심으로 선행 기업의 동료컨설팅(peer consulting), 사회적경제 조직간의 협력성장 모델(우수기업 포상 등) 추진
- (민간위탁) 지자체(자활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집수리·간병사업 등 자활근로사업을 자활기업에 위탁할 수 있도록 개선('18.下 지침개정)
 -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나, 자활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공모절차 없이 사업성 검토 후 자활기업에 위탁

□ 동일·유사 업종 간 규모화 지원

- (규모화) 각 권역별 동종·유사업종 간 네트워크화, 규모화 추진
 - 전국 자활기업화에 적합한 사회서비스·재활용·커피 도소매·외식업 프랜차이즈 사업 등을 집중 지원*하여 매출액 및 고용확대 유도
 - * 자활기금 투입, 지자체 부지 활용으로 공동 브랜드 개발, 공동작업장 설치 등 지원

□ 자활기업의 공공사업 유치 지원

- (도시재생 등) 매입임대주택·도시재생 사업(국토부·LH)과 자활기업 집수리·청소·관리사업 등을 연계
 - * 중앙자활센터-LH간 업무협약('18.6월)을 통해, 매입임대주택 사업 관련 입주 청소, 공가관리, 매입대상물건 상태 확인 등 업무에 자활기업을 투입할 예정이며, 협력분야를 향후 도시재생사업 전반으로 확대 계획
- (공공조달 우대) 자활기업 공공기관 입찰 가점 확대* 및 취약계층 고용(30%) 자활기업 대상 수의계약제도(5천만원 이하)** 신설
 - * '17.12, 계약예규 개정 완료 (국가: 1.7점→2점, 지자체: 0.5점→1점)
 - ** 국가계약법 시행령(7.9까지 입법예고)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7.24 공포 추진) 개정

4 자활기업 지원 인프라 개편

□ 인프라 네트워크화를 통한 지원 강화(『한국자활복지개발원(가칭)』)

- (재구조화) 중앙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14곳), 자활연수원 등으로 분산 운영중인 자활지원조직을 재정중립 원칙하에 재구조화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재구조화를 통해 공공성·안정성* 제고, 기능중복 제거, 정보시스템 및 기금집행지원 효율화 등 도모
 - * 자활지원조직 공공성 제고 요구에 부응, 개발원 재편 후 공공기관화 추진
 - 기업인증, 경영컨설팅, 규모화 지원은 광역자활센터의 고유 업무화
- (참여자 DB) 자활정보시스템 내에 참여자 DB 구축, 자활경로 상담 및 자활프로그램 반복진입 방지 등에 활용
 - 자활근로, 자활기업, 취업성공패키지(고용부) 사업 중도 탈락자의 재진입 시 DB를 활용하여 맞춤형으로 탈수급 경로 안내
- (자활기금 심의)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지자체 요청시 기금 지출·용자 심사를 지원하는 등 기금활용도 제고
 - * 개발원에 자활기금 운용 전문조직을 설치, 자활기업 규모화 전국화 지원
- (교육강화) 현장수요가 많은 기술·직능교육, 창업준비를 위한 경영기초과정 등 교육 확대, 사회적 경제조직 구성원 역량 강화

현행		변경	
중앙 자활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연구·교육·홍보 ■ 사업의 개발, 평가 ■ 광역·지역센터 및 자활기업 기술경영 지도 	→	한국 자 활 복 지 개 발 원 <본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연구·통계·홍보 ■ 신규사업 개발, 평가 ■ 자활기금 운영, 자활DB 운영
광역 자활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연구·교육·홍보 ■ 광역자활사업체 육성 ■ 지역특화 일자리 연계 		<광역자활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기업 경영컨설팅·인증 ■ 자활기업 규모화·프랜차이즈 ■ 지역특화 일자리 연계 등
자활 연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관련 교육기능 수행 		<연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 인력양성 일원화 ■ 청년특화 자격과정 운영

* 중앙자활센터 19명 정원 예산 25억원 → 개발원(광역센터 포함) 170명 정원 예산 100억원

□ 지역자활센터를 사회적경제 지원 허브로 육성

-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지자체가 지정하는 지역자활센터(250개)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 다양한 지역특화사업 수행여건 조성
 - 서울 송파 등 별도의 모법인이 없는 지자체 직영(전국11개소) 지역자활센터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우선 전환(기 전환 9개소)
 - 현장 피드백 결과를 반영, 법인화 지역자활센터 인센티브* 조정
- * 매출액의 50% 자율적 사용, 지역특화형 사업개발 및 네트워크비용 지원

<지역자활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시범사업('15~'21)>

- (개요) 근로취약계층 고용 촉진 차원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역자활센터가 직접 고용할 수 있도록 센터를 사회적협동조합 형태로 법인화
 - (운영) 사회적협동조합형 지역자활센터는 사업단 매출액의 최대 50%를 자율적으로 사용, 운영비 지원액은 매년 10%씩 감축(최대 50%까지)
- (허브화) 지역자활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사회적경제조직과의 네트워크를 강화, 협력·공동사업 추진(도시재생, 문화사업, 농촌 일자리 등)
 - 사회적기업 등 여타 사회적경제조직과 협력사업단 출범 등을 지역자활센터의 성과로 인정, 인센티브 지원 검토
 - 성공한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 대표, 사회적경제 전문가 등이 지역자활센터 운영진에 참여토록 의무화

<중앙자활센터-LH 간 『사회적 가치 구현 상생업무 협약』('18.6월)>

- LH가 추진 중인 집수리 연계형 장기전세임대 사업,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리츠 사업,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 등에 자활기업 참여를 촉진
 - 중앙자활센터는 사업에 참여할 자활기업을 선정하고 LH는 자활기업을 입주청소, 집수리, 공가관리, 매입대상 부동산 상태 파악 등 업무에 투입
- (예보자활기업) 자활센터의 자활사업단 2,400여 개 중, 매년 자격요건 등을 갖춘 100개*('17년 9개) 사업단에게 자격 부여
 - 자활사업단 운영기간(3년) 중 시장진입을 앞둔 우수 자활사업단(매출액이 사업비 대비 40%이상)을 선정해 집중 지원
- * 창업자금 적립비율(매출액의 60→80%), 사업비 비율(총비용의 30→50%) 조정 등

5 자활기금 적극 지원 체계 마련

- (현황) 전국 233개 지자체 조례에 의해 총 3,941억원의 자활기금 적립(자활근로수익금 등), 자활기업 지원 등 자활사업에 활용

* 총 4,376억원 중 435억원 집행(소모율 10%), 잔액 3,941억원('17년말 현재)

- 일부 지자체는 근로수익으로 조성된 자활기금을 폐지, 타기금에 통합
- 손실발생 위험기피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소극적 운용*, 목적외 사용 등 자활기금의 활용도가 낮은 상황(금년중 전수조사 예정)

* 위험부담을 직접 감수해야 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은 전세보증금 대출(38%) 등 회수가 가능한 지원에 치중, 현장이 요구하는 사업자금 지원 등에는 미온적

<지자체 자활기금 오용 사례>

- (일반회계 편입) 경상남도 2015.12월 자활기금 조례를 폐지, 잔액 및 상환금을 일반회계로 세입조치 (조례 폐지 당시 자활기금 잔액 약 33억원)
- (사회복지기금으로 전환) 대전('11.4월), 전남('13.4월) 자활기금 조례를 폐지하고 대전복지재단·전남복지재단 조례를 제정, 재단으로 이관한 기금을 재단규정에 따라 관리

- (기금위탁) 희망하는 지자체는 자활기금 운용, 융자심사 등의 업무를 중앙(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설치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위탁*

* 중앙자활센터 업무위탁 근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이미 완비

- 위원회에 전문가, 지역관계자* 등 참여, 지자체는 위원회의 기금 집행 타당성 등 검토결과를 활용하여 집행여부 결정(집행책임 분산)

* 자활기금 조성·사용권한은 지자체, 중앙의 위원회는 권고·중재 기능 수행

	기존	변경
신청	자활기업 → 지역·광역자활센터(보증) → 지자체(자활담당)	자활기업 → 자활센터, 지자체
심사	지자체(회계부서, 심의위원회)	중앙 위원회(은행)
집행	지자체(자활담당)	(위탁)민간은행

- 시군구 단위로는 육성이 어려운 광역·전국자활기업 등 자활기업 규모화, 네트워크화를 중앙과 지자체간 긴밀한 협력으로 유도

□ (집행간소화) 지자체-중앙자활센터-민간은행 간 업무협약을 통해 효율적인 자활기금 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업무 위탁 범위 설정

- 대출심사를 간소화하고 전문가가 융자심의 등에 적극 참여
- 자활기금 집행 심의과정에서 기업의 사회적가치 평가 등 반영
- 자활기업 전세보증금·사업자금 등의 대출금리* 인하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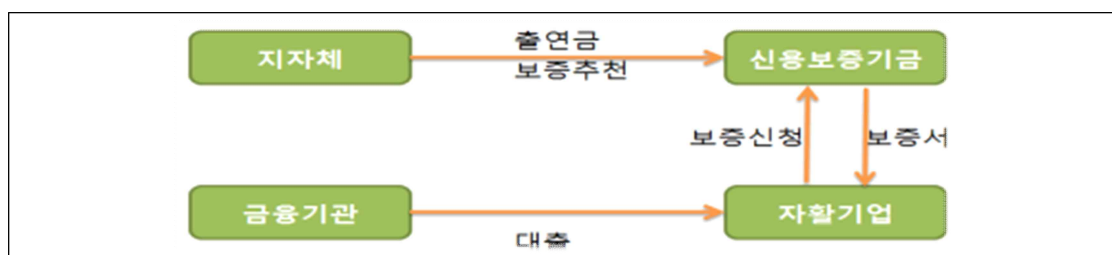
* (現) 전세보증금은 3% 이하, 사업자금은 3% 이내에서 조례로 정함(고정금리)

□ (기금관리 강화) 임의적 자활기금 폐지 제한(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 기금 조성의 특수성(자활참여자의 근로수익 적립)과 사용목적(자활사업 활성화)에 맞지 않는 지자체의 임의적인 폐지·오남용 방지
- 법개정까지 지자체에 자활기금 폐지의 위법·부당성 적극 설명

□ (협약보증) 지자체 자활기금 일부를 중앙자활센터를 통해,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재원으로 출연(50억원, 5년간 매년 10억원)

- 신보는 5년간 4백억원(출연금액의 8배) 규모로 자활기업에 대한 융자 보증지원 가능(1개 기업당 5천만원 융자시 8백개 기업 지원)
- 자활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 신보 전문가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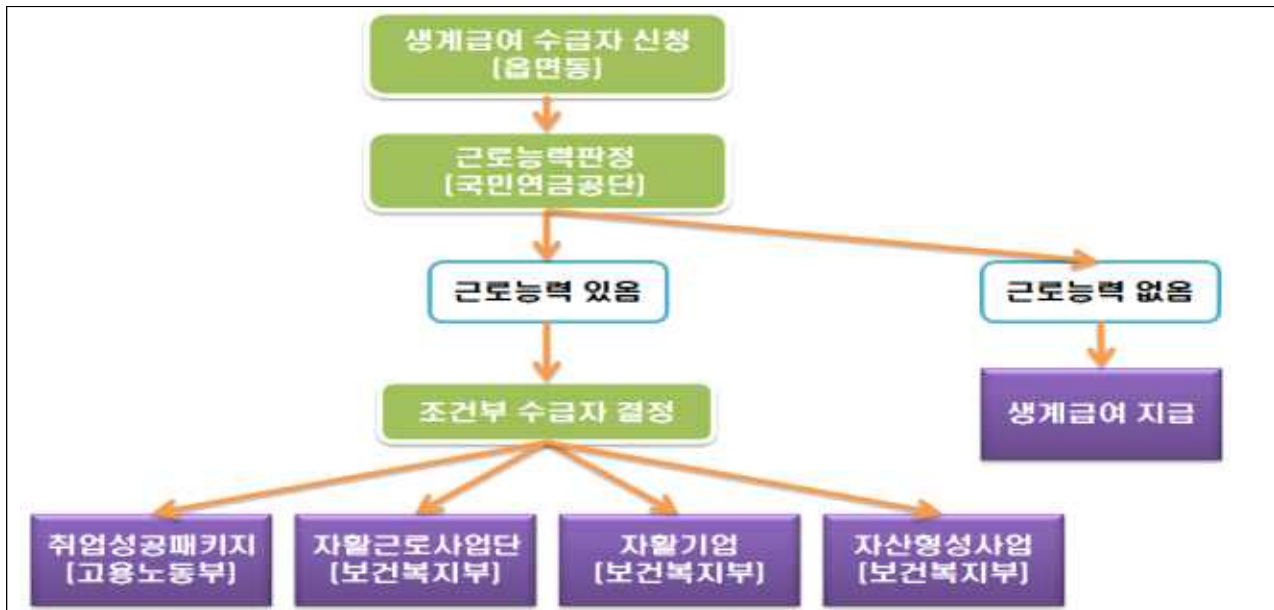
- 금융위·신보의 사회적경제지원계정(최대 5천억원) 적극 활용
 - 신보의 자활기업 신용보증 심사기준을 합리화하여 다른 사회적 경제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한 자활기업 보증 확대 도모

* 보증액('18.6) : 사회적기업 438억원, 협동조합 79억원, 자활기업 10억원

참고 1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경로

- 조건부 수급자의 자활경로는 취업성공패키지, 자활근로, 자산형성 사업, 그리고 자활기업 취·창업으로 나누어짐



- ❶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근로능력이 높고 취업의지가 있는 조건부 수급자 및 일반 실업급여 대상자로 **직업훈련**에 초점

* 취업성공패키지는 취업성공수당(150만원), 내일배움카드(최대 300만원), 진단경로 설정(20~25만원), 개별 훈련수당 월평균 28.4만원을 지원

- ❷ 자활근로는 근로능력이 취약한 참여자에게 자활·자립 동기부여 및 직업훈련, 창업준비, 사회성회복 등 복합적인 사례관리를 통한 **지역사회와 경제활동으로 복귀**하는 프로그램 제공

- ❸ 저소득층이 전세금, 창업 등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하도록 돕는 자산형성 사업은 지원대상의 특성에 따라 4가지로 구분 실시 중

- ❹ 자활기업은 성공적인 자활근로사업단이 독립하여 시장에 진입하거나,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협력하여 신규 설립할 수 있는 기업 형태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평균 종사자 10인, 평균 매출액은 1.3억원으로 2~3인 소규모 창업을 대다수

□ 지원 대상 자활기업 유형 구분 및 재정지원 확대

- (자립형 자활기업) 소규모 창업을 통한 근로취약계층 자립을 목적으로 하며, 2인 이상 4인 이하 수급자 및 차상위자로 구성
 - 지원요건은 인원기준(2~4인), 外 현행과 동일(개인사업자도 인정)
- (사회형 자활기업) 일정인원(5인 이상) 확보 및 수급자·차상위자 고용 비율요건 지속충족(전체 구성원의 1/3), 법인격취득 의무화 등
 - 최대 5년간, 신규 채용 수급자 1인당 인건비 50% 지원
 - 자활기금 활용, 사업자금 융자 지원 확대 (2억원 한도, 7년 상환)
 - 우수자활기업 대상 추가 사업비지원 확대('18년 16개소, 최대 1억원)
 - 탈수급종사자 사업자부담 4대 보험료 및 사업용재산 취·등록세지원

□ 사회적가치 실현 유도를 위한 자활기업 인증 강화('18.下 지침개정)

- (인증제) 정부의 추가지원을 위한 지원대상 자활기업 인증제 도입, 인증기간을 명시(예시: 1년)하고, 정기적인 재인증 절차 신설
 - 자활정보시스템 성과입력(연 2회 이상) 및 사업보고서 제출을 의무화 하되, 성장단계에 진입한 자활기업의 재인증에 대해서는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 수준으로 인증 요건 완화
- * 전체 고용 인원 (5인 이상) 대비 취약계층(차차상위자, 북한이탈주민, 장기 실직자, 장애인, 출소자, 고령자 등) 고용 30% 이상
- (명단공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자활기업' 명단 등을 공표하여 타부처 및 공공기관 등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홈페이지 게시 등)
 - 지원대상 자활기업의 업종, 생산품목 및 우선 위탁사업·생산품 우선구매내용 등도 고시하여 판로지원과 저소득층 고용창출 연계
 - 광역자활센터에서 정기적인 성과 모니터링 및 현장 지원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마을관리 협동조합 사업 추진

2018. 7.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주거재생과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마을관리 협동조합 사업 추진

2018. 7.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주거재생과

||| 목 차 |||

I. 추진배경	185
II.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개념 및 운영	186
1.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개념	186
2.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운영구조	187
3. 마을관리 협동조합과 공공지원	189
III.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사업구성 및 공공지원 ..	193
1. 기본방향	193
2. 『5대 서비스』 사업화 지원	194
3. 안정적 조합 운영기반 구축지원	198
4. 협동조합 교육지원(일자리 관련)	201
5. 他 사회적 기업과의 N/W 구성지원	202
IV. 마을관리 협동조합 육성 및 관리계획	204
V. 향후계획	205

I. 추진배경

- 도시재생 뉴딜 주거재생사업은 노후주택 정비 및 기초생활인프라 공급을 통해 노후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을 추진하는 사업
 - (노후주택정비) 뉴딜사업은 전면철거가 아닌 현지개량 위주의 소규모 정비사업, 경관개선 목적의 집수리* 추진
 - * 집단적 경관개선의 목적을 위해 자부담 10%를 전제로 주택외부수리 지원
 - (기초생활인프라) 마을도서관·체육시설, 커뮤니티시설 등 공공시설의 적극적인 공급을 위해 재정 및 기금 투입
 - * 도시재생 뉴딜사업비로 기초 생활인프라 건설비용 지원(부지매입은 일부 제한)
 - ** 코워킹 커뮤니티 시설 등 건설 시 총사업비의 70%까지 1.5%의 금리로 융자
- 다만,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면, 물리적 주거환경개선과 함께 주도적으로 주거지를 유지·관리할 자조조직 필요
 - 지자체는 도시재생사업을 총괄 기획·집행하지만, 인력·재정상 한계로 관련 시설을 지속적·능동적으로 운영하기에는 한계
 - 주차장 등 대형 시설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나, 마을도서관 등 소형 시설은 비용회수가 어려워 민간위탁도 현실적으로 곤란
- 결국, 도시재생지역의 마을 주민, 커뮤니티가 중심이 되는 조직을 만들어, 해당 지역 주민이 직접 유지·관리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주민 자조조직이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택을 관리하고, 도시재생을 통해 공급된 기초생활인프라를 관리하도록 육성 추진

⇒ 주민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소비자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여 공공서비스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를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 마을관리 협동조합에 대한 공공지원을 강화하여 마을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지역 생활기반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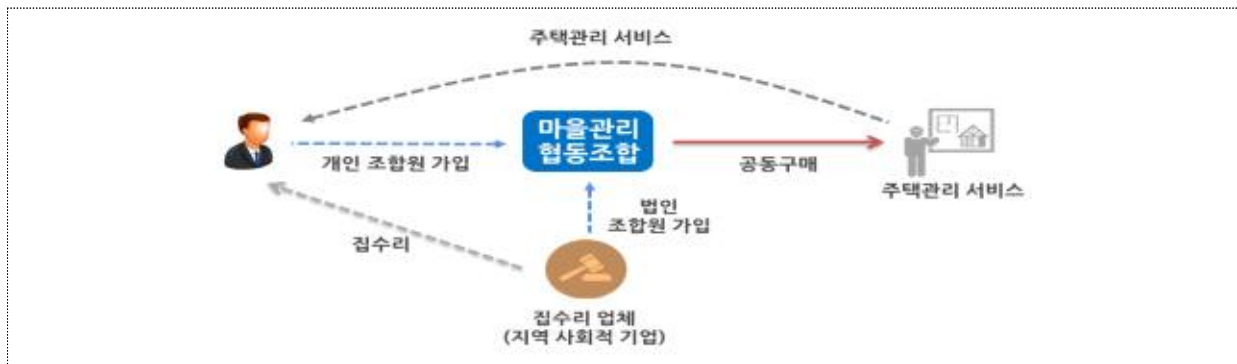
Ⅱ.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개념 및 운영

1.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개념

□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정의

-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소비자 협동조합으로, 조합원은 조합이 공동구매한 주택관리, 집수리 서비스 등을 이용
- 사회적 기업 등 他 사회적 경제주체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법인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 법인조합원 가입 시 집수리 등 해당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서비스를 조합원에게 판매도 가능

【마을관리협동조합 개념도(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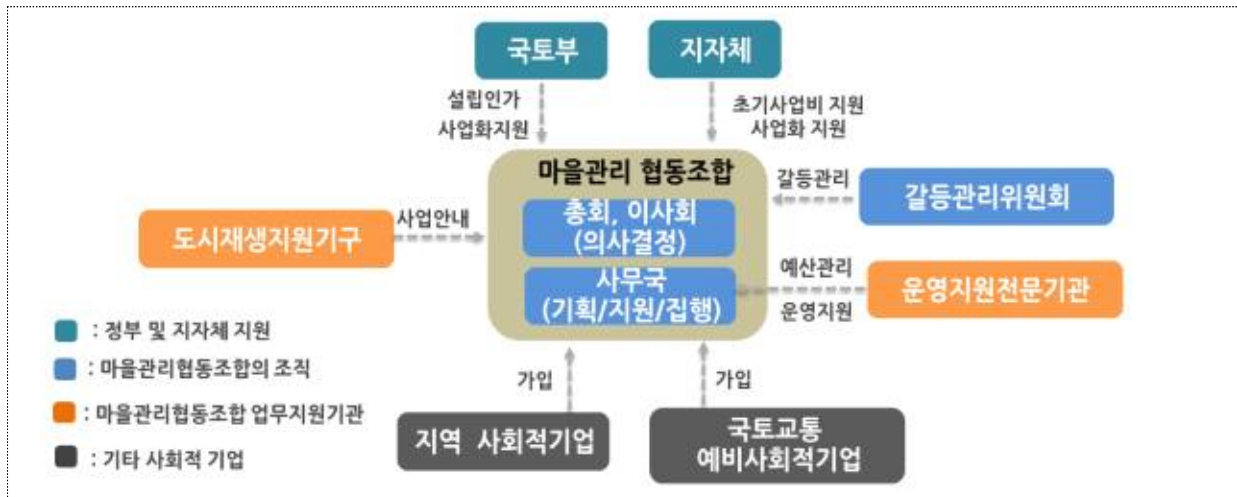


□ 마을관리 협동조합 운영방향

-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마을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운영
 - *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증진 또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의 비영리 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
 - 따라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역사회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일자리 제공 등 사업적 기능 수행
-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국토부 장관이 설립을 인가*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이므로 잉여금 배당 금지 (공공목적에만 사용 가능)
 - *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 제1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2.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운영구조

- (조직)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의사결정기구인 **총회 및 이사회**, 집행기구인 **사무국**, 갈등관리를 실시하는 **갈등관리위원회** 등으로 구성



- ① (**마을관리 협동조합 총회 등**)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마을주민을 조합원으로** 하고, 의사결정 기구로 **총회, 이사회** 등을 구성
 - (**총회**)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운영
 - (**이사회**)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총회 의결 안건 등 결정
 - * 총회, 이사회로 결정할 사항은 협동조합 기본법 및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 ② (**사무국**)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을 위한 **지원업무**, 마을관리 협동조합에 대한 **안내·홍보 업무**, 협동조합 사업 **총괄 집행**
 - * 임원의 사무국 직원 겸직은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일부제한
 -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주택관리업무가 상당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사무국 인력 중 **최소 1명은 주택관리사 채용 권고**
 - * 주택관리사 자격이 있는 주민 활용 또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협업
- ③ (**갈등관리위원회**) 마을관리 협동조합 운영과정에서 **주민간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 발생 시 **중재 역할수행** (非法政 사항, 표준정관 반영)
 - **외부인사***가 **50% 이상** 참여하도록 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성 확보
 - * 관할 지자체, 도시재생지원기구, 운영지원 전문기관 등 유관기관 인사 참여

□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국토부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마을 관리 협동조합에 대한 설립인가 및 운영점검·관리를 실시

- 지자체는 뉴딜사업비로 초기사업비를 지원하고(3년간 9천만원), 전체 활성화 계획과 마을관리 협동조합 운영 간 연계 강화
- 국토부와 지자체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자생적인 운영을 위해 사회적주택 사업, 기초생활인프라 위탁관리 등 수익원 확보 지원

□ (마을관리 협동조합 업무지원) 협동조합의 운영을 지원하는 도시 재생지원기구를 추가 지정하고, 운영지원 전문기관도 선정

① (지원기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지정, 마을관리 협동조합 설립을 희망하는 뉴딜 사업지 지원

- 진흥원은 지역순회자문단, 모니터링 및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마을 관리 협동조합의 성장단계별, 사업유형별 지원 체계 구축
- 아울러, 『표준정관』과 『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운영하고, 국토 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 등 他 사회적기업과 업무연계 지원

② (운영지원 전문기관) 협동조합은 신협, 새마을금고 등 지역기반 금융기관을 운영지원 전문기관으로 선정하여 투명한 운영 추진

* 운영지원전문기관은 조합원 가입, 출자, 경비부담, 임원보수 등 업무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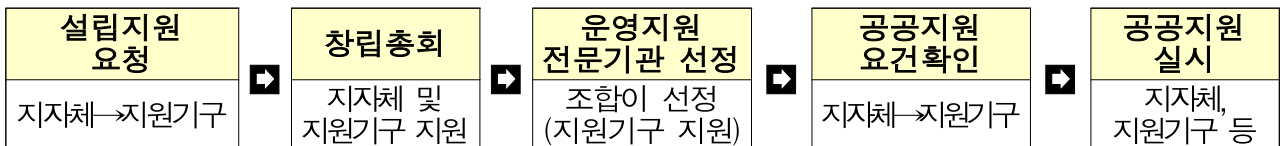
- 신협, 새마을금고 등은 그간 지역 사회에서 수행해온 지역 공헌 사업과 협동조합의 사업을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 협동조합이 희망하는 경우, 협동조합 사업에 대한 기획·관리·집행업무 등 사무국 역할도 수행 가능

□ (他사회적기업과 연계)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지역 내 사회적기업 또는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을 법인 조합원으로 활용

- 법인 조합원은 협동조합원이 희망하는 서비스를 공급하여, 마을 관리 협동조합의 기능을 일부 대행 (사회적기업진흥원 연계 지원)

3. 마을관리 협동조합과 공공지원

- (공공지원 요건) 국토부, 도시재생지원기구, 운영지원 전문기관은 국토부 고시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마을관리 협동조합만 지원
 - (국토부 고시)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공공지원을 받으려면 운영지원 전문기관 선정, 표준정관 필수 조항 반영이 필요함을 명기
 - * 도시재생 특별법 제27조제1항제8호(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보조)를 위한 기준
 - (표준정관)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창립총회를 위한 정관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총회 운영안, 조합원 자격 등 표준정관 마련
 - 다만, 임원 자격 등 일부 조항은 필수 조항으로 운영
- (공공지원 신청절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초기 설립을 지원 하되,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요건충족 여부에 따라 공공지원도 결정



- ① (설립지원 요청) 지자체는 관할 뉴딜 사업지역에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설립을 희망하는 경우, 지원기구에 지원 요청
- ② (창립총회) 지자체와 지원기구는 사업계획, 정관작성 등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창립총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
- ③ (운영지원 전문기관 선정) 창립총회를 마친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신탁, 새마을금고 등을 운영지원전문기관으로 선정 (지원기구 지원)
- ④ (공공지원 가능여부 확인) 지자체는 지원기구에게 해당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국토부 고시 등에 따라 지원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
- ⑤ (공공지원 실시)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공공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 초기사업비 지원, 사업화 지원 등 공공지원 개시

[참고1] 『마을관리 협동조합』과 도시재생 『주민협의체』와의 관계

- (문제상황)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뉴딜 사업지 내의 주민주도 조직이므로, 주민협의체와의 관계, 조합원의 자격 등의 개념 정리 필요

* 주민협의체 : 도시재생 사업지에서 주민을 대표하여 의견전달 및 사업안 제시

- (쟁점1)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발기 설립시, 주민협의체가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협동조합에 주민협의체의 지위를 부여할지 여부

○ (①안) 통합운영 (협동조합원 = 주민협의체 회원)

-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주민주도 조직이며, 도시재생 뉴딜과 관련하여 마을 내 주요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주민협의체와 동일시 할 필요
-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설립되는 경우, 지자체가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주민대표기구로 인정하여, 주민협의체의 난립 및 갈등 방지

○ (②안) 분리운영 (협동조합원 ≠ 주민협의체 회원)

-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주민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비자 협동조합으로 주민협의체와 동일시하는 것은 부적절

⇒ 마을관리 협동조합에게 공공자산에 대한 위탁, 주민복지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만큼, 주민협의체와 동일시하는 ①안 적정

- (쟁점2) 협동조합원의 자격을 마을주민으로만 제한할지 여부

○ (①안)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마을재생을 위한 것으로, 마을주민이 전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하므로, 외부인 참여 부적절

○ (②안) 소비자 협동조합이므로 조합원의 자격 제한은 부적절하며, 외부인의 개입 우려는 협동조합 임원자격 제한하여 통제 가능

⇒ 협동조합 참여 주체를 다양화 하고, 협동조합 기능 활성화를 위해 조합원 자격제한은 부적절, ②안 적정

- (대응방안) 표준정관을 통해 방향을 제시하되, 선택은 주민 재량

○ 협동조합 구성초기에는 주민협의체와 동일한 구성원으로 구성하고,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협동조합원 임원요건에 주민협의체 경력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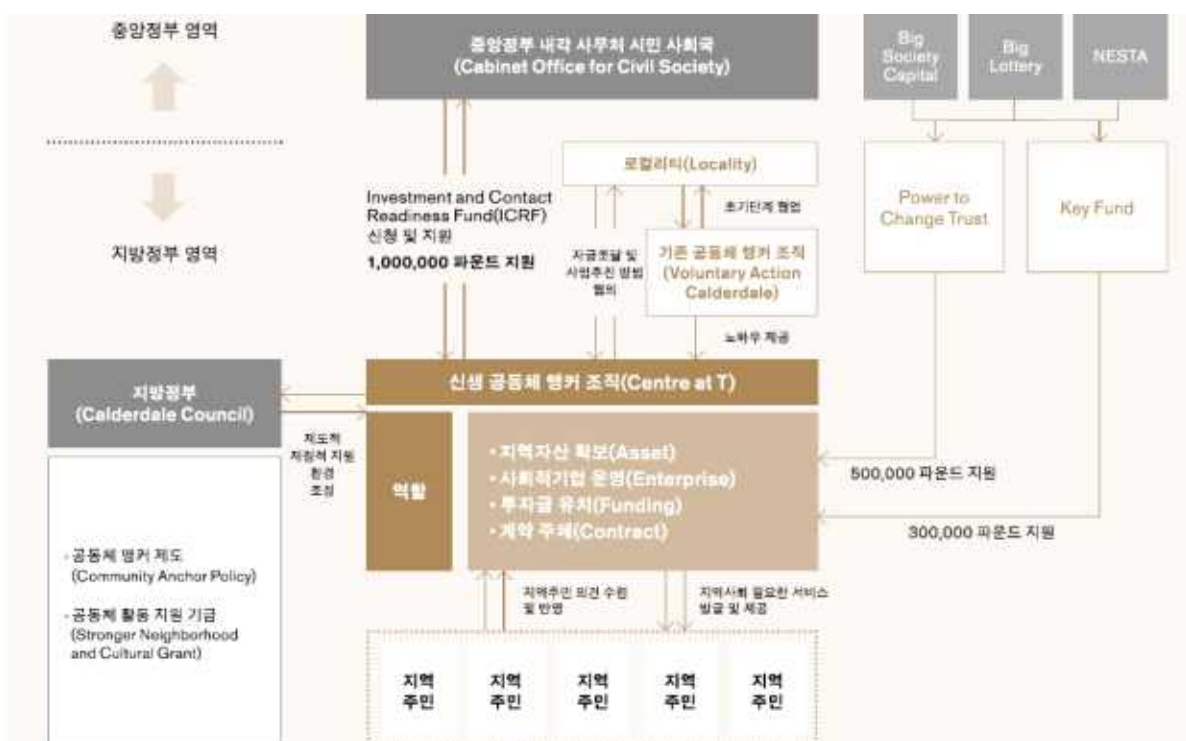
* 기존 주민협의체 회원이 아닌 경우 마을관리 협동조합 가입 후 활동경력 인전

○ 아울러, 조합원 자격제한을 두지 않되, 협동조합원 임원은 반드시 마을주민(3년이상 거주)으로 제한하여, 과도한 외부인 개입 차단

[참고2] 해외 유사사례 및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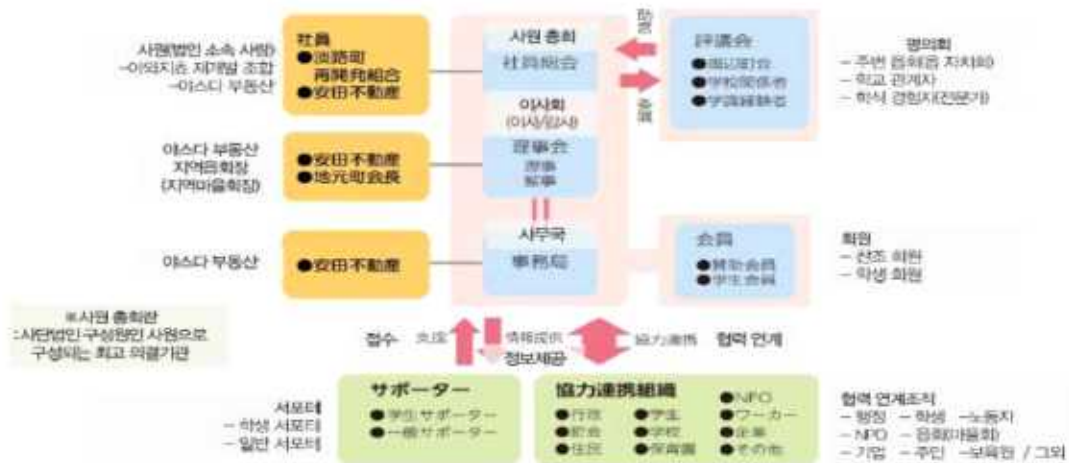
□ (영국) 공동체 앵커조직(Community Anchor Organisation)

- (개념) 공동체 앵커조직은 정부로부터 독립된 지역기반 비영리 조직으로 지역공동체의 대표자, 서비스 공급자, 지역자산 공유 중개자 역할 수행
 - 사회적 임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는 직접 지역사업을 운영하면서 확보하고, 이를 지역사회에 재투자하는 구조로 운영
 - 영국정부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를 대신하여 공공 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공동체 기업으로 육성 추진
- (공공지원 사항) 영국 정부는 지역공동체권리(community rights)를 법제화, 지역앵커시설을 공동소유 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
 - 또한, 영국 정부는 자선단체와 함께 공동체 앵커조직의 초기사업화 비용을 지원하여 공동체 앵커조직의 운영 안정화 지원
- (대표사례) Centre at Threeways(11년 설립) 설립 · 운영 사례
 - Centre at Threeways는 수익활동이 가능한 유한회사로 지자체로부터 지역 내 폐교에 대한 점유권과 활용권을 받아 시설물 개선 및 운영
 - 또한, 영국정부가 제정한 지역공동체권리와 초기사업비 기금지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중간지원조직인 Locality가 지원



□ (일본) 에리어매니지먼트(Area Management) 사례

- (개념) 에리어매니지먼트는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주택, 상가시설 및 생활인프라를 정비하는 공간 및 지역관리조직
- (공공지원) 국토교통성은 에리어매니지먼트 추진매뉴얼을 만들어('08년),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단체를 에리어매니지먼트로 지정하고,
 - 무이자 용자, 세제특례 등 국가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조직화 추진
- (대표사례) 아와지 에리어매니지먼트
 - 아와지 에리어매니지먼트는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으로 지정된 아와지 지역에서 다세대 정비, 지역방재, 공원기능 재편, 지역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시설 확충, 타운매니지먼트 등 지역공헌사업 추진
 - 특히, 학생기숙사를 운영, 학생들의 지속적인 마을거주 유도



□ 해외사례와 마을관리 협동조합 비교

	공동체 앵커조직(英)	에리어매니지먼트(日)	마을관리 협동조합
조직형태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조직성격	서비스 공급자	서비스 공급자	서비스 수요자 집합체
법적근거	지역주권법 사회적투자 준비선언	도시재생특별조치법	협동조합 기본법 (기재부)
수요자	주민 전체	주민 전체	조합 가입자 (수익자 부담)
주요업무	공간관리 커뮤니티 활성화	개발사업 및 공간관리 커뮤니티 활성화	공간관리 커뮤니티 활성화
공공지원	앵커시설 소유권 부여 초기사업비 지원	무이자 용자 세제 특례	앵커시설 소유권 부여 초기사업비 지원
지속화 방안	수익사업 발굴	수익사업 발굴	수익사업 발굴

Ⅲ.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사업구성 및 공공지원

1. 기본방향

◆ 마을관리 협동조합에게 저층주거민 희망 5대 서비스 사업화 지원

* ① 주택관리서비스 ② 집수리서비스 ③ 사회적 주택 ④ 에너지자립 ⑤ 마을상점

◆ 마을관리 협동조합 조기 안정화를 위한 수익원 확보 등 운영 지원

* ① 공공시설 위탁관리 ② 수익사업(태양광 사업) ③ 초기 운영비 지원

◆ 마을관리 협동조합 지역 N/W 구축과 지속적인 조합원 교육 지원

□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사업은 마을유지·관리,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주민이 희망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중심으로 구성 지원 필요

○ 국토부와 지자체는 저층주거지 주민들이 희망하는 5대 서비스를 선정,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원활하게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지원

※ 저층주거민 희망 5대 서비스

- ① 주택관리 서비스 : 노후 단독·다세대, 연립·빌라 등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같은 긴급 보수, 유지관리 등 제공
- ② 집수리 서비스 : 노후주택의 개량, 집단적 경관정비, 공용부 정비 등
- ③ 사회적 주택 : 마을주민 스스로 지역 내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 ④ 에너지자립 : 자가용 태양광 설치를 통한 협동조합원의 에너지 절감
- ⑤ 마을상점 : 주민이 필요로 하는 물품 판매점, 공중목욕탕 등 공중이용시설 운영

○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조기에 안정화 단계에 진입하여 자유롭게 주민희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일부 수익원 확보와 운영 지원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통해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신탁, 새마을 금고, 지역 내 他사회적 기업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 협동조합원에 대해 다양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종합 공공서비스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2. 『5대 서비스』 사업화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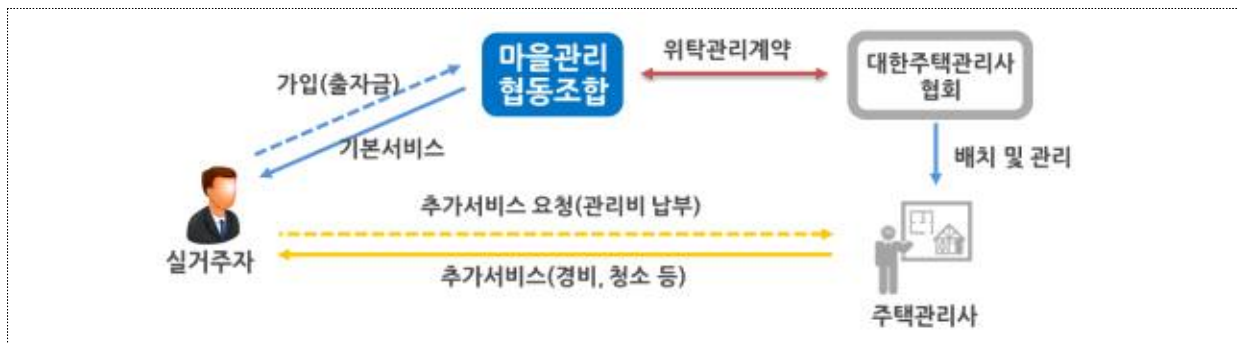
※ 주민이 희망하는 사업만 사업화 지원

◆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주택관리서비스, 집수리서비스, 사회적 주택, 에너지자립 사업, 마을상점을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지원

1 주택관리 서비스 (주택건설공급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협업)

- (현황) 저층주거지에는 20~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단독·다세대 주택이 대부분이며, 장기적 관리계획과 공용부 관리 등 필요
 - 그러나, 공동주택(150세대 이상)과 같은 **주택관리 서비스*** 부재
 - * 주택잔손보기, 재해응급조치, 주택안전점검, 경비, 청소, 공용부 관리 등
- (사업화 지원)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주택관리사협회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면, 협회가 주택관리사를 고용 또는 추천하여 사무국에 배치
 - * 위탁계약 비용은 인건비 상당액(위탁수수료 및 제비용 불포함)으로 추진
 - ** 주택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관리 근로자도 협회가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고용
- 배치된 주택관리사는 주택잔손보기 등 기초적인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협동조합이 희망하는 경우 상근으로 조합업무도 수행
 - * (기본업무) 주택잔손보기, 재해응급조치, 개별 주택안전점검, 무단주차 확인 등
- 추가적인 주택관리 업무는 개별 집주인 별로 협동조합 출자금 외에 추가로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
 - * (추가) 경비, 청소, 공용부 관리, 전기시설물 안전점검·보수 등 (관리비 발생)
- 협회는 고용한 주택관리사에 대한 손해배상공제를 지원하고, 마을 주민을 주택관리사로 양성하여 마을에 배치 추진

【마을관리협동조합 주택관리서비스 개념도】



② 집수리 서비스 (도심재생과, LH 협업)

- (현황) 저층주거지는 20년 이상 노후주택이 대부분이고, 집주인이 고령층인 경우가 많아 신축보다는 집수리 수요가 높은 실정
 - 다만, 집수리 사업은 집주인들의 비용에 대한 부담*, 집수리 수요 파악의 어려움, 전문사업자 부재 등 사업추진에 애로가 많은 상황
 - * 뉴딜사업비는 집수리(외관정비)에 대해 최대 1천만원까지 집행가능
- (사업화 지원) 국토부는 마을관리 협동조합과 연계, 터 새로이 사업자*를 우선 선정하고, 창업비용, 사업공간 마련 비용 등 지원
 - * 뉴딜 사업지 내 집수리 등 노후건축물에 대한 개선 사업을 위해 지역 청년·주민 고용, 이익 재투자 등을 조건으로 집수리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
-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집수리 수요를 파악, 터 새로이 사업자에 집단으로 발주하고, 잉여금이 있으면 수리비 일부 지원*
 - * (예) 내부 집수리 비용 = 70%(자부담) + 30%(협동조합 잉여금 지원)

【마을관리협동조합 집수리 서비스 개념도】



③ 사회적 주택사업 (민간임대정책과, LH 등 공공주택사업자 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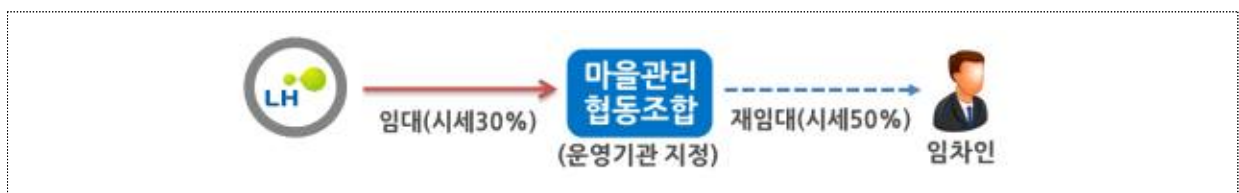
- (현황) 국토부는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관리를 맡겨,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적 주택 사업 추진 중
 - * 공공주택사업자가 운영기관(사회적경제주체)에게 시세 30%에 임대하면, 운영기관이 시세 50%에 재임대하는 구조(전대차 구조)
- 뉴딜 사업지에서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에게 임대관리를 맡겨, 뉴딜 사업으로 이주가 필요한 주민에게 사회적 주택 공급 추진

- (사업화 지원) 국토부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공모없이 사회적 주택 운영기관으로 수의 선정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 추진)

* 既시행 중인 사회적 주택사업은 공모를 통해 운영기관 선정

- 지자체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에게 뉴딜사업지 내 공공임대주택(건설+매입)의 임대관리 및 주거서비스 공급 위탁
-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이주대상자 1순위 + 시세 50%로 공급하되, 협동조합원은 시세 40%, 기초수급자는 시세 30%로 공급

【마을관리협동조합 사회적 주택 운영 개념도】



④ 에너지 자립 사업 (산업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협업)

- (현황) 저층 노후주거지에는 주로 저소득 · 고령층 · 임차인이 거주하는 만큼, 자가용 태양광 설치를 통해 에너지자립 지원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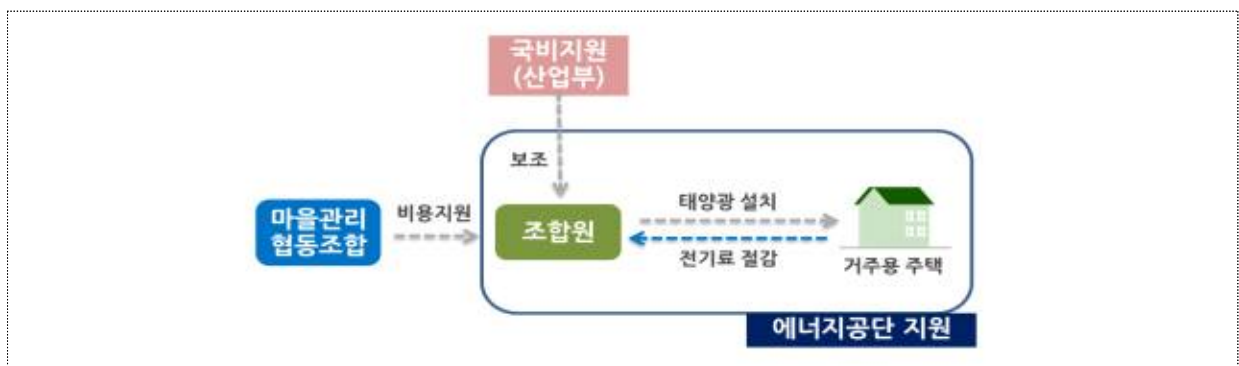
- 자가용 태양광은 거주자 스스로 설치하기에 비용부담*이 있고, 주택의 여건이 태양광을 설치하기에 적합한지 컨설팅도 필요

* 자가용 태양광 발전시설은 개인 사유물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비 지원 곤란

- (사업화 지원)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조합원의 자가용 태양광 설치 수요를 조사하여 산업부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신청

* 건물 유희공간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지원(사업비의 50% 이내)

【마을관리협동조합 에너지자립 사업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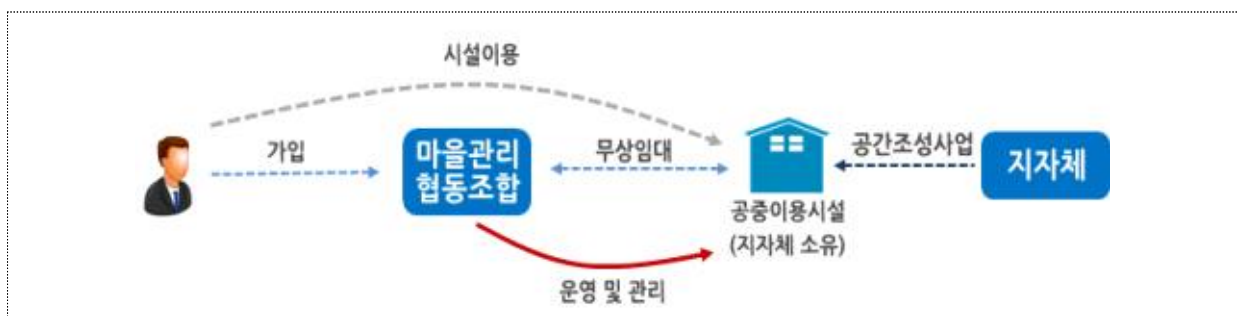


- 산업부는 마을관리 협동조합과 연계한 사업신청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여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 ('19년 공모분 부터 적용)
- 에너지공단은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사업선정을 위해 우수한 신재생 설비 시공기업 추천, 컨소시엄 구성 지원 등을 통해 공모과정 지원
-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잉여금 발생시 조합원에게 설치비용 일부지원
 - * (예시) 설치비용 = 국비(산업부, 50%) + 협동조합 잉여금(30%) + 조합원 자부담(20%)

⑤ 마을상점 사업 (지자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업)

- (현황) 노후 주거지는 주차장 등 공공인프라 외에도, 민간영역에서 공급하는 판매시설, 목욕탕 등 공중이용시설도 부족한 상황
 - * '17년 시범사업 현장인 공주의 경우 공중목욕탕이 없어 주민들 불편 호소→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공중목욕탕 운영을 포함 (주민주도 운영 계획중)
- (사업화 지원)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판매점, 목욕탕 등 민간영역 사업을 기획하면, 지자체가 공간조성 후 협동조합에게 무상임대
 - * 도시재생법 제30조의 2에 따라 구관장 등 공동이용시설 무상임대 가능
-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판매점 운영을 희망하는 경우, 사회적 기업 진흥원이 기존 소비자 생협, 사회적 기업 등과 협업* 지원
 - * SK행복나래, 아름다운가게 등 자체적인 물류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사회적 경제활용
- 모든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협동조합원에게는 가격 할인

【마을관리협동조합 마을상점 사업 개념도】



※ 이 밖에도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지역여건, 조합원의 필요에 따라 희망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사회적 경제센터와 상담을 통해 사업에 필요한 네트워크 구축 등 사업설계 지원 예정

3. 안정적 조합 운영기반 구축 지원

◆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공공시설물 관리 위탁, 태양광 사업 등 수익원 확보 및 초기사업비 지원

① 지자체 기초생활인프라 관리 위탁 (지자체 협업)

○ (위탁내용) 지자체가 뉴딜 사업지 내 주차장 등 기초 생활인프라 운영·관리를 마을관리 협동조합에게 위탁하고 수수료 지급

* 개방형 공동시설, 체육시설 등 단순 관리·운영만으로도 수익창출이 가능한 시설 대상

○ (위탁방법) 지자체와 마을관리 협동조합 간 시설관리 위탁계약은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가능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공유재산법 위임규정) 제10조 별표4

【나 - 1) - ②】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 (지자체 협업) 국토부는 既선정 뉴딜 사업지 중 지자체가 기초생활 인프라 위탁을 계획 중인 곳과 마을관리 협동조합 시범사업 추진

* '18년 시범사업으로 4개 뉴딜 사업지(인천, 공주, 충주, 안양) 추진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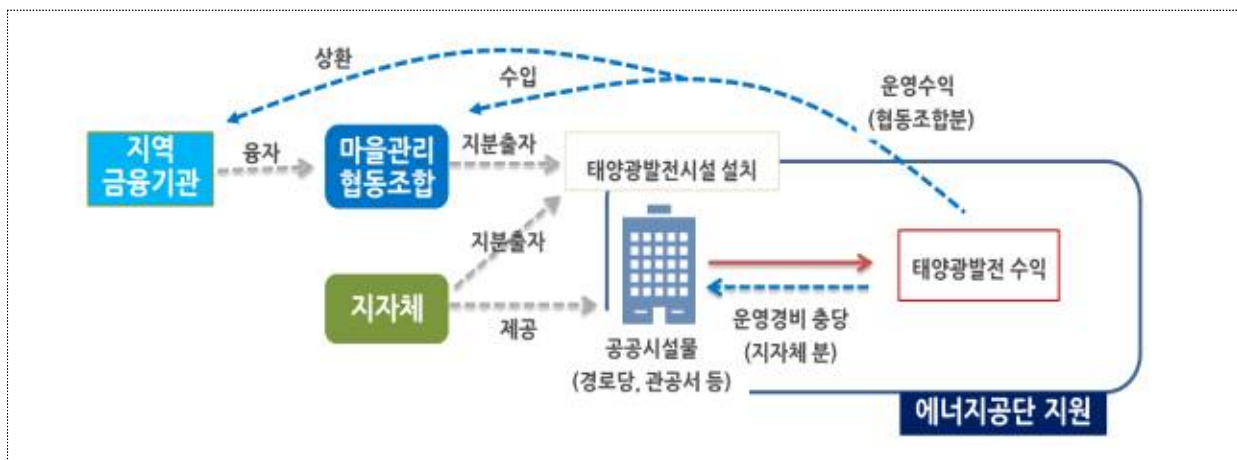
- 추후에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에게 기초생활인프라 위탁을 계획하는 사업지에 대해 가점을 부여, 뉴딜사업으로 우선 선정 추진

② 태양광 발전사업 (지자체, 에너지공단 협업)

○ (사업내용) 지자체와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태양광 발전사업에 공동으로 출자하여, 운영수익을 지분 비율대로 분배

- (사업방법) 지자체가 공공시설물 옥상 등 태양광 설치장소를 제공하면, 지자체와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공동 출자하여 태양광 설치
 - * 지자체는 뉴딜 사업비(국비+지방비)로, 협동조합은 자체 수익으로 출자
-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태양광발전사업자로 등록하고, 한국형 발전 차액지원제도*에 참여, 6개 발전사에 고정가격으로 생산전량 판매
 - *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공기업이 20년간 의무구매하는 제도 (발전소 설비용량 100kW 미만인 경우 가능하며, 발전소가 2개소 이상일 경우 발전소 간 이격거리는 250m를 초과해야 함)
- 신한 등 지역 금융기관은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자금여력이 충분치 않은 점을 감안, 태양광 설치용 저리 융자상품 지원 추진
- 에너지공단은 지자체와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을 총괄 컨설팅하고, 태양광 설치사업자 선정 지원

【마을관리협동조합 태양광 발전사업 개념도】



③ 초기사업비 지원 (지자체)

- (현황)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사업초기에 자금력이 부족하므로, 지자체가 뉴딜 사업비로 초기 조합사업비를 지원하여 동력 확보
- (지원내용) 지자체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에게 초기운영비용을 지급하면, 신한, 새마을금고 등 운영지원 전문기관이 수령해 집행관리
 - * 시뮬레이션 결과, 보조금 미수령시 초기 3년간 1억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하며, 이후 5년차부터 자생적 운영 시작(☞ 참고3)
 - ** 현재 2년간 5천만원→ 3년간 9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상향 추진

[참고3] 마을관리 협동조합 운영 시뮬레이션

※ 분석의 전제(실제 사업현장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 ▶ 사업대상 면적은 48,506㎡, 인구 1,678명, 총664세대(소유 66세대, 세입 598세대)
- ▶ 사업기간은 총 5년으로 가정
- ▶ 1차년도 협동조합원수는 50명이며, 협동조합원 수는 매년 50%씩 상승 가정
- ▶ 협동조합원 출자금과 연회비를 변수로 시뮬레이션 진행
- ▶ 지원방안에 필요한 모든 사업을 추진한다는 가정하에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되, 사업추진을 위한 준비기간을 감안 연차별로 아이템 추가
- ▶ 사업에 필요한 인력은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직접 고용함을 가정
- ▶ 사업비용에 대한 분석기준은 다음과 같이함
 - ① 인건비 ② 운영비(판관비, 이윤, 제경비 등으로 간주)

□ 연차별 추진사업 정리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수익사업	태양광발전	-	인프라 관리 (주차장)	-	-
조합사업	주택관리	-	-	사회서비스 공급	-

□ 연차별 수익 시뮬레이션 ⇒ 적정 출자금 및 연회비 수준에서 약 9천만원 지원필요

① 출자금 5만원, 연회비 2만원

(단위 : 백만원)

	합계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총수익	△84	△42	△34	△9	△16	17
수입	918	94	103	187	250	284
지출	1,002	136	137	196	266	267

② 출자금 10만원, 연회비 1만원

(단위 : 백만원)

	합계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총수익	△79	△40	△34	△12	△15	19
수입	923	96	103	187	251	286
지출	1,002	136	137	196	266	267

③ 출자금 20만원, 연회비 0원

(단위 : 백만원)

	합계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총수익	△59	△35	△32	△6	△11	25
수입	943	101	105	190	255	292
지출	1,002	136	137	196	266	267

4. 협동조합 교육지원 (일자리 관련)

◆ 주민 교육을 통해 마을관리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협동조합이 수행할 각종 업무에 참여, 지역일자리 적극 창출

□ 협동조합 관련 기본교육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도 운영하며, 배당금지 등 공익 목적이 강한 조직
- 배당·잉여금 등에 대한 공정한 관리가 조합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만큼, 마을 주민들의 조합설립·운영에 대한 정확한 이해 필요

⇒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사회적경제 기본교육을 활용, 마을관리 협동조합 특화교육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실시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16개 지역에서 기본법제, 운영 등 교육 실시 중

□ 지원사업 관련 직업교육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자체 협업 등)

- (지자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주민 교육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기초생활인프라 관리*, 사회서비스 공급 등 관련 자격교육** 추진

* 에너지관리기능사, 전기기능사 등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필요한 자격

** 요양보호사 등 각종 서비스공급을 위해 요청되는 자격증 취득교육

- (진흥원) 단기적으로 既실시중인 『협동조합 맞춤형 교육지원사업』 공모 시 마을관리 협동조합에 가점을 부여하여 우선 교육 실시

- 마을관리 협동조합에 대한 별도 직업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 추진 (도시재생지원기구에 대한 예산반영 필요)

- (운영지원 전문기관) 운영지원 전문기관으로 참여하는 지역기반 금융기관도 초기사업비를 활용하여 주민 일자리 관련 교육 추진

- 아울러, 기관 자체적으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정이 있는 경우, 마을관리 협동조합과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안 추진

5. 他 사회적 경제와의 N/W 구성지원

◆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他 사회적 경제와 N/W를 구성하도록 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플랫폼이 되도록 지원

□ N/W 구성을 위한 업무지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업)

-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자체적으로 협동조합원에게 공급하기 어려운 서비스를, 마을 内外의 사회적 경제를 통해 공급하도록 지원
 - * (예) 사회적주택 운영을 위해 임대관리 전문 사회적 경제를 법인 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마을의 사회적주택 임대관리 업무를 수행
- N/W 구성을 희망하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희망업종을 사회적 기업진흥원에 신청하면, 진흥원이 업체 정보제공, 업무협의 주선

□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과의 연계 강화 (도시재생역량과 협업)

- (신규 기업) 신규로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으려는 업체가 마을관리 협동조합과 연계 사업을 추진하면, 인증평가 시 가점 부여
- (기존 기업) 지원기구는 예비사회적기업 既인증 업체에게 사업지 인근의 마을관리 협동조합과 업무연계 지원
 - * 특히,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고용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기존 지역 사회적 경제와의 연계 강화

-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필요한 경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또는 관할 사회적 경제센터에 요청, 지역 사회적 경제와 협업체계 구축

※ 법인 조합원(사회적 경제)의 『마을관리 협동조합』 가입 (상세☞참고4)

- (가입조건) 사회적 경제 등이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법인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경우, 개인 조합원에 비해 높은 출자금 납부 (정관으로 출자금 규모 결정)
- (가입효과)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조합원들의 희망 수요를 취합하면, 관련 법인 조합원이 수요를 희망한 조합원들에게 관련 재화 및 서비스 판매
 - * 조합원은 非조합원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
- 다만, 지자체 등이 마을관리 협동조합에게 위탁하는 업무를 법인 조합원이 수행하려면, 협동조합과 법인 조합원이 공동수탁자가 되어 계약체결

[참고4] 마을관리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 간 협업 모델

□ (개요)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사회적 경제를 법인 조합원으로 참여시켜, 조합원에게 보다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고,

- 사회적 경제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통해 해당 법인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수요** 확보
- 아울러,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지자체 등의 위탁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법인 조합원과 공동수행하여, **부족한 전문성 보완**도 가능

□ (협업모델1) 공동구매 방식

* (예) 조합원들이 집수리를 희망하는 경우, 집수리를 영업으로 실시하는 사회적 경제를 법인 조합원으로 선정하여 마을에서 집수리 사업 실시

- ① (**희망수요 조사**)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조사하여, **사회적 경제 선정 분야** 결정
- ② (**사회적 경제 선정**)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희망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적 경제를 **공모 등의 방법으로** 선정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선정도 가능)

* 선정된 사회적 경제는 법인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정관상 규정된 출자금 납입

- ③ (**실수요조사 및 공급**)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제 구매를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재화 또는 서비스 공급

* 비조합원에 대한 수요도 조사하되, 가격차등화 등 조합원 우대

□ (협업모델2) 위탁사업 수행 방식

- 지자체, LH 등이 마을관리 협동조합에게 위탁하는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사회적 경제**(법인 조합원)이 수행하도록 하여 업무효율성 제고
- 다만, 지자체, LH 등 **공공기관**이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업무를 재위탁할 수 없고,
 - 협동조합과 법인 조합원 사이의 위탁도 서로 다른 법인격간의 업무 위탁으로 간주(법제처) 하므로,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업무 수행 (이때, 위탁사업비 관리, 수익의 배분 등은 정관으로 결정)



IV. 마을관리 협동조합 육성 및 관리계획

□ (육성목표) '22년까지 마을관리 협동조합 100곳 설립·운영 추진

*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 既 반영

【마을관리 협동조합 설립계획(안)】

	합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설립(개)	100	2	8	25	30	35
일자리(명)	500	10	40	125	150	175

※ 마을관리 협동조합 1개소 당 총 5명의 고용창출 예상

○ (시범사업) '17년 선정한 33개 주거재생사업지 中 주민협의체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4~5개 사업지에서 시범사업 실시('18.下)

* 총 4개 현장(인천 만부, 공주시, 충주시, 안양시)에서 시범사업 협의중

- '18년 중 최소 2개 사업지에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인가, 즉시 가능사업 착수 등 가시적 성과 도출

○ (본사업) '19년부터 지원기구(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를 통해 본사업 착수

* 시범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본사업 착수시기 결정

- 지원기구를 통해 운영지원 전문기관 선정, 국토부 지원 등 협의

※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실시할 공공위탁 사업, 협동조합 자체사업 등을 통해 5년간 지역기반 일자리 총 500개 창출

□ (사업관리 방안) 사업단계별로 도시재생 지원기구 및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마련하여, 구체적인 계획 하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관리

① (사업준비 단계) 지원기구가 지자체 및 주민들에게 사업의 내용, 추진절차, 유관기관 별 지원 사항 안내 (별도 사업가이드라인 마련)

- 특히, 지자체는 기초생활인프라 위탁, 태양광발전 지원, 조합원 업종교육 지원 등 중요 협조사항에 대한 연차별 이행계획 마련

* 뉴딜 사업비 집행이 필요한 항목은 활성화 계획 예산소요에 미리 반영 필요

- ② (협동조합 설립단계) 지원기구의 안내에 따라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발기인 모임을 만들고, 정관 및 사업계획 작성
- 관할 지자체가 既제출한 연차별 지원계획과 연계하여 협동조합의 공공위탁 업무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자체 조합사업 계획도 마련
- ③ (운영지원 전문기관 선정단계) 지원기구는 협동조합이 운영지원 전문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공모절차 안내·지원
- 특히, 신협, 새마을금고 등 표준정관 상 운영지원 전문기관 요건을 갖춘 기관에 지역별 공모사실을 통보하여 참여 독려
- ④ (사업착수 이후 단계) 지원기구는 운영지원 전문기관 선정을 마친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성장단계별로 구분, 지원 및 관리 실시

IV. 향후계획

- 『마을관리 협동조합』 사업추진 보도자료 : 7.27일 조간 (예정)
- 국토부 - 유관기관 간 시범사업 MOU 체결 : 8월 중 (예정)
 - * 『마을관리 협동조합』 협업기관 워크숍과 병행 예정
 - ** (MOU 대상) LH, 새마을금고, 신협,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에너지공단 등
- 『마을관리 협동조합』 업무체계 구축
 - 도시재생 지원기구 지정 : 8월 중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예정)
 - 표준정관 마련 : 8월 중
 - 마을관리 협동조합 지원기준(국토부 고시) 마련 : 9월 중
 - 시범사업 운영지원 전문기관 선정 및 조합원 모집 : 9월 중
- 『마을관리 협동조합』 시범사업 착수 및 보도자료 : 9월 중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학교 내 협동조합 지원계획(안)

2018. 7.

교 육 부
(평생미래교육국)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학교 내 협동조합 지원계획(안)

2018. 7.

교 육 부
(평생미래교육국)

차 례

I . 추진배경	211
II . 지원계획 수립 경과	212
III . 학교 내 협동조합 운영 현황	212
IV . 비전 및 기본방향	216
V . 학교 내 협동조합 지원방향(안)	217
VI . 학교 내 협동조합 세부 지원계획(안)	218
1. 지원 개요	218
2. 학교 내 협동조합 지원 대상	218
3. 학교 내 협동조합 지원 주요사항	219
4. 학교 내 협동조합 지원 추진체계	223
5. 제도개선 및 행정사항	224
VII . 향후 추진일정	225
<붙임 1> 교육부 인가 학교협동조합 현황	226
<붙임 2> 시·도별 학교협동조합 지원 현황	228
<붙임 3> 대학생협동조합 현황	229
<붙임 4> 국립대학 생활협동조합 현황	230
<붙임 5> 국립대학 생활협동조합 이익환원 현황	231
<붙임 6> 협동조합기본법/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국세기본법 비교	232
<붙임 7> 관련 법령	234

I. 추진배경

- 저출산·고령화, 사회양극화 등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 및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 증가
 - * (정의) 구성원간 협력·자조를 바탕으로 재화·용역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17.10, 기재부 주관)
- EU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저성장·저고용으로의 경제구조 변화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 중
 - * EU 전체 GDP의 10%를 사회적경제가 담당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고용 비율도 평균 6.5%(EU 6.5%, 프랑스 9.0%, 벨기에 10.3% 등, '15)를 기록
- 우리나라 또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17.10)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추진 중이나, 인재양성을 위한 여건은 열악한 상황
 -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07, 고용부 소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개원('10)
 - ※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추진 중(국정과제-26, 기재부)
- 특히 사회적경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여 사회적경제를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절실
 - ※ 「사회적경제 기본법안」 제정안(윤호중의원 등 27인 발의, '16.8),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제정안(박광온의원 등 21인 발의, '17.10) 국회 계류 중
- 학교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사회적경제 학습·체험공간으로 ‘학교 내 협동조합’의 중요성 상승
 - 학교협동조합을 통해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이 참여하여 사회적경제 체험 가능
 - 또한, 학교협동조합에 참여한 학생이 대학 진학 후에도 대학생협 협동조합 참여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관련 역량 함양 가능

👉 지역 내 사회적경제 체험·확산의 거점으로 학교 내 협동조합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지원체계 마련 필요

※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17.10) 내 교육부 소관 학교협동조합 지원 계획 포함

Ⅱ. 지원계획 수립 경과

- ('17. 10.)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기재부 주관) 발표
- ('17. 11.) BH 비서관 주재 관계자 협의회
 - ※ 참석자 : 사회적경제비서관 주재, 학교협동조합연합회, 대학생협동조합연합회 등
- ('17. 12. ~ '18. 4.) “사회적경제 학습체계 구축방안” 정책연구
 - ※ (연구책임자) 한신대학교 사회혁신경영대학원 교수 장종익
- ('18. 5.) 학교 내 협동조합 관계자 의견수렴
 - ※ 참석자 : 전국 학교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사무총장, 한국대학생협연합회 사무국장 및 이사장, 교육청 업무 담당자(서울, 대구, 경기, 강원) 등
- ('18. 6.) 평생미래교육국장 주재 부내 토론회
- ('18. 7.)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고용부 주관) 발표
 - ※ 종합계획 내에 대학생협동조합 및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과제 포함

Ⅲ. 학교 내 협동조합 운영 현황

※ ‘학교 내 협동조합’에서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임

- 학교협동조합 운영 및 지원 현황
 - (설립근거) 「협동조합 기본법」(기재부 소관)
 - “학교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하나로서 설립인가 등의 사무는 기재부에서 교육부로 위탁
 - ※ 「협동조합 기본법」 제11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항에 따라 기재부장관의 권한은 사회적협동조합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
 - 다만,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정의, 설립기준, 구성원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은 없음(사회적협동조합 설립기준 등 준용)
 - (설립현황) 전국 총 60개의 학교협동조합 설립·운영 중('18.4.)

< (참고) 시·도별 학교협동조합 설립 현황 >

서울	인천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울산	경기	강원
21	2	1	0	1	1	0	18	7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제주	세종	계
1	2	0	1	4	1	0	0	60

- (지원현황)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 인가 등 지원(교육부), 설립 및 운영 관련 컨설팅 등 지원(시·도교육청)

- (교육부) 설립인가, 정관변경, 해산, 지도·감독 및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의사록 공증면제* 시행 중('16~)

* 「공증인법」에 따라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나, 학교협동조합은 미성년 학생이 조합원인 경우가 많아 우리부는 학생이 50% 이상인 학교협동조합에 한해 의사록 공증면제를 법무부에 추천('18년 현재 60개 중 35개 면제, 58%)

- (시·도교육청) '18년 기준 11개 교육청에서 1,483백만원 예산지원, 8개 교육청에서 조례 제정* 운영

* 조례 제정 시도(8개) : 서울, 인천, 광주, 세종, 경기, 전북, 전남, 경남

< (참고) 주요 시·도별 학교협동조합 지원 현황 >

- (서울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 근거 마련,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추진계획'을 별도로 수립·추진하고, 학교협동조합 지원센터 운영 중
- (경기도)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 근거 마련, 학교협동조합을 포함한 '마을교육공동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원 추진 중

- (운영유형) 70% 이상이 학교매점 운영, 이외에도 방과후학교, 특성화고 창업연계, 농산어촌지역의 소규모 학교와 지역이 연계한 운영 모델도 존재

< (참고) 학교협동조합 사업모델(예시) >

- [학교매점 사업모델] 기존 개인사업자 운영에서 발생한 불량제품 판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동조합방식으로 운영.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운영됨.
- [방과후학교 사업모델] 학교협동조합이 방과후학교 위탁 관리 또는 프로그램 자체 운영하는 사업모델. '16부터 서울 초교(5개) 시범운영 중, 강원 금병초 마을교육 형태로 진행중
- [특성화고 창업모델] 비즈쿨 등 특성화고 창업교육과 연계해 협동조합 방식으로 학교내에서 창업하는 모델. 서울성수공고, 광신정보산업고, 강원춘천한샘고 등 특성화고가 대표적
- [특수학교 전환교육] 발달장애인 등의 사회적응 및 취업훈련을 위한 전환교육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모델. 서울 밀알학교 등
- [농산어촌 지역연계] 농산어촌의 협조(재배, 생산 및 가공활동 등)를 통해 친환경 생태실습 등을 추진하는 방식. 강원도 연당초 등이 농업 및 교육사업 진행 중

□ 대학생생활협동조합 운영 현황

○ (설립근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대학생생활협동조합의 관리·감독 및 지원 근거 등은 공정위 소관이며
우리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후 구체적인 방안 모색 필요

※ 대학생생활협동조합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공정위 소관이며,
기재부로 소관부처 변경 진행 중(이후 기재부→교육부 위임 예정)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소관부처 변경을 포함한 일부개정안(이학영의원 등
19인 발의, '16.11) 국회 계류 중

○ (설립현황) '17년 기준 총 33개 대학(국립대 18개교, 사립대 15개교) 내에 설립·운영 중이며,

- 국립대의 경우, 조합원 수는 교당 평균 2,439명, 연간 시설사용료는
교당 평균 37백만원 납부('16, '17년 결산자료)

<국립대학 생활협동조합 주요 현황(상세자료 불임참고)>

주요 항목	계	평균	최소	최대
조합원수(명)	41,468	2,439	363 (해양대)	16,922 (강릉원주대)
출자금(백만원)	2,541	149	37 (창원대)	700 (강원대)
총매출액(백만원)	74,771	4,398	827 (군산대)	9,192 (전북대)
시설사용료(백만원)	631	37	5 (군산대)	90 (서울과기대)
발전기금 장학금(백만원)	677	52	10 (강릉원주대 방통대)	193 (강원대)

(출처 : 한국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 '16, '17년 결산자료)

○ (운영현황) 식당·매점·서점 등 대학 내 복지시설 운영 및 대학 생협 간 공동구매·공동생산 등을 자발적으로 추진

※ '17년 기준 학교당 평균 10개 매장 운영, 학교당 연평균 매출액은 43억에 달함

※ 해외사례

- 말레이시아의 경우 국가가 주도적으로 학교협동조합을 장려하고, MCSC*, 앙카사**(ANGKASA)를 중심으로 지원체계 구축

* MCSC : 말레이시아 협동조합진흥원으로,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진흥원과 유사한 중간조직 역할 수행

** 앙카사 : 협동조합 연합조직으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 제공 등 수행

- 영국의 경우 학교제도의 변화에 맞춰 새로운 학교 모델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고 지원체계를 갖춘 사례

*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국·공립학교에서 운영하는 커리큘럼 내에 협동조합대학에서 개발한 초·중·고 대상 협동조합 교육커리큘럼이 포함

※ 협동조합대학(Co-operative College) : 1차대전 이후 영국협동조합전국연합회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 전문 기관, 학교협동조합 관련 교육자료 개발 등 추진

☞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관의 협력을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

IV. 비전 및 기본방향

비 전

“교육과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기 본 방 향

학교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 확보

대학으로 이어지는
사회적경제 체험의 장 마련

사·도교육청과 연계한 현장중심 지원

추 진 전 략

① 사·도교육청 및
학교협동조합과 연계한 학생
교육활동 지원

③ 대학생협동조합 활성화
환경 조성

② 학교협동조합
중앙지원센터를 통한 컨설팅
및 매뉴얼 보급

④ 민관 협의체 구성을 통한
현장 소통 강화

V. 학교 내 협동조합 지원방향(안)

□ 시·도교육청과 연계한 현장중심 지원

- 현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모든 사회적협동조합의 인가 및 관리·감독을 중앙부처가 직접 수행하고 교육청은 보조적 역할 수행
- 그러나, 학교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현장의 상황을 이해하여 밀접한 관리·지원이 가능한 교육청의 역할 확대가 필요

☞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인가, 관리 및 감독에 대한 권한을 지역 교육청으로 위임하여 현장적합성 있는 지원 추진

□ 학교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 확보

- 일반 사회적협동조합과 달리 학교협동조합의 구성원 대다수(학생, 학부모)는 3년 이상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
 - ※ 학생 및 학부모 조합원은 졸업, 교사 조합원은 전보 등으로 조합원 수증가가 어렵고 임원진의 안정적 확보가 어려움(관계자 협의회, '18.5.23)
- 또한, 70% 이상의 학교협동조합은 매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업운영모델 개발을 통해 학교별 특성에 맞는 사업 운영 지원 필요

☞ 국가적인 수준에서 학교협동조합 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학교협동조합 구성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사업모델 발굴 추진

□ 대학으로 이어지는 사회적경제 체험의 장 마련

- 학교협동조합을 통해 사회적경제를 체험한 학생이 대학에서도 사회적경제 관련 역량을 기를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 대학 내 편의시설 등을 학내 구성원이 직접 참여하여 운영하는 대학생활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추진

☞ 대학생활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법령의 소관부서 이관에 대비한 대학생활협동조합 관리방안 마련 추진

VI. 학교 내 협동조합 세부 지원계획(안)

1. 지원 개요

□ 사업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비 고
지원대상	■ 초·중·고 학교협동조합* 및 대학생협동조합	* 조합원 중, 학생·학부모가 50%이상 조합에 한함
지원내용	■ 학교협동조합 : 학교협동조합 중앙지원센터* 설립·운영 및 교육청별 지원센터 구축 지원, 학교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지원 등 ■ 대학생협동조합 : 대학생협 활성화 지원 ※ 국립대 내 생협 대상 시설사용료 면제** 추진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 설치(예정)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9조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 가능
사업예산 (1안)특별교부금 (2안)지방교육재정교부금	■ (1안) 특교 지원시 : 총 1,340백만원 - 중앙지원센터 운영 : 1개*300백만원 - 교육청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시도별 사업계획에 따른 상향식 맞춤형 지원 : 1,040백만원* * 시·도별로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의 편차가 커서 시·도 계획에 맞춰 총액으로 지원하고 세부사항은 시도에 위임하여 자율성 제고(대응투자 검토)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혁신교육 확산 지원) -교육청 위임에 따른 자율성 인정(단, 우리부 지원대상은 학생·학부모 50%이상 조합에 한함) -특별교부금 사업 운영 개선방안 : 하향식 지양('18.5, 지방교육재정교)
사업기간	■ '19~'22년(4년) - 중앙지원센터 운영 : '19~'22년 - 시도지원센터 구축 : 매년 교육청 계획에 맞춰 지원	

※ (2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 교육청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기준재정수요 항목 축소 및 폐지 추진 중('18 업무보고)으로 신규 항목 추가 불가('18.6.25, 지방교육재정교)

2. 학교 내 협동조합 지원 대상

□ 학교협동조합의 정의 및 구성요소

- (정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기반으로 하여 공통의 경제·사회·문화·교육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학생·학부모·교직원·지역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사회적협동조합

< (참고) 국내·외 학교협동조합 정의 사례 >

- (서울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기반으로 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설립한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포함)
- (국제협동조합연맹(ICA))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교육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학교구성원인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

- (구성요소) 학교협동조합은 구성원, 사업목적, 형태 및 사업기반 등에서 기존 사회적협동조합 조직과 다른 특성을 가짐
 - (구성원) 학교 구성원 등(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
 - ※ 50% 이상의 구성원이 학생 또는 학부모로 구성
 - (사업목적) 학교·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 수행 또는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일자리 제공 등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 (형태)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사업기반)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사회(법인 사무소는 학교 내 소재)

□ **대학생활협동조합의 정의**

- (정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내 구성원(대학생 등)이 출자·운영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비영리법인)
 - ※ 대학 생협은 대학 구성원의 공동체의식 함양, 직거래 경험 등을 통한 연대 사업, 이익금 환원 등 유·무형의 가치 창출

3. 학교 내 협동조합 지원 주요사항

□ **시·도교육청 및 학교협동조합과 연계한 학생 교육활동 지원**

- (권한 위임) 학교협동조합의 설립, 관리 및 감독 권한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관리·감독의 현장적합성 확보
 -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내 위임근거 마련('18.하)
 - ※ (시·도교육감 협의회) 학교협동조합 설립 인가 권한을 시·도교육감으로 위임 건의('18.1)

- (지원센터 신설) 인가 및 관리·감독, 지원방안 수립·실행 등을 추진할 시도지원센터*를 교육청 내에 신설하도록 권장하고 특별교부금 지원 추진

* (역할) 중앙지원센터에서 기 개발된 교육프로그램 및 매뉴얼 등을 활용하여 학교 현장을 대상으로 설립·운영 컨설팅 진행

- (교수학습 자료 개발) 교과, 창의적 체험 활동 등에서 보조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협동조합 사례가 포함된 사회적경제 관련 교수자료 개발·보급*

* 스토리텔링, 사례 중심의 초·중·고 교수자료 개발·보급('18.하)

- 사회적경제 연구학교 운영을 통해 사회적경제 관련 학습 및 학교협동조합, 공정 무역 등을 실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19년 6개교)

- (체험학습 확대) 학생 대상 진로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학교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지역 내 다양한 사회적경제 기관 지속 발굴

※ 학교협동조합 등에서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핸드북 제작·배포 예정('18.하)

< (참고) 서울 삼각산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사례 >

- 매점 먹거리 선택에서부터 홍보까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협동조합으로 진로체험지원전산망 '꿈길'을 통해 삼각산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의 이해, 게임을 통해 배우는 협동조합 체험 프로그램 운영 중

- (혁신학교 연계 운영)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이 학교협동조합원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마을과 학교가 결합된 마을교육공동체 내실화

※ 마을교육프로그램이 학교협동조합과 결합·운영된 서울 금천구의 혁신교육지구 사례 안내

-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학생 주도의 학교협동조합 운영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사회 참여 및 협업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성 함양 도모

※ 학생자치활동 우수사례집 및 교육청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활용 안내

- (방과후학교 연계 지원) 시·도교육청 방과후학교 협의회를 통해 학교협동조합 연계 방과후학교 도입을 원하는 교육청 대상 컨설팅 연계 지원

- (우수사례 발굴·확산) 사회적경제 박람회*(기재부 등 관계부처 합동), 미래교육박람회 등 관련 행사를 통해 학교협동조합 우수사례 발굴·확산

* 2018 사회적경제 통합 박람회('18.7.13~15, 대구 EXCO 2, 3홀) 등

- ☞ (예산) 시·도교육청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획일적 예산 지원을 지양하고 시·도별 사업 추진계획에 따른 상향식 맞춤형 지원 추진 : 1,040백만원*

※ 시·도별로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의 편차가 커서 시·도 계획에 맞춰 총액으로 지원하고 세부사항은 시·도에 위임하여 자율성 제고

* <산출근거> 시·도지원센터(17개*20백만원)+협동조합 신규설립(40교*10백만원)+운영지원(기존60교*5백만원) ⇒ 시·도 요구에 맞춰 교부금 차등 지원(예정)

□ ‘(가칭)학교협동조합 중앙지원센터’를 통한 컨설팅 및 매뉴얼 보급

- 학교협동조합 운영 주요주체(학생, 학부모, 교사 등)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 기존의 매점사업 외 학교협동조합이 추진 가능한 다양한 사업모델을 개발하여 다양한 형태의 학교협동조합 개설 및 운영 지원
- 시·도 교육청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관련 연수를 추진하고, 학교협동조합 운영매뉴얼을 개발·보급

☞ (예산) 중앙지원센터 운영(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 설치 예정) : 300백만원*1개 기관
 * <산출근거>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120백만원)+매뉴얼 개발·보급(80백만원)+연수·운영지원 등(100백만원) ⇒ 세부 항목은 협의 후 구체화(예정)

□ 대학생생활협동조합 활성화 환경 조성

- 국립대 내 생활협동조합(38개 국립대 중 18개교 생협 운영) 대상 대학시설 사용료* 면제를 통한 대학생협 운영 지원 및 활성화 환경 조성

* (현황) '17년 결산기준 총 631백만원을 시설사용료로 납부, 교당 평균 시설사용료 37백만원(최소 5백만원 군산대, 최대 90백만원 서울과기대)

※ 국립대 내 생협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할 예정. 다만, 생협은 수익금의 일정액을 장학금으로 환원하거나 학내구성원 복지증진 등 사회적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내용을 정관에 반영하는 등 연합회와 협의 필요('19, 운영지원과)

< (참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관련 주요 법령 >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9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① 국가 및 공공단체는 조합 등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공공단체는 조합등의 국가 또는 공공단체 시설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공공단체는 소비자의 후생목리 증진을 목적으로 국유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조합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조(국유재산의 사용료 면제) ① 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의 내용과 조건은 그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조합·연합회 또는 전국연합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사용허가의 방법) ③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할 수 있다.
 5. 법 제34조 제1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 기 운영 중인 대학 내 소비조합*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여 판로 확대**

* 소비조합 :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국립대 38개교 중, 4개교에서 소비조합 운영 중(공주대, 교원대, 교통대, 서울교대)

※ 대학 내 소비조합의 국유재산 사용과 관련한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국립대 내 소비조합의 생활협동조합 전환 안내('05.12, 교육부 운영지원과)

< 소비조합 운영 대학의 생협 미전환 관련 대학 담당자 의견('18.6.26)>			
	생협	소비조합	위탁운영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 교직원 등의 자발적 참여 및 민주적 의사결정 등 사회적경제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금이 대학회계로 들어와서 직영처럼 운영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유재산사용허가를 통해 안정적인 임대수익, 직원 등 관리에 대한 부담 감소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원 모집, 구성원 동의, 출자금 마련, 시설이용료, 발전기금, 장학금 등 번거로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이 적거나 적자일 경우 대학에서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업체가 수익 확보를 위해 판매가 인상 등 우려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협 전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별로 없음(예; 생협 전환에 따른 식재료 공동구매 시, 절감액이 현재보다 크지 않음) ■ 오히려, 위탁을 통한 안정적 임대수익 등에 대한 유인가가 더 큼 	

**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고용], 사회적협동조합[기재], 마을기업[행재], 자활기업[복지]) 대상 판로확대 기 추진입찰시 기점부여, 수익계약 허용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17.10, 기재부

□ 민관 협의체 구성을 통한 현장 소통 강화

- 교육부, 시·도교육청, 사회적기업진흥원 및 사회적협동조합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발전방안에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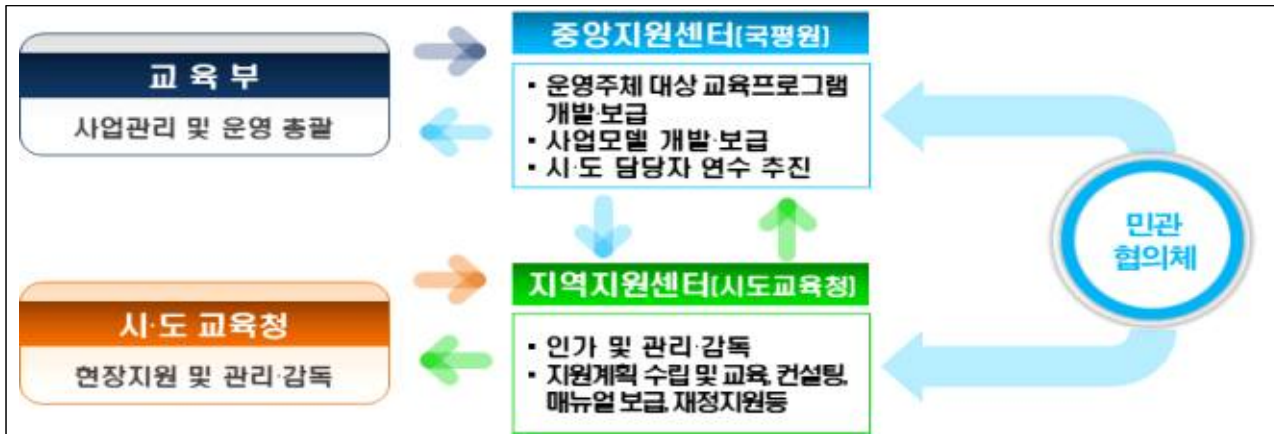
※ 학교 내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관련 의제 발굴 및 협의, 현장 소통 및 홍보 지원 등 교육부-시도교육청-민간 간 협력 체제 강화

< (참고) 학교협동조합 민관 협의체 구성 관련 서울교육청 조례 >

- 제6조(민관협의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학교협동조합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학교협동조합 업무담당 실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 학교협동조합 관련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3. 그 밖에 학교협동조합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학교 내 협동조합 지원 추진체계

□ 사업 추진체계



- (교육부)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비 교부 등 사업관리·운영 총괄
- (중앙지원센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 “학교협동조합 중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학교협동조합 지원 관리·운영 수행

< (참고) 국평원 내 학교협동조합 중앙지원센터 설치 근거 검토 >

-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르면, ‘평생교육’에는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포함하고 있으며,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역주민들의 권익 및 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음

따라서,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평생교육원(「평생교육법」 제19조) 내에 학교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중앙지원센터를 두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국평원 내 검정고시지원센터의 경우, 보조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18. 교육기획보장과)

- 학교협동조합 지원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연간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민·관 협의체의 실질적 운영 추진
- 학교협동조합 운영·관리모델 개발, 운영 매뉴얼 제작, 학교협동조합 구성원 대상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시·도 담당자 연수 등을 수행
- (시·도교육청) 시·도 교육청 내에 별도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하고, 현장 관리 및 설립·운영 지원 추진
 - 학교협동조합 설립 인가 및 관리·감독을 수행할 “(가칭)학교협동조합 시도지원센터” 등 전담조직 설치·운영

- 시·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교육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보급 및 운영 컨설팅, 재정지원 등 현장 중심의 직접 지원 추진
- (민·관 협의체) 교육부, 시·도 교육청 관계자, 사회적기업진흥원 관계자 및 현장 관계자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를 운영하여 학교 내 협동조합 지원 방향 등에 대한 자문 수행

5. 제도개선 및 행정사항

□ (학교협동조합) 관리주체 변경을 통한 현장성 강화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학교협동조합의 관리주체를 교육부 → 시·도교육청으로 위임

— < (참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안) > —

제22조(교육부 소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1~20. 생략

(신설) 21.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교육부장관 소관의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

- 교육부는 학교협동조합 지원센터와 협력하여 학교협동조합 대상 교육 지원 및 사업모델 개발 등 지원 역할 수행

□ (대학생활협동조합) 권한 이전에 대비한 관리방안 마련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소관부처 변경*에 따른 교육부 내 관리 체계 구축 필요 → 담당부서 지정 및 사전 관리 추진

※ 대학생활협동조합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공정위 소관이며, 기재부로 소관부처 변경 진행 중(이후 기재부→교육부 위임 예정)

- 소비조합과 대학생활협동조합이 혼재되어 관리·감독 상의 어려움 발생 → 소비조합이 대학생협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안내·유도

VII. 향후 추진일정

- “학교 내 협동조합 지원 계획(초안)” BH 협의('18.7.)
- “학교 내 협동조합 지원 계획(최종안)” 확정('18.7.)
- 2019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 관련 시·도교육청 수요 조사('18.8~)
 - ※ 수요 조사를 근거로 특별교부금 교부금액 확정 및 시도 통지(~'18.9)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18.10~)
 - ※ 법령 소관 부처인 행자부의 법령개정 수요조사('18.10~)와 연계하여 개정 추진
 - (내용) 학교협동조합의 설립·관리·감독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
- 2019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시·도교육청 배부 및 사업 추진('19.1~)
- 학교 내 협동조합 중앙지원센터 지정 추진('19.1~)
- 시·도교육청 대상 학교협동조합 설립·운영 지원 등을 위한 연수 및 컨설팅 실시('19.3.~)

□ 학교협동조합 현황('18.4.30)

번호	협동조합명	수리(인가)일	지역	학교급	유형	학교명	의사록 공증면제 여부
1	금병초등학교비단병풍 사회적협동조합	2016.06.01	강원	초	매점&교육	금병초등학교	0
2	춘천한샘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2016.06.02	강원	고	매점&교육	한샘고등학교	0
3	연당초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2017.04.12	강원	초	농업&교육	연당초등학교	0
4	웅기중기 사회적협동조합	2017.06.09	강원	고	매점&교육	현천고등학교	
5	소양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2018-01-10	강원	고	복지, 교육	소양고등학교	
6	황지정보산업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2018-01-18	강원	고	교육(경제)	황지정보산업 고등학교	
7	자갈자갈 팔렬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2018-04-25	강원	고	매점&교육	팔렬고등학교	
8	북정고 교육경제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2013.09.03	경기	고	매점&교육	북정고등학교	0
9	덕이고 교육복지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2014.01.08	경기	고	매점&교육(동아리)	덕이고등학교	0
10	사회적협동조합 의정부여자중학교 모교지	2014.08.07	경기	중	매점&교육(생태)	의정부여자중학교	0
11	한문영고 교육경제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2014.12.19	경기	고	매점(로컬푸드)	한국문화영상고등 학교	
12	한국도예고 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2014.12.19	경기	고	매점&교육	한국도예고등학교	0
13	흥덕고 사회적협동조합 흥덕쿠퍼	2015.02.25	경기	고	매점&교육	흥덕고등학교	0
14	기흥고 교육경제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2015.03.24	경기	고	매점&교육	기흥고등학교	0
15	신길고 마을교육공동체 개방형 사회적협동조합	2015.12.02	경기	고	매점&교육	신길고등학교	0
16	큰꿈교육사회적협동조합	2016.02.15	경기	초	교육(방과후)	조현초등학교	
17	마을교육경제공동체 별내고 사회적협동조합	2016.04.22	경기	고	매점&교육	별내고등학교	0
18	현암고마을교육공동체 개방형 사회적협동조합	2016.06.27	경기	고	매점&교육	현암고등학교	0
19	사회적협동조합 술이홀통일출판사	2016.09.26	경기	고	교육(진로)	문산수익고등학교	0
20	양평고등학교 창업체험센터 사회적협동조합	2016.12.26	경기	고	방과후 마을학교, 사회복지시설및 청소년육성·보호 위탁사업	양평고등학교	
21	운양고 마을교육공동체 개방형 사회적협동조합	2017.01.05	경기	고	매점&교육	운양고등학교	0
22	참여와 나눔의 교육공동체 청옥초 사회적협동조합 푸른빛 나누리	2017.02.07	경기	초	매점&교육	청옥초등학교	
23	천천고등학교 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2017.05.01	경기	고	매점&교육	천천고등학교	0
24	마석고 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2017.08.08	경기	고	매점&교육	마석고등학교	
25	광덕고 교육경제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2018-03-16	경기	고	매점&교육	광덕고등학교	
26	가온길 사천여고 사회적협동조합	2016.10.06	경남	고	매점&교육	사천여자고등학교	0

27	범어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2016.11.24	경남	고	매점&교육	범어고등학교	0
28	보광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2016.11.28	경남	고	매점&교육	보광고등학교	0
29	태봉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2017.03.29	경남	고	매점&교육	태봉고등학교	0
30	문경여자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2015.08.10	경북	고	매점&교육	문경여자고등학교	0
31	광주제일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2017.08.31	광주	고	매점&교육	광주제일고등학교	0
32	대송 사회적협동조합	2017.03.29	대구	고	교육(진로)	대구방송통신고등학교	
33	만덕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2016.10.27	부산	고	매점&교육	만덕고등학교	0
34	영림중 사회적협동조합	2013.09.03	서울	중	매점&교육	영림중학교	0
35	독산누리 사회적협동조합	2014.08.19	서울	고	매점,교육	독산고등학교	0
36	삼각산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2015.02.25	서울	고	매점&교육	삼각산고등학교	0
37	삼성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2015.08.25	서울	고	매점&교육	삼성고등학교	0
38	선사고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2015.10.20	서울	고	매점&교육	선사고등학교	0
39	국사봉중학교 사회적협동조합	2016.02.02	서울	중	매점&교육	국사봉중학교	0
40	가재울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2016.02.15	서울	고	매점&교육	가재울고등학교	0
41	월천교육문화 사회적협동조합	2016.03.11	서울	초	교육(방과후)	월천초등학교	
42	모기동마을학교 사회적협동조합	2016.06.27	서울	초	교육(방과후)	양화초등학교	
43	계성셋별 사회적협동조합	2016.07.28	서울	고	매점&교육	계성고등학교	0
44	길음중학교 사회적협동조합	2016.08.26	서울	중	매점&교육	길음중학교	0
45	신천사회적협동조합	2016.09.07	서울	초	교육(방과후)	신천초등학교	
46	한울타리 사회적협동조합	2016.09.20	서울	중	매점&교육	한울중학교	0
47	금북 사회적협동조합	2016.10.24	서울	초	교육(방과후,진로, 평생교육)	금북초등학교	
48	성수공업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2017.03.28	서울	고	교육(진로)	성수공업고등학교	
49	광신정산고 사회적협동조합	2017.08.23	서울	고	매점&교육	광신정보산업고등학교	0
50	함께배움 사회적협동조합	2017.10.26	서울	초	방과후	천왕초등학교	
51	밀알학교 사회적협동조합	2017-11-27	서울	초·중·고 통합	교육, 복리증진	밀알학교	
52	서울남산초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2018-01-10	서울	초	복지, 교육	서울남산초등학교	
53	성심학교 사회적협동조합	2018-01-24	서울	중,고	매점&교육	성심여자중,고등학교	
54	성일 사회적협동조합	2018-03-30	서울	초	복지, 교육	서울성일초등학교	
55	강화여자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2017.09.06	인천	고	매점&교육	강화여자고등학교	0
56	선학중학교 사회적협동조합	2017-12-04	인천	중	건강, 교육	선학중학교	
57	광양중학교 사회적협동조합	2017-12-19	전남	중	건강, 교육	광양중학교	
58	전라중학교 생그레 사회적협동조합	2017.07.03	전북	중	매점&교육	전라중학교	
59	양현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YHAM(암)	2018-01-10	전북	고	복지, 건강	양현고등학교	
60	충북고등학교 교육경제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2016.12.08	충북	고	매점&교육	충북고등학교	0

붙임2

시·도별 학교협동조합 지원 현황

(단위:백만원, '18년기준)

연번	교육청	과(팀)	담당자 (연락처)	조례 유무 (제정일)	예산 현황	기본계획 유무	지원내용
1	서울	참여협력 담당관	강석찬 주무관 (02-399-9379)	○ ('15.10.8)	121	○	운영비, 컨설팅, 시설개선비
2	부산	교육정책과	박혜영 주무관 (051-860-0472)	×	×	×	×
3	대구	중등교육과	최진아 장학사 (053-231-0373)	×	130	○	운영비
4	인천	정책기획 조정관	황미애 주무관 (032-420-8207)	○ ('17.7.17.)	23	○	초기 시설비, 운영비, 연수경비
5	광주	교육자치과	안정섭 주무관 (062-380-4639)	○ ('17.8.1.)	5.6	○	홍보, 교육 등 관련 운영비
6	대전	교육정책과	이양숙 주무관 (042-616-8232)	×	×	×	×
7	울산	평생교육 체육과	오선희 주무관 (052-210-5573)	×	×	×	×
8	세종	학교혁신과	김은하 주무관 (044-320-2021)	○ ('18.4.10)	×	×	동아리 운영, 컨설팅
9	경기	마을교육 공동체기획단	김경래 장학사 (031-820-0922)	○ ('15.11.4)	700	○	사회적경제 교육 프로그램
10	강원	정책기획관	지창환 주무관 (033-258-5349)	×	139	○	학교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지원
11	충북	체육보건 안전과	배상호 장학사 (043-290-2265)	×	70	○	설립지원 서비스, 연수 및 컨설팅 지원 시설비, 운영비 등
12	충남	학교정책과	김태곤 교사 (041-640-7116)	×	80	○	시설비, 운영비, 연수비, 체험비 등
13	전북	정책공보 담당관	장학사 임수영 (063-239-3143)	○ ('17.8.11.)	180	○	설립 초기 시설비 및 운영비 지원 등
14	전남	교육진흥과	김경렬 장학사 (061-260-0819)	○ ('17.12.28.)	10	○	시설운영비 및 프로그램 운영
15	경북	과학직업과	김태환 주무관 (054-805-3424)	×	×	×	×
16	경남	교육복지과	김해숙 주무관 (055-210-5172)	○	25	○	운영비 등
17	제주	미래인재 교육과	박은희 주무관 (064-710-0392)	×	×	×	×

□ 전국 대학생활협동조합 현황(국립대 18교, 국립대법인 2교, 사립대15교)

연번	협동조합명	학교유형	설립년도
1	강릉원주대학교생활협동조합	국립	2015
2	강원대학교생활협동조합	국립	2001
3	경북대학교생활협동조합	국립	2001
4	경상대학교생활협동조합	국립	2004
5	경희대학교생활협동조합	사립	2003
6	국민대학교생활협동조합	사립	2003
7	군산대학교생활협동조합	국립	2011
8	금오공과대학교생활협동조합	국립	2007
9	농협대학교생활협동조합	사립	2016
10	동국대학교생활협동조합	사립	2004
11	동아대학교생활협동조합	사립	2014
12	목원대학교생활협동조합	사립	2012
13	부경대학교생활협동조합	국립	2011
14	부산대학교생활협동조합	국립	2006
15	상지대학교생활협동조합	사립	2005
16	서울과학기술대학교생활협동조합	국립	2013
17	서울대학교생활협동조합	국립법인	2000
18	성결대학교생활협동조합	사립	2016
19	송실대학교생활협동조합	사립	1999
20	안동대학교생활협동조합	국립	2012
21	연세대학교생활협동조합	사립	1994
22	이화여자대학교생활협동조합	사립	1998
23	인천대학교생활협동조합	국립법인	2005
24	인하대학교생활협동조합	사립	2000
25	전남대학교생활협동조합	국립	2007
26	전북대학교생활협동조합	국립	2012
27	제주대학교생활협동조합	국립	2011
28	조선대학교생활협동조합	사립	1990
29	창원대학교생활협동조합	국립	2006
30	충남대학교생활협동조합	국립	2012
31	충북대학교생활협동조합	국립	2012
32	한국기술교육대학교생활협동조합	사립	2008
33	한국방송통신대학교생활협동조합	국립	2012
34	한국외국어대학교생활협동조합	사립	1994
35	한국해양대학교생활협동조합	국립	2011

< 자료출처 : 한국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 2018년 >

연번	대 학 명	조 합 원 수(명)	출 자 금(원)	매 장 수(개)
1	강릉원주대	626	71,810,000	10(매점4, 식당3, 카페3)
2	강원대	16,922	700,841,650	12(매점5, 식당4, 카페3)
3	경북대	1,500	64,050,000	21(매점6, 식당10, 카페5)
4	경상대	636	114,230,000	16(매점7, 식당7, 카페2)
5	군산대	364	195,300,000	5(매점2, 카페3)
6	금오공과대	656	43,730,000	6(매점2, 식당3, 카페1)
7	부경대	710	73,430,000	14(매점4, 식당6, 카페4)
8	방송통신대	1,089	98,033,854	2(매점1, 카페1)
9	서울과기대	809	73,180,000	8(매점2, 식당2, 카페4)
10	안동대	388	43,010,000	7(매점2, 식당3, 카페2)
11	전남대	13,932	238,155,000	10(매점5, 카페5)
12	전북대	487	465,150,000	18(매점7, 식당5, 카페6)
13	제주대	1,034	80,270,000	9(매점5, 식당3, 카페1)
14	창원대	356	37,220,000	10(매점4, 식당3, 카페3)
15	충남대	484	50,590,000	-
16	충북대	1,112	90,999,950	9(매점3, 식당3, 카페3)
17	한국해양대	363	101,840,000	9(매점 2, 식당3, 카페4)
	계	41,468	2,541,840,454	166

< 자료출처 : 한국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 2016년 결산자료(2017.3월) >

※ 부산대 제외(자료 미확보)

<단위 : 원, %>

연 번	학교명	총매출액	시설사용료	영업이익(A)	시설개선비(B)	발전기금/ 장학금(C)	환원비율(%) (B+C/A)
1	강릉원주대	2,216,980,000	18,500,000	17,030,527	-	10,000,000	58.7
2	강원대	6,226,864,143	16,003,531	-1,662,537	153,624,000	152,925,910	-
3	경북대	8,892,164,857	22,000,000	64,510,741	-	-	-
4	경상대	5,327,514,856	36,559,910	6,792,509	135,890,135	30,000,000	2,442.2
5	군산대	827,179,000	5,056,000	-41,123,873	-	-	-
6	금오공대	3,095,635,279	13,512,259	125,654,697	-	50,000,000	39.8
7	방송통신대	1,863,042,413	60,001,166	22,207,175	-	10,000,000	45.0
8	부경대	5,449,171,690	44,737,310	95,207,434	-	193,625,063	203.4
9	서울과기대	4,098,630,076	90,019,370	-	62,606,600	11,500,000	-
10	안동대	1,801,959,592	20,180,000	3,783,722	-	-	-
11	전남대	4,300,000,000	19,000,000	38,198,542	-	64,000,000	167.5
12	전북대	9,192,064,673	87,906,236	-65,569,633	125,438,161	-	-
13	제주대	3,207,348,000	18,883,000	10,585,799	6,500,000	15,000,000	203.1
14	창원대	2,812,447,998	18,270,900	142,232,120	23,198,675	30,000,000	37.4
15	충남대	6,691,654,307	56,971,070	189,631,197	4,037,000	20,000,000	12.7
16	충북대	5,244,439,000	31,025,930	70,719,846	-	31,800,000	45.0
17	한국해양대	3,524,242,518	72,659,690	46,436,440	-	59,000,000	127.1
	계	74,771,338,402	631,286,372	724,634,706	511,294,571	677,850,973	164.1

<자료출처 : 한국대 학생 생활협동조합연합회 '17년 결산자료>

※ 부산대 제외(자료 미 확보)

구 분	협동조합기본법 (2012.1.26.제정, 기재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1999.2.5.제정, 공정위)	국세기본법 (1974.12.21제정, 기재부)
	사회적협동조합(학교협동조합 포함)의 근거법	대학생활협동조합의 근거법	대학 소비조합의 근거법 * 대학생협으로 전환토록 안내(2005 국감지적)
특 징	<p>※ 사회적협동조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격) 비영리(사단)법인 ■ (설립) 5인 이상 조합원자격 가진자 발기인, 정관작성, 창립총회 의결, 신고, 중앙부처 인가 ■ (출자) 1인 1좌 이상 출자, 총 출자수의 30/100 초과 금지 ■ (임원) 이사장 1명 포함 3명이 상 이사, 1명 이상 감사 	<p>※ 대학생활협동조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격) 비영리(사단)법인 ■ (설립) 30인 이상 조합원자격 가진자 발기인, 정관작성, 창립총회 의결, 신고, 지자체 인가 ■ (출자) 1인 1좌 이상 출자, 총 출자수의 20/100 초과 금지 ■ (임원) 이사장 1명 포함 7명 이상 20명 이하 이사 2명 감사 	<p>※ 소비조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격) 법인으로보는 단체 ■ (신청) 관할 세무서장 승인 ■ (기타) 조직운영규정에 따라 단체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단체명의로 수익·재산 소유·관리 등
제 정 이 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는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법」등 기존 별법 체제에 포괄되지 못하거나 「상법」에 의한 회사설립이 어려운 경우 생산자 또는 소비자 중심의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경제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을 주로 수행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을 별도로 도입하며, ■ 협동조합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주자립·자치적인 협동조합의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자발적인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활동이 지역·직장·단체 및 학교 단위에서부터 점차 증대하고 있으나,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 등 생산자조합과는 달리 법적 근거가 없이 운영되고 있어 조합에 대한 공신력의 결여, 조합원의 확보곤란 등 조합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 이 법의 제정을 통하여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의 자발적인 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p>목 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u>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법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u>소비자들의 자주·자립·자치적인 생활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 과세(課稅)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p>주 요 내 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기 위한 사업조직으로 경제·사회·문화 모든 분야에서 설립 가능하며,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는 각각 법인으로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비영리법인으로 함 ■ 협동조합 등은 조합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상호협력 증진에 노력하여야 함 ■ 협동조합 등에 대하여 특정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3년마다 협동조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함.<이하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발적인 조합활동을 통하여 상호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30인 이상의 소비자는 발기인이 되어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조합원은 누구나 1좌 이상을 출자하도록 하고, 1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출자좌수의 5분의 1을 넘을 수 없도록 함 ■ 조합은 농수산물 및 환경물품 등을 구입하여 공급하는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조합은 재고물품의 처리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없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세법에 공통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기간과 기한, 서류송달 절차등을 정함. ■ 세법과의 관계를 규정하여 세법의 특례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법을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 ■ 국세부과 및 세법적용상의 원칙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 소급과세의 금지, 기업회계존중의 원칙등을 정함. ■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등의 타채권에 대한 우선권,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등이 교부청구한 다른 국세등에 우선한다는 것과 납세담보물매각시 우선순위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1조제2호 :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비영리·공익법인 관리·감독 업무편람, 2017, 법무부)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민법법인)

나.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 협동조합기본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등에 따른 법인(특수법인)

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교육부 소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교육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

(참고)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설립인가 등) ①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1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② 이 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3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설립인가 등) ① 조합을 설립하려면 3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發起人)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5조에 따른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합의 사업구역이 2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1.12.31.>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이하 생략)

저성장 시대의 따뜻한 성장동력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18~'22)

2018. 11.

관계부처 합동

저성장 시대의 따뜻한 성장동력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18~'22)

2018. 11.

관계부처 합동



목 차



I. 추진 배경	241
II. 제2차 기본계획 평가 및 향후 여건 전망	242
1. 평가	243
2. 향후 여건 전망	245
III. 제3차 기본계획 추진방향	246
IV. 분야별 추진과제	247
1. 다양한 사회적기업 진입 촉진	247
2. 사회적 가치 중심의 사회적기업 지원	256
3. 사회적경제 성장 생태계 조성	259
4. 지역·민간 중심의 지원체계 조성 및 국제협력 확대	267
V. 과제별 추진 일정	272
<참고> 최근 세계의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	276

I. 추진 배경

- 세계화 및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자리·환경·노인복지·보육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과 기대 고조
 - 사회적기업은 창의적 아이디어로 새로운 시장 수요를 개척하고, 시장의 방식으로 사회문제도 해결함으로써 **혁신성장·포용성장에 선도적 역할** 가능
 - * EU 등에서도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적경제에 주목하고 정책 지원을 강화
- 정부는 '07년부터 2차례의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1차: '07~'11, 2차: '12~'17)을 수립, 사회적기업을 적극 육성
 - 초기 기반이 취약한 상황임을 고려, 정부 주도의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재정·세제 등을 집중 지원하여 성장 기반을 조성
 - 지난 10년 간 사회적기업 수는 34배, 고용규모는 16배 이상 증가하는 등 **양적으로 확대**되고, 매출액 등 **경영상황도 개선**되는 성과
 - * ('07) 55개소, 2,539명 → ('17) 1,877개소, 41,417명
 - ** 평균 매출액: ('14) 12.0억원 → ('15) 13.5억원 → ('16) 15.8억원
- 그러나, 사회적경제의 지속 성장 및 질적 도약을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정부 주도의 육성 정책으로는 한계
 - 사회적경제기업 고용 비중이 EU의 1/4에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인증 요건이 엄격하여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혁신적 기업도 포용하지 못하는 문제**
 - 기업별 규모가 영세하고 정부지원에 의존하는 기업도 존재하는 등 **민간의 창의성을 제약하는 측면도 존재**
- 따라서, 정부 주도 육성에서 **민간·지역 주도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
 -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유입되고 사회적경제 당사자와 지역·국민이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 정부는 이를 적극 뒷받침

II. 제2차 기본 계획 평가 및 향후 여건 전망

< 사회적기업 현황 >

- '17년 사회적기업 수는 1,877개*, 예비사회적기업 수는 1,194개이며, 총 매출액은 약 3.5조, 기업 당 평균 매출액은 19.3억**

* 사회적기업 수 : ('12) 774개소 → ('15) 1,506개소 → ('17) 1,877개소

** 평균 매출액(억원): ('12) 8.9 → ('15) 13.5 → ('17) 19.3(추정치)

- 유형별로는 일자리제공형(68.6%), 기타형(10.3%), 혼합형(10.0%), 사회서비스 제공형(6.3%)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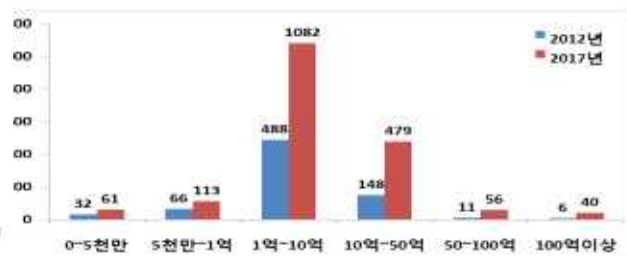
- 경쟁력있는 사회적기업도 많아지면서 사회적기업 간 격차도 확대*

* 연매출 100억원 이상 기업(40개)도 증가한 반면, 5천 이하 기업(61개)도 존재

< 사회적기업 수 >



< 사회적기업 매출액 분포 >



- 사회적기업 전체 고용인원은 4.1만명, 평균 고용은 약 22명*, 매출액 대비 고용은 1억당 2명(전체 사업체 평균 고용 5.4명, 매출액 대비 전체 사업체 1억당 0.4명, '16. 전국사업체조사)

* 고용인원(명) : ('12) 18,297 → ('15) 33,527 → ('17) 41,4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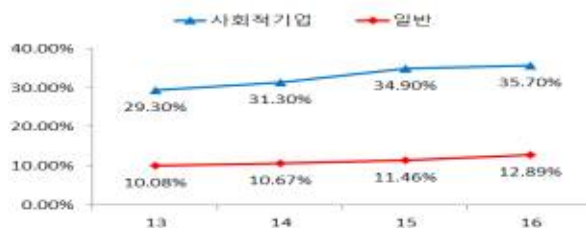
평균 고용인원(명): ('12) 24.4 → ('14) 23.0 → ('16) 23.7 → ('17) 22.1

- (취약계층 고용) 전체 고용인원 중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용 비율은 60% 수준으로, 규모는 지난 5년간 2배 이상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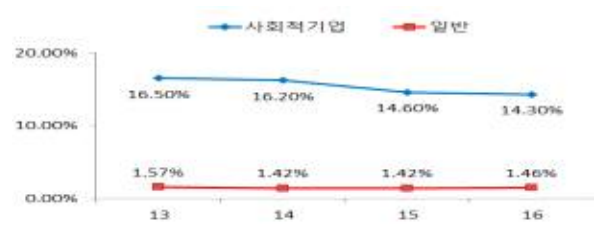
* 취약계층 고용규모(명): ('07) 1,403 → ('12) 11,091 → ('17) 25,171

취약계층 구성('17년 기준): 고령자(58%), 장애인(23%), 저소득자(12%)

< 고령자 고용비율 >



< 장애인 고용비율 >



- (고용의 질) 사회적기업 종사자 고용보험 가입률은 97.6%*(전체 89.1%, '17년), '16년 기준 사회적기업 평균임금은 154만원**, 일자리의 안정성(상용직 94.1%) 등의 이유로 종사자의 근로 만족도도 높은 편

* 국민연금 93.3%,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97.0%, 산재보험은 98.4%로 높음

** 청소업 187.4만원(전체 청소·환경미화 직종 164.4만원) 등 고령자 등 취약계층이 많이 종사하는 직종에서의 평균임금은 사회적기업이 더 높은 편

— < 제2차 기본계획('13~'17) 주요내용 > —

◇ 목표: 사회적기업 3천개 육성

◇ 주요과제: 4대 분야, 15개 정책과제, 61개 세부추진과제

- ①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강화: 판로 지원 및 공공구매 확대, 자금 및 투자 지원 확대, 인건비 지원 등 재정지원 제도 개선 등
- ②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컨설팅 지원 확대, 지원기관 역량 및 인프라 강화, 사회적기업가 양성 확대, 사후관리 지원 등
- ③ 사회적기업 역할 확대 및 성과 확산: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기업 활성화, 사회적기업 성공모델 확산, 경영공시를 통한 책임성 강화 등
- ④ 민간과 지역 파트너십 강화: 민간의 사회적기업 지원 확산, 지역·업종 간 교류 및 협력 활성화 등

◇ 주요 실적: 61개 세부추진과제 중 54개 추진, 7개 미추진

- 주요 추진과제는 ▲온·오프라인 판매채널 확대 ▲재정지원 개선 (연차별 차등 지원 등)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추진 등
- 주요 미추진과제는 ▲사회적기업 등록제 전환 ▲사회적기업 제품 소비 인센티브(구매 포인트제 등) 신설 등

[F4] 인증제 기반 지원 정책이 단기간 사회적기업 육성에는 기여,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은 부족

□ 인증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위주 지원 정책은 단기간 사회적기업 육성에 역할, 특히 취약계층 고용 창출에 도움

- 그러나,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사회적기업으로 포용하지 못하고*,

* 전년대비 증가율(%): ('14) 23.6 → ('15) 20.4 → ('16) 13.7 → ('17) 9.6

- 인증 요건이 엄격하여 창업초기 단계에 있는 소셜벤처 등이 사회적기업으로 유입되지 못하는 등* 사회적경제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의 인·지정률(예비 포함): 28.4%('17년)

□ 인증 사회적기업에 대한 획일적인 지원 체계 하에서, 창업 이후 기업 활동에 있어서 사회적 가치 평가도 부족

F5 사회적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 틀을 마련하였으나 창업 단계 지원 집중

- ☐ 청년 사회적기업가 양성을 확대하고,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관련 정보 DB(통합정보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
 - 소셜벤처 경연대회와 전문지원 기관을 통한 사회적기업가 육성, 초기 창업팀을 위한 성장지원센터 조성 등 단계적 지원 틀 마련
- ☐ 판로개척, 경영·노무 등 전문 컨설팅, 전문인력이나 종사자 직업역량 강화 등 원하는 지원이 다양*해졌으나, 정부 지원이 여전히 일자리 창출(43.3%), 창업지원(16.9%)에 집중
 - * 사회적기업의 향후 지원 필요사항('17년) : 판로(21.6%), 홍보(20.4%), 금융(11.7%), 인력(10.5%), 교육훈련(8.1%) 등
 - 특히 판로 지원의 경우, 온·오프라인 매장은 여전히 부족하고 일반 국민들은 사회적기업 구매에 애로*
 - * 사회적기업 제품·서비스 이용의 애로사항으로 “접할 기회가 적음”이 1순위

F6 개별 사회적기업 육성에 주력,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은 미흡

- ☐ 매출 100억원 이상 사회적기업이 증가('12. 6개소 → '17. 40개소)하는 등 개별 사회적기업의 성장에 성과
 - 반면, 국민들의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지도가 여전히 낮고*, 매출액 중 공공구매가 40%를 차지하는 등 구매층이 제한적
 - * 사회적기업제품 경험률은 약 20%, 사회적기업을 잘 모른다는 응답은 61%, 사회적경제를 잘 모른다는 응답은 87.5%('17. 실태조사)
 - 판로개척, 금융 등 간접 지원이 부족하고 사회적기업 상호구매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회적기업 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는 한계

F7 자생적 성장 단계로 진입하지 못하는 기업이 상당수 존재하며, 사회적기업의 지역적 분포도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

- ☐ 영업이익 발생이 개선되고 있으나 약 50%는 적자 상태이며, 연 매출 100억 이상 기업은 약 2%(40개), 5천만원 미만 기업도 존재(61개)
- 또한 매출상위 기업이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상위 20개 중 13개)하고, 사회적기업의 분포도 수도권이 40%*인 반면, 세종 0.5%, 제주 2.3% 등 지역 간 편차가 존재
 - * 서울(17.3%), 경기(16.8%), 인천(5.9%)

F4 저성장과 4차 산업혁명 등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 필요

- ☐ 최근 3%대 저성장 기조가 상당 기간 유지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하는 방식 변화 등으로 대규모 일자리창출 가능성은 낮아짐
- 지역에 기반을 두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한 기업 활동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의 역할이 중요

F5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역사회와 민간의 관심 증가

- ☐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세먼지, 고독사, 아동학대 등 새로운 사회문제도 대두되면서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역사회와 민간의 관심과 기대가 증가
-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역과 민간의 자원 투입 확대는 사회적기업 확산 기회로 작용 전망

F6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확산된 거버넌스 하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경제기업 간 유기적 연계 강화 필요

- ☐ '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 마을기업('11년), 협동조합·자활기업('12년) 지원법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경제조직이 정책적으로 육성
- 먼저 체계화된 사회적기업 지원제도와 축적된 경험을 여타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확산하고, 사회적경제기업 간 연계도 강화하여 사회적경제를 선도해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와 요구 증대
- 또한 사회적경제기업 증가에 따라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활동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인식도 확산

- ◆ 사회적기업의 외연을 넓혀 혁신적인 일자리 창출을 유도
- ◆ 사회적기업의 자생적 성장과 역할이 가능하도록 생태계 조성 방식으로 지원을 개편
- ◆ 지역·민간 중심 속에서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경제 전체의 확산 위한 선도적 역할 수행

Ⅲ. 제3차 기본계획 추진방향

- ❖ 정부 주도의 “사회적기업 육성”에서 “사회적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

비 전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따뜻한 성장 실현”

목 표

사회적기업을 통한 가치 있는 일자리 10만개 신규 창출,
사회적기업 구매 경험 비율 60% 달성

추진과제

F4 다양한 사회적기업 진입 촉진

- ▲ 사회적기업 저변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 ▲ 사업 주기에 따른 창업 지원 강화
- ▲ 사회적가치가 높은 영역에 사회적기업 진입 촉진
- ▲ 소셜벤처 육성 및 사회적경제기업으로의 연계 강화

F5 사회적 가치 중심의 사회적기업 지원

- ▲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적 가치 평가 강화
- ▲ 사회적기업 투명성 제고
- ▲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천 선도

F6 사회적경제 성장 생태계 조성

- ▲ 사회적기업 제품·서비스 소비 촉진
- ▲ 업종·지역별 협력 사업 지원 강화
- ▲ 스타기업 육성
- ▲ 사회적 금융 공급 확대
- ▲ 컨설팅 지원 확대

F7 지역·민간 중심의 지원체계 조성 및 국제협력 확대

- ▲ 지역 주도, 중앙부처 뒷받침
- ▲ 사회적경제를 뒷받침하는 협력체계 구축
- ▲ 일반 국민의 사회적가치 이해 제고
- ▲ 남·북 협력, ODA 등 통한 사회적기업 확산
- ▲ 아시아 지역의 사회적경제 Hub화

IV. 분야별 추진과제

1

다양한 사회적기업 진입 촉진

- ◆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이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

사회적기업 저변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F4 사회적기업 정의 개편

-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소셜벤처 등 혁신적 기업들을 사회적기업으로 포괄하는 방향으로 법령에 명시
 - 현행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이 강조되는 ‘사회적기업’ 정의 규정을 혁신적 방식의 사회문제 해결 기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정(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 * (현행) ‘①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②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 (개편) “③ 혁신적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등” 정의 추가

F5 등록제 도입 추진

- 다양한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혁신적 기업들이 사회적기업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등록제 전환
 - ① 법개정을 통해 인증제를 폐지하고 등록제로의 개편을 추진하되,
② 단기적으로 현행 인증제도의 세부 요건을 완화하여 연착륙 지원
- (인·지정 요건 완화) 사회적기업 인증 및 예비 심사기준이 되는 세부요건을 완화하여 양적 확대 기반 구축(18.下~)
 - (인증)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 등 현재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식되는 요건을 중심으로 대폭 완화
 -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기업은 ‘사회적 목적 실현’이 조직의 주된 목적이 되어야 하며,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공헌형, ▲기타형으로 분류(5개)하여 각 요건을 설정·심사 중

- 사업 개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실제 사업 운영기간 실적만으로 **평가·인증***이 가능하도록 개편

* (現) 6개월 동안의 영업이익을 제출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6개월 이상 기업만 인증 신청 가능

-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목적의 경우 **최소 고용 인원과 근로 시간 기준 완화**

* 現 5명 고용, 주 20시간 이상 근무 → 3명, 주 15시간 이상 근무

- 또한 청년 소셜벤처 등 **참신한 기업의 진입 촉진**을 위해 **새로운 서비스 분야*** 명시(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개정)

* 도시재생, 친환경, 공정무역 등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사업 분야에 대한 지원 규정 신설

- (예비) 잠재력이 높은 사회적기업을 발굴,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사업실적이 없는 계획 단계에서도 지정 가능하도록 개선**

- (등록제 도입) 사회적기업 진입장벽 완화 및 민간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현행 인증제를 '**등록제**'로 개편 추진('18.下~)

- 등록 요건*과 자치단체-중앙 간 역할 분담** 등에 관한 의견수렴을 거쳐 등록제로의 개편을 추진

* 사회적 목적 추구, 이윤의 일정 부분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 등 **핵심적인 사항** 중심으로 설정

** 자치단체가 등록·관리하고 중앙은 지자체 재정 지원 등

- 이와 함께,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 추구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별도의 법인격 신설을 검토

- 법인격 신설 수요, 조건* 등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신중 추진

* (법인격 조건(예)) ① 상법상 회사만큼 **설립이 자유로우나**, ② **이윤의 일정 비율 이상을 배분할 수 없으며**, ③ 청산할 경우 잔여자산을 사회적 기업 또는 비영리조직에 **증여해야 하는 규제 부여 등**

(사례) 영국 CIC(Community Interest Company):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로, 구성원들에게 자산 분배를 금지하는 '**자산처분제한(asset lock)**' 및 연차보고서 작성 의무 적용, '**CIC 감독관실**'은 CIC의 법령준수여부 감독 및 관련 지침 발행

F6 정부 지원 효과성 제고

- (수요 중심 지원 강화) 인증제도 개선에 맞춰 사회적기업의 특성·필요에 따라 정부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지원체계 개편('18.下~)

* (예) 태양광 에너지를 판매하는 혁신형 사회적기업 → 신재생 에너지 전문인력 지원 등 사회적기업 요구를 중심으로 지원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활성화) 부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회적기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개선
 - 부처 간 MOU 등을 통해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부처별 우수사례 및 애로사항 등 공유, 정책 반영
 - 사회적기업진흥원은 총괄 지원기관으로 신규 참여 분야 발굴 및 지정 심사 지원
- (정책 연계 강화) 중앙부처 간 정례적 협의체인 '사회적기업 정책협의회'를 신설,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을 공유하고 유사·중복 방지 및 효율적인 정책 추진(차관급)
 - 사회적경제기업 및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부처 등으로 구성*
 - * “사회적경제 기본법” 통과 시 사회적경제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설치 등 검토
 - 부처형 사회적기업 우수 사례 공유, 관련 지원 예산 협의, 산하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지원 실적 점검 등 협력방안 논의

- (단계별 지원 강화) 창업 입문단계부터 창업 이후 사회적기업 인증까지 쏙 단계별 지원 체계 구축
- (창업 前) 도시재생, 사회서비스 등 분야별 창업입문과정을 신규 추가* 하고, 「소셜벤처 경연대회」 지원 강화 등 통해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잠재적 사업가 유입 활성화
- * ('18년) 일반 창업입문과정(240명, 30시간) → ('19년) 도시재생·사회서비스 등 사회적경제 장점이 부각되는 분야별 특화 과정 포함 입문과정 확대
- 사회적경제 선도대학('19. 3개소 지정) 내 사회적경제 학부 개설 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무 과정 중심 커리큘럼 운영
- (창업 초기)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확대하고, 사무공간 등 물적 인프라 확충
- 창업 지원팀 수를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지원액 상향 추진
- * 지원팀수 : '18년 675팀 → '19년 1,000팀
- 지원기간도 기존 1년 → 최대 2년으로 연장* 등 탄력적 지원
- * (1년차) 시제품 개발 등 사업 아이템 고도화
(2년차) 비즈니스 모델 수립 및 사업화(단, 2년차 지원은 평가 및 기업 수요 등 고려하여 제공)
- (창업 後) 매년 이력 조사를 실시하여 성장 현황 및 지원 수요 등 파악, 필요한 지원 연계 및 컨설팅 제공 → 예비·인증 사회적기업으로의 진입 촉진

① 교육·아이디어 지원	② 창업 초기 집중 육성	③ 성장 지원	④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입문과정 신설 ▪ 선도대학 지정 및 학부과정 개설 ▪ 소셜벤처 경연대회 지원, 사회적기업 홍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확대 (사업비, 멘토링 등) ▪ 무료 사용 공간 제공 (소셜캠퍼스 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력조사(연 1회) ▪ 사후관리 및 후속지원 (컨설팅, 교육, 네트워킹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인증 사회적기업 지정

- (사회적기업 재도전 지원) 창업에 실패하거나 창업 이후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재창업 및 경영 개선에 필요한 멘토링, 사업비 등 지원('19. 시범사업, 100팀)
 - 창업 실패 기업에 대해서는 상담·평가 등 통해 재창업 교육·멘토링, 사업화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Re-Start」* 신설 추진
 - * (1단계) 실패원인분석, 재사업 아이템 평가 → (2단계) 기술·시장조사 등을 통해 사업화, 마케팅 비용 등 지원(평균 3천만원)
 - 경영 악화 기업에는 「사회적기업 경영혁신 프로젝트」 신설* 추진
 - * 악화원인 분석, 자금 조달 지원, 마케팅 지원, 역량강화·멘토링 등을 통해 경영 개선을 유도하거나 적합한 유형 변경을 통한 재창업 연계 등 지원
 -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사회적기업이 진출 가능한 업종* 개발, 사회 서비스 영역에서 사회적기업 확대 지원**
 - * (예) 청소업종 사회적기업을 코레일 차량정비단 폐기물수거업체로 전환 (코레일-진흥원 MOU 체결, '18.下)
 - ** (예) LH 임대주택 입주민 입주청소 서비스를 사회적기업에 위탁('18년 5개 사회적기업에 시범 사업(3억 매출), '19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추진
- (혁신 분야 특화 지원) 해외진출형, 기술기반형, 신재생에너지 등 혁신 분야 별 전문적 지원 강화(외교부, 중기부, 산업부 등 협조)
 - 진흥원과 KOTRA,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관련 전문기관 간 MOU 추진 → 컨설팅, 기술 지원 등 제공
 - * (예) 해외진출형은 KOICA, KOTRA 등 해외진출 인큐베이팅이 가능한 전문 기관, 기술기반형은 중소기업기술진흥원 등 특화 기관을 통해 R&D 기획 지원 제공
- (중장년·여성 맞춤형 지원 확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내 중장년·여성 특화 분야를 신설('19. 100팀(육성사업 물량 10%))
 - 대상별 창업 입문과정을 확대('18. 3개 → '22. 10개)하고, 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31개소), 새일센터(155개소) 등을 활용하여 사회적기업 취·창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
- (성장지원센터 활용 확대) 전국 9개 권역의 성장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입주공간, 협업공간 및 멘토링 등을 제공
 - * '19년 +4개소(現 6개) 개설하여 총 9개 권역 10개소 구축 예정
 - '센터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을 개발하고, 센터 운영자 간 정례적 워크숍(연2회) 등을 통해 운영 경험 공유
 - 지역 주민, 학생 등 대상으로 창업 관련 프로그램도 운영

□ 지역 발전 분야

- (도시재생)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확대 및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창업 및 사업 운영 지원
 - 도시재생사업 참여 신청 시, 금융지원 심사 가점(2점), 도시재생 기금 융자 지원 등 추진
 - 도시재생 지역에 어울림플랫폼*(도시재생 복합시설) 조성 및 창업 공간 임대, 노후건축물 개량사업자**(‘터 새로이’사업자)로 우선 지정
- * 도시재생 지역내 창업지원과 주거기능을 함께 하는 복합시설로 연 20개소 설치 목표(‘22년까지 100개소)
- ** 청년 건축가·기술인을 채용하는 지역업체를 노후건축물 개량사업자로 지정하여 자생력 있는 회사로 육성(‘22년까지 100곳 지정)

* (사례) 팩토리 베를린(독)

- 베를린의 구도심지역(베르나우어 거리)의 폐공장을 활용하여 청년 창업자 등에 저렴한 임대료로 창업공간, 코워킹 스페이스, 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창업단지를 조성, 이를 통해 지역 활성화



- (생활 SOC) 지역단위 문화체육, 장애인 돌봄 시설 등 각종 생활 밀착형 SOC*에 사회적기업이 건립·운영 참여
 - * 지역과 밀착된 10대 생활SOC분야를 선정, 단기간 집중투자 예정(‘19년 7조)
 - 특히 위탁기관 공모 규정에 사회적 가치 기준을 반영하여 사회적 기업의 위탁 확대를 추진

□ 사회서비스 분야 * ‘18.12월 사회서비스 종합대책 발표 예정

- (보건복지) 의료, 돌봄 관련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노인돌봄 (요양) 국공립 시설 위탁 기준에 사회적 가치 반영, 국공립 위탁체 선정 시 사회적기업 우선 고려
 - *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임직원에 조직관리, 법령·회계 교육 등 제공(연2회)
- (돌봄) 돌봄 사회적기업의 돌봄서비스 위탁 운영을 활성화*
 - * ‘다함께 돌봄 센터’ 위탁기준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토록 하고, ‘지역특화 사업’과 ‘다함께 돌봄’ 사업 연계추진 (‘19~)

- (보육) 국공립 시설 일부를 사회적기업이 수탁·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기준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18.上), 보육 관련 지원을 위한 매뉴얼 마련

* 어린이집 총 40,330개소 중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51개소(약 0.13%)('17.7월)

□ 문화·관광·체육 분야

- (문화예술) 예술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컨설팅, 홍보·마케팅, 자금 지원 등을 통해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기업 설립 및 운영 지원
 - * 기업당 최대 50백만원, '18년 25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10억) → 기업당 최대 150백만원으로 지원한도 확대 및 지원기업 개소 증대 추진('19. 58억)
- (관광)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하는 음식, 기념품,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관광 사업 분야에 사회적기업 진출 확대 및 지원*
 - * 지역관광 전문인력(관광두레 PD)을 육성하고('22년까지 256명 선발), 지역 공동체가 참여하는 '생태관광', 로컬푸드 기반 '음식업' 등 주민사업체 사업에 사회적기업 육성·지원('19년 475개 → '22년까지 1,125개)
- (체육) 체육인, 생활 체육 동호회 등을 통해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설립 지원 및 스포츠클럽 운영 확대*
 - * 지자체 생활체육시설(생활 SOC)의 스포츠클럽(비영리) 위탁 등('스포츠 클럽 육성법」제정 추진)

□ 환경·산림 분야

- (환경) 공공선별장 위탁운영, 주민주도형 생태관광, 도시환경 개선 등 '22년까지 10대 중점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 250개 육성하는 등 환경형 사회적기업 영역 확대
 - * 현재 폐기물, 청소 등 위주(300여개 인증 사회적기업 수) → 생태 관광, 녹색 소비, 자원순환, 미세먼지, 환경보건 등 분야로 다변화
- (산림) 청정임산물, 국유림 등 지역 산림자원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귀산촌인, 청년임업인 등이 참여하는 산림형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
 - 지원기관(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지역별 산림 전문인력을 지정* →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역자원조사, 산림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현장 밀착지원 추진
 - * '18. 8억, 5개 지역 → '19. 16억, 25개
 - 숲교육, 생활정원, 목공 등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하여 증가하는 새로운 시장에서 산림형 사회적기업의 진출 지원
 - * 사회적기업가 등 대상 산림형 사회적기업 육성 프로그램 운영('18. 3억 → '19. 6억)

- (소셜벤처 진입 촉진) 전국 대학 내 소셜벤처 동아리 지원('19년 20팀) 및 캠퍼스 투어 확대(연1회 → 연 2회)
 - 청년들이 사회적경제기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업 체험 프로그램'* 신설('19. 500명 시범사업)
 - * 노동부 "중소기업 탐방 프로그램"을 활용, 사회적기업을 탐방 대상에 포함
- (경연대회를 활용한 소셜벤처 육성) 혁신적인 소셜벤처가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소셜벤처 경연대회를 활용, 창업과 연계 강화
 - 육성사업 참여 시 최대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하는 등 수상팀의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연계도를 제고*
 - * '09~'17년간 290팀 입상, 92팀 육성사업 연계(31.7%)
 - 경연대회 수상팀은 관계부처 창업 지원사업 진입 시 우선선발* 또는 가산점 부여 등 통해 실제 사업화 유도(중기부, 교육부 협조)
 - * 현재 일반창업 및 글로벌성장 부문 수상팀은 노동부 육성사업에 자동선정
 - (중기부)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및 '청년창업 사관학교'** 내 수상팀 신청 시 가점 부여
 - *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오픈바우처) : 만 39세이하 예비청년창업자 및 창업 6개월 이내 청년창업자(100개 기업, 최대 1억)
 - ** 1년간 사업비(최대1억원), 교육, 코칭, 기술지원, 창업공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공공기관 창업경진대회 입상자에 대해서는 가점 0.5점 부여 중
 - (교육부)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경진대회'* 참여 시 우대 방안 마련·추진
 - * '15년부터 개최 중으로 '18년 사회적 문제해결 분야를 신설

○ (민간 자원 연계) 대기업·공공기관 등의 CSR과 연계하여 기업 전문역량을 활용한 후속 지원 및 협업 프로그램 운영*

* (딜로이트 회계법인) 사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회계·세무 분야 컨설팅, (우리은행) 금융교육·멘토링, (SK) 판로 지원, (LG) 소셜캠퍼스 내 업무 공간 지원(5곳)

○ (공간 지원) 입상팀 창업 시 성장지원센터* 등 활용하여 창업공간 우선 입주 지원

* '17년 3개소(서울, 부산, 전주) 조성, '18년 하반기 3개소(성남, 대구, 대전), '19년 4개소 추가 조성 예정

○ (금융 지원) 모태펀드, 임팩트펀드 및 신용보증기금 등 정부 금융 지원과 민간 자원을 연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

- 수상팀이 창업하는 경우 사회적기업투자 '모태펀드'(노동부), '소셜 임팩트 펀드'*(중기부)에 입상자 정보 제공 및 투자 추천

* (중기부) 모태펀드 출자(800억원, 80%)를 기반으로 소셜벤처에 투자하는 1,00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18년) → 22년까지 총 5,000억원 규모 조성 목표

-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수상팀 대상 대출금액의 100% 보증* 및 민간은행 대출금리 우대 추진

* 보증한도 5,000만원, 연간 25억 내외

○ (판로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사업*에 수상팀 연계

* 예: 주요 기차역사 내 사회적기업 판매 공간에 소셜벤처 경연대회 수상팀 제품 전시 및 비치(코레일)

□ (네트워킹 강화) 경연대회 참여자들의 교류·활동 촉진 및 협업 기반 마련을 위해 멘토-멘티 프로그램 등 정례적 네트워크 구축 지원 (운영비 등 지원)

* 선배 사회적기업가와의 멘토-멘티 프로그램 신설, 홈커밍데이 등 기존 및 신규 참가자간 점점 마련(운영비 등 지원) → 참여 기수별-기수 간 네트워크 활성화 등 자체 펠로우십 체계 형성을 지원

2

사회적 가치 중심의 사회적기업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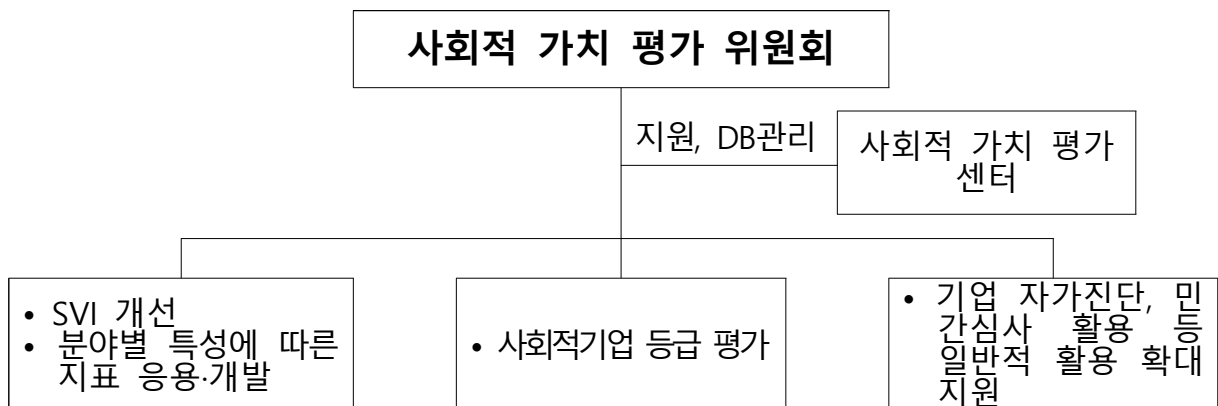
- ◆ 인증 중심의 사회적기업 지원체계를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개편하겠습니다.

2-1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적 가치 평가 강화

- (「사회적 가치 지표」 평가체계 구축) 사회적 가치 지표(SVI)를 바탕으로 사회적기업을 평가 → 중앙·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지원 심사 시 활용
 - SVI를 기본 가치지표로 하여 사회적기업을 평가(2년에 1회)하고, 등급을 부여 → 필요 기관에 정보 제공, 평가 결과를 DB로 관리
- < 사회적 가치 지표(SVI) 개요('17. 개발) >

 - ▲ (목적)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 정도를 파악하고 발전방향 제시
 - ▲ (지표 구성) 3대 관점, 14개 측정지표(계량 11개+비계량 3개)로 구성
 - 조직 운영 등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 여부, 고용창출 및 재정 성과, 제품 및 서비스의 혁신성, 이윤의 사회적 환원 노력 등 평가
- 사회적가치지표 운영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현장과 금융·판로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적가치평가 운영위원회'를 구성, 지표 개발·보완, 적용·평가 등 총괄기능 수행
 - 사회적기업진흥원 내 사회적 가치 평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가치 평가 센터」 설치
 - 사회적가치 평가 운영위원회 지원, 사회적기업 평가 DB 관리,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등 수행



- (「사회적 가치 지표」 응용) 사회적 가치 지표(SVI)를 응용하여 다양한 목적에 맞는 분야별 지표 개발, 정부 지원 시 적용
 - (재정 지원) 고용성과, 매출 및 영업수준, 사회 기여 등을 중심 사회적 가치 지표로 활용(지자체·중앙정부에 심사 기준(안) 배포)
 -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 지원 선정 시 심사 기준으로 활용
 - (공공구매 지원) 고용성과, 지역사회 기여 등을 중심 사회적 가치 지표로 활용
 -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평가, 등급을 부여(평가 센터), 일정 등급 이상 구매시에만 경영평가 실적으로 인정*
 - * 「사회적기업 공공구매 심사 기준(안)」 마련·배포('19년~, 기재부 협의)
 - (금융 지원) 신보·기보 등 공공기관 및 민간과 협력하여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사회적경제기업 신용평가 모델 확산('18.下)
 - * 활용 사례 및 지표 보완 필요 등에 관한 실태 조사 수행('19. 연구용역)
 - 사회적경제기업이 대출이나 보증 등 금융 지원 신청 시 일정 기준 이상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 (지표의 지속적 개선) 사회적 가치 지표(SVI)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지표에 대한 현장의 공감도를 높이고, 기업 자가진단, 소셜벤처·사회적기업 창업 지원 평가 등 일반적 영역에 활용 확대 추진*
 - * 현재 크라우드펀딩 등을 통한 금융지원(고용부), 신용보증기금 및 일부 지자체에서 지원 대상 선정 시 등에 활용 중
- 민간 기업에서 사회적기업 지원 대상 선정 시 평가 등에 활용 권장
 - * (활용례) '2018 LG소셜캠퍼스 지원사업' 시 사회적가치지표를 심사기준으로 적용, 총 20개 기업 대상 사회가치측정, 최종 11개소 선정 및 지원('18.4월)

2-2 | 사회적기업 투명성 제고

- (경영공시 강화) 경영공시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자율경영공시제도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 * '17년 1,877개 기업 중 455개 기업이 자율경영공시에 참여(약 24%)
- 공공구매 시장에 참여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경영공시 의무화*
 - * 사회적협동조합 및 조합원 200인/출자금 30억원 이상의 협동조합은 경영공시 의무화 (협동조합기본법 제49조의2, 제96조의2)
- 경영공시 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 신청 시 가점 부여, 금융·판로 지원 신청 시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

- **(부정수급 관리 강화)** 부정수급 예방 교육 의무화 및 사업장 점검 확대 등 사전 예방을 강화하고,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
 - 사회적기업 인증시 부정수급 예방 의무교육 실시 및 정부지원을 받는 기업 대상 정기 교육 실시(연 1회)
 - 사업장 점검대상을 재정지원을 받는 (예비)사회적기업 → 쏘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확대
 - 부정수급 시 금액 무관하게 형사고발하고, 정부지원사업 참여 영구 제한

2-3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천 선도

- **(공공부문 자원과 사회적기업 연계)** 공공기관의 강점 및 보유자산을 활용하여 사회적기업에 지원을 확대
 - 해외 진출사업이나, 임대주택 건설 등 사업 수행 과정에 사회적 경제기업을 직접 활용하거나 지원을 확대*(MOU 등 추진)
 - * (KOTRA) 사회적경제기업 수출 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 영문 카탈로그 제작 지원, 상담 주선 등 지원
 - 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코레일, 항만공사 등 다수가 이용하는 자산을 가진 공공기관에서 사회적기업 홍보 영상 게재, 판매 매장* 등 지원(국토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 협조)
 - * 고속도로 휴게소·서울역사 내 사회적기업매장 개장 추진('18.下~) → 유동 인구가 많은 주요 거점휴게소·역사(예: 전주역, 부산역 등)로 확대
- **(사회적 가치 창출 우수기업 시상)** 사회적 가치 지표(SVI)를 활용,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지원 성과 등을 평가(연 1회)하고 사회적 가치·성과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포상
 - 중앙부처 사회적기업 협의회('19년 신설)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지원 실적 평가 및 지원방안 등 논의(연 1회)
 - 사회적기업 지원 유형별 우수 사례집을 발간,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지원을 촉진
 - '사회적 가치 창출대회'를 신설하여 우수 공공기관 및 지자체 시상 등 우수사례 적극 확산('19년~)
- **(공공기관 교육 확대)**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관련 교육 확대
 - 신규 입사자, 관리직 등을 대상으로 한 기관 연수 프로그램에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

- ◆ 사회적기업 제품·서비스의 민간 소비를 늘리고, 사회적기업 간 협업을 촉진하여 규모와 질을 확장하겠습니다.

3-1

사회적기업 제품·서비스 소비 촉진

F4 민간부문의 소비 확대

- (사회적경제기업 소비 인센티브 신설) 일반 시민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소비 촉진을 위해 지역화폐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이용·소비액에 대한 세제 지원 검토* 등 추진

* 소득공제 적용 타당성 여부 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19년~)

- 고향사랑상품권(지역화폐) 거래 대상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포함 (기재부, 행안부 협조)
- 은행, 카드사와 연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시 혜택 부여
 - 사회적기업 온라인 구매몰(SEPP, '18.12월 개설 예정)과 연계하여 사회적기업제품 구매 시 할인, 포인트 적립 우대 등 추진

- (SNS 물-가치 소비 캠페인 연계) 카카오 등 SNS 물 내 사회적기업 진출 추진을 위한 방안 마련 및 '가치 소비' 캠페인 등을 병행하여 구매 촉진

- 공공기관, 대기업 임직원 전용 온라인몰 내 사회적기업 제품 입점을 지원하고 '가치소비의 날' 사내이벤트 등을 통해 구매 유도('18.下~)


- (소비자 접점 확대) 소비자에 친숙한 유통 채널을 활용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소비 접점을 확대*

* '17년 조사 결과, 사회적기업 제품 미구매 사유에 대해 온·오프라인에서 제품을 접할 기회가 없다는 응답이 응답자의 88.3%로 조사

- TV홈쇼핑, 백화점·마트, 소셜/오픈마켓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을 활용한 특별전·기획전 개최 및 기업의 입점 지원 확대
 - GS·롯데·현대 홈쇼핑 등과 협약을 확대하고(현 2곳) G-마켓 등 온라인유통 플랫폼에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카테고리 신설 추진

- 공영홈쇼핑 내 사회적기업 제품 판매 방송 편성 및 이용수수료 우대(15%)* 추진(중기부 협조)

*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공영홈쇼핑(아임쇼핑) 수수료는 평균 20%

< 홈쇼핑 방송 우수사례 >	
<p>(기업) 아름다운커피 / (상품) 공정무역 너츠세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GS샵 전문 품평회 지원, '17년 유통 확대 지원사업으로 박람회 참여 지원 - (주요성과) GS홈쇼핑 33,000천원 매출 달성 	

- 사회적경제기업들의 공동 판매·마케팅 등을 위한 오프라인 유통 거점 전국에 확대*(행안부, 농림부 등 협조)

-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판매장 '스토어 36.5'*를 유동 인구가 많은 중심 상권에 조성하는 방향으로 통합·재편

* 현재 타 판매장 내 흡인숍 형태를 포함하여 전국 65개소 조성, 유동인구가 적은 지역에 주로 설치되어 활용도가 낮음


- 전국 주요 도시에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신설 추진('19년~)

* 행안부와 지자체 공동으로 '흔 마음' 유통지원센터를 조성, 사회적경제 기업들을 위한 공동 마케팅, 판매장으로 활용

- 로컬푸드 직매장, 하나로마트 등 중앙부처·공공기관 주관 유통망에 사회적경제기업 위탁 및 입점을 확대(가점 신설, 입점 비용 지원 등)

- (상품 개선 지원) 성장 잠재력이 있는 상품을 발굴,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상품 개선 지원 확대

- 상품MD, 유통전문가, 디자인전문가를 한 팀으로 구성하여 종합적인 상품 개선 컨설팅을 제공하고 소비자 설문조사를 통해 추가 개선 지원('18.下, 진흥원)

< 상품 경쟁력 강화 지원 우수사례 >	
<p>(기업) 향미원 / (상품) 포켓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상품 네이밍 리뉴얼, 상품 중량 개선 및 수출용 패키지 개선 - (지원성과) '17년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IFFE 우수 디자인상품상 수상, 이베이(ebay) 입점 등 	

- (해외 진출 지원) 해외진출 사회적기업에 컨설팅, 마케팅, 출장 지원 등을 패키지로 제공*(KOTRA·진흥원)

* KOTRA 해외진출 패키지('18. 신설) : 기업역량평가를 통해 93개 사 선정 ('18.8월), 역량강화 컨설팅, 영문 카탈로그 제작, 디지털마케팅, 세일즈 출장 지원 등을 패키지로 제공 → 지속 확대 추진

- (중소기업 지원제도 연계) 사회적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지원 제도와 연계한 전문적인 판로·마케팅 등 지원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사업 공모 시, 사회적기업 부문 신설 또는 가점 부여(중기부 협조)
 - 마케팅 대전(연1회) 진행 시 사회적기업 가점 부여 및 코너 설치 지원 등

㉔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구매 활성화

- (법·제도 개선)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 구매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 및 평가 강화

- (구매 비율 의무화) 공공기관 구매비율 의무화*, 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제품 지정제도 신설 등 추진**

* (유사사례)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 비율 50%, 여성기업 5% 규정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계류중

-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 계획 및 사회적기업 별 상품·서비스 정보 DB를 구축하여 공공기관 구매 매칭을 강화
- (결과 공개 강화) 사회적기업 구매 실적구매 결과 순위 공개 강화*
 - * (現) 전년도 공공구매 실적, 당해년도 공공구매 계획, 공공구매 실적 상위 10개 기관 공표(노동부)
 - (강화) 3년 연속 구매비율 하락 기관 및 당해년도 구매 계획 감소 기관 소관부처 통보 및 소관부처 홈페이지 게시 추가
 - 경영평가 대상이 아닌 기타 공공기관(전 공공기관의 약 1/4, 207개/832개)의 경우 소관 부처에서 평가 시 기재부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평가 기준을 준용하여 평가*
 - * 현재 소관부처에서 자율적으로 평가항목을 정하여 구매 평가 등이 상이(고용부 사회적기업 구매율 3%, 문체부 정성평가, 중기부 사회적기업+사협 구매율 5% 등)

□ (수의계약 확대) 취약계층 30% 이상 고용한 사회적경제기업 대상으로 제품·서비스 용역 민간 위탁 시 수의계약 금액을 2천만원 → 5천만원으로 확대(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18.下)

□ (온라인 플랫폼 구축) 일반 국민 및 공공기관의 편리한 제품 구매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SEPP) 구축('19. 20억)

- 상품정보 제공에서 구매 지원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공공기관 구매 이력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 재구매 및 기관 실적관리 편의성 제고

□ (공공구매 상담 지원) 지역별 공공구매 전문상담기관 운영 등 구매 지원 강화

- 공공구매 구매상담기관은 공공구매 수요 발굴, 구매 상담 및 영업 지원, 우수 모델 개발 등 현장지원 활동 강화
- 진흥원 내 공공기관 판로지원 T/F를 신설, 총괄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구매상담기관(16개)을 활용한 현장 설명회(분기 1회), 지자체·공공기관 협약체결 등 구매 지원* 확대

* '17년 4개소 시범운영(광주, 울산, 충남, 경북 지역) 추진 성과

↳ 광주시 우선구매 조례 제정 지원 (구매비율 5%)

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공기관 우선구매 협약 체결 (2건) 등

□ (행사 연계 구매 촉진) 국가·공공기관 대규모 행사 등과 연계, 사회적기업 참여를 촉진하여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창출

- 일자리박람회, 창업박람회 등 중앙·지방 개최 박람회 시 사회적기업 홍보 부스 설치 및 기념품 등으로 사회적기업제품을 제공(공공기관 구매상담기관 활용)
- 정부 주도 국제행사 심사 과정에서 사회적기업 관련 부대행사를 마련하는 등* 사회적기업 참여 시 우대(기재부 협조)

*(참여 사례) “사회적경제와 함께하는 평창동계올림픽”

↳ 공정여행 사회적기업 컨소시엄(15개사) 주도로 전국 1,400여명의 사회 소외계층 대상으로 평창동계올림픽 참관 및 공정여행 제공

□ (지역단위 공동사업 지원) 사회적기업 간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 협업 해결 및 사회적기업 규모의 경제 실현

- 사회적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회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경우 전문인력비, 사업개발비 등 지원(1팀당 최대 3억, '19년~) 추진
 - 퇴직 인력,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을 활용하여 지역 내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분야 발굴 및 사회적기업 설립 지원 (가칭 '우리동네 사회적기업', '18.下 시범사업, 2개 지역)

* (노동부 지역특화사업) 우리동네 사회적기업(신설) 사례 : 부천시

- 돌봄 수요가 많은 방학 기간 동안 "급식", "방과후 수업", "등·하원" 전문 사회적기업이 함께 협업하여 '급식-방과후 수업-등·하원'을 One-Stop으로 제공 예정('18. 下, 시범사업)

- 현재 공동 상표, 브랜드 개발에 한정된 사업개발비 공동사업 지원 항목도 확대('18.下 지원항목 수요 조사)
 - 다수 기업이 협업하여 시장 수요 조사, 마케팅, 홍보 등 공동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개발비 우선 지원
- (공동 시설·장비 지원) 기업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공동으로 필요한 시설·장비 등 비용 지원 추진
- (공동 기술개발 지원) 사회적경제 유관기관들이 공동으로 지역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수행 시 기술개발 및 사업화 비용 등 지원 (중기부, 산업부 기술지원 사업과 연계)

□ (프랜차이즈 육성) 업종별 프랜차이즈화*를 통해 업종 내 경쟁력을 가진 우수기업의 노하우 및 사례를 유사 사회적기업체에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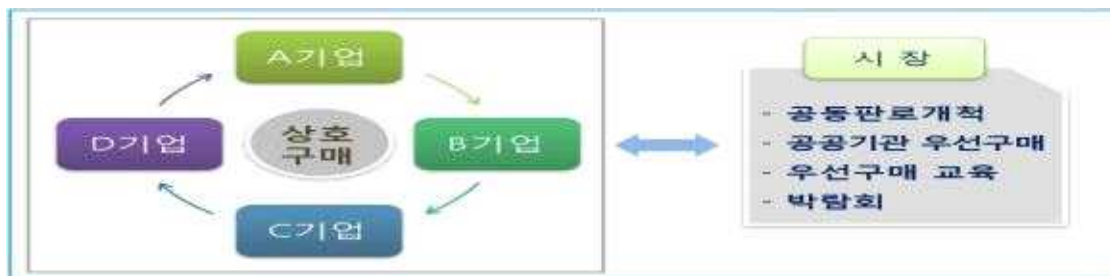
- 프랜차이즈 당 20억원 범위 내 지원(매칭형) → 공모 사업으로 추진

* 방역·소독 청소업종, 돌봄, 관광, 재활용(환경) 등 업종별 사회적기업을 묶는 프랜차이즈 지원사업 시범 실시

- (사회적기업 혁신타운 조성) 사회적기업, 지원 기관 등이 집적된 시설을 조성하여 사회적기업 간 협업·교류 및 공동 홍보·판매, 사회적경제 연구 등 지원(산업부 등 협조)
 - 사회적기업 상품 판매(비즈니스) 뿐 아니라 파일럿 형태의 사업 등이 가능하도록 혁신적인 사회적기업 클러스터로 조성('19년 2개소)
- (지역 단위 사회적기업 지원 기관 육성) 지역 단위 사회적기업의 전문적인 판로지원을 위해 '(가칭)사회적기업 종합상사'를 신설·육성
 - 사회적경제기업 간 연계하여 공동 판로개척 및 상호구매를 활성화 하는 경우 사업비 등 지급(전문인력·사업개발비 등, 1억 범위)
 - (1) <일반 시장>에서 공동 판로개척, 박람회, 교육 등을 수행하고,
 - (2) <사회적기업 내>의 상호 구매도 활성화

☞ 지역 내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구조 체계 확립

- * '경상북도 사회적기업 종합상사'는 지역 소재 사회적기업을 조합원으로 하여, 조합원인 사회적기업의 판로개척, 제품 컨설팅, 홍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17년 종합상사 회원기업의 매출액 93억)



3-3 | 스타 기업 육성

- ("소셜임팩트 11" 신설) 우수 사회적기업을 선정(11개), 백화점·홈쇼핑 등 전국적 유통망에 우선 입점 등 집중적 지원을 통해 큰 기업으로의 성장을 도모
 - 상품의 질, 매출액, 사회적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선정 → 2년 간 상품 개선, 금융·판로, 우수사례 홍보 등을 집중 지원
 - 진흥원 내 관련 전담 인력(가칭 '스타기업 매니저')을 지정하여 선정 기업 성장 지원, 지원기간 2년 후 성장도를 평가하여 1년 추가 연장

- (금융 공급 확대) 정부 재원을 활용한 금융 공급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 경로도 다변화
 - 사회적기업 전용 모태펀드 확충('18년 5호 펀드 108억 출자 → '20년 6호 펀드 발행 추진)
 - 다양한 기업에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1개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조정((現) 1개 기업 한도 20% → (개정) 10~15% 이내)
 - 소셜 임팩트투자펀드* 사회적경제기업 투자 확대(중기부)
 - * ('18) 1,000억원 → ('22) 총 5,000억원 규모 조성 목표
 -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등 사회적기업 대상 금융 공급 확대
 - * (서민금융진흥원) '18년 50억원→'19년 50~80억, (신용보증기금) '18년 400억 →'19년 1,600억원으로 특례보증 연 한도 확대
 - 공공임대상가 사회적기업 입점 지원 등 임대 지원 신설
 - LH 공공임대주택 단지내 상가 일부를 사회적경제기업에 저가에 임대('18년부터 공급 추진, 임대료 시세의 50% 수준으로 임대)
- (금융 접근성 제고) 사회적금융 정보 제공 강화 및 우수 사회적기업의 금융접근성 제고
 - 서민금융진흥원 협력기관('18년 11개 기관)을 통해 사회적금융 지원 제도 안내 및 컨설팅 제공
 - 사회적 가치 창출이 우수한 사회적기업이 대출 선정 등에서 우대될 수 있도록 신용평가시 사회적 가치 반영 추진(금융위)
- (자조금융 기반 조성) (가칭)사회적경제공제사업기금을 설치, 운영 자금 및 성장기 금융 공급 인프라 확충
 -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공제회 지원 근거 마련

- (컨설팅 효과성 제고) 상시 상담이 가능한 온·오프라인 컨설팅 시스템을 구축
 - 일회성·단기적 상담은 온라인 ‘재능기부뱅크’ 사이트*를 통해 퇴직전문인력의 프로보노 활동과 연계
 - * 인적·물적 자원이 취약한 사회적기업과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퇴직전문인력 등 전문가를 연계하여 경영·회계·법률 등 분야별 자문 서비스 제공
 - 다회성·장기적 상담은 초기 상담을 거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컨설팅 전문기관 등과 연계하여 대면 상담 지원(심사 + 자부담)
 - 프로보노 활동 활성화를 위해 권역별 성장지원센터*의 공간 및 사무기기 등 물적 인프라 제공
 - * 서울, 부산, 전주 3개소 조성 → '18. 성남, 대구, 대전·충남 3개소 구축 중
- (업종·분야별 전문기관 육성·발굴) 사회적기업의 지원 수요를 반영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기관 육성 및 발굴
 - * (현장의 목소리) 전문기능 중심으로 영역별 전국을 커버하는 지원 조직을 육성하여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 강화 필요('18년 지원기관 대표자 간담회)
 - 사회적금융, 유통·마케팅 등 사회적기업 지원 분야별 전문 지원 조직을 발굴·육성하여 전문적인 지원 서비스 제공
 - (기업·직능단체 연계 강화) 다양한 기업, 직능단체*, 시민사회와 MOU 등 협력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역량 강화 지원
 - * 노무사회, 변호사회, 세무사회, 관세사회, 경영지도사회 등 전문성을 지닌 직능 단체(16.12월, 고용노동부-한국공인회계사회 협업, 회계·세무 분야 전문 컨설팅 제공)
- (컨설팅 간 연계 지원 강화) 기업별 지원 현황 등 이력을 DB화하고,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기업에 필요한 후속 지원 연계
 - * (예) 경영 컨설팅 + 판로·금융·재정지원: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마케팅, 금융, 재정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

4

지역·민간 중심의 지원체계 조성과 국제협력 확대

- ◆ 지역과 사회적기업 중심, 중앙정부가 뒷받침하고 사회적경제 속에서 함께 성장하는 사회적기업 정책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4-1

지역 주도, 중앙부처 뒷받침

F4 지역 주도

- (지자체 기능 이관) 사회적경제 발전도, 정책 추진 여건, 등록제 전환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일부 사업의 지자체 이관 검토
 - 지자체의 수요·인프라 등 역량을 반영하여 신규 기업 발굴, 재정 지원 및 기초 컨설팅, 지역 주민과 사회적기업 간 접점 확대 등을 통한 지역기반 구축·지원업무 등을 점진적으로 이관*
- * 지자체 업무 자율성 확대를 위한 자치단체 의견수렴('18.下)을 통해 진행
- (예산 탄력성 확대) 광역 지자체에서 각 지역 실정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집행 탄력성을 강화
 - 지역 수요 및 필요에 맞는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자체 간 예산의 조정이 용이한 예산계정으로 변경 추진(기재부 협조)
-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지자체, 당사자조직·사회적경제기업, 중간지원기관 등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정례화 및 활성화 → 중앙·지자체 정책 반영
 - * 업종별 프랜차이즈화, 사회적기업 컨소시엄 사업, 기업의 경영상 애로,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전략적 업종 전환, 직원·대표자 역량 강화 등 사회적기업 주요 사업 추진 과정에 네트워크 의견수렴 제도화

F5 중앙 뒷받침

- (지자체 사업 참여 강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운영하는 매칭 사업의 사회적기업 참여 확대

- 지역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공동체활성화 등 자치단체 대상 중앙 정부 공모사업*에 지역내 사회적기업 등 참여시 심사 우대 등 추진

* (예) 농식품부의 '마을만들기' ①지역 주민이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 ②지역소득증대를 위한 시설 지원, ③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역주민 역량 강화 사업 등 추진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통해 창업한 지역 기업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육성*되도록 지원(사회적기업 컨설팅 등으로 연계)

* (예) 천안시는 소유 건물에 결혼이주여성들이 운영하는 '다문화 레스토랑 (I'm Asia: 이맛이야)' 창업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17.6)

- 부처별 주요 우수 사례를 선정하여 「지역사회 공헌형 사회적기업 우수사례집」 발간, 지자체 등 배포 → 우수 모델 확산 추진

4-2 사회적경제를 뒷받침하는 사회적기업 협력체계 구축

- (당사자 참여 확대) 사업 추진과정에 사회적기업 단체 등 현장의 참여를 확대하고,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정기적 의견수렴

- 중앙, 지자체 및 진흥원의 주요 사업 계획 수립 및 집행·평가·환류 등 전 단계에서 현장과 시민사회의 참여체계 구축 추진*

* 사회적기업 자치단체 포상 시 심사 우대 등 추진

- (진흥원-자치단체 협력 강화) 사회적기업진흥원 - 자치단체와의 효율적인 역할·분담체계 마련

- 각 기관의 장점이 되는 혁신 기능을 강화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 제고

- 우수 지원사례 및 경험과 노하우, 자원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조직 네트워킹 기회 확대(지자체 및 부처 사회적경제 지원기관 포함)

- (사회적기업진흥원) 중앙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업무를 중심으로 진흥원의 기능 확대·개편

- 사회적기업 정책 개발 및 조사·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창업 지원, 공공구매 및 판로 지원, 경영 지원 등 전문서비스 강화

- 사회적기업에 대한 통계관리 강화를 위해 **통합정보시스템 기능 개편 및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통계청 협조)

* ▲사회적기업 통합 DB 구축 ▲기업별·사업별 맞춤형 정보 제공 ▲국가 보조금의 효율적 집행·관리·중복 및 부정수급예방 시스템 구축 등

- **민간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자치단체 간 업무 협조·공유사항 조율, 교육·컨텐츠 제공, 우수 사례 확산 등 자치단체를 지원하고 자치단체 업무를 중앙과 연결·지원하는 역할을 수행

○ **(자치단체) 지역 특색을 살려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등 현장 밀착형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종사자 역량 교육도 확대

- 지원기관 종사자들의 업무능력 향상과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

* 3년 미만 전담인력(전체 인력의 약 40%)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기적인 교육 추진

□ **(사회적경제기업 상호 연계 지원)** 사회적기업 지원제도를 여타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확산하고 상호 간 교류·협업을 촉진

○ 판로·재정지원 및 클러스터 이용, 통합박람회 개최 등 사회적경제 기업이 **함께 이용·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지원제도를 개방

○ 업종별 협업, 교육, 판로 지원 등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에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이 협력하여 참여하는 경우 심사 우대 등 검토

4-3 | 일반국민의 사회적 가치 이해 제고

□ **(체험기회 확대)** 청소년·청년·일반시민 등 대상자별로 사회적기업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 기회 확대 제공

○ 청소년·청년 대상 **사회적기업 캠프, 대학 학습 동아리**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적기업에 **자원봉사 활동 유도**(행안부 협조)

* 사회적기업 캠프: ('19년) 연 2회, 160명 → '22년까지 확대
학습동아리 지원: ('19년) 20팀 → '22년까지 확대

- 청소년 대상 사회적기업 **진로체험 프로그램*** 참여 유도

* 청소년 진로체험 지원전산망 「꿈길」을 통해 사회적기업 진로체험을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의 사회적기업 인식 개선 및 사회적기업분야 관심·참여 유도

- 사회적기업 자원봉사 수요기관 등록 검토*(행안부), 대국민 참여 확대

* 소속 자원봉사센터와 활동 계획 및 활동 내용에 대한 사전 협의 후 등록

- 초·중등 교과과정에 사회적경제 내용과 가치를 반영하여 일상 생활에서 협력·연대를 실천 할 수 있는 기회 확대

* 초·중등 교수자료 개발('18년)하여 시·도 교육청 교과 개설 지원('19년~)

- (국민참여 홍보 강화) 가치 소비, 사회적기업 제품·서비스 체험 등에 대한 수기 공모전 개최하고, 교육도 진행하여 일반 시민의 인식 확산 유도(한국소비자원 협조)

- (사회적기업 홍보 다각화) 우수사례 발굴·홍보 강화 및 온·오프라인 홍보방식 다양화

- 우수 사회적기업 또는 기업가, 종사자를 선발하여 연중 홍보함으로써 대중에게 사회적기업에 대한 노출 확대

* (예시) 지하철 스크린도어, 기차 KORAIL 매거진 등 국민 생활 밀착형 홍보

- 공익광고, 다큐 제작 중심의 기존 홍보 방식에서 나아가 드라마·예능 프로그램 간접광고(PPL), SNS 활용 등 홍보방식 다각화

* (유사사례 : JTBC 천하장사, '16.6~8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진흥공단과 JTBC 공동기획으로 은지원, 강호동 등 유명 연예인이 직접 전국 각지의 지역 전통시장을 찾아가는 프로그램 방영

4-4 남·북 협력, ODA 등 통한 사회적기업 확산

- (남·북 협력사업 내 사회적기업 참여 지원) 사회·문화 교류, 인도 협력 등 남북 협력 사업에 사회적기업 참여 활성화(통일부 협조)

- 생태 교류, 문화재 공동 발굴 등 민간 협력사업에 환경, 문화 관련 사회적기업 참여 지원 → 교류사업 확대에 맞춰 사회적기업 참여 가능 분야 발굴·단계적 확대 추진

- (ODA·정책 이전) KOICA 등을 활용하여 아시아 국가 등에 한국 사회적기업 정책 이전 및 사회적기업 진출 등 추진

- ODA 사업 참여자 선정 시 사회적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등 추진 (외교부 협조)

- * (예) KOICA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 내 사회적기업 가점 신설 등
 - 예비창업가, 스타트업 등 혁신가들의 혁신적 아이디어, 기술 등을 ODA에 적용하여 개발 협력 난제 해결을 모색, 기술개발사업(최대 3억) → 시범사업(최대 5억) → 현지적용(최대 10억) 단계로 구성

-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ODA 사업 개발 및 사회적기업 참여 확대 (외교부 협조)

4-5 | 아시아 지역의 사회적경제 Hub화

- (협력체계 구축) 한국의 사회적기업 제도·정책을 공유·확산하고, 아시아 지역 내 한국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협력 체계 구축

- * 한국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 정책 및 지원제도가 가장 잘 조성된 국가 1위 선정('16년 사회적경제 주요 45개국 대상, 톰슨 로이터 재단·GSEN·UnLtd 공동으로 진행한 글로벌 리서치)

- 사무국을 신설(진흥원)하여 사회적기업 관련 국제포럼, 학술·연구·워크숍 교류, 대학 학위·프로그램 교류 등 실무 지원
- 사회적경제 국제 포럼(SE)을 확대하여 '아시아 네트워크*'를 신설하고 우수 글로벌 기업에 '아시안 사회적기업가' 상(Asian SE Awards)을 추진하는 등 한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사회적기업 협력체계를 구축

- * 사회적경제기업, 유관 민간 조직, 정부기관을 포함하여 아시아지역 민·관 합동 네트워크로 조성

- OECD, ILO 등 국제기구와 공동 연구를 추진하는 등 사회적기업 논의 확산을 위한 전략 마련

- (아시아 사회적기업가 양성) 사회적경제 선도대학('19년 지정) 등 활용하여 국제 사회적기업가 양성과정(가칭)을 신설, 아시아 사회적기업가를 대상으로 교육 실시

- 국내 사회적기업가들의 글로벌화와 아시아 유망 (청년)사회적기업가들의 국내 유입 활성화 → 국내·외 사회적기업가들이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사회혁신 글로벌 허브로 한국의 위상 정립

V. 과제별 추진 일정

연번	추진과제	추진일정					소관 부처
		'18	'19	'20	'21	'22	
1. 다양한 사회적기업 진입 촉진							
1-1. 사회적기업 저변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1-1-1	사회적기업 정의 개편						노동부
1-1-2	등록제 추진 및 인·지정 요건 완화						노동부
1-1-3	수요 중심 지원 강화						노동부
1-1-4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활성화 및 정책 연계 강화						노동부
1-2. 사업 주기에 따른 창업 지원 강화							
1-2-1	창업 단계별 지원 강화						노동부
1-2-2	사회적기업 재도전 지원 신설						노동부
1-2-3	혁신분야 특화 지원 및 중장년· 여성 맞춤형 지원 확대						외교부, 중기부, 산업부
1-3. 사회적가치가 높은 영역에 사회적기업 진입 촉진							
1-3-1	지역발전 분야 진입 촉진						국토부, 문화부
1-3-2	사회서비스 분야 진입 촉진						복지부
1-3-3	문화·관광·체육 분야 진입 촉진						문화부
1-3-4	환경·산림 분야 진입 촉진						환경부, 산림청
1-4. 소셜벤처 육성 및 사회적기업으로의 연계 강화							
1-4-1	소셜벤처 진입 촉진						노동부
1-4-2	경연대회 지원 강화						노동부, 중기부, 교육부
1-4-3	네트워크 지원						노동부

2. 사회적 가치 중심의 사회적기업 지원							
2-1.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적 가치 평가 강화							
2-1-1	평가체계 구축 추진						노동부
2-1-2	사회적 가치 지표 응용 추진						노동부
2-1-3	지표의 지속적 개선						노동부
2-2. 사회적기업 투명성 제고							
2-2-1	경영공시 강화						노동부
2-2-2	부정수급 관리 강화						노동부
2-3.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천 선도							
2-3-1	공공부문 자원과 사회적기업 연계						노동부
2-3-2	사회적 가치 창출 우수기업 시상						노동부
2-3-3	공공기관 교육 확대						노동부, 기재부
3. 사회적경제 성장 생태계 조성							
3-1. 사회적기업 제품·서비스 소비 촉진							
3-1-1	사회적경제기업 소비 인센티브 신설 추진						노동부, 기재부, 중기부, 지자체
3-1-2	소비자 접점 및 오프라인 유통 거점 확대						노동부, 행안부, 농림부
3-1-3	상품 개선 지원						노동부
3-1-4	해외 진출 지원						노동부, KOTRA
3-1-4	중소기업 지원 제도 연계						중기부
3-1-5	공공기관 구매 비율 의무화 등 판로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노동부
3-1-6	공공기관 경영평가 내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 평가 반영 강화						기재부
3-1-7	온라인 구매 플랫폼 구축 및 공공구매 상담 지원						노동부
3-1-8	행사·구매 연계						노동부, 기재부

3-2. 업종·지역별 협력 사업 지원 강화							
3-2-1	지역단위 공동사업 지원						노동부
3-2-2	프랜차이즈 육성						노동부
3-2-3	사회적기업 클러스터 조성						산업부 등
3-2-4	지역단위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육성(사회적기업 종합상사)						노동부
3-3. 스타 기업 육성							
3-3-1	소셜임팩트 11 신설						노동부
3-4. 사회적 금융 공급 확대							
3-4-1	금융 공급 확대						노동부, 중기부, 금융위, 국토부
3-4-2	금융 접근성 제고						금융위
3-4-3	자조금융 시스템 구축 추진						노동부, 금융위
3-5. 컨설팅 지원 확대							
3-5-1	컨설팅 인프라 강화						노동부
3-5-2	전문기관 육성 발굴						노동부
3-5-3	지원사업 간 연계 및 기업·직능 단체 협력 강화						노동부
4. 지역·민간 중심의 지원 체계 조성과 국제 협력 확대							
4-1. 지역 주도, 중앙부처 뒷받침							
4-1-1	지자체 기능 이관						노동부
4-1-2	예산 자율성 확대						노동부, 기재부
4-1-3	지자체 사업 참여 강화						노동부, 농식품부, 각부처
4-2. 사회적경제를 뒷받침하는 협력체계 구축							
4-2-1	현장과 시민사회 참여체계 구축						노동부

4-2-2	사회적경제 지원조직 간 협력 강화						노동부
4-2-3	사회적경제기업 상호연계 지원						노동부
4-3. 일반 국민의 사회적가치 이해 제고							
4-3-1	자원봉사 수요기관 등록 검토 등 지원						행안부, 노동부
4-3-2	초·중등 교과과정 반영						교육부
4-3-3	국민참여 홍보 강화						한국소비자원
4-3-4	사회적기업 홍보 다각화						노동부
4-4. 남·북 협력, ODA 등 통한 사회적기업 확산							
4-4-1	남북 협력사업 내 사회적기업 참여 지원						통일부, 노동부
4-4-2	ODA 사업 참여 확대 및 인센티브 제공						외교부, 노동부
4-5. 아시아 지역에서의 사회적경제 위상 강화							
4-5-1	사무국 신설(진흥원)						노동부, 진흥원
4-5-2	국제포럼 확대 및 아시아네트워크 신설						노동부, 진흥원
4-5-3	국제기구 협력 방안 마련						노동부, 기재부
4-5-4	아시아 사회적기업가 양성						노동부

< 최근 세계의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 >

- EU는 실업, 사회 양극화 등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적경제의 역할이 주목받으면서 '09년 **사회적경제 개념 인식, 법적조치 권고** 등을 위한 '**사회적경제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관련 정책 수립 및 집행 기능 강화
 - 이에 따라, 유럽 각 국은 사회적경제의 영향력을 높이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 추진
 - 프랑스는 2014년 '**사회연대경제법(ESS: l'Economie Sociale et Solidaire)**'을 제정하고, 사회연대경제의 원칙과 영역, 승인제도 및 지원방안 등에 대해 규정
 -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은 사회적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추진
- OECD는 주요 국가의 사회적기업 정책을 비교 분석, **8가지 정책 추진방향 제시** (Boosting Social Enterprise Development, OECD/EU, 2017)
 - ① 사회적기업 인지도 제고 ② 다자간 파트너십 구축 ③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육성 ④ 금융 공급자에 대한 위험 공유 ⑤ 교육 과정에 사회적기업가 정신, 관련 역량 반영 ⑥ 사회적 영향 측정 및 평가 활성화 ⑦ 사회적기업 친화적 행정 시스템 마련 ⑧ 사회적기업을 위한 제도적 연속성과 정치적 지원 보장 등
 - 주요 사례
 - ▲ (벨기에) "사회적혁신공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회적기업가 및 혁신가에게 워크샵, 훈련, 선배 혁신가 멘토링 등 제공하고 인식제고 및 네트워킹도 지원
 - ▲ (덴마크) 코펜하겐 시는 "코펜하겐 프로젝트 하우스"라는 창업보육센터를 운영, 스타트업의 인큐베이팅, 다중 파트너 멘토링 시스템, 문화행사 등 개최
 - ▲ (프랑스) 랑그도크루시옹 지역에서는 지역창업보육센터(Alter'Incub)를 통해 12개월 과정의 창업보육프로그램*을 시행
 - * 개인, 집단, 외부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네트워킹, 시장조사, 재정 및 사업계획, 집단훈련 등 제공
 - ▲ (독일) 사회적기업의 금융 지원을 위해 "사회적기업정신을 위한 금융기관 (FASE)" 및 "PHINEO" 운영
 - ▲ (영국) "빅포텐셜"이라는 투자준비 지원프로그램을 운영, 자조기업, 지역공동체 기업 및 사회적기업 투자 또는 공공계약 수주를 지원
 - ▲ (스페인) 공공조달을 활용하여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사회책임 공공조달을 위한 시의회 법령"*을 제정(바르셀로나)
 - * (예) 직원 50명 이상 기관은 공공조달 기업 선정 시 최소 5% 이상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직원을 고용한 기업을 선정하여야 함

사회주택 활성화 방안

2019. 2.

국토교통부

사회주택 활성화 방안

2019. 2.

국토교통부

1. 추진배경

- 공공과 민간으로 이원화된 주택공급체계의 한계를 매워주는 대안 필요
 - 공공임대주택은 개발 가능 택지부족, 재원부담으로 인해 지속적 공급확대가 어렵고, 낙인효과 등 사회갈등을 유발
 - 민간임대주택은 높은 임대료 등으로 취약계층 주거문제 해결에 한계
- 주거와 경제활동 공간의 분리, 제테크 수단으로 이용 등 주거공간이 더 이상 삶의 터전으로 기능하지 못하면서 공동체 형성 미흡

2. 추진성과 및 한계

- 공공과 민간의 주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주거종합계획('16.5), 주거복지로드맵('17.11) 등을 통해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중
 - 자금조달(기금 대출상품·HUG 보증 등)·행정(HUG 산하 지원센터 설립) 지원 및 LH 보유부지 활용 시범사업(고양삼송, 수원조원) 등
- 그러나, 아직까지 사회적경제주체의 역량 및 타부처 정책과의 연계 부족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데는 다소 미흡

3. 사회주택 활성화 방안

< 추진 방향 >

[비전] 주거취약계층이 저렴하게 오랜기간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주거환경 조성

- ◆ 다양한 사업모델의 사회주택을 공급, 주민참여 등 사회가치 실현
- ◆ 자금조달 지원 및 교육·컨설팅을 통한 사회적경제 주체 역량 제고
- ◆ 중앙-자치단체-사회적경제주체로 협의체 구성·운영 등 활성화 기반 구축

① 사회주택 공급 확대

- (안정적 주거공급)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밀착, 수요 맞춤형으로 공급 ('19년~'22년 매년 2,000호), 개발 가능한 토지 발굴 및 시범사업 지속 실시
 - 서울시는 본격적으로 공급확대(매년 1,500호 이상 공급 예정), 인프라가 취약한 다른 자치단체는 소규모 시범사업 위주 실시
 - * '19년 토지임대부 900호, 리츠형 200호, 준주택 리모델링 250호 매입임대 운영위탁 70호 등
 - LH는 '19년부터 매년 500호(토지임대부 300호, 매입임대 운영위탁 200호)
 - * 토지임대부(또는 리츠형) : 지자체(또는 리츠)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사회적경제주체에게 장기 임대하여, 대상 토지에 사회주택 건설 및 임차인 모집 운영하는 방식
- (맞춤형 사업모델 발굴)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입주대상을 넓게 설정하되, 수요자 특성에 맞는 사회주택 공급
 - 전국단위로의 확산을 위해 농촌형 사회주택 등 지역·환경 특성에 맞는 사업모델과 프로그램*도 개발
 - * 청년 대상의 세어하우스, 신혼부부를 위한 돌봄서비스, 고령자 노노(老老)케어 등
- (공공성 확보) 사회주택 공급을 위한 기금지원 요건에 공공성을 반영하고, 심사 시 외부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운영
 - 입주자격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3인 500만원) 120% 이하 무주택자 / 전체 세대의 40% 이상 주거취약계층(공공주택특별법)에 공급
 - 임대가격은 주변시세 85% 이하, 기간은 15년 이상 공급
 - * (심사절차) 신청→자문위원회→영업점심사→본점심사→보증 발급

② 다양한 사회가치 실현

- (주민참여 제고) 복지·문화·일자리 등 각종 정부정책이 사회주택을 통해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 초기부터 지자체·지역주민 참여

- (공동체 코디네이터) 공모 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공동체 코디네이터*로 양성하여 위촉, 입주초기부터 공동체 활성화 지원

* 사업계획 단계에서 민간사업자 자율적으로 위촉하되, 필요시 해당 사회주택의 컨셉에 맞는 전문가를 지자체, LH, HUG 등이 추천

- 주민과 함께 프로그램 기획·실행, 외부자원 연계 활동 등을 통해 입주민의 공공의식 변화·참여 유도(서울시는 자체 운영 중)

3 사회적경제주체 지원 및 역량 강화

- (지원체계 구축) 사회주택 공급 관련 금융·행정지원을 위한 HUG의 '사회임대주택 금융지원센터'(18.6)를 강화하여 전국적 지원체계 구축

- 센터 기능을 기금 지원 위주에서 컨설팅·교육·홍보 등으로 강화

- (자금조달 지원) 주거복지로드맵(17.11)에 따라 도입한 사회주택 건설·매입자금 기금융자* 및 HUG 보증**으로 민간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지원

*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시행세칙에 기금융자를 위한 '사회임대주택' 기금융자 조건 신설(18.3)

** HUG의 PF 보증을 위한 주택사업금융보증규정 및 세칙 개정(17.12)

- (교육 및 컨설팅) HUG 사회주택금융지원센터를 통해 사회적경제·주택사업 및 재원조달 관련 역량 배양을 위한 교육 실시

- 입주자 및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모델 및 사업성 분석·컨설팅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주체의 자생력 및 지속가능성 확보

4 협의체 구성 등 사회주택 활성화 기반 구축

- (협의체 구성·운영)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사회적경제주체, 주택 관련 전문기관 및 사회단체 등으로 상시소통을 위한 협의체 구성

- 우리부는 사회주택 제도 전반과 기본적인 지원을, 자치단체는 사업 승인 및 관리, 세부 지원, 각종 정부정책 연계 등을 담당

□ (관련 정책 연계) 단순 주거제공이 아닌 다양한 관련 정책 실현의 플랫폼으로 사회주택이 기능할 수 있도록 정책 연계 추진

- 사업계획 단계부터 생활SOC, 도시재생, 커뮤니티 케어 등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사회적경제주체 협업 유도(기금 심사시 가점 부여 등)

□ (홍보 강화) 인식제고 및 저변확대를 위해 대중매체, 유관기관 및 단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

- HUG 금융지원센터 홈페이지 등 온라인 플랫폼 개선을 통해 사업자와 수요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

5 추진체계 및 사업참여 방안

□ (추진체계)

중앙정부	지자체	사회적경제주체
정책수립, 제도개선 등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제시 및 기반 조성	지자체 사업 공모 사회서비스 연계 예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사업 공모 참여 - 자체 사업 추진 - 매입임대주택 위탁 운영
	공공기관 (LH등) 기관 사업 공모* (HUG) 기금 융자·보증, 컨설팅, 교육	

□ (사업참여) 사회주택 사업은 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공모에 참여하거나, 사회적경제주체의 자체사업으로 추진

- (공모사업)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사업목적/사업대상지/사업방식 등을 정하여 공모하면, 공모 내용에 적합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 추진

* 참가의향서 제출 →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자 선정 → 약정체결 및 자금조달 → 착공, 준공 및 입주자 모집 등 운영

- (자체사업) 사회적경제주체의 아이디어를 발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HUG 또는 금융기관과 자금조달 방법 협의 후 사업 추진

* 토지 및 사업방식 발굴 → HUG 컨설팅 → 기금 융자·보증 상담 → 약정체결 및 자금조달 → 착공, 준공 및 입주자 모집 등 운영

참고 1

사회주택 사업 방식

1 토지임대부 방식

- 사회적경제주체가 지자체나 지방공사의 미활용 용지를 임대하여 사회주택을 공급·관리하고, 임대 완료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
- * 수원조원에 LH국민임대홍보관 부지를 활용한 시범사업 중('20.下 입주예정/ 45~8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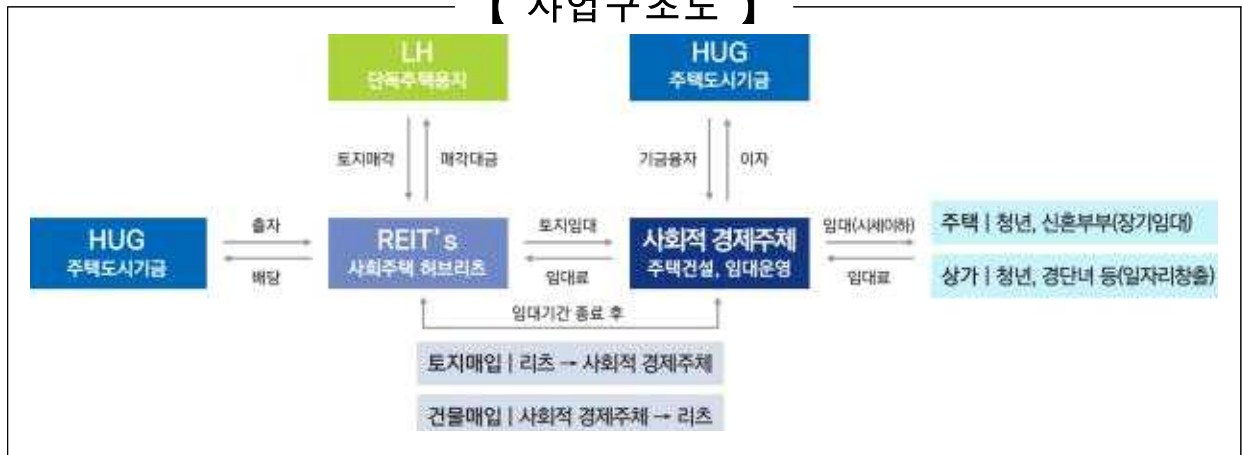
【 사업구조도 】



2 리츠형 토지임대부 방식

- 리츠가 토지(점포주택용지)를 매입하면 사회적경제주체가 이를 임대하여 사회주택을 공급·관리하고, 상가임대수익 및 15년 이상 운영 후 사업청산 시 수익으로 주택임대 손실 보전
- * 고양삼송에 시범사업 중('19.下 입주예정/ 14호)

【 사업구조도 】



③ 매입임대주택 운영위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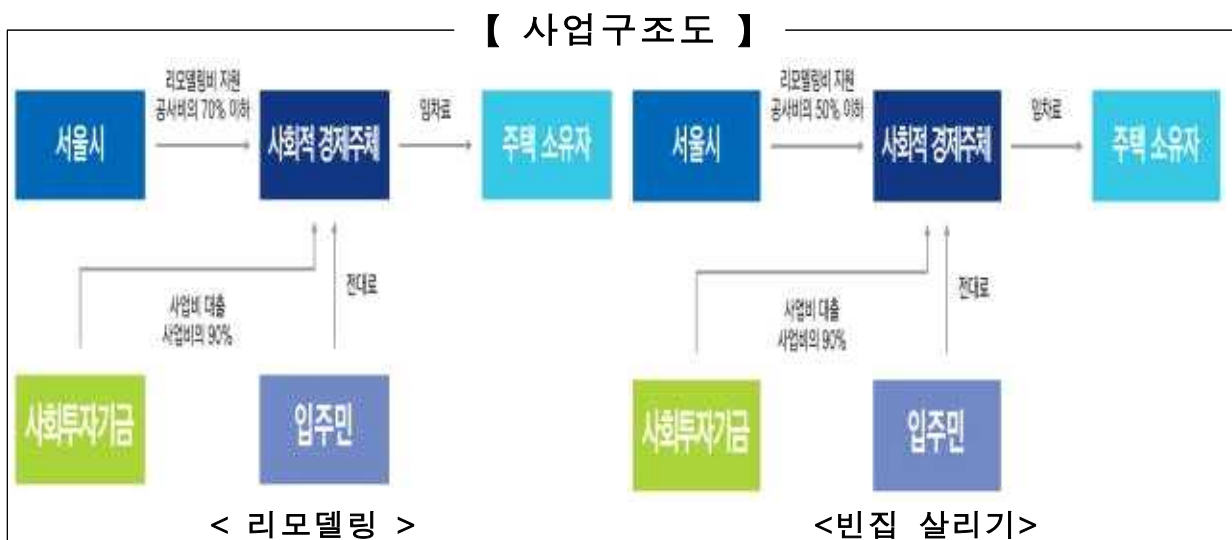
- LH 등이 다가구·다세대 주택 매입 후 사회적경제주체 등 운영 기관에 임대하면, 운영 기관이 대학생과 청년에게 셰어하우스로 재임대

* '16년에 12개 운영기관 선정하여 246호 운영 중,
'18년에 신규로 운영기관 10개를 선정하여 수도권 101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 중



④ 준주택 리모델링/ 빈집 살리기

- (리모델링) 사회적경제주체가 고시원 등 15년 이상된 근린생활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청년에게 재임대
- (빈집살리기) 6개월 이상 빈집을 사회적경제주체가 리모델링해서 청년 등에게 재임대



□ 기금융자 : 사회주택 건설/매입을 위한 장기·저리의 기금융자

- (지원 방식) 토지임대부*, 지자체·공공기관 협업형**, 리츠형*** 등 다양한 사업구조의 사회임대주택 공급을 다각적으로 지원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토지지원리츠 등의 소유토지를 사회적경제주체가 임차하여 사업수행

** 지자체, 공공기관의 신용을 담보로 사회적경제주체와 공동 사업수행

*** 기금, 지자체, 지방공사 또는 LH가 출자·설립한 리츠 등을 통한 사업수행

- (용자대상)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및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경제주체(사회적경제주체에 토지를 임대하는 지자체, 기금 등이 출자한 리츠 포함)

- (대상주택)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인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등) 및 단독주택(다가구 등)

- (용자기간) 최장 30년(20년+ 연장 10년), 만기* 일시상환 구조이며, 매 연장시 당초 용자원금의 5%이상 상환 필요

* 건설자금 용자는 12년, 16년, 20년, 매입자금 용자는 8년, 16년, 20년

- (한도 및 금리) 전용면적 45㎡이하는 세대당 용자한도가 최대 0.5억원, 60~85㎡이하는 최대 1억원으로, 연 2.0~2.8%(변동금리)로 지원

- 용자기간 만료 후 전체세대를 분양전환을 하지 않은 경우 1년마다 금리를 0.1%p씩 인하하여 최대 1.0%p까지 인하

구분	공동주택			단독주택 (다가구)
	45㎡이하	45㎡~60㎡	60㎡~85㎡	
용자한도	최대 0.5억원	최대 0.8억원	최대 1억원	가구당 0.6억 (호당 5억원내)
용자금리(변동금리)	연 2.0%	연 2.3%	연 2.8%	연 2.0%

□ **보증 : 금융기관으로부터 건설/매입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대출보증**

○ **PF보증**

- (보증대상자)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및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경제주체
- (대상주택)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등) 및 단독주택(다가구 등)
- (보증요건) 공공성*, 시공사 수행능력**, 자기자금 선투입*** 등

* 임대료(시세의 85%이하), 입주대상(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이하인 무주택자)

** 신용등급 BB+ 이상 또는 시공순위 500위 이내이거나, 시공실적 최근 5년간 300세대 이상

*** 총사업비의 5%, 토지임대부사업은 20%(단 지자체 등의 매입확약시 5%)

- (보증료율) 심사등급별(3등급 체계)로 연 0.220%~0.668% (매입확약시 연0.1%)
- (보증한도) 총사업비의 70% 이내(매입확약시 최대 90%)

○ **매입자금보증**

- (보증대상자) PF보증과 동일
- (대상주택) PF보증과 동일(단, 단독주택은 매입확약시만 보증취급)
- (보증요건) 공공성(PF 보증과 동일), 자기자금 선투입* 등

* 총사업비의 10%, 토지임대부사업의 경우 20%(단 지자체 등의 매입확약시 5%)

- (보증료율) 연 0.278%(매입확약시 연0.1%)
- (보증한도) 주택유형·지역별 주택가격의 50~80% 차등 적용(매입확약시 최대 90%)

구 분	사회임대주택 PF보증	일반 PF보증	사회임대주택 매입자금보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공사] 신용등급 BB+이상 or 최근 5년간 300세대 이상 실적 (또는 시공순위 500위이내) * 30세대 미만 사업장인 경우 C이상, 시공사 실적요건 면제 ▪ [건축 연면적] 요건 없음 ▪ [자기자금 선투입] 총사업비 5% 토지임대부사업은 20% (지자체 매입확약시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공사] BB+등급 이상 & 시공순위 500위 이내 (or) 5년 실적 300세대 이상 ▪ [건축 연면적] 5천㎡이상 ▪ [자기자금 선투입] 총사업비 5% 토지임대부사업은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자금 선투입] 총사업비 10% 토지임대부 사업은 20%, (지자체 매입확약시 5%)
요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0.220%~0.668% (지자체 매입확약시 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0.605%~1.2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0.278% (지자체 매입확약시 0.1%)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사업비의 70% 이내 (지자체 매입확약시 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사업비의 70%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유형·지역별 주택가격의 50~80% 차등 적용 (지자체 매입확약시 90%)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계획

2019. 3.

관계부처 합동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계획

2019. 3.

관계부처 합동

순 서

I. 추진 배경 및 경과	293
II. 현황 및 문제점	294
III. 목표 및 전략 체계도	296
IV. 실행계획	297
V. 과제별 추진 일정	310

I. 추진 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발달장애*는 아동기 발생 장애로 인지·의사소통·자기 통제 능력이 부족하여 평생동안 특별한 보살핌 필요

* 발달장애인 : 22.5만명(지적 20만명, 자폐성 2.5만명), 전체 장애인(254만)의 8.9%

** 부모도움 비율 : 전체장애인(21%), 지적(72.8%), 자폐(98.5%)

- 발달장애인에 대한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하여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수립·발표('18.9.12)

※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 발달장애인 자립지원과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통해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 및 포용사회 구현
-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욕구기반 '영유아기-학령기-청장년기-노년기-전주기' 구분에 따라 10대 정책과제 24개 세부 이행과제 수립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등에도 불구하고 장애 특성상 다양한 수요를 공적 자원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측면

☞ 지역별·연령별 여건을 고려하여 자조모임 등 민간 자원을 보충적·보완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다양하고 촘촘한 서비스 제공 필요

☞ 정부과 민간사이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키(key) 역할 수행 필요

- (추진경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민간 자원을 포괄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를 활용한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방안' 마련 추진

- 기재부, 복지부, 교육부, 고용부, 문체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합동 TF 구성('18.11.21)
- 파파스윌 사회적협동조합 등 현장 방문을 통해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사회적경제기업 현장 의견 수렴('18.12.11)

II. 현황 및 문제점

- ☞ 그간 발달장애인 자조모임은 민간이 자발적으로 구성·운영, 이를 위한 정부지원도 부처별 분절적으로 수행
- ☞ 자조모임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하여 안정화, 체계화하는 것이 중요하나, 현재 발달장애인 자조모임과 사회적경제기업은 맵아기 상태

□ 자조모임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복지관, 단체 등 기관 중심으로 형성,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부모 자조모임이 활동 중
 - (당사자) 사회 참여적* 또는 여가 문화적 성격의 자조모임 위주
 - * (예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소속 ‘피플퍼스트’
 - (부모) 정부 재정지원을 토대로 형성·운영되어 왔으나, 최근 온라인 맘카페 등을 통한 자생형 자조모임*도 활동 중
 - * (예시) 영유아발달장애 엄마모임 ‘무지개모임’
- (문제점) 생산적인 자조모임 유지를 위한 양질의 정보와 콘텐츠, 공간 등 체계적인 기반 구축은 미약한 상황

□ 발달장애인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발달장애 서비스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은 66개(협동조합 17개, 사회적기업 49개)
 - * 교육, 치료, 돌봄 및 주간활동, 직업재활 및 일자리, 심리치료/부모 교육 등
- 서비스 공급(종류, 양과 규모) 부족 해결, 비용절감 및 품질 향상, 교사 및 전문가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설립
- (문제점) 비전문가 위주 운영, 공간 확보의 어려움, 경영 노하우 미흡 등으로 지속가능한 운영에 애로
 - 또한 기존의 교육, 돌봄, 고용 등 장애인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발달장애인 부모 및 당사자(사회적경제기업)의 직접 참여* 미흡
 - * 방과후 돌봄, 상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협동조합을 위탁하는 형태 등

[참고] 국내·외 자조모임 사례

(1) 미국

- 1974년에 설립된 'People First'를 비롯하여 800개 이상의 자기 옹호 그룹이 운영 중
- 1991년에는 전국 조직인 'Self-Advocates Becoming Empowered(SABE)'를 결성(Missouri People First Members&Advisors)
 - *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재활부(California Department of Rehabilitation)에서는 자기옹호 훈련을 위한 비용을 주 정부 차원에서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 존재, '10년에는 자기옹호 훈련비용으로 7만 달러를 비영리조직에 제공

(2) 일본

- 1989년 '전일본 손을 잡는 육성회(이하 '육성회')를 통해 발달장애인 당사자 활동 시작
 - * 육성회에서는 매년 10~11월에 전국대회 개최, 수천명의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지원자가 참여
- 일본 정부는 2004년부터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활성화를 목표로 본인활동 지원사업 실시 중
 - * 자조모임 당사자 간 회의 및 교류, 역량강화를 위한 학습·세미나 등 지원

(3) 우리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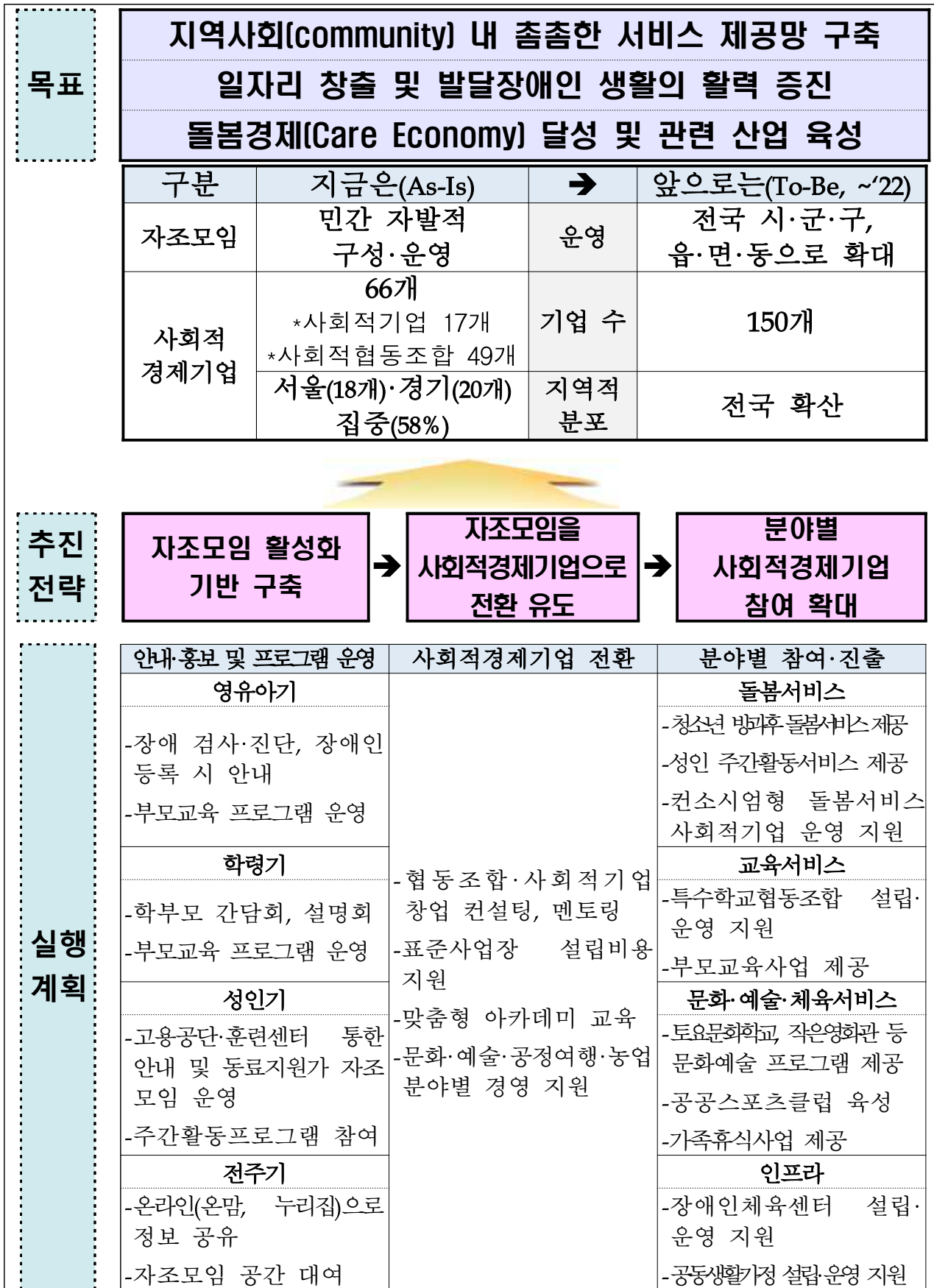
- 2015년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자조단체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

* (제11조) 자조단체의 결성 등

- ①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자조단체(自助團體)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라 자조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부모회 등 기관의 지원 하에 소규모 자조모임이 연대체를 구성하여 조직되는 경향

Ⅲ. 목표 및 전략 체계도



IV. 실행계획

1 자조모임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1. 기존 자조모임에 참여 안내 및 홍보

□ 영유아기부터 성인기까지 생애주기별 자조모임 안내 강화 (복지부)

- (영유아기) 보건소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달장애 정밀검사 및 진단, 장애인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자조모임 안내

* 발달장애인 부모 자조모임 홍보 및 안내

- (보건소) 영유아 발달이상 정밀검사 관련 기관 정보 및 자조모임 관련 안내문 제공
- (건강보험공단) 영유아 발달선별검사결과 심화평가 권고 대상 가족에게 유선상담 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부모 자조모임 안내
-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 등록 신청시 주민센터에서 자조모임 관련 안내문 제공

- (학령기) (특수)학교 내 장애학생 교육적 지원을 위한 진단·평가, 선정·배치 시 학부모 대상 간담회, 설명회 등 자조모임 안내* (교육부)

* 지역 내 발달장애인 부모 자조모임 조직 현황, 성격, 프로그램 등 안내

- (성인기) 발달장애인 훈련센터·장애인고용공단 지사 등을 통해 자조모임 모집공고·프로그램, 우수사례 등 안내 (고용부)

□ 온·오프라인 상시 정보공유를 통한 자조모임 안내

- 인터넷 및 스마트기기 활용 상시 접근 가능한 장애자녀 부모 지원 종합시스템 '온맘' 운영 (교육부)

* 장애학생의 영유아기부터 성인기까지 교육 및 관련서비스 등 다양한 양육정보 제공(www.nise.go.kr/onmam)

- 장애학생 부모 양육 지원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와 자료, 부모 자조모임 정보 등 실제적이고 체계적인 정보 제공

- 장애학생 부모 자조모임 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유도
-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 확대를 위한 정보센터 운영으로 장애인생활체육동호회 클럽 및 생활체육 정보안내, 유선 상담 실시 (문체부)
- (장애인생활체육정보센터 '누리집') 지역별 맞춤형 생활체육, 활동 중인 클럽 정보(경기종목별, 장애유형별 등), 프로그램 및 대회 등 안내
- *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관리 운영 중(<https://sports.koreanpc.kr>)이며,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1577-7976)'를 통해서도 정보 안내 가능

2. 새로운 자조모임 결성 촉진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통한 자조모임 결성 지원 (복지부)

- 부모 자조모임의 활성화 위해 지역발달센터에서 발달장애인·부모 신규 자조모임 모집 공고* 등 지원 강화
- * 대표 홈페이지 : 비로소(www.broso.or.kr) 활성화 통해 자조모임 홍보 및 신규 자조모임 모집, 자조모임 교육 프로그램 등 콘텐츠 제공 추진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지원사업*과 부모 자조모임 연계 활성화
- 부모교육 프로그램 이용자인 부모들의 자조모임 결성을 지원하고, 기존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의 프로그램을 자조모임 프로그램과 연계
- * 발달장애인법(제34조2항) 및 종합대책에 근거, '19년부터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지원사업' 추진 예정

□ 특수교육지원센터*(199개소)의 장애학생 가족지원 사업을 통한 부모 자조모임 결성 지원 (교육부, 고용부)

- * 특수교육대상자 조기발견·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활동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는 센터로, 특수학교, 특수학급이 설치된 초·중·고교

또는 관할지역 관공서 내에 설치(「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

-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 프로그램에 장애학생 부모 자조모임 지원 포함

[참고] '18년 장애학생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례

- (인천) 장애학생 가족을 위한 책자 발간, 학부모 집단상담 지원, 여름방학 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 가족 요리교실 등 특기적성지원
- (제주) 특수교육대상영유아 가족캠프 및 유·초·중 특수교육대상자 가족캠프 운영, 초등학교 입학예정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 연수 등

- 지역 내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기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부모가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또는 강사로 참여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애인고용공단 협업하여 운영·강사 pool 제공

3. 자조모임 활동공간 지원

- 부모 및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조모임 활동 공간 제공 (복지부, 교육부, 고용부)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17개소)와 주간활동·방과후돌봄 제공 기관에서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부모 자조모임 공간 제공 (복지부)
- 자조모임을 결성한 장애학생 부모회를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 ('18년 199개소)나 특수학교('18년 176개교)에 모임 공간 제공 (교육부)
- 교직원 연수 등을 통해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학교 구성원의 자조모임 지원에 대한 공감대 확산
- 발달장애인훈련센터('19년 13개소), 장애인고용공단지사(20개소)에서 자조모임 공간 제공 (고용부)

4. 자조모임이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 지원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사업을 통한 부모 자조모임 지원 (복지부)

- 발달장애인 부모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해 전문가 중심의 이론에서 벗어나 참여 위주 수요자 중심의 자조모임 프로그램 지원
- 부모교육 프로그램* 공통교육과정으로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포함 및 부모교육 수행기관 선정 시 자조모임 프로그램 가점 부여
- * 영유아기 부모교육지원, 성인전환기 발달장애인 자녀 진로상담 및 코칭, 성인권 교육으로 구성

□ 시·도교육청 단위 장애학생 부모 자조모임 활동 공모를 통해 지역 여건 고려한 자조모임 프로그램 지원 (교육부)

- 선정된 자조모임을 대상으로 연수 및 설명회 운영, 사회적협동조합 탐방, 전문가 컨설팅 등 지원*
- * '20~'22년, 매년 5개 교육청 선정
- 장애학생 부모 자조모임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운영의 주요 주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운영 지원
- 자조모임이 특수학교 및 지역 내 유관기관과 연계할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운영 지원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프로그램으로 자조모임을 포함하여 다양한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 지원 (복지부)

-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부모 자조모임 결과보고를 통해 우수 사례 시상 및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바람직한 모델 확산 도모
- * 발달장애인·부모 자조모임 수기 공모 및 시상, 우수사례 발표 및 자료집 제작

< 주간활동 프로그램 예시 >

구분	내용
참여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조모임 : 티타임, 동아리, 독서모임 등 • 산책, 걷기, 수영, 등산, 요가, 볼링, 탁구, 농구 등 건강 증진 활동 • 직장 탐방, 캠프, 여행 • 교육(일상생활 자립, 권리, 성인권 및 안전 교육 등) • (문화관람) 연극 및 영화 관람, 미술관 및 박물관 이용 등
창의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조모임 : 목적이 있는 특정 활동의 기획 회의, 계획, 수행 등 제반활동 • 음악활동 : 악기 연주, 노래 부르기, 중창이나 합창, 난타배우기 등 • 미술활동 : 그림그리기, 작품 감상, 한지 공예 작품 만들기, • 바리스타 교육, 가드너, 제과제빵, 양초공예 등 • (도예) 흙으로 생각 표현, 창작품 만들기, 생활도자기 만들기 • (사진 찍기) 카메라 관리, 사진 찍기, 사진 인화방법 • (공예품 만들기) 목공예, 비누공예 등

□ 동료지원가(발달장애인)와 발달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직업생활 관련 자조모임 지원(고용부)

○ 직업체험, 발달장애인 고용 사업장 및 사회적기업 방문 등 직업 생활을 위한 자조모임활동* 지원

* 예 : 실제 사업장과 유사하게 구성된 발달장애인훈련센터 내 직업체험관, 지원고용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장애인 현장훈련이 진행 중인 사업체 방문

□ ‘찾아가는 장애인 문화예술학교’ 운영을 통해 자조모임 문화교육 프로그램 참여 지원 및 발달장애인 전문 예술 활동 기회 제공 (문체부)

○ 지적, 자폐성 장애인 중심(450명)으로 5개 분야·총 45개 과목 운영

- ① 클래식 음악(현악기, 관악기) ② 무용(창작무용, 전통무용, 발리댄스 등)
 ③ 미술(순수미술, 도예) ④ 실용음악(마칭밴드, 퓨전밴드, 우쿨렐레, 등)
 ⑤ 전통음악 (향피리, 가야금, 아쟁) 및 전통공연 (사물놀이, 국악, 안동탈춤 등)

* 주관 : (사)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 ('18년 성과) 전국 14개 시·도내 문화예술학교 16개소 운영, 3,799회 교육

- 발달장애인 자조모임에 생활체육교실 및 생활체육동호회 지원 및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파견 (문체부)

사업명	사업구성	추진방안
생활체육교실	① 지체장애교실, ② 지적장애교실, ③ 청각장애교실, ④시각장애교실, ⑤ 혼합 및 기타유형교실	17개 시도장애인체육회를 통해 교실 및 동호회 지원
생활체육동호회	생활체육종목 동호회 지원 (장애인 가맹종목, 국제대회 경기종목 등)	

- 발달장애인 자조모임이 전국에 조성된 열린관광지* 나눔 여행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확대 (문체부)

* 휠체어·유모차 이용자, 시니어 등 신체적 사유로 관광활동에 제약이 있는 이들이 최소한의 관광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개선한 관광지('18년말 기준 누적 29개소)

- (참가대상) 관광취약계층(장애인, 시니어, 영·유아동반자 등, 1회당 20여명)
- (주관기관) 한국관광공사

- 발달장애인, 부모 등으로 구성된 농촌지역 공동체(10인 이상) 대상 체육활동, 마을가꾸기 등 프로그램 운영 지원 (농식품부)

- 발달장애인이 참여하는 공동체에 대해 사업 계획·실적 평가 시 가점을 부여

* 농촌 교육문화복지지원사업 : 농촌주민 10~15명 이상 공동체(면단위)에 교육·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지원('19년 : 장애인 참여 8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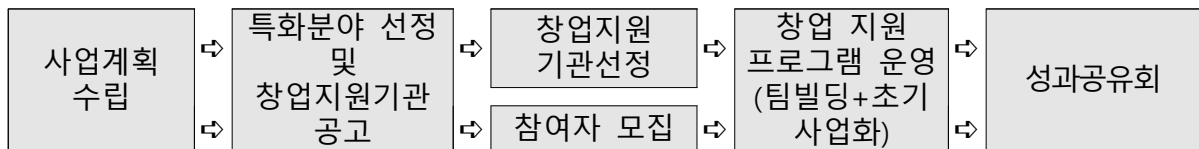
** (전북 완주 새힘원) 마을주민·장애인 공동체가 비즈공예, 클레이아트 프로그램 운영

2 자조모임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 및 정착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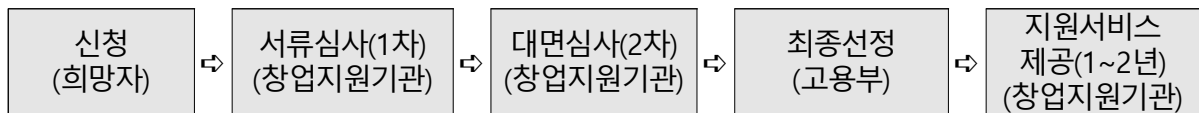
1.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지원

- 협동조합·사회적기업 창업 지원사업을 통해 부모 자조모임 등 대상으로 창업 프로세스 구축 및 초기 창업지원 (기재부, 고용부)
-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업 창업을 원하는 자조모임에 맞춤형 컨설팅, 장애인고용 친화적 기업(사회적기업)과 멘토링 등 지원

< 협동조합 창업지원 사업 추진절차 >



< 사회적기업 창업지원 신청 절차 >



* '18. 사회적기업 2,122개소 중 장애인을 고용한 사회적기업은 699개소(32.9%)

- 사회적경제기업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창업지원(5개소) (고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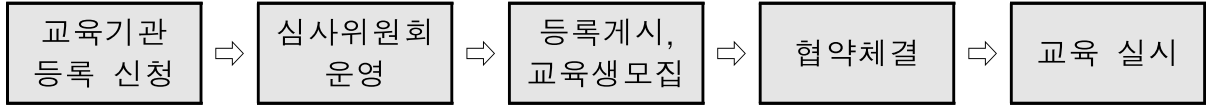
- 시설·장비 구입비, 제품 및 기술개발비, 홍보 및 마케팅 비용 등 창업비용 지원(최대 5천만원 한도)

* 지원대상 :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을 설립하여 3년 이내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증 받을 사업주

- 작업시설, 편의시설 비용, 장애인 출퇴근용 승합차 구입비용 등 최대 10억원 한도(장애인 1인당 3천만원 지원) 내에서 설립·운영비 지원
- 판로 및 운영지원을 위해 최초 3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 100%, 그 다음 2년간 50%를 면제하고, 공공기관에게 표준사업장 생산품에 대한 우선 구매의무 부과(0.3%)

- 협동조합 맞춤형 아카데미를 통해 발달장애인 협동조합 창업을 위한 특화교육 추진 (기재부)

<협동조합 맞춤형 아카데미 추진 절차>



- 협동조합·사회적기업 전문상시상담기관* 운영 및 경영코칭**을 활용하여 운영에 필요한 역량 강화(기재부, 고용부)

* 법무, 회계·세무, 인사·노무 관련 상시 질의·답변 가능한 게시판 운영

** 성장단계별 현안 진단, 적합한 전문가를 매칭하여 컨설팅

2. 분야별 맞춤형 경영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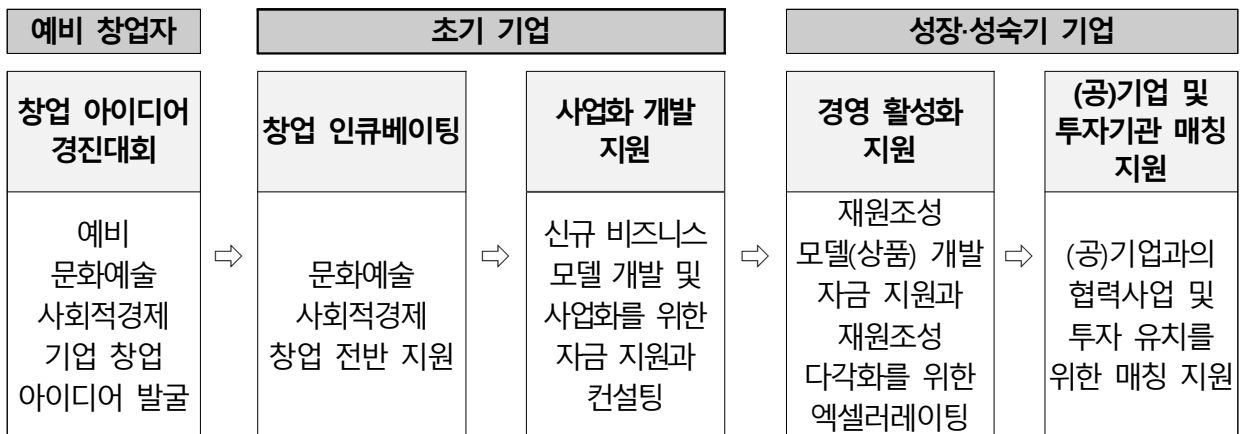
-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경제기업 맞춤형 경영 지원 확대 (문체부)

- (지원대상) 사회적기업 뿐 아니라 사회적협동조합, 소셜벤처 등까지 경영지원 대상 확대*

* '18년 10억원 → '19년 39억원

- (단계별 지원) 아이디어 발굴부터 창업, 초기·성장·성숙기까지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추진

【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내용 】



【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협동조합 활동 및 지원사례 】

※ (드림워드앙상블) 국내 최초('15년) 발달장애인 클라리넷앙상블로 연주 및 강연, 장애 인식 개선, 연주 재능기부 등을 수행, '17년 재원조성 컨설팅 지원을 통해, 고용창출, 매출액 및 기부·후원 모금액 증가

□ 공정여행* 특화형 사회적경제 창업 육성지원 (문체부)

* 생산자와 소비자가 대등한 관계를 맺는 공정무역(fair trade)에서 따온 개념으로, 현지의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현지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여행을 의미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고용부)' 연계를 통해 공정여행 분야 창업 및 관광분야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성장 유도·지원

* ('19년 특화분야) 공정여행 분야 / (창업지원기관) (사)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공제사업단 / (전문멘토) 트레블러스맵 활동가

□ 발달장애인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조직 지원 (농식품부)

○ 발달장애인이 농업 기술과 공동체 활동을 익힐 수 있는 사회적 농업을 지원하여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자립 지원

-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사회적 농장 확산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농업 직업훈련 기회 확대('19, 18개 → '22, 70개)

- 사회적 농장 선정 시 발달장애인이 사업주체이거나 사업대상인 경우 가점 부여를 통해 발달장애인 지원 확대 추진('20~)

- 사회적 농업 : 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돌봄·교육·고용 등을 제공하는 농업활동('19: 18개소)
- '18년도 사회적농장 4개소가 발달장애아동 및 성인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농업 체험, 농업 직업교육 등 실시
- (전북 완주) 발달장애아동 가족과 고령농업인이 멘토·멘티가 되어 채소를 재배하는 사회적 농업 활동 수행, 판매 수익금을 기반으로 협동조합 설립 구상 중

③ 분야별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및 진출 확대

1.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 공급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 서비스 제공 (복지부)

- 방과후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및 협력기관*으로 사회적 경제 기업이 진입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참여 확대 추진

* 19년 7월 도입하는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 서비스 관련 제공 기관 및 협력기관에 관한 구체적 기준 마련 중

☐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복지부)

- 주간활동 서비스 제공기관* 및 협력기관**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이 진입할 수 있도록 개선

* 시·군·구청으로부터 주간활동서비스의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아 주간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주간활동 제공기관과 연계(계약 체결 등)하여 이용자에게 체육, 미술, 음악이나 각종 취미나 여가활동 등의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협력기관

※ (협력기관 예시) :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민간 학원(음악, 미술 등), 체육관/주민체육 시설(수영, 검도, 태권도, 볼링, 헬스 등), 각종 체험교실, 공방(요리, 제과제빵, 바리스타 등), 평생교육센터, 진로교육센터, 직업체험장, 치료·감각통합센터, 카페, 레스토랑 등

☐ 발달장애인 돌봄을 위한 컨소시엄형 사회적기업 지원 (고용부)

- 발달장애인에 돌봄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기업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사업비 지원(3억 한도)

2. 발달장애인 교육 서비스 공급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사업과 사회적경제기업 연계 강화 (복지부)

- 발달장애인 사회적협동조합이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사업 수행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침 개정

※ (우수사례) 파파스윌(Papaswill) : 발달장애인 부모 자조모임에서 시작하여 발달장애인 부모, 특수교사, 장애인 권익옹호 활동가들과 함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주요사업으로 **직업재활사업, 당사자 자조모임지원** 등 수행

□ 특수학교협동조합 설립·운영 지원 등 **특수교육 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분위기 조성**(교육부)

○ 장애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특수학교협동조합 설립·운영을 위한 지원 강화**

* 학교협동조합 중앙지원센터(국가평생교육진흥원)와 연계하여 학교 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지원(교육 콘텐츠 보급, 연수 및 컨설팅 지원 등)

- **교육부-시·도교육청 간 협력을 강화**하고, 특수학교 현장의 상황을 이해하여 밀접한 지원·관리가 가능하도록 교육청 역할 확대

○ 특수학교를 중심으로 학교 내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사례 공유** 및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

[참고] 특수학교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사례

- (밀알학교) 발달장애인 등의 사회적응 및 취업훈련을 위해 직무중심의 현장실습형 매점 사업 및 사회적경제 교육 활성화를 위한 테스트마켓 사업 추진('18.3.~)
- (새솔학교) 장애학생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사회적협동조합 새솔학교 지점인 '하울림' 카페를 김포교육지원청 내에 운영하여 카페 운영 및 물품 판매('18.3.~)

□ **동료지원가(장애인)를 활용한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직 등 경제활동 참여 유도(고용부)

○ 동료상담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취업의욕을 고취**하고 **직업훈련 프로그램 및 취업 정보 제공***('19년 9,600명)

* 자치단체가 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등 장애인 유관기관('19년),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20년)을 수행기관으로 선정

3. 발달장애인 문화·예술·체육 서비스 공급

□ 사회적경제기업의 문화·체육 시설 및 프로그램 참여 기회 확대 (문체부)

○ (독서문화 프로그램) 인지·행동 특성에 전문성을 갖춘 발달장애 사회적경제기업 프로그램 위탁 기회 제공

- 전국 공공도서관 및 발달장애인 복지시설과 연계, 「장애인(시각·청각·발달·지체 등) 독서문화프로그램」 위탁 사업자 선정에 참여

* (예시) 함께 읽고 생각 나누기, 글쓰기, 지역도서관 견학, 독서문학기행 등

○ (토요문화학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등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운영단체 공모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유도

* 공모를 통해 '18년 총 825개 중 사회적경제 조직 72개(8.7% 포함) 선정

○ (작은영화관 확충) 극장 부재 지역 대상 소규모 상설 영화관 (100석 내외) 건립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기회 확대

* ('17년) 32개소 중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작은영화관은 22개소 (68.8%)

※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 기초지자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작은영화관을 개설, 문화소외계층 문화 향유권 확대 및 지역간 문화불균형 해소

- '19년 지체장애인과 가족들이 편안하게 영화 관람할 수 있는 국내 최초 장애인 전용 '동행영화관(1개소)' 설립 예정

○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설립 지원 및 스포츠클럽 운영 확대 근거 마련

- 지역단위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해 지원센터 개념의 비영리법인 76개('18년 기준) 선정·지원*(선정→법인설립→3년간 연 2~3억원 지원)

* '22년까지 '1시군구 1스포츠클럽' 완성 목표(232개 클럽 육성)

- 지자체 생활체육시설의 스포츠클럽(비영리단체, 사회적협동조합) 위탁* 등이 포함된 「스포츠클럽 육성법」 제정 추진

* 272개 체육 시설 중 스포츠클럽 위탁 시설은 106개(39%) 수준, '17년 기준


- (가족휴식)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휴식 지원 사업*에 사회적경제기업이 수행기관으로써 참여 활성화 유도 (복지부)

* 힐링캠프(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테마여행(역사, 문화, 기관방문) 등, '19년 11,030명 지원

4. 인프라 공급

- 생활 SOC 운영 주체로 발달장애 사회적 경제 조직 참여 확대 (문체부)

- 장애인체육센터(반다비체육센터) 등 시설운영 주체에 사회적 협동조합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

<예 시> 생활밀착형 장애인체육센터 “반다비체육센터”	
	○ 장애인의 우선 이용권을 보장하되,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하는 통합 체육시설로서 지역 맞춤형 모델 선택
	○ 목표 : 총 150개소 / '19년~'23년 매년 30개소 신규 조성
	○ 유형 : 체육관형, 수영장형, 종목특화형 모델 중 지역수요 맞춤 설계

- 발달장애인 사회적협동조합이 공동생활가정 등 관련 사회복지 시설의 설립·운영의 주요주체로 참여토록 지원 강화* (복지부)

* 그룹홈 설립·운영, 그룹홈 우수사례 공유 등 실제적이고 체계적인 정보 제공

- 공동생활가정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19~)

* 적정 이용 인원 설정 및 의료 특화 공동생활가정 도입 등 유형 다양화 연구

-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19년 25천명),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제공주체로 사회적협동조합이 참여하도록 사업시행 시 적극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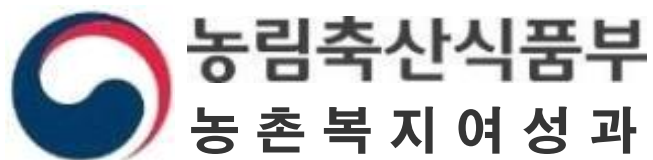
V. 과제별 추진 일정

정 책 과 제 명 [33개]	추진일정	주관부처
1.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1-1. 기존 자조모임에 참여 안내 및 홍보		
1-1-1. 영유아기부터 성인기까지 생애주기별 자조모임 안내 강화	‘19~	복지부, 교육부, 고용부
1-1-2. 온·오프라인 상시 정보공유를 통한 자조모임 안내	‘19~	교육부, 문체부
1-2. 새로운 자조모임 결성 촉진		
1-2-1.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통한 자조모임 결성 지원	‘19.上~	복지부
1-2-2.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장애학생 가족지원	‘19~	교육부, 고용부
1-3. 자조모임 활동공간 지원		
1-3-1.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주간활동·방과후 돌봄 제공기관에서 공간 대여	‘19~	복지부
1-3-2. 특수교육지원센터나 특수학교에 모임 공간 제공	‘20~	교육부
1-3-3.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장애인고용공단지사에서 공간 제공	‘19~	고용부
1-4. 자조모임이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 지원		
1-4-1.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사업을 통한 부모 자조모임 지원	‘19~	복지부
1-4-2. 시·도교육청 단위 장애학생 부모 자조모임 활동 공모	‘20~	교육부
1-4-3. 발달장애인 자조모임을 주간활동 프로그램으로 구성	‘19.3~	복지부
1-4-4. 발달장애인 직업생활 관련 자조모임 지원	‘19~	고용부
1-4-5. 문화예술 교육 과정에 발달장애 자조모임 참여 유도	‘19~	문체부
1-4-6.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체육활동 지원	‘19~	문체부
1-4-7. 열린관광지 나눔여행 참여 기회 제공	‘19~	문체부, 고용부
1-4-8. 농촌지역 발달장애인 공동체 프로그램 지원	‘19.下~	농식품부
2. 자조모임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 및 정착 유도		
2-1.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지원		
2-1-1. 발달장애인 부모 자조모임 등 대상으로 협동조합 창업 프로세스 구축 및 초기 창업지원	‘19~	기재부, 고용부
2-1-2. 사회적경제기업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해 법인세·소득세 면제 또는 감면 등 지원	‘19~	고용부

정 책 과 제 명 (33개)	추진일정	주관부처
2-1-3. 협동조합 맞춤형 아카데미를 통해 발달장애인 협동조합 창업을 위한 특화교육 추진	'19~	기재부
2-1-4. 전문상시상담기관 운영 및 경영코칭을 활용하여 협동조합 운영에 필요한 역량 강화	'19~	기재부, 고용부
2-2. 분야별 맞춤형 경영 지원		
2-2-1.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경제기업 맞춤형 경영 지원 확대	'19~	문체부
2-2-2. 공정여행 특화형 사회적경제 창업 육성지원	'19~	문체부
2-2-3. 발달장애인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조직 지원	'19.下~	농식품부
3. 분야별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및 진출 확대		
3-1.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 공급		
3-1-1.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 서비스 제공	'19.7~	복지부
3-1-2.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19.3~	복지부
3-1-3. 발달장애인 돌봄을 위한 컨소시엄형 사회적기업 지원	'19~	고용부
3-2. 발달장애인 교육 서비스 공급		
3-2-1.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사업과 사회적경제기업 연계 강화	'19~	복지부
3-2-2. 특수교육 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분위기 조성	'20~	교육부
3-2-3. 동료지원가를 활용한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19~	고용부
3-3. 발달장애인 문화·예술·체육 서비스 공급		
3-3-1. 독서문화 프로그램에 위탁 기회 제공	'19~	문체부
3-3-2. 토요문화학교 등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공모에 참여 유도	'19~	문체부
3-3-3. 소규모 상설 영화관 건립에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확대	'19~	문체부
3-3-4.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설립 지원 및 스포츠클럽 운영 확대 근거 마련	'19~	문체부
3-3-5. 가족휴식 지원사업에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활성화 유도	'19~	복지부
3-4. 인프라 공급		
3-4-1. 생활 SOC 운영 주체로 발달장애 사회적 경제 조직 참여 확대	'19~	문체부
3-4-2. 공동생활가정 등 사회복지시설 설립·운영의 주요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19~	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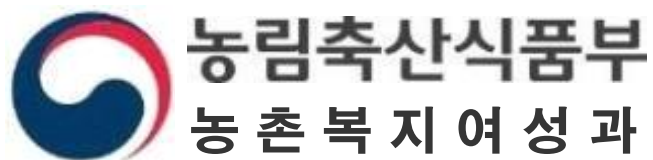
사회적 농업 추진전략(요약본)

2019. 3.



사회적 농업 추진전략(요약본)

2019. 3.



- 농촌의 산업구조가 다각화되고 농촌인구가 다양해지면서 농업·농촌의 가치 재조명
 - 농촌 인구의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귀농·귀촌인의 지속적 유입으로 농촌에서의 새로운 활동 가능성 증대
 - * 귀농귀촌가구: ('13) 291,040호 → ('15) 329,368 → ('17) 346,759
 - 농촌에서는 농업 생산활동 외에도 자연 경관, 전통문화, 공동체 등 농촌다움을 활용한 관광·융복합산업 등 다양한 활동이 전개
 -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1,073개소, 관광농원 655, 융복합산업인증 1,397('17년)
 - 장애학생 대상 농업 체험교육, 고령영세농업인과 연대한 공동생산·가공 등 농업을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
- 해외에서는 농업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시도가 활발하게 전개
 - 이탈리아는 '70년대 이후 사회적협동조합 중심의 사회적 농업이 활발하고, 정부기관 간 협력을 위한 사회적 농업법 제정('15)
 - 네덜란드는 정부에서 농장에 돌봄 비용을 지불하는 돌봄농업이 활성화, 일본은 장애인의 농장 취업을 지원하는 농복연계 정책*을 추진
 - *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이 협력하여 농장에 시설·교육·기술·인력 등 지원
- 농촌 사회적경제 기반 조성을 위해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18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시범사업을 비롯한 정책 추진
 - * 국정과제 81-3. 농산어촌 지역경제 활성화
 - 사회적 농업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 내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적 농장(9개소)에 운영 및 네트워크비 지원(국비 378백만원)
 - 복지·교육기관 등과 협력하여 장애인, 고령자, 범죄피해가족, 다문화여성 등을 농업활동에 참여시켜 돌봄·교육·일자리 등을 제공

< 사업 개요 >

- ◆ 사회적 농업은 농업활동을 통해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사회통합과 자립을 도우며 함께 살아가는 활동
- ◆ '18년부터 사회적 농장을 선정하여 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비를 지원(개소당 6천만원, 국비 70%, 지방비 30%)

□ (네트워크) 사회적 농업이 농업과 복지의 융복합적인 영역임을 고려할 때 기관 간의 협력 관계 형성이 필수

- 사회적 농업 참여자 모집, 프로그램 구성·평가, 인적·물적 자원 확보 등을 위해 복지기관 등 지역사회 협력망의 중요성 재확인
- 각 농장 활동의 발전을 위한 사회적 농장 간 상호 정보 교환 및 체계적인 홍보 활동 필요

□ (교육)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서는 사회적 농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 기회 확대 필요

- 지역 여건·대상자·분야에 따라 사회적 농업의 형태가 다양하므로 농장별로 선도 농가의 멘토링이 효과적
- 농업인은 대상자(장애인·범죄피해자)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며, 복지·교육기관에도 농업의 특성에 대한 교육 필요

□ (운영) 사회적 농업 활동 지속을 위한 경영 및 인프라 보완 필요

- 농업 경영과 사회적 농업의 비중 조절 및 생산품 판매 지원 필요
-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농장 주변 시설 보완과 인력 확보 중요
- 장기적으로는 복지제도 연계 등 제도적 지원 바람직

* 네덜란드는 사회보험을 통해 사회적 농장에 돌봄서비스 비용 지불

비 전

“사회적 농업을 통해 함께 사는 따뜻한 농촌 실현”

목 표

- ▶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농장 확대
- ▶ 농촌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 활성화
- ▶ 농업계 내외에 농업·농촌의 가치 확산

연차별
주요과제

기반조성('19~'20)	도약('21~'22)	확산('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농장 확대 ('19: 18개소→'20: 30) ▲ 온라인 플랫폼 구축('19) ▲ 성과지표 개발('19) ▲ 지원센터 설치('20) ▲ 법적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농장 확대 ('21: 50개소→'22: 70) ▲ 분야별 거점농장 운영 ▲ 사회적 농업 교육홍보 지속 확대 ▲ 돌봄공동체 조성(~'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농장 확대 ('23: 100개소) ▲ 등록제 도입('23~) ▲ 공공기관 구매 추진 ▲ 커뮤니티 케어 등 복지제도 연계 추진

분야별
주요과제

1. 인지도 제고

- 온라인 채널 홍보, 농업인·지자체 대상 교육

2. 사회적 농장의 체계적 육성

- 예비 사회적 농장 및 거점농장 도입, 역량 강화, 등록제 도입

3. 운영의 지속가능성 확보

- 사회적 농업 사업비 지원, (가칭)돌봄공동체 조성, 제도적 지원

4. 생산물 판매 지원

- 로컬푸드 연계, 사회적 농업 생산물 홍보 및 구매 활성화

5. 네트워크 구축

- 지역 네트워크 지원 및 체계 구축, 사회적 농업 협의체 확대

6. 제도적 기반 구축

- 사회적 농업 연구 추진, 법적 근거 마련, 지원센터 설치

1. 인지도 제고

□ 사회적 농업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잠재적 구매자 확대를 위해 온라인 채널을 활용하여 사회적 농업의 가치 전파

○ 농식품블로그기자단을 활용하여 사회적 농업 온라인 플랫폼*에 사회적 농장의 활동을 정기적으로 소개

- 대한민국 농식품 미래기획단(YAFF)**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홍보 추진

* 사회적 농업 정책·사례 소개, 생산품 홍보·판매 지원 플랫폼(10월 구축 예정)

** 농식품 취업정보 공유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6,895명)

○ 소비자단체가 사회적 농업을 이해하고 사회적 농장과 교류하며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 홍보 활동 지원

* 사회적 농장 방문 및 사회적경제박람회(7월, 광주) 견학 추진

□ 교육을 통해 귀농·귀촌인을 사회적 농업 인력으로 육성하고, 지역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공무원의 이해도 제고

○ 다양한 재능을 가진 귀농·귀촌 희망자 대상의 사회적경제 교육을 신설하고 사회적 농업 활동 소개

* 귀농귀촌 종합센터 교육 과정(67개) 內 사회적경제 의무 과목 편성 추진

* 농업농촌교육훈련사업, 농업인 국외훈련사업을 통해 농업인 교육 추진

○ 귀농·귀촌인이 자원봉사자·협력농가가 될 수 있도록 귀농귀촌 박람회를 통해 사회적 농업을 보람있는 농촌생활 아이템으로 홍보

○ 현장을 밀착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 공무원 대상 교육 추진

- ‘사회적 농업과 공동체활성화 과정’ 운영(8월, 교육원), 중앙·지방공무원 대상 사회적경제 교육에 사회적 농업의 이해 포함(‘18, 중공교)

* 일본 교토부는 청사에서 사회적 농업 마켓을 정기 개최하는 등 지자체 지원 활발

- 사회적 농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유럽·일본 등 선진지 견학 추진(연2회)

2. 사회적 농장의 체계적 육성

□ 사회적 농업 활동에 진입하려는 농장을 사회적 농장으로 육성하는 ‘예비 사회적 농장’ 제도 도입

○ 사회적 농업 사업 참여의지가 있는 농업법인 등*을 예비 사회적 농장으로 분류하여 정책사업 관련 정보 제공

* 지원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곳(지자체에서 농촌지역 소재, 중복지원 등 적격요건 검토)

○ 사회적 농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여 실제 사회적 농장 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행사·공모 사업 등 참여 안내

* 기획공모·교육원 교육, 사회적경제 박람회, 사회적 농업 사업 공모, 토론회 등

□ 분야별 거점 농장을 지정하여 사회적 농장에 대한 교육·네트워크 중심 기관으로 운영(‘20년 5개소)

○ 거점 농장은 (예비)사회적 농장에 대한 자문, 현장 교육 및 인근 농가에 사회적 농업 활동을 확산하는 역할 수행

* 사회적 농업 인력 육성에 대한 교육비 및 전담인력인 전문매니저 비용 지원 추진(예산 확보 필요), 경영공시 의무 부여

○ 거점 농장과 네트워크를 맺은 복지·교육·보건 기관 등과 신규 사회적 농업 활동 희망 농장들 간에 연결망 형성

* 일본 교토부는 지역별 거점농장을 중심으로 사회적 농장 교육 및 협력체계 구축

* '20년도에는 1차적으로 '18년도 시범사업자 중 분야·지역을 고려하여 지정

□ 농가의 사회적 농업 실천 역량을 강화하고 등록제를 도입하여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농장 확산

○ 거점 농장을 중심으로 분야별 세미나를 개최하여 참여자(사회적 약자)의 장애·대응방법 등에 대한 이해 제고, 운영 사례를 공유

* 사회적 농업 사업비 및 상향식 학습조직 지원사업 활용하여 세미나 개최

○ 사회적 농업 해외 연수를 통해 우수 사례 벤치마킹 및 사회적 농장 간 유대 강화 추진

* 1년차 사업자: 하반기 일본, 2년차 사업자: 상반기 유럽(사회적 농업 사업비 활용)

○ 사회적 농업 전문가 풀을 구축하여 각 농장의 사회적 농업 방향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컨설팅 지원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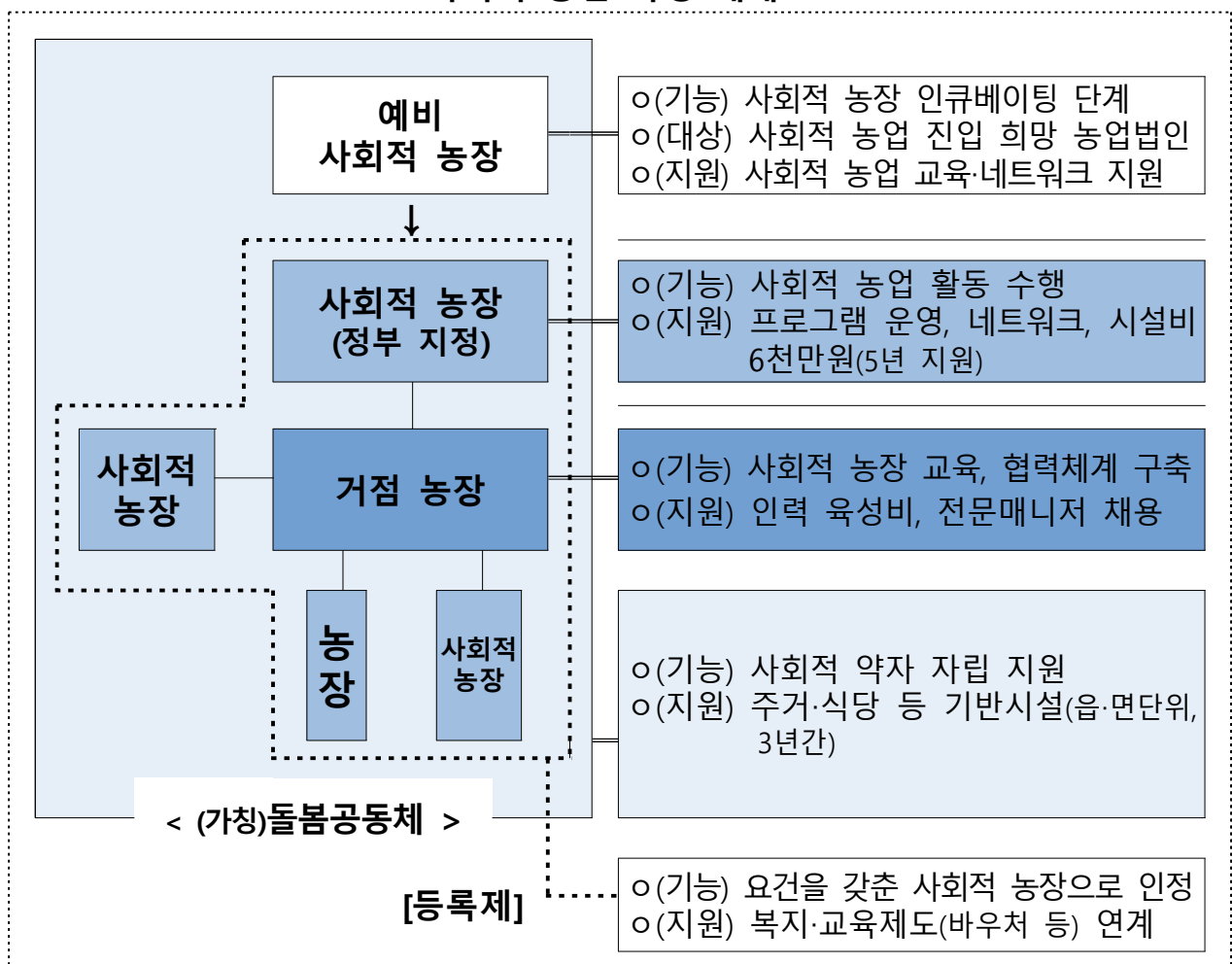
* 컨설팅이 필요한 농장이 사업비를 활용하여 전문가 컨설팅 이용

○ 향후 사회적 농장의 구체적인 요건 마련 후 등록제를 도입하여 정부가 인정하는 사회적 농장 확산 추진('23~)

* 사회적 농장 개소수 확대를 위해 인증보다 진입장벽이 낮은 등록제로 추진

** 등록처는 지자체 또는 민간 협회 등에 위탁하는 방안 검토(네덜란드는 농업부와 사회적농업협회가 인증 기준을 만들고, 협회에서 인증 심사 주관)

< 사회적 농업 육성 체계도 >



3. 운영의 지속가능성 확보

- 사회적 농장 중 일정 요건을 갖춘 농장에 대해 **사업비 등 지원**
 - '18년 시범사업(9개소)을 시작으로 사회적 농업 활동비, 네트워크 구축비, 시설개선비 **지원 대상 확대**(개소당 6천만원, '19: 18개소 → '22: 70)
 - 사회적 농장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위한 **전문분야**(회계·세무) **바우처 운영 및 인건비 지원사업*** 연계('19)
 - *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경영인력과)
 - 지역의 **유희시설**을 사회적 농장이 활동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및 연계 추진('19)
 - * 농촌 유희시설활용 창업지원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시설 정보(RAISE) 활용
- 사회적 농업을 중심으로 사회적 약자가 농촌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칭)**돌봄공동체 조성**('20년 9개소 추진)
 - 사회적 약자들의 사회적 농업 활동과 자립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거시설, 농장, 식당, 직매장, 도서관 등 **기반시설 조성 지원**
 - * 홍성·임실·청송의 경우, 사회적 농업을 통해 마을에 정착하려 할 때 주거시설 및 식당 부족 등 지역 환경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
 - 지역 내 사회적 약자 수, 기반시설 및 전문기관 현황 등을 파악하는 **지역조사 및 해외사례 조사 추진**(2월, 지자체·도연구원)
 - * 네덜란드 호그벡: 치매환자·의사·봉사자가 함께 거주하며 농업 등 일상생활 영위
- 장기적으로는 복지·고용 등이 연계된 **제도적 지원**을 통해 사회적 농업 활동의 지속가능성 확보
 - 등록한 농장의 사회적 농업 활동은 복지·교육·고용 등의 영역에서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업 필요**
 - 정책연구('19)를 통해 관련 **복지제도 분석 및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삶의질위원회 분과위** 등을 통해 논의 추진
 - * 벨기에는 '17년부터 사회적 농장에서도 장애인 수당을 활용 가능

4. 생산품 판매 지원

- 사회적 농업 생산물이 로컬푸드 직매장, 지역아동센터, 공공 급식 등을 통해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유도
 - 먹거리 선순환체계 내에 사회적 농장이 생산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안내
 - 지역 푸드플랜 수립 시 사회적 농장이 생산자에 포함되도록 사업 지침 개정('20, 푸드플랜 구축지원사업)
 - 대상자(사회적 약자)들이 속한 복지관, 학교 등에서 소비할 농산물을 사회적 농장이 기획 생산하는 경우 사회적 농장 선정 시 가점 부여('20)
 - 사회적 농업의 가치 전파와 생산품 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 추진
 - 사회적 농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사회적 농장의 생산품을 홍보하고 판매 사이트와 연결(10월, 플랫폼 구축)
 - 생산에 참여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소개와 사회적 농업 활동 취지를 설명하여 스토리와 상품을 함께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
 - 공영홈쇼핑 중간광고, 사회적 농업 생산품에 대한 클라우드 편딩, 사회적 농장의 박람회 참가 지원 등 다양한 홍보 방안 추진
 - 우리부·유관기관 행사를 활용하여 사회적 농업 생산품 홍보
 - 박람회·시상식 등 행사에서 사회적 농업 생산품을 기념품·상패로 활용하고, 우리부의 명절 선물세트로 제공될 수 있도록 협의
 - 장기적으로 공공기관의 구매비율을 의무화한 사회적경제 판로 지원법(안)* 지원 대상에 사회적 농장이 포함될 수 있도록 협의(노동부)
-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계류중

5. 네트워크 구축

□ 지역 내 주민·복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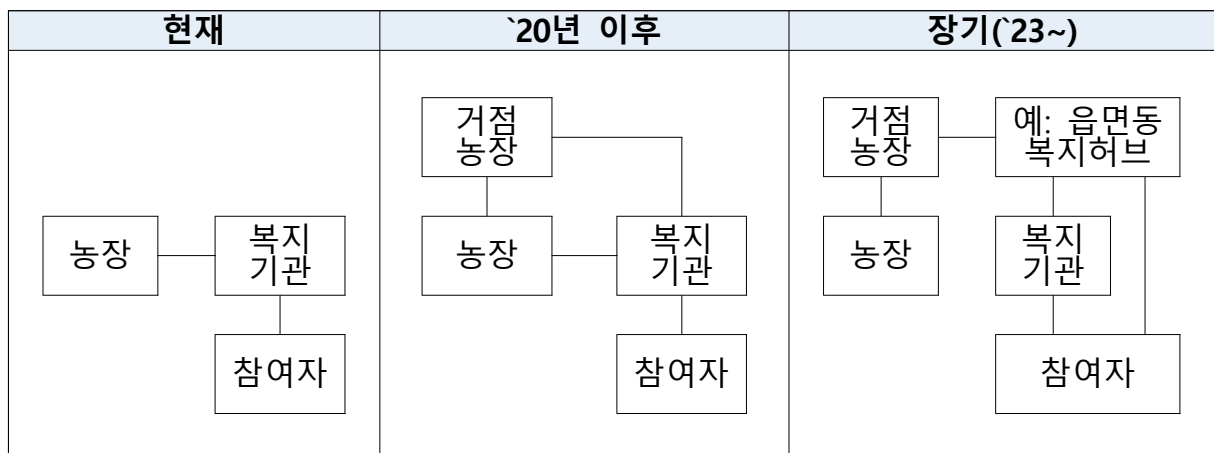
- 네트워크 구성원 간에 사회적 농업 활동 시 협력하고, 기타 지역 사회 문제 논의 및 생산품의 상호 구매·판매가 이루어지는 장 마련

* '18년도 사업자들은 각 지역별 사회적 농업 협의체를 자체 구성하여 운영 중

- 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참여자 및 가족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청취하여 사회적 농장의 신뢰도 제고

* 지자체(시·군)의 사업 이행점검 시 사회적 약자의 의견 청취 포함(반기별)

- 장기적으로 사회적 농장과 참여 희망자 간 원활한 매칭을 위해 지자체 복지 분야와 농장 간 연결 체계 구축 추진(복지부·행안부 협의 필요)



□ 사회적 농장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국 사회적 농업 협의체 운영 개편

- 전국 사회적 농장 분포를 고려하여 논의의 밀도를 높이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권역별로 회의 운영(4월~, 월 1회)

- 지자체, 농식품 유관기관 및 지역 대학 등이 사회적 농장과의 교류를 강화할 수 있도록 협의체 참여 안내

* 농어촌공사·aT 등 유관기관 지원 사업 연계 및 대학 사회복지 전공자 등의 유입 유도

6. 제도적 기반 구축

□ 제도 개선 및 홍보에 활용할 사회적 농업 관련 연구 지속 추진

- 사회적 농업 성과 연구를 통해 성과 지표를 개발하여 사회적 농업 성과 관리·분석에 활용('18~'19, 농진청·농정연구센터)

* 농업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효과를 분석하여 홍보에 활용(농진청)

- 각 농장이 활동 내용, 참여자의 변화·성취 등을 기록하도록 하여 이를 효과 분석, 홍보 등에 활용

* 사회적 농업의 효과는 계량이 어렵고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므로 기록이 중요

- 농장 유니버설 디자인* 연구를 장애인 분야까지 확대 추진하여 사회적 약자도 일하기 쉬운 농작업환경 조성

* 성별·연령·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제품·환경 디자인

□ 사회적 농업을 명확히 규정하여 인식을 제고하고 제도적 지원의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18.12월 발의된 「사회적 농업 육성법(안)」 대응(서삼석의원안)

* 주요 내용: 사회적 농업 정의, 정부 지원,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위원회 등

- 농업계, 농업·복지전문가, 언론 등과의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사회적 농업의 중요성과 근거법의 필요성을 공론화

□ 사회적 농장의 홍보·컨설팅 등 사업을 지원할 지원센터 설치('20)

- (예비)사회적 농장 관리, 실태조사,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사회적 농업 정책 발전 지원

- 사회적 농장에 대해 정책사업 안내, 네트워크 형성, 홍보, 판로 확보를 위한 경영·판매 컨설팅 등을 지원

* 기존 농촌공동체회사 지원센터(농어촌공사)의 역할을 농업·농촌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지원 기능으로 확대

복권기금의 사회적 가치 제고방안

2019. 4.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의 사회적 가치 제고방안

2019. 4.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순 서

I. 복권기금 운용 현황 및 개편 필요성	331
II. 복권기금 개편방안	333
1. 복권위원회 구성·운영 개편	333
2. 복권기금 사업 신청·선정 기준 개편	334
3. 복권기금 사업 성과평가 개편	335
4. 복권기금 사업의 국민 소통 및 투명성 강화	336
III. 향후 추진계획	337
【참고】	
1. 복권기금에 적용하는 사회적 가치	338
2. 복권기금 사업 성과평가 개편(안)	339

I. 복권기금 운용 현황 및 개편 필요성

□ (복권기금 현황) 복권판매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사용하기 위하여 복권기금 설치

- 조성 재원 : 복권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운용 수익 등
- 배분 및 용도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의한 법정 배분사업(10개 기관) 및 제23조제3항에 의한 공익사업*

* 복권법상 공익사업 : ① 저소득층 주거안정지원 ②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 복지 ③ 국가유공자 복지 ④ 문화예술진흥 등

- 사업계획 수립 : 복권위원회(총 21명) 심의·의결

- 지원사업 현황 : '19년 복권기금 지원사업비는 총 2조 1,857 억원으로 저소득·소외계층 지원을 지속 확대

< 복권기금 지원사업 현황 >

(단위: 억원, %)

	'04~'10	'11	'12	'13	'14	'15	'16	'17	'18	'19계획
총규모	67,218	12,022	12,723	14,620	15,499	16,257	16,671	17,328	18,972	21,857
법정배분사업	18,512	3,580	4,259	5,233	5,433	5,392	5,367	5,780	6,415	7,206
공익사업	48,706	8,442	8,464	9,387	10,066	10,865	11,304	11,548	12,557	14,651

□ (개편 필요성) 복권기금이 사회적 가치 사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복권기금 운용체계 개편 필요

- 양극화, 고령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권기금이 사회적 가치를 선도적으로 실행하는 기반 마련 추진

□ (추진 경과) 사회적 가치 창출 TF* 운영('18.5~) 및 연구용역** 등을 통해 복권기금의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개편방안 마련

* TF 구성 : 민간위원 9명, 정부위원 4명

** 복권기금의 사회적 가치 제고 방안 연구: 동국대 오영민 교수('18.6~10)

참고

복권기금 사회적 가치 활성화 목표 및 발전전략

◇ 복권기금이 사회적 가치를 선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복권기금 개편방안 마련 및 시행 추진

복권기금의 사회적 가치 제고를 통한 국민 복지 증진

목표

사회적 가치 사업의 활성화 및 대국민 투명성 제고

추진 전략

사회적 가치 사업
확대를 위한
복권위 및 사업부처
역할 강화

다양한 의견수렴 및
대국민 정보공개를 위한
인프라 구축

정책 과제

복권위원회 운영개편

균형인사 및 추천경로 다양화

사회적 가치 사업 발굴

사업 신청지침 및 신청서 개편

성과평가체계 개편

사회적 가치 평가지표 등 신설

대국민 정보공개 확대

복권위원회 홈페이지 개편

추진 체계

복권위원회 및 기금사업주체의 사회적 가치 사업 실현 선도
민간부분(민간 전문가, 국민 등)의 적극적 참여가 가능한 인프라 조성

II. 복권기금 개편방안

1. 복권위원회 구성·운영 개편

1 현황

□ (구성) 총 21인{(위원장: 기재부 2차관), 민간위원 11인, 정부위원 9인}

< 분야별·성별·지역별 민간위원 현황 >

성별		지역별		분야별(자격요건별)			
남성	여성	수도권	비수도권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기타
5명 (45%)	6명 (55%)	10명 (91%)	1명 (9%)	2명 (18%)	5명 (45%)	3명 (27%)	1명 (9%)

2 개편방안

◇ 복권위 의사결정에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민간위원을 성별·지역별·분야별로 균형 있게 구성(행정기관 소속위원회 설치·운영지침 준수)

□ 복권위 정책결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민간위원 구성을 다양화

- (성별) 특정성별이 위촉직 민간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여성참여율 40%이상 준수)
- (지역별) 지역주민, 지자체 등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비수도권위원을 확대하는 등 지역인사를 균형 있게 포함하기 위해 노력
- (분야별) 특정 직업군이 위촉위원의 25%를 넘지 않도록 하고 복지단체 등 다양한 현장전문가 적극 위촉 노력

2. 복권기금 사업 신청·선정 기준 개편

1 현황

- (사업부처 신청) 사업부처는 매년 3.31일까지 차년도 복권기금 사용신청서를 복권위에 제출

* 복권위는 사용신청서 양식을 매년초 사용신청지침에 포함, 부처에 통보

- (복권위 심의·조정) 복권위는 신청 사업에 대해 심의·조정하여 차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 5.31일까지 예산실 제출

2 개편방안

- ◇ 사업부처가 사회적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을 발굴·신청하도록 「복권기금 사용 신청(계획)서」를 개편
- ◇ 복권위가 사회적 가치 사업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복권기금 사용신청지침」을 개편

- (사용 신청(계획)서) 각 사업부처가 사회적 가치 사업을 발굴·신청하도록 하기 위해 「복권기금 사용 신청(계획)서」를 개편

- 각 사업부처가 복권위에 제출하는 “사용 신청(계획)서”에 사회적 가치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내용 추가

- * ① 내용 : 사업목적 등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
② 절차 : 참여, 공유, 윤리 등 사회적 가치의 절차를 통해 추진하도록 유도
③ 대상 : 사업의 수혜자를 사회적 가치 대상자(사회·경제적 약자)로 선정

- (사용신청지침) 각 사업부처가 신청하는 사업 중 사회적 가치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지원할 수 있도록

- 복권위가 사업부처에 제시하는 「복권기금 사용신청지침」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사업의 우선 지원 원칙 제시

3. 복권기금 사업 성과평가 개편

1 현황

- 복권위는 매년 복권기금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1~3월)
 - 평가 결과는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반영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과 복권기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

2 개편방안

◇ 복권기금사업이 “사회적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복권기금 성과평가 편람」 개편

- 사회·경제적 약자 지원 등 복권기금의 취지 및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사업 수행을 더욱 유도하기 위하여 성과지표 개편
 - (성과) “성과목표의 타당성” 지표를 신설(2점)하고, 사업 내용 및 대상 측면의 사회적 가치 반영 정도를 평가
 - (환류/홍보) 참여·공개 등 사업 절차 측면의 사회적 가치 반영 여부를 평가

< 복권기금의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성과평가 편람 개편안 >

부분	현행 (A)	개편 (B)	증감 (B-A)	비고	사회적 가치	
집행	25	25	-		내용	안전·인권, 노동·일자리, 보건·복지, 상생·책임, 지역균형, 환경·재생 등
성과	50	50	-			
- 성과목표의 타당성	-	2	2	신설		
- 성과지표의 타당성	5	5	-		대상	보훈·유공자, 노인, 청소년, 여성, 장애인, 저소득층 등
-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5	5	-			
- 성과지표의 연간목표치달성 정도	40	38	△2		절차	참여·공개, 공유·협력, 공평·윤리
환류	25	25	-			
가점1(홍보실적)	+2	+2	-	평가내용 추가		
가점2(신규사업 발굴노력)	+2	+2	-			

4. 복권기금 사업의 국민 소통 및 투명성 강화

1 현 황

- 복권위원회 홈페이지(www.bokgwon.go.kr)를 통해 복권기금 지원 사업의 개요, 주요사업 사례 및 연간 집행액 정도만 제공 중
 - 일반 국민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별 세부내용(지원요건, 대상자 등), 신청방법 및 사업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움

2 개편방안

◇ 홈페이지를 통해 복권기금사업의 지원요건, 신청방법 등 세부 사업내용을 제공하여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사업 운용 현황 및 운용 성과를 공개해 기금운용의 투명성 확보

- 일반국민이 복권기금 사업을 ① 쉽게 찾아서, ② 내용과 지원요건을 확인하고, ③ 성과까지 알 수 있도록 개편
 - ① 사업검색 기능 신설 : 사업별 정책 대상자(저소득층, 장애인 등)가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업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검색 기능 추가
 - 생애주기(영유아, 아동, 노년 등), 가구상황(저소득층, 장애인, 한부모 등), 주제(주거, 문화, 서민금융 등)별 사업 검색
 - ② 사업별 상세정보 제공 : 지원사업에 어떻게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지 지원대상, 지원요건, 신청방법 등 상세 안내
 - 사업별 선정·집행 관련 자료 및 사업지침 등도 함께 공개
 - ③ 운용현황·성과 공개 : 사업별 월별·일별 집행실적*과 연간 성과평가 결과 공개

* ‘열린재정’ 사이트(기재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집행정보 연계

Ⅲ. 향후 추진계획

□ 개선방안에 포함된 세부 추진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

- ① (복권위 구성·운영 개편) 향후 신규위원 선임 시 반영(상시)
- ② (사업 신청·선정기준 개편) 복권기금 사용신청지침 개정 및 부처 통보('19.2.14. 완료)
- ③ (사업 성과평가 개편) 복권기금 성과평가 편람 개정 및 부처 통보('~19.10월)
- ④ (홈페이지 개편) 개편안에 대한 기금사업 집행부처 협의 등을 통해 '19년도 사업부터 정보공개 확대(~'19.6.)

〈 세부 과제별 추진일정(안) 〉

추진과제	추진일정			
	1/4	2/4	3/4	4/4
1. 복권위원회 구성·운영 개편				
· 민간위원 구성 다양화 등 (상시)				
2. 복권기금 신청·선정 기준 개편				
· 복권기금 사용신청지침 개정·통보				
· '20년도 복권기금사업 신청·접수				
· '20년도 복권기금사업 심의·선정				
3. 복권기금 사업 성과평가 개편				
· '19년도 성과평가편람 개편안 마련				
· 개편안 복권위 의결 및 부처 통보				
4. 복권기금 사업의 국민 소통 및 투명성 강화				
· 홈페이지 개편안 마련 및 부처 협의				
· 홈페이지 개편 및 대국민 공개				

1. 사회적 가치의 개념

- ☐ 경제적 가치와 대비되어 개인을 초월하여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바람직한 가치

2. 사회적 가치의 구성요소와 적용방법

(1) 사회적 가치의 내용

- 구성요소: 안전·인권, 노동·일자리, 보건·복지, 상생·책임, 지역 균형, 환경·재생, 기타공익사업
- 반영방법: 복권기금의 각 사업목적에 사회적 가치의 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

(2) 사회적 가치의 절차

- 구성요소: 참여·공개, 공유·협력, 공평·윤리
- 반영방법: 복권기금 사업을 사회적 가치의 절차를 통해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유도

(3) 사회적 가치의 대상

- 구성요소: 사회적, 경제적 약자 (장애인, 노인, 영아, 청소년, 저소득층 등)
- 반영방법: 복권기금의 사업의 수혜자가 가급적 사회적 가치의 대상자인 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가 되도록 선정

참고 2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복권기금 사업 성과평가 개편(안)

현행				개편			
부 문	평가지표	자 숙	산 구	부 문	평가지표	자 숙	산 구
집 행	1. 당초 계획에 비추어 사업예산을 적기에 차 질없이 효율적·합리적으로 집행하였는가? - 예산집행률 (15) - 계획이행정도(5): 분기별자금지출계획 - 예산절감노력 등 효율적 집행 (5)	25	25	집 행	좌동	25	25
성 과	2. 성과지표와 목표치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당초 계획된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 성과지표의 타당성 (5) -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5) - 목표달성도 (40) *(가점) 저소득·소외계층 복지증진 기여도(법정배분사업 경우 0~2점)	50	50	성 과	2. 성과지표와 목표치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당초 계획된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 성과목표의 타당성 (2) * 사업 수혜자 및 사업목적 측면에서 사회적 가치 반영의 적절성을 함께 고려 - 성과지표의 타당성 (5) -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5) - 목표달성도 (38)	50	50
환 류	3. 사업체계가 효과적이며 사업평가 등의 환류가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 사업추진 (5) - 집행실태점검 (5) - 체계의 적절성 (5) - 사업평가 등의 환류 (10)	25 (5) (5) (5) (10)	25 (83) (83) (83) (-)	환 류	3. 사업체계가 효과적이고 사회적 가치를 적절 히 반영하였으며 사업평가 등의 환류가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 사업추진 (5) * (추정기준) 협력과 공유 참여와 공개 등 - 집행실태점검 (5) * (추정기준) 공평과 윤리 등 - 체계의 적절성 (5) - 사업평가 등의 환류 (10)	25 (5) (5) (5) (10)	25 (83) (83) (83) (10)
가 점	(가점1) 복권기금사업을 통해 복권기금에 대한 긍정적 인지도 제고에 기여하였는가? - 홍보실적 및 홍보효과의 수준 (2)	-	+2	가 점	(가점1) 복권기금사업을 통해 사회적 가치가 증진되고 있음 을 홍보하는 등 복권기금에 대한 긍정적 인지도 제고에 기 여하였는가? - 홍보실적 및 홍보효과의 수준 (2)	+2	+2
	(가점2) 신규사업 발굴노력 (2) 사업 참신성과 가점(기금)별 특성 반영 여부 (법정배분 및 공익 사업, 0~2점)		+2		좌동	-	+2